
2022년도 업무 추진 성과

2022. 12.



외 교 부

(공백)

순서

I. 북한 비핵화 추진	1
II. 동아시아 주요국과의 관계 강화·발전	41
III. 지역별·사안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91
IV.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157
V. 국민권익과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외교	205

(공백)

1. 북한 비핵화 추진

(공백)

순 서

I. 요약	5
II. 업무 추진 성과	10
1. 업무 개요	10
2. 추진계획 및 주요 실적	11
3. 주요 추진 노력	14
4. 주요 업무 성과	18
①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 추진 ...	18
② 북한 핵문제 당사국으로서 국제공조 강화	23
③ 북한 도발 대응 및 제재·압박 강화를 위한 공조	29
④ 원칙있는 대북관여 추진	35

(공백)

I. 요약

1 주요 추진 노력

- 정상 및 외교 장관 협의 등을 통해 한미간 각급 협의 집중 전개
 - 신정부 출범 이후 한미정상회담 개최 계기로 한미 정상 및 외교 장관·차관, 북핵수석대표 협의 실시
- 코로나19로 국가간 협의가 다소 위축되었던 지난해와 달리, 유선·화상·대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 및 평화 구축 지지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 경주
 - 담대한 구상 관련, 우리 정부 입장 설명 및 협조 확보 노력
-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기반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 대상 아웃리치
 -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기반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 여론주도층 연구기관 등 대상 아웃리치 강화 노력 경주
- 북한의 전방위적 핵·미사일 고조 및 전례없는 빈도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북핵 문제 당사국으로서 미국·일본 등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 미국·일본 등 우방국과의 고위급 협의 횟수 전년 대비 대폭 증가, 5년 만에 한미 외교·국방 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9.16, 워싱턴) 개최를 통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노력 등 한미공조 강화
- 북한의 중대한 도발에 적시에 대응하고 기존 대북 제재·압박 및 신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관·관계부처와의 협력 확대
 - 국방부와의 협력을 통해 EDSCG 개최, 더욱 강력한 대북 억지 메시지를 담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11.3, 워싱턴) 공동성명문 도출 등 성과

- 국내·외 유관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미 간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최초 출범 및 연내 2차례 회의 개최(제1차(8.9, 워싱턴) 및 제2차(11.16, 서울))
 - 안보 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북한 핵·미사일 관련 기술 분석 공조 지속
 - 국내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5년 만에 대북 독자 제재 추가 대상 발표(10.14)
-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주요국 및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 대상 아웃리치 활동
- 북한인권·인도적 상황 관련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등과의 공조 활동
 - ▲ Robert King 前 미 북한인권특사 화상통화(8.22), ▲ Robert Berschinski 美 NSC 민주주의·인권 담당 선임보좌관 면담(10.5), ▲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10.26) 참석, ▲ Suzanne Scholte 북한자유연합 대표 및 북한인권 활동가 면담(10.7) 등
 - 전문가 세미나, 라운드테이블 등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및 협력 제고 활동
 - ▲ 브뤼셀 전문가·싱크탱크 라운드테이블(9.28), ▲ 美 싱크탱크 CSIS 주최 북한 인권 관련 공개행사 참석(10.6), ▲ 주한미국대사관 주최 북한인권 라운드테이블 참석(11.15) 등
-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관련 국제사회 동향을 파악하고 구체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제고 및 지지 확보 노력 경주
- UNICEF, WFP 등 국제기구들과의 협조체제 유지 및 북한 내 인도주의적 상황 공유·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구체 협력방안 강구
 - ▲ 장관-WFP 사무총장 면담(7.14), ▲ 장관-UNICEF 사무총장 면담(11.7) 등
 - '한반도 클럽·평화 클럽' 대상 아웃리치 행사 3회(6.10, 10.14, 11.11) 개최

2 주요 업무 성과

- 한미간 긴밀한 조율을 바탕으로 대북 협상의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북한 비핵화 로드맵 마련 완료
 - 광복절 경축사 계기 북한 비핵화 조치 및 정치·경제·군사적 상응 조치를 포괄하는 '담대한 구상' 제안
 - 5.21 한미정상회담 개최 이후, 각급에서 미국과의 양자 협의를 통해 한미간 공조 강화 추진 및 공감대 형성

- 주요국 간 협의 지속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 담대한 구상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 표명을 비롯하여 주요국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 입장 설명 및 지지 확보
 -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 및 한반도 전문가 초청 간담회 등 자체 발굴 아웃리치 프로그램 확대 및 내실화
 - 이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제고 및 우호적 지지 기반 확대

-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5.21),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11.13) 및 2차례의 외교장관 공동성명(5.29, 9.22)을 채택하는 등 북한 핵문제 당사국으로서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 발신
 - 한미·한일·한미일 간 고위급 교류를 예년에 비해 대폭 확대함으로써 북핵 문제 공조를 위한 미·일 등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
 - 한편, 미중·미러 대립 상황 하에서도 북핵 문제 관련 중·러와의 소통을 지속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를 위한 중·러의 건설적 역할 견인 노력 지속

- 한반도 정세가 유례없이 엄중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단합된 북한도발 대응을 추진하며 기존 제재 강화·신규 압박 모색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대화의 길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
 - 대북 독자제재 발표를 통해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 사회에 환기
 - 특히, 한·미·일이 연이어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함으로써 제재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3국의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 발신
 - 5년 만에 한미 외교·국방 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9.16, 워싱턴)를 통해 미측의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미측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한미 간 공조 강화
 - △한미 간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발족 및 제1차(8.9, 워싱턴), 제2차(11.16, 서울) 회의 개최,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한미 공동 민관 심포지엄(11.17, 서울)을 통해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한미 간 공조 강화
- 정부 출범 2개월여 만에 지난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조속히 임명(7.19)함으로써, 북한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대내외에 발신
 - 대사 임명 직후부터 국내외 아웃리치 등 적극적 활동을 통해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국내외 관심 제고 및 북한인권·인도적 상황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 언론 인터뷰 및 북한인권 관련 세미나·라운드테이블 참석 등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적 관심도 제고 및 다수 언론에서 긍정 보도
 - 북한인권·인도적 상황 관련 주요국·국제기구 등과의 다양한 공조 활동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 관련 우리 정부 노력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

- 한미일 정상회담(11.13) 공동성명에 우리 남북자·억류자 관련 문안을 최초로 포함시키는 등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 환기를 위한 주도적 역할 수행
 -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새롭게 임명된 Salmon 유엔 북한인권특별 보고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공조 구축 선도
-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고려 없이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국내 유관부처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우호적 여건을 조성
 - 북한의 코로나19 봉쇄조치로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중단된 상황 하에서도, UNICEF, WFP, OCHA 등 식량·보건 분야 국제기구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 북한내 인도주의적 상황을 공유하고 대북 인도 지원 관련 구체 협력 방안 강구
 - 유관기관 참석 下 한미 북한정책 관련 협의(10.5, 11.15) 진행 등 국내 유관부처와 긴밀한 소통 유지 및 협력 강화
 - ‘한반도 클럽’(6.10, 11.11) 및 ‘평화 클럽’(6.10, 10.14) 아웃리치 행사를 전년대비 3배 더 개최(1회→3회)하여 북한과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들의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대북 인도적 지원 등 우리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우호적 여건 조성

II. 업무 추진 성과

1 업무 개요

□ 업무 목표

-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 구현
 - 우리의 중심적 역할을 바탕으로 원칙과 일관성 있는 북한 비핵화 협상 및 평화협정 체결 추진

□ 업무 주요 내용

-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 추진
 - 비핵화 로드맵 마련
 -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미·중·일·러 협력 강화
 -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노력 전개
 -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른 평화체제 구축 준비
- 북한 핵문제 당사국으로서 국제공조 강화
 - 양·다자회의의 계기 북핵 문제 관련 우리 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
 - 남북미 3자간 안보대화채널 구축 기반 마련
- 북한 도발 대응 및 제재·압박 강화를 위한 공조
 - 북한 도발시 우방국 및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추진
 - 기존 제재·압박 및 신규 제재 강화를 위한 관련 국제기구 및 관계부처 협력 강화
- 원칙있는 대북관여 추진
 - 북한 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 추진 등
 - 대북 인도적 지원(북한 코로나19 대응 지원 포함) 관련 국내 유관 부처·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및 국제사회의 우호적 여건 조성

2 추진 계획 및 주요 실적

세부추진과제	추진 계획	주요 실적
<p>1.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간 조율을 통해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북한 비핵화 로드맵 추진(8월) ■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한일 외교장관회담 등 계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및 평화 정착 관련 정부 정책 지지 확보(9월) ■ G20 정상회의, ASEAN 관련 정상회의 등 계기 주요국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및 평화 정착 관련 정부 정책 지지 확보(11월) ■ 한미·한일·한중·한러 북핵수석대표 협의(12월) ■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관련 대외 아웃리치 지속(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비핵화 로드맵 성안 완료(8.15) ■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7.8, 9.22), 한일 외교장관회담(8.4, 9.19), 한중 외교장관 회담(7.7, 8.9) 등 계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및 평화 정착 관련 정부 정책 설명/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 확보(미국, 일본) ■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7.7), 한일 북핵수석대표협의(7.8),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7.8), 한러 북핵수석대표협의(7.8) 등을 추진하여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및 평화 정착 관련 정부 정책 설명 ■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 등 1.5 트랙 공공외교 행사 개최(~12월)
<p>2. 북한 핵문제 당사국으로서 국제공조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외교행사* 계기를 활용하여 북핵 문제 관련 우리 입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대·정책 조율 강화 * ASEAN 외교장관회의(8월), UN 총회(9월), G20 정상회의(11월), ASEAN 관련 정상회의(11월) 등 ■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및 3자간 안보대화채널 구축을 위한 한미간 공감대 마련 차원에서의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뉴질랜드, 한-브루나이, 한-스리랑카 외교장관회담(8.4) / 한-태국, 한-캄보디아, 한-호주, 한-라오스, 한-파키스탄 외교장관회담(8.5) / 한-베트남, 한-캐나다 외교장관 약속회담(8.5.) ■ 한중 외교장관회담(8.9) ■ 장관, 유엔 사무총장 면담(8.12.) ■ 제3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9.16.) ■ 유엔총회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9.22) ■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10.26.) ■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마셜제도, 한-파푸아뉴기니, 한-통가, 한-팔라우 외교장관회담(10.27) ■ G20 정상회의 계기 한-프랑스 외교장관회담(11.15) ■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시 남북미 3자간 안보대화채널 관련 구상에 대한 협의 및 소통 지속

<p>3. 북한 도발 대응 및 제재·압박 강화를 위한 공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차단 노력 강화 차원 한미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출범(8월) ■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한 한미, 한일, 한미일간 공조 강화(12월) ■ 대북제재 체제 강화를 위한 우방국들과의 협의 개최(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북한 사이버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8.9) ■ 제2차 북한 사이버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11.16) ■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을 위한 한미 공동 민관 심포지엄(11.17) ■ 한반도본부장, 미 사이버·신흥안보 담당 국가안보부보좌관 조찬 협의(7.26) ■ 한반도본부장-미 재무부 테러 금융·금융범죄 담당 차관보 면담(9.22) ■ 한반도본부장, 제5차 북핵 대응 관련 한-불 고위급 협의 참석(9.29) ■ 한반도본부장, 평화클럽 초청 조찬 라운드테이블 개최(10.14) ■ 한반도본부장, 한반도클럽 초청 행사 개최(11.11)
--------------------------------------	---	---

<p>4. 원칙있는 대북 관여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 및 국제기구 대상 아웃리치 등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활동 (~12월) ■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관련 국제 사회 동향 파악 및 구체 협력 방안 협의(~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7월) ■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 △Elizabeth Salmon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화상통화 및 면담(8월, 10월), △Robert King 前 미 북한인권특사 화상통화(8월), △EU 인권특별대표 면담(9월), △EU 대외관계청 아태부국장 면담(9월),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면담(9월),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 의원 면담(9월), △브뤼셀 전문가·싱크탱크 라운드테이블(9월), △Robert Berschinski 미 NSC 민주주의·인권 담당 선임보좌관 면담(10월), △Suzanne Scholte 북한자유연합 대표 및 북한인권 활동가 면담(10월), △Scott Busby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부차관보 면담(10월), △미 싱크탱크 CSIS 주최 북한인권 관련 공개행사 참석(10월), △북한인권위원회 및 제이콥 블라우스틴 인권증진재단 주최 북한인권 관련 행사 참석(10월), △서해 피격 공무원 유가족 면담(10월), △국군포로가족회 대표 면담(10월), △주한미국 대사관 주최 북한인권 라운드테이블 참석(11월) 등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참석 및 의결을 통해 '대북 영양·보건 협력 정책사업' 기간 연장(6월), △장관-WFP 사무총장 면담(7월), △한미 북한정책 관련 협의(10월), △UNICEF 사무총장 면담(11월), △제6차 한-OCHA 정책협의회 참석(11월) 등 ■ '한반도 클럽' 및 '평화 클럽' 아웃리치(6월, 10월, 11월) 등
-----------------------------	--	---

3 주요 추진 노력

① 투입노력

○ 코로나19 제약 하 국가간 협의가 다소 위축되었었던 지난해와 달리,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소통 및 협의를 통해 주요국과의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우리의 북한 비핵화 및 평화 구축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대

- 신정부 출범 이후 한미정상회담(5.21) 개최 계기로 한미 정상 및 외교장관·차관 협의 등 각급 소통 채널 확대 추진

○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5년만에 임명, 주요국 및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 대상 아웃리치 활동 실시

- 북한인권·인도적 상황 관련 외국정부·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등과의 공조 활동 및 전문가 세미나, 라운드테이블 등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및 협력 제고 활동

○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관련 국제사회 동향을 파악하고 구체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제고 및 지지 확보 노력 전개

- UNICEF, WFP 등 국제기구들과의 협조체제 유지 및 북한내 인도주의적 상황 공유·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구체 협력 방안 강구

* △장관-WFP 사무총장 면담(7.14), △UNICEF 사무총장 면담(11.7), △제6차 한-OCHA 정책협의회 참석(11.10) 등

○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제고 및 지지 확보 노력 경주

- '한반도 클럽' 및 '평화 클럽' 소속 주한 외교단 대상 아웃리치 행사를 3회 개최하여 북한과 외교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 한반도 클럽 : 주한공관 중 북한을 검입하는 공관(20개)과 외교부간 협의체 / 평화 클럽 : 북한에 상주공관을 보유한 국가의 주한공관(20개)과 외교부간 협의체

* '한반도 클럽-평화 클럽' 대상 아웃리치 행사 2022년 3회(6.10, 10.14, 11.11) 개최

② 일하는 방식 개선

- 기존 국과장급 이상에서 주도하던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실무자급으로 적극 확대·활성화함으로써, 아웃리치의 양적 확대 및 행위자별 맞춤형 아웃리치 실시에 기여
 - 전년 동기 아웃리치 행사가 모두 국과장급으로 실시된 것에 비해, 금년은 실무자급(서기관 이하)에서 주도적 실시
 - ※ 젊은 직원의 아웃리치 실시는 신진 학자 발굴, 신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주제 포용 등을 장점으로 하며, 장기적으로 정책 네트워크 확대·공고화에 기여
- 국내·외 유관·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北의 중대한 도발에 적시에 대응하고, 기존 대북 제재·압박 강화 및 신규 제재 도입 위한 **노력 지속**
 - 국내 유관부처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5년 만에 독자제재 발표(10.14)
 - 외교·안보 부처간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미 외교·국방 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9.16, 워싱턴)
-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점증하고 있는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해외 IT 노동자, 가상자산 탈취 등) 대응 노력 전개
 - 한미 정상회담(5.21) 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을 위한 한미 양국 범정부 차원의 공조 강화 합의
 - 정상회담 후속조치로서 한미 간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출범, 제1차(8.9, 워싱턴) 회의에 이어 참석 대상을 더 확대한 제2차(11.16, 서울) 회의를 개최하며 연내 2차례 회의 개최
 - 또한 ‘제2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11.16, 서울)’과 연계하여 미 국무부와 공동으로 한미 가상자산 탈취 대응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11.17)
- 유관부처와 다양한 급에서 공식 협의 및 회의 등을 통해 소통과 협력 강화 노력
 - NSC 회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등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다양한 회의 및 협의 참석 계기를 통해 각급에서 긴밀한 정책 조율

- 특히, 2년여 만에 개최되고,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등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북한인권정책협의회(8.25)**에 참석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부처간 긴밀히 협력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 통일부장관 면담(7.28)



2022년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8.25)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참석(10.26)’ 등 **국내의 시민사회** 등의 목소리도 열린 자세로 경청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 방안 모색**

③ 기관장 노력

- **(고위급간 협의)** 연례적 주요 다자외교행사 계기를 활용하여 대북 정책 및 북핵문제 관련 우리 입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대 하고, 정책 조율 강화
 - **G20 외교장관회의(7월)** 계기 북핵 문제 관련 **4국(미·중·일·러) 모두와 고위급 교류** (북핵수석대표(차관급) 포함)*
 - *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7.7),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7.7), 한일 북핵수석대표협의(7.8),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7.8), 한러 북핵수석대표협의(7.8)
 - **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중국·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
 - **ASEAN 외교장관회의(8월), 유엔 총회(9월)** 등 주요 다자 외교 행사 계기 각국과의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 관련 동향·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설명하고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는 등,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우리 입장 설득 노력 확장
- ‘한반도클럽’ 및 ‘평화클럽’ 소속 주한대사들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 행사(6.10)에 동 클럽이 출범한 2014년 이래 최초로 기관장이 직접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긴밀한 협력과 건설적 역할을 건인



‘한반도클럽’·‘평화클럽’ 대상 대북정책 브리핑(6.10)

- UNICEF, WFP 등 국제기구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 파악 및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협조 체제 유지
 - * △장관-WFP 사무총장 면담(7.14), △UNICEF 사무총장 면담(11.7) 등

④ 갈등·리스크 예방 등 위기관리 노력

-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유엔 안보리 내 분열이 가시화되고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이 부결(5.26)되는 등, 국제사회 대북공조 및 단합된 대응 약화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 지속 모색
 - (강력한 글로벌 독자제재 연대 구축 노력)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5년만에 대북 독자제재(개인 15명·단체 16개) 대상 지정(10.14)을 통해 그간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해온 미·일 등 우방국과의 대북제재 공조 강화
 - (미·중·일·러 外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 모색) 북한의 중대 도발 시 최대한 많은 국가들이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의 국가들 대상 아웃리치를 확대하여 우리 입장 설득 및 긴밀한 협조 당부 노력 지속
 - (사이버 분야 북한 불법활동 대응 위한 국제공조 강화) 대북 제재를 회피하여 핵·미사일 개발자금을 마련하고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강화

4 주요 업무 성과

1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 추진

□ 주요 성과

- 한미간 긴밀한 조율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정치·경제·군사적 조치를 포괄하는 **비핵화 로드맵(담대한 구상) 마련**
 - 한미 정상회담(5.21) 계기 미측은 '비핵·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 성안에 대한 일차적 지지 표명



한미 정상회담(5.21) 및 공동기자회견

-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상기 '담대한 계획'의 구체 내용 성안
- 우리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 계기 북한 비핵화 조치 및 정치·경제·군사적 상응 조치를 포괄하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 대외 발표**
 - ※ 북한의 비핵화와 우리의 상응 조치를 망라한 과감하고 균형적인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고, 북한의 합의 불이행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단계적 이행 추진
 - ※ 초기 조치로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 및 보건·식수·산림 분야에서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 상정
 - ※ 이 외에도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 추진



광복절 경축사 계기 담대한 구상 제안(8.15)

- 한미정상회담 개최 이후 한미 외교장관회담, 한미 외교차관 협의, 북핵수석대표 협의 등 각급에서 미국과의 양자 협의를 통해서도 '담대한 구상' 후속 이행방안 등 관련 긴밀한 의견 조율



한미 외교차관보 협의(8.26)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9.22)



한미 북핵차석대표 협의(12.2)



한미 외교장관회담(8.5)



한미 외교차관협의(10.25)

- 작년 코로나19 제약 하 다소 위축되었었던 협의를 유선·대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요국 간 적극 소통 및 협의 진행하여 담대한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 확보

- 담대한 구상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 의사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국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기여

<담대한 구상 지지 확보 실적 >

- ▶ 정상 : 한-미 정상회담(5.21), 한-캐나다 정상회담(9.23), 한-독일 정상회담(11.4), 한미일 정상회담(11.13)



한-캐나다 정상회담(9.23)



한-독일 정상회담(11.4)

- ▶ 장관 : 한미일 외교장관회담(9.22), 한-영국 외교장관 전략대화(9.28), 한-네덜란드 외교장관회담(9.28),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마셜제도·통가·팔라우·파푸아뉴기니 외교장관회담(10.26), 한-중양아시아 협력 포럼 계기 한-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회담(10.26)



한미일 외교장관회담(9.22)



한-영국 외교장관 전략대화(9.28)



한-네덜란드 외교장관회담(9.28)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담(10.26)



한-중양아 협력 포럼(10.26)

<담대한 구상 지지 관련 공동성명 및 언론 >

- ▶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으며, 3국 정상은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

- ▶ 장관들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국제사회가 동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장관들은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블링컨 국무장관과 하야시 외무대신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공동성명)
- ▶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은 외교를 포함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것. / 이것은 한미 둘다 공유하고 헌신하는 목표 / 우리는 윤 대통령의 이런 구상을 높이 사는 바임.** / 한국의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조율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의해 제기된 위협에 대처하는 것과 관련해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계속 협의할 것. / 우리의 노선과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음. (Kritenbrink 동아태 차관보 채널A 인터뷰)
- ▶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천명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였고, **트뤼도 총리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한-캐나다 정상회담 공동성명)
- ▶ **박 장관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였고, 클레블리 장관은 이에 대해 지지 표명**(제7차 한-영국 외교장관 전략대화 보도자료)
- ▶ 장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지역 및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태평양도서국 장관들은 한국 정부의 비핵, 평화, 번영을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한-태도국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
- ▶ **담대한 구상을 매우 깊은 존중을 갖고 보고 있다. 비핵화 논의를 다시 진행시키려는 노력에 존경을 표한다. 독일은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지지할 것.** 북한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불가역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 한국과 독일이 같이 협력해야 한다. (한-독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
- ▶ **"아세안 정상들은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달성 및 역내 평화, 안정,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최근 공개된 한국의 담대한 구상을 환영하였다."** (제2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
- ▶ **"중앙아 국가들은 한국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를 표명하였다."** (제15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 공동성명)

- 주요국 북핵수석대표 간 협의를 통해 그간 우리 정부의 정책 및 비핵화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고 소통을 위한 채널 확보**

○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 등 대북정책 관련 공공외교의 내실화를 통해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과 양적 확대 달성**

- (지역) 기존 일부 주요국에 집중됐던 국외 아웃리치 대상 권역을 △아프리카, △중양아시아, △동유럽 등으로 다변화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담론 확산 노력의 지평 확대**
 - (국가) 한반도 문제 관련 역내 주요국 외에도 △국제회의 의장국,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국제기구 본부 소재지, △평화협정 체결국, △수교 기념국 등 **전략적 대상국 선정으로 아웃리치 효과성 배가**
 - (대상) 한반도 전문가·정책 담당자 등 기존 주요 대상에서 △의회, △언론, △NGO, △대학생 등 **다양한 행위자들로 대상을 확대하여 '맞춤형 공공외교' 실시**
- 여론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 대학, 싱크탱크, 언론 등을 대상으로 전략적 공공외교를 펼침으로써, **정부간 직접적인 1트랙 협의를 보완하고 국제사회에 탄탄한 우리 정책 지지 기반 마련**
 - 재외공관에서도 정책 공공외교 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노력 지속
 - 행사 이후 △참여 기관 홈페이지, △언론 보도, △SNS 등의 국내외 다양한 매체를 통한 아웃리치 홍보 효과

□ 장기적 효과

- 담대한 구상을 통해 예측가능하고 일관성있는 북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추진의 토대 마련
-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달성을 위한 **협상 여건 개선 전망**
 -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과 협의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에 대북정책 설명 및 이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결과,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유도하고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환경 조성**
-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아웃리치 실시 노력과 그 성과를 적극 홍보하여 우리 대북정책의 국내 지지 기반 강화에 기여

② 북한 핵문제 당사국으로서 국제공조 강화

□ 주요 성과

- 미·중·일·러·EU 등 주요국과의 양자·다자 협의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 견인을 당부하고, 우리 정부의 비핵화 추진 전략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저변 확대·공고화
- 미국, 일본 등 우리 주요 우방국과 협력하여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한미·한일·한미일 간 정상, 외교장·차관, 북핵수석대표 등 각급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강화
- 특히, 한미 정상회담(5.21) 이후 한미간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연쇄적으로 개최하며 한미 공동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국방·사이버 안보 등 다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을 위한 공조 강화를 논의하며,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공조 방안을 지속 협의하며 한미간 협력의 모멘텀 지속



2022.5.21. 한미 정상회담



2022.6.13. 한미 외교장관회담



2022.8.5. 한미 약식 외교장관회담



2022.9.22.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

- 북핵 문제 관련 주요 우방인 일본과 북한·북핵문제 관련 공조 강화



2022.9.21. 한일 정상 약식회담
(VoA 코리아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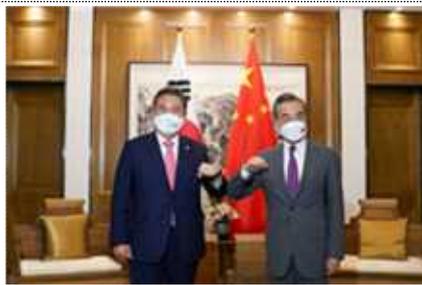


2022.10.6. 한일 정상 유선통화
(연합뉴스TV 자료화면)

-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견인 노력 지속 강화



2022.7.7. 한중 외교장관 회담



2022.8.9. 한중 외교장관 회담



2022.7.26. 한중 북핵수석대표 통화
(MBC 자료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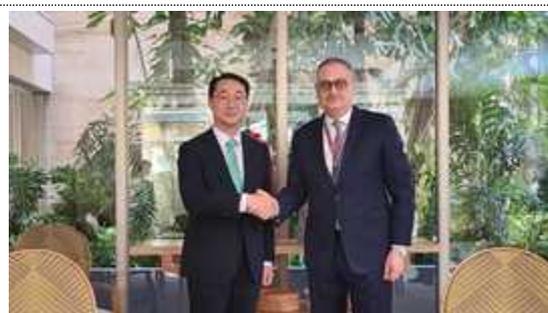
※ 2022년 한중 고위급 교류 : ▲(정상) 11.15 ▲(장관) 5.16(화상), 7.7, 8.9, 12.12(화상)
▲(북핵수석대표) 6.9(유선), 7.26(유선), 11.15(유선) 및 주한중국대사 통화(5.25, 11.21) 등

- 북핵문제 관련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 견인 위한 양국간 협의 모멘텀 유지

* 언론 보도내용 인용 / 출처: "한러 북핵 수석대표 통화..."北상황 악화 않도록 러 역할 당부" (연합뉴스, 2022.5.19.)



2022.5.19. 한러 북핵수석대표 통화
(연합뉴스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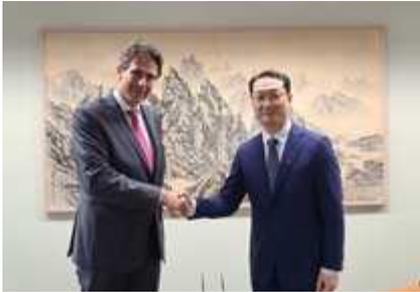
2022.7.8.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러 북핵수석대표 협의 (해럴드경제)

※ 2022년 한러 고위급 교류: ▲(북핵수석대표) 5.19(유선), 7.8 및 주한러시아대사 통화(5.25, 11.21) 등

- 국제사회 여론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북핵문제 해결의 주요 파트너인 EU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정부의 북핵 관련 정책에 대한 지지 저변 확대 가속화

※ ▲ 한반도본부장-EU 대외관계청 아태실장 면담(6.28, 9.27) ▲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EU 외교장관회담(7.7) ▲ 1차관-EU 대외관계청 사무총장 통화(7.20) ▲ 한반도본부장-유럽의회 한반도관계 대표단 면담(9.27) ▲ 제8차 한-EU 고위정치대화(10.28) ▲ 한반도본부장-EU 대외관계청 사무차장 면담(10.28) 등

< 한-EU 고위급 교류 관련 보도자료 >



▲ 2022.6.28. 한반도본부장, 군나 비간트(Gunnar Wiegand) EU 대외관계청 아태실장 면담

※ (언론보도) 한반도본부장-EU대외관계청 아태실장 면담...“대북정책,북핵 문제 논의 (서울평양뉴스, 2022.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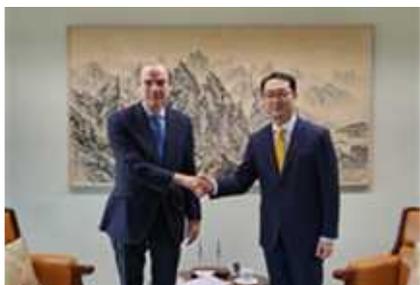
- “양측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할 수 있도록 북핵문제 관련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기사 내용)



▲ 2022.9.27. 한반도본부장, 군나 비간트(Gunnar Wiegand) EU 대외관계청 아태실장 면담

※ (언론보도) 한반도본부장-EU 아태실장 “北 7차 핵실험 시 강력대응” (뉴스원, 2022.9.28.)

- “비간트 실장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냉철하고 현실적인 접근을 취함과 동시에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한국의 접근법에 동의한다’며 ‘EU는 한반도 문제에서 조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해갈 여지가 있다고 재확인” (기사 내용)



▲ 2022.10.28. 한반도본부장, 엔리케 모라(Enrique Mora) EU 대외관계청 사무차장 면담

※ (언론보도) 한.EU “北 핵실험시 국제사회와 단합해 단호히 대응” (파이낸셜뉴스, 2022.10.28.)

-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행위임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지속 공조해가기로 했다” (기사 내용)

○ 국제·지역기구와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여론 결집 노력을 강화하고, 양자외교뿐 아니라 다자무대를 통해 우리 정부의 북핵 및 북한 관련 정책 소통 무대 다변화

- 제10차 NPT 평가회의 개최 계기 북핵 부대행사 개최(8.1)를 통해 각국 대표 등 70여명 대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 제고



▲ 프랑스 외교부와 공동 개최한 NPT 평가회의 개최 계기 북핵 부대행사(8.1)

※ (언론보도) '핵 전멸' 위험 경고 속에 개막한 NPT 평가회의 (경향신문, 2022.8.2)

- "(동 회의에서) 북한 핵 개발 역시 중대한 문제로 지적됐다.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우리가 오늘 모인 가운데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 "미국, 영국, 프랑스, 북아일랜드는 회의 개막에 앞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중단을 촉구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가진 모든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내용)

- 유엔 사무총장 방한(8.11-12) 시, 대통령과 오찬(8.12) 계기에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장관-유엔 사무총장 면담(8.12)을 통해 우리 정부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등, 유엔과의 협력 확대

- 장관-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통화(9.14)를 통해 IAEA와 북한의 비핵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한 차원 높은 긴밀한 공조를 도모하고, IAEA를 통한 국제사회 여론의 결집 당부하여 북핵문제 관련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

※ 상기 사례 외 ▲ NATO 정상회의(6.29-30) ▲ G20 외교장관회의(7.8) ▲ ASEAN 외교장관회의(8.4) ▲ UN 총회(9.13) 등 정례적 다자외교 행사 참석



▲ 장관-유엔 사무총장 면담(8.12)

※ (언론보도) 빙한 구테흐스 유엔 총장 "북한 비핵화 'CVID' 전폭지지" (VoA코리아, 2022.8.12)

-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대화를 시작하는 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환영한다며 유엔도 전폭적인 지지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비핵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한국의 강한 신념이 매우 인상깊었다'며 (기사 내용)

- 한반도본부장, NATO 이사회 확대회의(NATO 사무총장 주재, 9.27) 시 NATO 30개 회원국 및 스웨덴·핀란드 등 가입예정국, 한·일·호·뉴 등 아태 파트너 4개국을 대상으로 북핵 문제 브리핑을 실시하여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 및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대한 NATO 차원의 지지 확보
- 유엔 안보리 내 분열이 심화되어 안보리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이 난망한 가운데, 안보리를 통한 제재 강화 및 이행 노력 외(外)에도 우방국·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에 대한 다각적인 압박 강화 노력 전개
 - 북한의 중대 도발 시 최대한 많은 국가들이 단호한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 대상 우리 정부 입장 설명 노력 경주
 - 유엔 안보리 일부 상임·비상임 이사국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한 규탄 공동성명(10.5) 발표 등, 우방국·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압박 강화

< 유엔 무대 북 규탄 공동성명 추진 >

※ (언론보도) 안보리, 北 IRBM 도발 논의 결론없이 종료 ... 서방, 장외 규탄 성명(종합) (연합뉴스 2022.10.6)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일(현지시간)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지만 결론 없이 산회”
- “안보리 서방 이사국과 한국, 일본은 회의를 마친 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장외 성명을 내놨다.**...(중략)... 성명에서 이들 국가들은 ‘지난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9월 25일 이후 7발의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 **장외 공동성명에는 한미일 외에 알바니아, 브라질, 프랑스, 인도, 아일랜드,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 영국 등이 동참했다.**” (기사 일부)

※ 상기 동참국 중 6개국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알바니아, 브라질, 인도, 아일랜드,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 / 3개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미, 프, 영)

<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압박 강화 >

※ (언론보도) 국제민간항공기구 “북한 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 안전 위협” (VoA코리아 2022.10.4)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고, 국제해사기구(IMO)는 올해 말 북한에 대한 의무 감사가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기사 일부)
- “앞서 ICAO는 지난 6월 3일의 성명을 통해 ‘ICAO 이사회가 제226차 회의에서 국제민간항공에 계속 심각한 안전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의 예고없는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는 것을 규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사 일부)

※ (언론보도) IMO “올해 말 북한 미사일 발사 통보 의무 등 협약 준수 감사 계획” (자유아시아방송, 2022.9.6.)

- “국제해사기구(IMO)는 올해 말 북한이 국제 해양안전 및 보안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북한은 ...(중략)... 국제해사기구에 **미사일 발사 전 사전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 일부)

-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시 관련 협의 및 소통을 통해 남북미 3자간 안보대화채널 구축 기반 마련
 - 한반도 문제 핵심 당사국인 남북미 3자간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안보대화채널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
 - 긴밀한 한미 공조 下 대화 재개 및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세부사항 논의 및 한반도 정세 예측 시나리오 구상 협의

□ 장기적 효과

-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미국, 일본, EU 등 북핵문제 관련 주요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북한의 핵 위협은 억지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외교와 대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과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토대 강화
 - 특히 북한의 고조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국민의 안보 위협*을 불식시키기 위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노력 추진
 -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의지를 결집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경주
 - 국제사회의 총의를 결집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북한·북핵 문제 관련 중국 및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
- 한미간 긴밀한 협의 下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향후 북한의 도발 중단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고 남북미 3자간 합의 도출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경우, 남북미 3자간 **보다 원활한 소통**에 기여

3 북한 도발 대응 및 제재·압박 강화를 위한 공조

□ 주요 성과

-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가운데* 긴밀한 한미공조下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태세 강화
 - 한미 정상회담(5.21)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간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 천명
 - ※ 동 계기 ▲ 확장억제 제고,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강화, ▲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시 담대한 계획 제시 등에 대한 공동인식 도출
 - 정상회담 시 양 정상 간 한미 외교·국방 2+2 고위급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 조기 재가동에 합의하여, 5년 만에 개최된 제3차 EDSCG(9.16, 워싱턴)에서 미측의 기존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뿐만 아니라 진전된 비핵(非核) 전력(우주, 사이버 등) 등 모든 군사 역량을 총동원한 대한민국 방위공약 확인

< 제3차 EDSCG 개최 관련 참고자료 >



※ (언론보도) '미국의 약속→한미공조' ... 한국 목소리 커진 EDSCG 논의 (연합뉴스, 2022.9.17.)

- "북핵 대응을 위한 제3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 (중략)... 과거 회의들과 비교해 논의가 구체화하고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한미가 이번 회의의 결과를 '공동성명' 형식으로 담은 것은 북핵이 고도화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확장억제에 대한 중요성도 커진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사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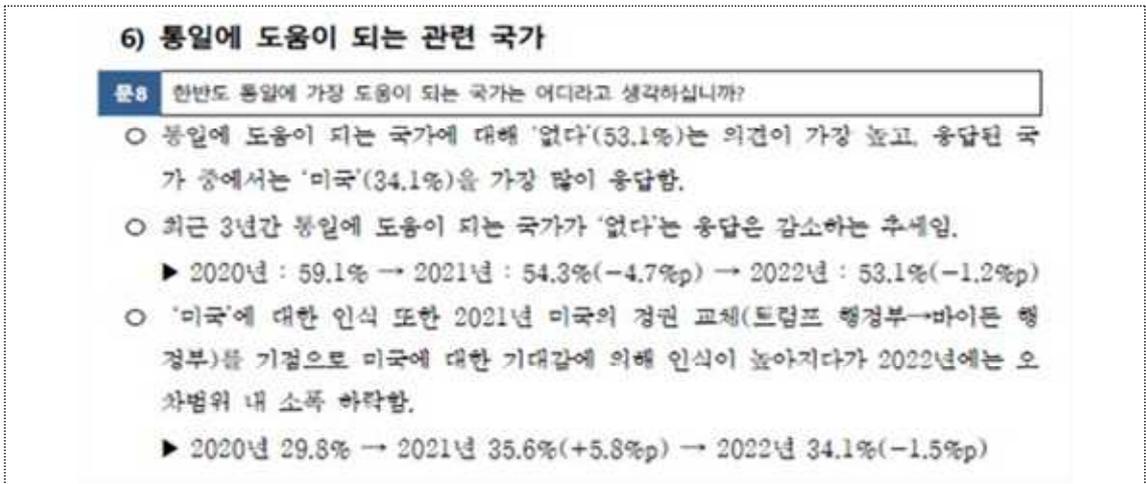
- 북한이 올해 들어 역대 최다 횟수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 전방위적으로 핵·미사일 위협을 강화함에 따라 한·미·일 3국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
 - ※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중대 도발 시 수시로 한미·한일·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간 협의를 개최하고, 2차례의 한미일 외교장관 간 공동성명(5.28, 9.22),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공동성명(6.8) 등 문서로서 3국간 단결과 단합을 과시

< 한미·한미일 공조 강화 관련,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발언 >

- ▲ “최근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한미일 공조 강화는 한국과 일본을 더욱 가깝게 하는 것을 포함해 많은 이점이 있다” (YTN, “美 블링컨 “北 도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반발”, 2022.10.18.)
- ▲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한국 및 일본과의 동맹을 강조**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겠다”, “북한의 도발은 한국, 일본 안보에 대한 우리의 절대적 약속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방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결의를 강화할 뿐**” (노컷 뉴스, 블링컨 “北 도발은 한미일 동맹 강화할 뿐”, 2022.11.5.)

- 또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국가로 확인된 **미국***과의 공조가 더욱 강화되면서 **국민들의 외교·안보적 수요에 부응**

* 2022년 국민 통일 의식 조사(KBS 공영미디어연구소)(7.27-8.1) 결과, 통일에 가장 도움이 되는 국가로서 '미국'이 34.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 (단, '없다'는 응답 제외 시)



○ 국내 유관·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중대한 도발에 적시 대응하고, 기존 대북 제재·압박 및 신규 제재 강화를 위한 **노력 지속**

- 보다 실효적인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을 위해 국내 유관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5년 만의 독자제재 합동 발표(10.14)**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외교·안보 부처간 협력을 증대**하고 **정보교환을 지속**하여 5년 만에 한미 외교·국방 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9.16, 워싱턴), 언론에서는 **과거 회의들과 비교해 논의가 구체화하고 진전됐다는 평가***

* '미국의 약속→한미공조' ... 한국 목소리 커진 EDSCG 논의 (연합뉴스, 2022.9.17.)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對 중·러 갈등으로 인한 안보리 균열 속에서도 미·일 등 우방국과의 북핵 대응 공조 강화를 통해 국제 사회의 단호한 북핵 불용 메시지 발신 노력 지속 추진
- 우리 정부는 5년만에 대북 독자제재(개인 15명·단체 16개, 10.14)를 통해 미국 등 우방과의 교차·중첩적인 독자제재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우방국과의 대북제재 공조 강화

< 2022.10.14.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 >

개인 (15명)	강철학(제2자연과학원 심양대표)	양대철(연봉무역총회사 소속)
	김성훈(제2자연과학원 심양부대표)	김병찬(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변광철(제2자연과학원 대련부대표)	김경학(연봉무역총회사 소속)
	정영남(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성원)	한권우(연봉무역총회사 소속)
	정만복(연봉무역총회사 단동대표부)	김호규(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리덕진(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박동석(연봉무역총회사 소속)
	김만춘(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박광훈(연봉무역총회사 소속)
	김성(연봉무역총회사 소속)	-
기관 (16개)	로케트공업부	육해운성
	합장강무역회사	원유공업국
	조선승리산무역회사	하나전자합영회사
	운천무역회사	화성선박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구룡선박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	금은산선박회사
	GENCO(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해양산업무역
	국가해사감독국	CK International Ltd.

- 특히, 한·미·일이 연이어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함으로써 제재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3국의 강력하고 단합된 의지와 긴밀한 공조 시현

 <p>정치·언론</p> <p>일본 "한국 독자 대북제재 지지...미한일 3자 안보협력 등 모든 대응책 강구"</p> <p>2022.10.18 연6명</p> <p>일본 정부가 5년 만에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한 한국의 결정에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 일본 간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p>	<p>※ (언론보도) 우리 정부 대북 독자제재 발표 관련 日측 긍정적 반응(VoA코리아 2022.10.18)</p> <p>- 일본 외무성 대변인,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로 한국 정부가 최근 단행한 대북 추가 제재를 지지한다" (기사 일부)</p>
---	---

- 대화를 통한 비핵화 추진이라는 기본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고조되는 도발에는 제재 강화 등을 통해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

2) 북핵문제의 해결방안

문15 북핵문제의 올바른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북핵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남북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35.5%)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26.5%), '6자회담을 통해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22.8%) 등의 순임.
- 최근 3년간 조사에서 '남북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임(2020년 30.0%, 2021년 31.2%, 2022년 35.5%).

※ 최근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2순위** 차지(2022년 국민 통일 의식 조사,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7.27-8.1)

-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下 해상·해외 노동자 등 분야에서의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도 추진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감시하고 저지하는 '네온 작전(Operation NEON)'을 이행 중인 캐나다 정부와 정상회담(9.23, 오타와) 및 외교장관회담(10.14, 서울)시 해상 분야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한 양국의 협력 강화와 구체적 방안 지속 모색 의지 표명



※ (언론보도) 캐나다 '한국캐나다 정상회담 한반도 안보 경제 협력 집중 논의' (VoA코리아, 2022.9.20)

-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의 해상 활동을 감시하고 저지하는 '네온 작전'을 통해서 한반도의 역내 안보 문제에 대해 **캐나다와 한국이 계속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일부)



※ (언론보도) 한국 외교장관 "북한 중대 도발 시 국제사회 대응 필요" ... 캐나다 외무장관 "대북제재 이행 의지 재확인" (VoA코리아, 2022.10.15.)

- "졸리 장관(캐 외무장관)은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제재 이행**을 위한 **캐나다의 의지는 확고**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달성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기사 일부)

- 점증하고 있는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해외 IT 노동자, 가상자산 탈취 등)*에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대응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외화 자금줄** 및 **대북제재 우회노력**을 차단하여 제재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응 노력도 강화**
 - 한미 정상회담(5.21) 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을 위한 한미 양국 범정부 차원의 **공조 강화 합의**
 - 정상회담 후속조치로서 한미 간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출범, 제1차(8.9, 워싱턴) 회의에 이어 참석 대상을 더 확대한 제2차(11.16, 서울) 회의를 개최하며 **연내 2차례 회의 개최를 통해 1회성 행사가 아닌 정례적·체계적 논의 채널로 공고화**



※ (언론보도) 해킹으로 2조 버는 북한..제재 효과 있을까 (KBS, 2022.11.8.)

- “장기간 이어진 경제 제재에도 (북한의) 돈줄이 마르지 않은 건, **암호화폐를 훔쳐오는 해커들 덕분**이란 게 국제사회의 분석” / “**북한 ‘암호화폐 수익’ 규모는 연간 1조원 이상... 나라 살림의 10% 이상**”
-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이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조를 이례적으로 강조” (기사 일부)

- 또한, **고위급 소통·협의를 지속 추진***하며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 강화**

* ▲Anne Neuberger 美 NSC 사이버·신흥기술 담당 국가안보부보좌관 방한 및 한반도본부장과 조찬협의(7.26) ▲Victoria Nuland 美 국무부 정무차관 방한 및 한반도본부장과 면담(7.27) ▲Elizabeth Rosenberg 美 재무부 테러 금융·금융범죄 담당 차관보 방한 및 한반도본부장과 면담(9.22) 등 계기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간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국내·외 언론, 국회, 학계,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우리 정부 대북정책 설명 등 **활발한 공공외교 활동** 지속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국내외 여론지도층 인사들의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저변 확대**

- (언론) ▲장관, 중앙일보 인터뷰(6.10) ▲YTN 뉴스Q 인터뷰(6.24) ▲동아일보 인터뷰(8.19) ▲JTBC 뉴스룸 생방송 인터뷰(9.26) 등 국내 언론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북핵 관련 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 환기 및 대국민 이해도 제고 노력 지속
 - (국회) ▲장관, 제17차 제주포럼 참석 계기 캐나다 의회·행정부·학계 인사 접견(9.15) ▲1차관, 미 하원 인사 면담(9.15) ▲장관, NATO 의회연맹 대표단 면담(10.20) ▲장관, 몽골 국회의장 면담(10.28) 등을 통해 주요국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 관계자들까지 협력의 대상 확대·다각화
 - (학계 등 기타) ▲한-베트남 한반도 정세 라운드 테이블(8.17-18) 계기 베트남 싱크탱크 대상 한반도 문제 관련 우리 정부 입장 설명 ▲장관, 워싱턴 타임스 대표단* 접견(8.11) 등 활동을 통해 정책결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학계 인사 대상 공공외교 저변 확대
 - * 대표단 : ▲Joseph Detrani 前 6자회담 특사 ▲Beth Van Duyne 연방 하원의원 ▲Walter Sharp 前 주한미군사령관 ▲Alexander Mansourov 조지타운대 겸임 부교수 ▲워싱턴 타임스지 관계자 등
 - (1.5트랙) ‘제2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11.16, 서울)과 연계하여 미 국무부와 공동으로 한미 가상자산 탈취 대응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11.17)
- 국내외·조야를 아우르는 아웃리치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경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지지 여론 확보**(‘대북정책 중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는 답변 53.5%)*

* 2022년 국민 통일 의식 조사(KBS 공영미디어연구소)(7.27-8.1)

3) 현(現)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문19 윤석열 정부가 가장 중시해야 할 대북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53.5%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경제 교류 및 협력’(24.0%), ‘이산가족 상봉’(9.2%), ‘문화예술체육 등 비정치적 교류’(8.6%) 등의 순임. 한편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은 4.6%에 그쳐, 다수의 응답자가 조건부 지원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장기적 효과

- 북한의 전례없는 빈도와 강도의 도발에 대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는 것이 없으며 자신의 안보만 저해할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
- 또한,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및 사이버 활동 등 비전통적인 북한 외화벌이 창구 차단 등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 강화를 통해 북한이 핵개발을 단념하고 대화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4 원칙있는 대북관여 추진

□ 주요 성과

-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5년만에 임명) 정부 출범 2개월여 만에 지난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조속히 임명(7.19)함으로써, 북한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대내외에 발신
- ※ (북한인권법 제9조제2항) 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이하“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특히, 유엔인권사무소(OHCHR), 세계식량계획(WFP) 한국사무소, 유니세프(UNICEF) 서울사무소 등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전수식을 개최(7.28)하고, 국제사회 대상 북한인권 관련 협력 메시지를 발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장 전수식(7.28)

- (북한인권 관련 국제 논의 주도) 한미일 정상회담(11.13) 공동성명에 우리 납북자·억류자 관련 문안을 최초로 포함시키는 등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 환기를 위한 주도적 역할 수행
 -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새롭게 임명된 Salmon 유엔 북한인권특별 보고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공조 구축 선도

< 한미일 3국 공동성명(11.13) 납북자억류자 관련 문안 >

- ▶ 3국 정상은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 ▶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이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화상통화(8.3)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면담(10.26)

- (북한인권 관련 국제사회 공조 강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아웃리치 등 적극적 활동을 통해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국제적 관심 제고 및 북한인권·인도적 상황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 (외국정부) 북한인권·인도적 상황 관련 미국·EU 등 주요국 외국정부 인권 담당 인사들과의 다양한 공조 활동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 관련 우리 정부 활동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 모색



미국 前 북한인권특사 화상통화(8.22)



EU 인권특별대표 면담(9.28)

- (국제기구) 유엔 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에 참석(10.26)하여 북한의 심각한 인권 실태를 상기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환기
- 한편, 상기 계기 북한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등 원칙있는 대북관여 기조 견지



유엔 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상호대화(10.26)

< 유엔 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상호대화 계기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주요 발언 내용 >

- ▶ 납치·강제실종·전쟁포로 문제에 대한 우려 표명
- ▶ 북한이 우리측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화답할 것을 촉구
- ▶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북한에 정보공개 및 재발방지를 촉구
- ▶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잊어서는 안 됨을 강조

- (북한인권 관련 국내적 관심 제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언론 인터뷰 및 북한인권 관련 국내 세미나·라운드테이블 참석 등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적 관심도 제고 및 다수 언론에서 긍정 보도

* 주한미국대사관 주최 북한인권 라운드테이블 참석(11.15) 등



RFA 인터뷰(9.6)



문화일보 인터뷰(9.15)

<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활동 관련 주요 언론 보도 >

- ▶ "이신화 北인권대사, 유엔 인권보고관과 화상통화..." "긴밀협력" (8.4, KBS)
- ▶ "이신화 "美 북한인권특사 조기 임명돼야"...로버트 킹 전 특사와 통화" (8.23, SPN)
- ▶ "한국 북한인권대사 "북 인권탄압 책임 규명 최우선" (8.24, VOA)
- ▶ "北인권대사 "제재·인권문제 압박으로 北 협상장 유도해야" (9.29, 연합)
- ▶ "이신화 北인권대사, 브뤼셀서 EU와 북한 인권 증진 방안 논의" (9.30, 연합)
- ▶ "이신화 北인권대사 5일 첫 방미...美 정부·학계와 北인권 논의" (10.3, 연합)
- ▶ "이신화 대사 "바이든 행정부, 북한인권특사 임명해야" (10.6, RFA)
- ▶ "북한인권대사, "북한 인권 위해 가치 공유한 국가 간 연대해야" (10.8, imbc)
- ▶ "이신화 대사 "북인권 개선 위해 유럽과 협력" (10.8, RFA) 등
- ▶ "이신화, 유엔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개탄"...北 인권침해 비판" (10.27, 연합) 등

○ (국내외 학계·시민사회 소통 강화) 워싱턴, 브뤼셀, 뉴욕 및 국내에서의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및 미국내 북한인권 활동가 면담 등 국내외 학계·시민사회 등의 목소리도 열린 자세로 경청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 방안 모색

- * ▲ 브뤼셀 전문가 싱크탱크 라운드테이블(9.28), ▲ 미 싱크탱크 CSIS 주최 북한인권 관련 공개행사 참석(10.6), ▲ 북한인권 활동가 면담(10.7), ▲ 북한인권위원회 및 제이콥 블라우스틴 인권증진재단 주최 북한인권 관련 행사 참석(10.28) 등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 규명...그러나 책임 규명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되기에 건설적인 관여도 중요...저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과 역량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축사(10.26)



美 싱크탱크 CSIS 주최 북한인권 행사 참석(10.6)



브뤼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참석(9.28)

○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의 정치적 고려 없이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국내 유관부처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우호적 여건을 조성

- (유관부처 소통 강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제327차, 6.23~6.29) 참석 및 의결을 통해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의 기간을 연장하고, 유관기관 참석 下 한미 북한정책 관련 협의(10.5, 11.15)를 개최하여 북한 내부동향 및 한미간 대북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유관부처와 긴밀한 소통 유지 및 협력 강화

< 제32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안건 의결 >

▶ 제758호 안건 :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 기간 연장('22.6.30까지 → '22.12.10까지)

-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 및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국내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대북 영양·보건협력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총 100억원 이내 범위 지원 계획
- 북중 코로나19 발생 및 봉쇄조치 등에 따른 사업추진의 애로를 고려하여 기간 연장

- ▶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건인하기 위한 한미 양측의 지속적인 공조 강화 강조
- ▶ 북한 내부동향 및 한미간 대북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
- ▶ 긴밀한 소통 지속 약속



한미 북한정책 관련 협의(10.5)

- (인도적 지원 관련 국제사회 협력 강화) 북한의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중단된 상황 하에서도, UNICEF, WFP, OCHA 등 식량·보건 분야 국제기구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 북한내 인도주의적 상황을 공유하고 대북 인도 지원 관련 구체 협력 방안 강구

* ▲ 장관-WFP 사무총장 면담(7.14), ▲ 장관-UNICEF 사무총장 면담(11.7), ▲ 제6차 한-OCHA 정책협의회 참석(11.10) 등

“우리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추진해 나갈 것...WFP의 대북 식량 원조 사업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



장관-WFP 사무총장 접견(7.14)

- (국제사회 우호적 여건 조성) ‘한반도 클럽’(6.10, 11.11) 및 ‘평화 클럽’(6.10, 10.14) 아웃리치 행사를 전년대비 3배 더 개최(1회→3회)하여 북한과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들의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대북 인도적 지원 등 우리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우호적 여건 조성



평화클럽 라운드테이블(10.14)



한반도클럽 라운드테이블(11.11)

□ 장기적 효과

- (가치외교 비전 실현) 국제사회 내 북한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공조에 있어 보다 적극적·주도적 역할 수행을 통해,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수호·확대 및 우리 정부의 가치외교 비전 실현
- (북한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 동 사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재환기하고, 국제사회가 함께 북한 당국의 개선 노력을 촉구함으로써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
- (한반도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에 기여) 장기적으로 북한 당국의 인권 인식 변화 및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장을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및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에 기여

2. 동아시아 주요국과의 관계 강화·발전

(공백)

순 서

I. 요약	45
II. 업무 추진 성과	51
1. 업무 개요	51
2. 추진 계획 및 주요 실적	52
3. 주요 추진 노력	56
4. 주요 업무 성과	68
①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68
②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 구현	72
③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 구축 ...	78
④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관계의 안정적 발전 모색	87

(공백)

I. 요약

1 주요 추진 노력

-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에 따라, 한미동맹의 전통적 영역인 군사안보 협력 심화는 물론 공급망 등 경제·기술안보, 인도-태평양 지역, 글로벌 현안까지 양국 간 협력의 내용적, 지리적 외연을 꾸준히 확장
 - 특히, 미래성장 동력 확보 및 국민·기업의 손에 잡히는 실천적 성과 발굴 가능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구체화
 - 또한, 한미간 외교·국방(2+2) 협의 매커니즘을 통한 전략적 소통 강화 등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확장억제 협력 심화
 - 아울러 미 의회 및 조야 인사 대상 아웃리치를 확대하고, SOFA 협의체를 운영하며 기지 반환 등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동맹 현안과 민군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
- 한중 양국은 금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정상 포함 고위급간 긴밀한 교류·소통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상호존중과 호혜 정신에 기반한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토대 공고화
 - 특히, G20 정상회의(22.11월, 발리) 계기 신정부 출범 후 정상간 최초 대면회담을 통해 정상 차원에서 한중관계 중시 메시지 발신 및 미래 협력 방향 구체화
 - 또한, ▲공급망 관리, ▲문화콘텐츠 교류 회복, ▲항공편 확대 등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협력 심화 추진
-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022)’를 맞아 관계부처·기관, 주중공관과의 긴밀한 협업 하, 양국 국민간 인적·문화적 교류 활성화 추진·실시
 - 아울러, ▲현안(문화논쟁, 불법조업 등) 관련 한중간 협의 및 ▲역사왜곡에 대한 對중국 시정 촉구 등 단호한 대응 지속

- ▲역사분야 관련 협력(독립사적지, 유해 송환 등), ▲긴급상황(이태원 사고 등) 대응 지원을 통한 상호간 신뢰·우의 강화 도모
- 신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 2차례의 한일 정상회담, 4년 7개월 만의 외교장관 방일(7.18-20) 포함 각 4회의 대면·통화 실시, 활발한 고위급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양국 관계 개선 전기 마련 노력
- 피해자 고령화, 대법원판결 이행 문제 등 고려, 강제징용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국내 아웃리치 적극 추진 / 대일 협의시,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일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
- 코로나19 등으로 급감한 한일 간 인적교류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무사증 재개 등 제도 전면 정비 / 포스트코로나 양국 민간 교류 행사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및 미래세대 교류 활성화 지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새로운 외교 환경에 맞는 對러 정책 이행
 - 우크라이나 전쟁 下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 노력을 경주하면서 우리 국민 및 기업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 시행

2 주요 업무 성과

- 신정부 출범 이래 군사안보, 경제·기술 협력을 아우르는 한미 간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바탕으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본격 진화 중
 - 특히, 최고 정책결정자인 정상급 교류는 그 빈도와 깊이가 유례 없는 수준
 - 동맹 역사상 최단기간(10여일) 내 개최된 첫 한미 정상회담(5.21.)을 시작으로, 한미 정상이 세 차례* 대면 회담
 - * 바이든 대통령 방한 계기 회담(5.21.), 유엔총회 계기 환담(9.21.),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회담(11.13.)

- 신정부 출범 후 5개월 만에 美 의전 서열 1-3위인 대통령, 부통령, 하원의장이 모두 방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 행정부 및 입법부 수장의 절대적 지지 확인
- 북한의 전례없는 공세적 도발 국면 속에서 美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강화
 - 특히, 한미 정상간 합의에 따라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약 5년 만에 재가동하고 고위급 회의 연례 개최에 합의 → 확장억제에 특화된 외교·국방(2+2) 공조 체계 제도화
- 경제안보·기술 관련 한미 간 전략적 소통 및 협력 확대
 -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가안보실(NSC)간 경제안보대화 출범
 - ▲ 핵심광물, 반도체, 에너지 등 공급망의 안정화·다변화 및 ▲ 외환 시장 안정화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실질 협력 방안 모색
- 한미일 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하고, 3국 공조의 외연을 지역·글로벌 차원으로 확대
 - 지난 6월 NATO 정상회의 계기 5년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6.29.) 개최
 - 아울러, 11월 EAS 정상회의 계기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개최된 두번째 한미일 정상회담(11.13.)에서는 역대 가장 포괄적인 정상 공동성명* 발표
 - * (주요 내용) ▲3국간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도래 등 복합적 도전과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 등
- 역내 및 글로벌 안정·평화·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한미 공조 확대
 -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관련 공조 의지 확인
 - 한-아세안 정상회의(11.11.) 계기 우리나라 최초의 포괄적 지역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 미측 환영·지지 표명

- 태도국 협력 관련 공조를 위해 美 주도 유사입장국간 이니셔티브인 '태평양도서국협력구상(Partners in the Blue Pacific)'에 참여
 - 이외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기후변화 대응 및 인태지역 내 자유·인권 등 보편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긴밀한 공조 지속
- 신정부 출범 이래 정상 포함 고위급간 활발한 교류·소통 지속
- (정상) ▲당선인 자격으로 시진핑 주석과 최초 통화(3.25), ▲수교 30주년 기념 축하 서한 교환(8.24), ▲G20 정상회의 계기 3년 만에 한중 대면 정상회담 개최(11.15, 발리)
 - (장관) ▲화상통화(5.16), ▲G20 계기 회담(7.7, 발리), ▲장관 방중 계기 외교장관 회담(8.9, 칭다오)
 - 이외 ▲왕치산 국가 부주석 방한(대통령님 취임식 축하사절단),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방한 등
- 한중 각급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외교정책 기조(글로벌 중추 국가) ▲사드 등 현안 관련 기본 입장 등에 대한 중국측 이해 제고
- 특히, 외교장관 방중(22.8월, 칭다오) 등 계기에 우리 국익·원칙에 따른 당당한 외교 전개를 통해 사드 등 현안이 양국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자는 공감대 형성
- 수교 30주년 기념행사 등을 통해 지난 30년간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한중 협력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공감대 형성
-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행사」 서울·베이징 동시 개최(8.24) 및 양국 정상간 축하서한 교환, 총리 및 외교장관간 축전 교환
 - 지난 1년간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운영을 통해 양국 각계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공동보고서 작성 완료
- 북한의 전례 없는 빈도의 도발 국면 하,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견인
- 시진핑 주석, 한반도 평화안정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지속 발휘 의사 및 우리 담대한 구상(이행여건 마련시)에 대한 지지 표명(11.15)

- ▲ 공급망, ▲ 문화콘텐츠, ▲ 항공편 등 분야에서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부 실질협력 성과 거양
 - (공급망 관리) 정상 차원의 공급망 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제26차 한중 경제공동위 개최(11.24) 등
 - (문화콘텐츠 교류 회복) 올해 초 5년여 만에 중국 내 한국 드라마 방영 재개(현재까지 총 13편) 및 중국 OTT 플랫폼 내 한국 영화 서비스 개시
 - (항공편 확대) 정기항공편 주 51회 운항 승인(※ 11.8. 기준 / 실제 운항편수는 수요에 따라 변동) 및 인천-상하이 직항편 운항 재개 (11.17 아시아나 / 11.20 대한항공) 등

- ▲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022)’ 교류사업, ▲ 한중 청년 우호증진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실시, 양국 국민간 상호인식 개선 및 우호 감정 제고 기반 마련
 - 한중간 차세대 참여, 쌍방향적 교류 등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학술, ▲청소년, ▲지방 교류, ▲공연·전시, ▲스포츠 분야 관련 문화교류의 해 사업(160개) 및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9.30, 외교부 발대식) 등 적극 추진
 - ▲중국군 유해(88구) 인도, ▲우리 유조선 긴급구조 관련 중국측 협력 확보 등 통한 한중간 신뢰 제고

- 한일간 고위급 교류 활성화로 양국 관계 긍정적 흐름 형성
 - 약 3년 만에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9.21)을 필두로 장관 방일(7.18) 및 매월 1회 빈도로 개최된 장관회담, 양국 정상·장관 간 수시 통화 등 연쇄적 고위급 접촉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의 전기 마련
 - 그 외, 국무총리 방일(9.27, 아베 前총리 國葬 참석) 및 차관협의 2회(6.8., 10.25) 등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한 협의를 실시, 다층적 신뢰 회복 토대 구축
 - 10월 기시다 총리 소신표명 연설시 한일관계 전향적 언급, 양국 정상회담 등에 대한 일본 내 우호 분위기 형성 시작

- 한일 현안 관련 국내 의견수렴 및 대일협의 가속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 최초의 강제징용 민관협의회 출범 및 4회(7.4, 7.14, 8.9, 9.5) 개최, 외교 장관 최초 징용 피해자 방문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 수시 국장협의 등 대일협의를 통해 수렴한 국내 의견을 일측에 전달하고 성의 있는 호응 촉구

- 한일 인적교류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전면 복원 및 민간교류 적극 지원
 - 그간 대일협의 시,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 상호 무비자 복원 등 중점 제기, 소기의 성과 목표 조기 달성 → 국민 불편 크게 개선
 - ▲한일축제한마당 ▲한일대학생교류 등 민간 대면 교류 적극지원 / 특히 미래세대간 교류·소통 집중 지원 한일관계 중장기 비전 모색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강력 규탄하고 국제규범 및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공조
 -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 對러 규탄 결의에 동참하고, 對러 수출 통제·금융제재 시행중

- 국제규범과 원칙, 우리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 노력 경주
 - 러시아와 외교채널을 통한 필요한 소통을 지속하는 가운데 대러 제재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 노력 경주

II. 업무 추진 성과

1 업무 개요

□ 업무 목표

- (한미) 한미간 협력 분야와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인태지역과 글로벌 질서의 미래비전을 함께 설계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지속 발전
- (한중) 상호존중 원칙 下 실질협력을 강화하여 한중관계를 더욱 업그레이드함으로써 미래 30년을 위한 든든한 발전 토대 마련 및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측의 협력 확보
- (한일) 한일 신뢰 회복을 토대로 셔틀외교 복원 및 현안의 포괄적 해결 등 양국 관계를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 관계로 발전
- (한러)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 모색

□ 업무 주요 내용

- (한미) 한미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고 경제안보·기술안보 및 인태 지역을 포함한 역내·글로벌 현안 관련 한미 협의 및 공조를 보다 활성화하며, 한미간 안보협력 강화 및 미 의회·조야 인사대상 아웃리치를 확대하는 가운데 민군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
- (한중) 상호존중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중간 협력의 범위·수준을 확대함으로써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로의 발전 토대 마련
 - ①고위급간 소통 적극 추진, ②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 및 대화 복귀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견인, ③경제·문화·환경·인적교류 등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강화, ④우호 정서 기반 강화, ⑤중국 대내외 정세 분석 등을 통한 對中 외교적 역량 증대 등

- (한일) 고위급 교류·소통 활성화를 통한 양국 간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한일 간 인적교류 복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며, 지역·초국경적 이슈 공동 대응을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유사 입장국과 다자·소다자 차원의 협력을 추진하고 현안 관련 국내 의견수렴 및 대일협의 가속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
- (한러)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가운데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 노력 지속

2 추진 계획 및 주요 실적

세부추진과제	추진 계획	주요 실적
1.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급 교류) 한미 및 한미일 고위급 교류(7월, 8월, 10월, 11월) ■ (경제·기술 안보 및 글로벌 현안 대응 관련 한미공조 확대) 고위급 회담 계기 한미동맹의 발전 및 글로벌 현안 대응 관련 대미 협의 지속(연중) ■ (한미 인태협력 추진) 국내외 견 수렴 및 유관국 북미국장 협의(9월), 인태전략 대외발표(12월) ■ (한미 안보동맹 강화) 통합국방협의체 개최(8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개최(9월) 한미안보협의회의 개최(11월), 동맹의 밤 및 한미동맹 세미나(11월) 한미안보협력 관계관 회의(12월) ■ (의회외교 활성화 및 아웃리치 확대) 장관-하원 대표단 및 언론 면담(8월, 9월), 장관-미 외교협회 등 면담(11월) ■ SOFA 협의체 운영 및 현안 관리, 기지 신속 반환 추진, 민군관계 강화활동 등(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급교류) ▲정상회담(5.21., 9.21., 11.13.), ▲부통령 방한 계기 대통령 접견(9.29), ▲국무총리-부통령 회담(9.27.) ▲장관회담(6.13., 6.29., 8.5.), ▲장관 통화(5.13., 8.19., 10.4., 11.2.) ▲차관 회담(6.7., 9.15., 9.16., 10.25.) ▲차관 통화(5.18, 10.4, 11.3), ▲차관보 회담(12.12.), ▲한미일 정상회담(6.29, 11.13.), ▲한미일 장관회담(7.8, 9.22), ▲한미일 차관회담(6.8, 10.26), ▲한미일 차관 통화(5.26, 10.4, 11.7, 11.22)등 ■ (경제·기술 안보 및 글로벌 현안 대응 관련 한미공조 확대) 고위급 회담 계기 한미동맹의 발전 및 글로벌 현안 대응 관련 대미 협의 지속(연중) ■ (한미 인태협력 추진)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북미국장회의(8.25.-26), 한-베트남 북미국장회의(10.5.), 한-인도 북미국장회의(10.7) 한-인도네시아 북미국장회의(10.10) ■ (한미 안보동맹 강화) 제7차 한미안보협력 관계관회의(6.23.), 제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참여(8.16-17), 제3차 한미 외교·국방 고위급

		<p>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9.16), NSC 국가안보보좌관 면담(9.15.), 미사일 방어청 방문(9.14.), 장관, 인태사령관 접견(10.6.), 장관, 전직 주한미사령관 접견(10.26.) 제 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11.3.), 한미동맹의 밤 및 세미나 개최(11.18.), 제8차 한미안보협력 관계관 회의(1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외교 활성화 및 아웃리치 확대) 장관-하원 대표단 면담(7.4.), 대통령-미 하원의장 통화(8.4.), 대통령-미 상원 위원장 면담(8.12.), 장관, 워싱턴타임즈 대표단 접견(8.11.) 대통령-주지사 접견(9.3., 9.16.), 장관-하원 의원 대표단 면담(9.5.) 대통령-미 상원의원 접견(10.26.), 대통령-미 외교협회 회장 접견(11.2.), 대통령-CSIS 대표단 접견(12.2.), CSIS 포럼 축사(장관, 12.1.), 장관-미 외교정책협의회 대표단 접견(12.8.) ■ SOFA 합동위원회, 분과위원장 회의, 분과위별회의 개최(연중) SOFA 국민지원센터(서울·평택) 아웃리치(수시), 주한미군 대상 도로교통안전 홍보동영상 제작 및 배포(8월),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에 필요한 SOFA 잔여부지 공여완료(9월), SOFA 국민지원센터, 평택지역 한미 합동순찰 실시(4월, 9월, 11월)
<p>2.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 구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고위급간 교류 적극 추진을 통해 양국간 전략적 소통 강화 ■ 한중간 경제, 해양 등 분야 협의체를 적극 가동하여 국민 체감 분야 관련 협력 추진 ■ 한중간 우호감정 강화 노력 경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급 교류) 대통령 당선인-시진핑 주석 전화통화(3.25), G20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 회담(11.15), 대통령-왕치산 부주석 접견(5.10),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방한(9.15-17), 국가안보실장-양제츠 중앙정치국 위원 통화(6.2), 한중 외교장관 화상 통화(5.16),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7.7), 장관 방중(8.8-10)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 및 만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교 30주년 기념) 양국 정상 간 축하서한 총리 및 외교장관 간 축전 교환, 수교 기념행사 서울-베이징 동시 개최(8.24) -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공동 보고서 제출식(8.24) ▪ (이태원 사고)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왕이 외교부장 명의 조전 접수(10.30) 및 이에 대한 답전 발송(11.4/11.14/11.7) ▪ (경제)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 회의(7.14) 및 제26차 한중 경제 공동위(11.24) 개최 ▪ (해양) 제2차 해양협력대화 개최(6.16), 제10차 한중 해양경계획정 회담 개최(11.23) ▪ (인적·문화적 교류) ‘한중 문화 교류의 해(2021-2022)’ 교류사업 실시(연중) ▪ (미래지향적 교류협력 추진)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출범(9.30),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정책 발표회 및 시상식(11.25) ▪ (역사) 외교부 본부중국지역 공관·유관기관 간 「역사 담당관 회의」 개최(3.25, 9.23) ▪ (해양) 불법조업 담당관 회의 개최(4.19)
<p>3.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급 교류) 장관 방일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 및 기시다 총리 예방(7월), ARF 계기 한일외교장관 회담(8월), UN총회 계기 고위급 교류 추진(9월), 다자계기 고위급 교류 추진(11월) ▪ (인적교류 복원) 김포-하네다 노선 증편(7월), 서울페스타 계기 한시적 무사증 입국 실시(8-9월), 무사증 복원 관련 협의(연중) ▪ (지역·초국경적 이슈 대응)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7월), 다자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급 교류) ▲정상회담 및 통화(9.21/11.13/10.6) ▲총리회담(9.27) ▲외교장관 회담 및 통화(5.9/5.25/7.18/8.4/9.19/10.4/11.3/11.18) ▲외교차관 회담 및 통화(6.8, 10.25) ▲아소 전총리 대통령 예방(11.2) ▲한일·일한의원 합동총회 계기 일본 의원단 대통령 예방(11.4) 등 ▪ (인적교류 복원)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6.29) ▲김포-하네다 노선 증편(7.25/10.30) ▲서울페스타 계기 한시적 무사증 입국 실시(8.4-31) 및 연장(9.1-10.31) ▲한일 국제여객선

	<p>기 한미일 고위급 교류 추진 (연중)</p> <p>■ (현안 해결방안 모색) 강제징용 관련 민관협의회(7-9월), 피해자 및 지원단체, 법률대리인 소통(7-9월), 피해자측 비롯 각계각층 의견수렴 및 소통 지속(연중)</p>	<p>여객운송 재개(10.28) ▲ 상호 무사증 입국 제도 복원(11.1-)</p> <p>■ (지역·초국경적 이슈 대응) ▲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7.8) ▲ 유엔총회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9.22) ▲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한일 외교장관통화(10.4),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한일 정상통화(10.6) ▲ 한미일 차관협의회(10.26) ▲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한일 외교장관통화(11.3/11.18) ▲ 북한의 일련의 도발 관련 한미일 3자 통화(11.7)</p> <p>■ (현안 해결방안 모색) ▲ 강제징용 관련 민관협의회 개최(7.4/7.14/8.9/9.5) ▲ 이태극장 지원단체 면담(7.28) ▲ 한일 국장협의(8.26/10.11) ▲ 외교장관 광주 강제징용 피해자 방문(9.2)</p>
<p>4.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리관계의 안정적 발전 모색</p>	<p>■ 우크라이나 사태 下 한러간 주요 현안(한반도 문제, 실질 협력 등) 관리를 위한 소통 유지(연중)</p> <p>■ 대러 제재로 인한 우리국민 기업 피해 최소화 및 경제협력 기반 유지 노력 경주(연중)</p>	<p>■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p> <p>*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4건) 및 국제무대에서 러시아 규탄 성명 동참 및 공동제안국 참여</p> <p>* 對러 제재 동참수출통제 및 금융제재</p> <p>■ 한러 간 필수적 소통 유지</p> <p>* ▲ G20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계기 외교장관 조우(2회) ▲ 신임 주러대사 부임(8.31) 및 푸틴 대통령 앞 신임장 제정(9.20) ▲ 신정부 출범 계기 취임이임 서한 교환 ▲ 북핵수석대표 협의(4회) ▲ 기타 외교채널을 통한 실무접촉 등</p> <p>■ 우리 국민·기업 피해 최소화 노력</p> <p>* 관계부처 및 재외공관 협조 下 ▲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 개최 ▲ 對러 수출통제 설명자료 배포 ▲ 수출입 기업 대상 금융지원 등 조치 시행</p> <p>* 극동 정기 여객선 동해-블라디보스톡 운항 재개(주회 6.29~) 등</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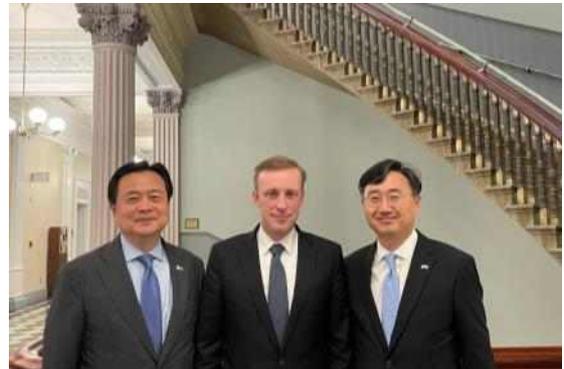
3 주요 추진 노력

① 투입노력

- (한미일 3국협력 확대) 5년만에 22년 6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한 데에 이어, 11월 EAS 정상회의 계기에도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전례없이 포괄적이고 강력한 수준의 한미일 공조 실
 - 6월 NATO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회담에서 3국 협력에 대한 정상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후 한미일은 장·차관급에서도 각 2회의 회담을 개최하여 3국 공조 강화를 위한 구체 방안을 논의
- (인태전략TF 창설) 외교부 각 분야 소관 국에서 폭넓게 참여하며 차관보를 TF단장으로 하고 북미국장을 간사로 하는 외교부 내 인태 전략 TF를 창설, ▲국내 의견수렴(학계 세미나, 업계 간담회 등), ▲유관국 협의, ▲정부 내 검토(유관 부처 간 협의 등)를 통해 역내 주요 국가들과 공조·협력하는 인태전략 수립 추진
- (한미간 전략적 소통을 통한 안보협력 강화) 우리 국방부와 긴밀한 협력하 백악관, 미 국무부 및 국방부 등 미측과의 협의 주도
 - ▲Jake Sullivan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면담(9.15.), ▲Laura DeSimone 미 미사일 방어청(MDA) 부청장 접견(9.14.), ▲Aquilino 인태사령관 접견(10.6.), ▲전직주한미사령관 접견(10.26.) 등



박진 장관, John Aquilino 인태사령관 접견
(10.6.)



조현동 1차관, Jake Sullivan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면담(9.15.)

○ (적극적 소통을 통한 美 의회와의 관계 강화) 美 의회 내 친한 지한파 네트워크 강화 및 우리 지지 기반 공고화

- ▲박병석 前 국회의장 방미(6월), ▲국회평화외교포럼 대표단 방미(6월), ▲미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 방한(7월), ▲미 하원의장 방한(8월), ▲미 상원 동아태소위원장 방한(8월), ▲미 하원의원 대표단 방한(9월) 등 계기 한미간 소통*

* ▲대통령-미 하원의장 통화(8.4), ▲대통령-미 상원 동아태소위원장 면담(8.12), ▲대통령-댄 설리번 상원의원 면담(10.26), ▲국무총리-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면담(7.6), ▲국회의장-미 하원의장 접견(8.4), ▲장관-미국 하원의원 대표단 면담(9.5), ▲장관-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면담(7.4), ▲장관-태미 덕웁스 상원의원 면담(6.3), 장관 방미 계기 ▲미 하원 외무위 지도부 간담회(6.14), ▲미 하원 외무위 간사 접견(6.14), ▲미 상원 동아태소위원장 면담(6.13), ▲영 김 미 하원의원 면담(6.14), ▲미 상원 친한의원(크리스 쿤스, 빌 해거티, 존 오소프) 접견(6.14) 등



대통령, 미 상원 동아태소위원장 면담 (8.12.)



장관, 미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 접견 (7.4.)

○ (기지 반환) 용산기지를 포함하여 아직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주한 미군 기지들의 신속한 반환을 위해 SOFA 협의체를 적극 가동하여 대미협의 실시

- 또한,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완전성 보장 차원에서 용산기지 잔류 부지 이전을 위한 국방부-주한미군 간 기술적·전문적 SOFA 채널 논의 실시

○ (SOFA 협의체 운영을 통한 안정적 현안 관리) SOFA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주요 한미 동맹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

- (성주 사드기지 잔여부지 공여) 우리 정부 주요과제로 추진중인 사드기지 정상화 차원에서 SOFA 합동위 승인을 통해 성주 사드기지 잔여부지 공여 절차 완료(9월)
- (주한미군 기지 환경 관련 문제 논의) 가능한 계기마다 한미간 환경문제를 심도있게 논의, 양측간 공감대 형성 노력 지속
- (주한미군 코로나19 방역협력) 지난 2년간 구축해온 ▲질병관리청, ▲국방부, ▲중대본 등과의 유기적인 협업 및 소통체계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며 새로 생겨난 형태의 협력 수요(주한미군 장병 출입국절차 등)를 식별하여 해결
- (「한중 미래발전 공동행동계획」 채택 추진) 외교부를 중심으로 수교 30주년 계기 미래 한중 협력 방향 모색 위한 분야별 각급 채널 활성화 위한 공동행동계획 채택 추진
 - 8월 장관 방중 계기 우리측 최초 제안 후 현재 양측간 문안 협의 중 / 향후 교류 이행에 참고 예정
- (다각적 교류행사 개최를 통한 양국민간 우호 증진 노력 전개) ▲주중 공관 지역 특화 교류행사, ▲참여형 한중 교류사업, ▲대국민 공공외교, ▲전문가 간담회·강연 등 통해 양국민간 상호인식 제고 도모
 - (주중공관 특화 행사) ▲한중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을 소개합니다 미담사례 공모전(주중대사관) ▲한중수교 30주년 계기 임정의 발자취를 찾아서 사적지 탐방(주상하이총영사관) ▲수교동이(92년생) 한중 청년 예술가 교류전(주상하이총영사관) ▲동심동행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3.0km 걷기 행사*(주선양총영사관) ▲한중(란저우) 우호림 행사** (주시안총영사관) ▲한-홍콩 서예 교류 전시회(주홍콩총영사관) 등
 - * 수교 30주년 상징 3.0km 걷고 온라인 인증(해시태그 사용 등)
 - ** 수교 30주년 상징 소나무 30그루 식목
 - (국민 참여형 한중 교류사업)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9~11월) ▲신진 한반도 전문가 모임(7월) ▲한중 우호수호천사단(주중대사관) ▲한중 우호 SNS 서포터즈(주광저우총영사관) ▲한중 청년교류 행사(주우한총영사관) 등

* 국내 대학 재학 중인 한·중 대학생 19명으로 구성 / 양국민간 우호증진 방안 토의, 관련 콘텐츠 제작 및 홍보·정책 제언 발표회 등 실시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한중 우호수호천사단(중국)

한중 우호 SNS 서포터즈(중국)

- (對中 공공외교) ▲ 제3기 대학생 외교 아카데미 강연(7.15) ▲ 국민 외교 열린캠퍼스 강연(11.8) ▲ 한중 문화교류 이야기 유튜브 영상 제작(9.30 공개) 등
- (전문가 간담회·강연) ▲ 한중 우호감정 증진 방안 논의를 위한 주중공관-관계기관-전문가 합동 회의 개최(2.28), ▲ 한중 청년 우호 증진단 발대식 초청 강연(9.30) 등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022)' 대표 사업

수교 30주년 기념 음악극

한중 인문학 포럼

ABC(AI&Big data&Cloud) 포럼

-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공동보고서 완료) 한중관계 미래발전 위원회 공동보고서 제출 행사(8.24)를 개최하여 양국 전문가들의 한중 관계 미래 발전 방향과 정책에 대한 제언 접수, 향후 외교정책 수립에 참고 예정
 - 작년 8월 출범 이후 1년 간 미래계획,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 문화 등 각 분과별 한중 공동회의 18회 및 전체회의 4회 개최
 - (對日 고위급 교류 및 실무협의 활성화) 지난 3년 평균 7건(21년도 6건)에 비해 금년 15건 이상*, 배 이상 노력 투입 / 특히, EAS 계기 정상회담 등 고위급 교류 내용·형식·빈도 면에서 과거에 비해 현격한 진전
- * (차관급 이상 회담·통화) ▲ 정상회담(1회)·통화(2회) ▲ 국무총리 방일(1회) ▲ 외교 장관 회담(4회)·통화(4회) ▲ 외교차관 회담(2회)·통화(1회)

- 그 외, 국무총리 방일(9.27, 아베 前총리 國葬 참석) 및 차관협의 2회 (6.8/10.25), 수시 국장협의 등 **한일간 소통 상시화**
- (한일 인적교류 제도 복원 여건 마련) 외교당국 협의 및 의회·정재계 일본 조야 주요인사와 면담시, ▲격리면제,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 ▲무사증 재개 촉구 / 국내 관련부처(질병청, 국토교통부, 공항공사 등)와 긴밀한 협업 下 우리 방역 체계 개선, 제도 복원 여건 마련
-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TF 운영) 초기부터 외교부 비상대응 TF를 중심으로 경제 피해 최소화 및 우리 국민·기업 지원을 위한 적극적 조치 시행
 - ※ 「외교부 우크라이나 TF(단장 : 외교부 2차관)」: ① 우크라이나 현황 ② 기업 피해 최소화 지원 ③ 현지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철수 등 대응방안 마련
- 재외공관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하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 개최 ▲對러 수출통제 설명자료 배포 ▲수출입 기업 대상 금융지원 등 기업 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조치 시행
- 신속해외송금제도 확대 운영(3.21.)을 통해 현지 유학생 및 국민들의 외환 결제·송금 등 애로사항 해소 노력
- 한-러 간 특별 여객선 운항(3.31.), 극동항로 정기 여객선(동해-블라디보스톡) 운항 재개(주1회, 6.29.~) 등 현지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귀국 지원

② 일하는 방식 개선

- (한미 안보 현안 관련, 우리 외교·국방당국간 협업·소통 강화) 안보이슈 특성을 감안, 우리 국방부와 상시적인 협업체계 유지 및 강화
 - ▲제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8.16.-17.) 참석, ▲제3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9.16.) 공동 개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11.3.) 참석 등 전략 협의 실시
- (여타 우방국(美 동맹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일본, NATO 사무처, 유럽 주요국 등 미국 이외 협의 대상 다변화
- (중국 업무 관련 부내 여타국과의 유기적 협업) 미중 전략적 경쟁 심화 하, 중국 이슈 관련 우리 입장 수립 검토 과정에서 북미국, 경제국, 국제기구국 등과 긴밀한 소통 및 유기적 협업체제 가동

- (한미관계) 한미 정상 공동성명상 중국 요소 포함 관련 입장 검토
- (지역협력) 우리 정부의 IPEF, Fab4 참여, NATO 정상회의 참여 등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하 역내 역할 확대 관련, 중국 요소를 감안하여 입장 및 조치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
- (가치문제) 신장 문제 등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 참여시 우리 입장 수립 지원
- (對中 문화교류 관련 부처·지자체·공관과의 유기적 협업) 코로나 상황에서도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022)'를 맞아 지자체, 공공기관, 양국 주재공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총 160개 문화교류 사업 추진
 - 코로나19 등 제약 상황에서도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바, 11월 기준 131개(약 82%) 사업 완료 예상
- (대면·비대면 혼용 하이브리드형 외교로 외교공백 발생 방지) 중국의 엄격한 방역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면·비대면 방식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적극적인 對中 외교 전개
 - (서한외교 가동) 특히, 정상간 수교 30주년 기념 축하서한 교환 (8.24), 우리 대통령님의 시진핑 주석 앞 20차 당대회 개최 축하서한 (10.16), 이태원 사고 관련 시진핑 주석 명의 대통령님 앞 위로전 (10.30) 접수 등 정상간 서한외교 적극 가동
 - (공군 2호기를 이용한 장관 방중) 중국 내 엄격한 방역정책 시행 등 현실을 감안, 공군 2호기를 이용하여 장관 방중(8.8-10) 추진
 - (비대면 소통채널 활용) 코로나19로 중국측 대표단 방한 등 대면협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2차 해양협력대화(6.16)를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 한중간 해양현안 관련 소통 강화 및 실질협력 증진방안 논의
- (한중 양자 민감현안 관리 관련 범정부적 대응체계 강화) 유관부처·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하, ▲문화논쟁 ▲역사왜곡 ▲불법조업 등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범정부 협의체 개최 등을 통한 우리측 대응방안 협의

- (문화논쟁 관련 모니터링 강화 및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확립) 외교부 본부·중국지역 공관·관계기관 전문가 합동회의를 개최(2.28), 양국민간 우호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화논쟁(한복 기원 논쟁 등) 관련 다각적인 대응 방안 논의 및 신속·효율적인 관계기관 간 상시 협조체계 확보
- (중국의 역사왜곡 관련 주중공관·유관기관과의 협력 심화) 외교부·공관·유관기관 합동 「역사(사적지) 담당관 회의」를 상반기(3.25)에 이어 하반기에 추가 개최(9.23)하고, 특히 중국 국가박물관 특별전 사안(고구려·발해를 삭제한 한국사 연표 전시) 관련 모니터링 체계 점검 및 협력 대상기관 확대(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 중앙연구원 추가)
- (한일 현안 관련 국내 의견수렴 강화) 강제징용 관련 「민관협의회」 출범, 4차례에 걸쳐 피해자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 (한러 관계 주요 사안에서 유관부서의 적극적 협조 확보)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우리 국민 편의 차원에서 코로나19로 중단된 극동항로 정기 여객선(동해-블라디보스톡) 운항 재개를 위해 관계부처(질병청, 해수부 등)의 적극적 협조 견인
- (러 진출 기업·국민 애로사항 파악 및 제기 관련 유기적 협력) 본부와 공관간 유기적 소통 및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우리 국민·기업 보호 업무 추진

③ 기관장 노력

(수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소통·교류의 모멘텀 유지)

- (한미 :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해 활발한 고위급 교류 지속) 5월 첫 한미 정상회담 및 11.13 정상회담 이후, ▲외교장관회담(6.13., 6.29., 8.5.) ▲외교장관 통화(5.13., 8.19., 10.4., 11.2.) ▲외교차관회담(6.7., 9.15., 9.16., 10.25.) ▲외교차관 통화(5.18., 10.4., 11.3.) 등을 통해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한미동맹의 경제안보·기술 동맹으로의 발전 방안 및 역내 안보·글로벌 현안 대응 관련 의견 교환

- (한중 : 고위급 소통의 중심축으로서 솔선수범) 3월 대통령 당선인-시진핑 주석 간 통화 계기 형성된 한중관계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외교장관 화상통화(5.16),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외교장관 회담(7.7) 및 ▲외교장관 방중(8.8-10, 칭다오) 등을 적극 추진



- 특히, 한중 외교장관 회담(8.9, 칭다오)시 우리측은 한중관계 3가지 발전방향으로 ▲상호존중 기반 공동이익 추구, ▲안보주권 사안 타협 불가, ▲국익·원칙에 기초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의 협력 모색 제시
- 사드 문제가 한중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자는 '칭다오 공동인식' 달성
- (한일 : 장관 간 셔틀외교 복원) 외교장관으로서 4년 반 만의 양자 방문을 통해 한일 외교장관회담, 기시다 총리 예방, 동포간담회, 일본 경제인과의 의견교환 등 내실 있는 일정 소화
- (한러 : 대러제재 하 우리 국민과 기업 보호) 국제사회의 對러 제재로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제회의* 계기 한러 외교장관간 조우하여 우크라이나 전쟁 및 한러관계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 하고, 우리 국민·기업에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 당부
 - * 발리 G20 외교장관회의(7.7) 및 프놈펜 아세안 외교장관회의(8.5) 계기
- (對韓 美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정상, 장관, 차관 등 고위급 접촉 계기 확장억제 강화 방안 수시 협의
 - 특히, 지난 5월 한미 정상간 합의에 따라 한미 외교·국방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개최(9.16., 워싱턴 D.C.)

- (美 여론주도층 대상 적극적 소통) 외교장관은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간담회(6.14), ▲워싱턴타임스紙 대표단 접견(8.11) 등 미국 싱크탱크와 전문가 등 미국 여론주도층 대상 활발한 정책 소통 활동을 통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미 메시지 발신



장관,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주최 간담회
기조연설 (6.14)



장관, 워싱턴타임스紙 대표단 접견 (8.11)

- (한중간 실질협력 강화 당부) 한중 외교장관회담(8.9)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협력 분야에서 중국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양국간 긴밀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소통·대화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 (문화콘텐츠 분야 교류 확대) 게임·영화·방송·음악 등 분야의 원활한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국측의 각별한 관심·협조 요청
 - (사적지 보존·관리) 중국 내 우리 사적지 보존·관리에 대한 중국측의 협조 당부
- (중국군 유해송환 관련 적극적인 활동 전개) 2차관, 제9차 중국군 유해인도식* 참석(9.16) 및 동 행사의 한중간 우호협력의 상징성 강조
 - * '14~'21년 825구 + '22년 88구 → 누적 923구 송환



제9차 중국군 유해인도식 개최(9.16)

- (강제징용 피해자 최초방문) 외교장관 최초 광주 강제징용 피해자 방문(9.2), 직접 의견 경청 / 강제징용 피해자 묘소 헌화 및 빈소 조문(9.2) 등 對 피해자 소통 및 실태 파악에 각별한 노력 경주
- (재일 재외동포 사회 격려) 장관, 일본 내 한국계 학교인 교토 국제고의 고시엔 본선 진출 관련 축하메시지 게재(7.28, 장관·외교부 SNS)를 통한 재외동포 사회 격려 및 화합 도모



외교장관 방일(7.18-20)

교토국제고 격려 메시지 게재 (7.28)

강제징용 피해자 방문 및 묘소 참배(9.2)

④ 갈등·리스크 예방 등 위기관리 노력

- (우리국민-주한미군 간 안정적인 민군관계 관리) 합동 순찰, 교통법규 홍보영상 제작·배포 등을 통한 주한미군 사건사고 선제적 예방활동 전개
 - (평택 SOFA국민지원센터-주한미군 간 야간 합동순찰) 주요 명절 및 휴일 계기 미군기지 인근 주한미군 관련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미간 합동 순찰 실시 (4월, 9월, 11월)
 - (국내 교통법규 홍보영상 제작) 주한미군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한미간 상이한 교통법규로 인해 주한미군 장병들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영상을 제작·배포
 - ※ 주한미군측은 동 홍보영상이 주한미군 장병의 교통안전 준수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면서 영상 제작에 대한 사의를 표하고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게재
- (이태원 사고 발생 직후 각국 피해자 가족들에게 신속한 조력 지원) 주한대사관과의 비상연락망 가동 및 협업체계 구축, 외국인 사망자에 대한 외교부 직원 전담 지정을 통해, ▲현장 방문 확인 ▲시신 안치 확인 ▲유가족 입국 지원 ▲장례 및 운구 절차 지원 등 원스톱 조력 서비스 제공

- 푸틴 대통령 등 러측 주요 인사로부터 조잔위로전 접수(10.30) 및 블링컨 美 국무장관 등으로부터 위로전 접수(11.23.)
- 장관, 이태원 사고 외국인 사망자 빈소 방문 및 유가족 위로(11.3)
- **(사드 등 민감 현안 관련 對중국 소통)** 사드, 대만, 신장 등 민감 현안 관련 서울·북경 외교채널 통해 중측과 긴밀하고 솔직한 소통체제 상시 가동 / 우리측 입장에 대한 중국측 이해도 제고
-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활동에 대한 선제적이고 조율된 대응 강화* / 불법조업 관련 사안 발생시 (성어기, 상황 심각시 등) 중측에 우리 입장 전달 및 시정조치 요청
 - * 「외교부·주중공관·유관기관 간 중국지역 조업질서 담당관 회의」 개최(4.19) 등
- **(해양문제 관련 소통 및 갈등 예방 노력)** 「제2차 한중 해양협력 대화*」를 개최(6.16), ▲해양 권익에 대한 상호존중을 통한 안정적 해양질서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우발적 갈등 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방안 협의(양국 해·공군 간 직통전화 추가 개통 등)
- **(해양 실질협력 강화를 통한 한중간 신뢰제고 기회 모색)** 생태·환경 보전, 항행 안전 제고, 수색 구조 등 양국 간 해양 분야 실질 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당국 간 교류 활성화 합의
 - * 양국 참여부처 : (韓) 외교부, 해수부, 국방부, 산업부, 해경청 / (中) 외교부, 중앙외사판공실, 국방부,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교통운수부, 농업농촌부, 해경국
- **(역사왜곡 관련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단호히 대응)** 역사 문제는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 사안인 만큼, 유관부처·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하, 중국 내 한국사 서술 동향을 파악·분석하고 왜곡사향 발견시 중국측에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
 - 중국지역 공관·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역사(사적지) 담당관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관련 현황 점검 및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논의



조업질서 담당관 회의 (4.19)



한중 해양협력대화(6.16)



역사 담당관 회의(9.23)

- (국민 우호감정 증진 노력 전개) ▲ 「외교부(주중공관 포함)-관계기관-전문가 합동회의」 개최(2.28), ▲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등 양국 청년 간 교류 기회 확대, ▲우호감정 저해 요소 적극 모니터링 시행 및 결과 전파 등
 - ※ 카카오톡 플랫폼을 활용한 「중국 언론 일일 모니터링」(17.11월~) 및 「외교부 e-중국 이슈」(18.9월~)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여 양국민간 우호감정 증진 기반 구축 및 우리 對中 외교 관련 이해 제고
 - (강제징용 관련 당사자 의견 경청) 국내 피해자 지원단체, 법률 대리인, 국회 및 오피니언 리더 등 개별 접촉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청취 및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 장관, 피해자 직접 방문(9.2) 외에 아태국장-피해자 지원단체 면담 (7.28, 광주) 등 수시로 소통하여 피해자 의견수렴 및 정부 정책 설명
 - (아베총리 사망 등 돌발 상황 대응) 사상 초유의 아베 전총리 피격(7.8) 직후 상황관리 및 분석·보고부터 일본 國家葬에 우리 국무총리를 대표로 조문사절단 파견(9.27)까지 돌발변수 총력 대응
- ⑤ 외부 지적사항 정책개선 노력
- (민감사안 관리 관련 부내·부처 간 협업 강화 및 적극적인 對中 소통)
 - ▲유관부처·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수시 모니터링 및 관련 정보 공유, 범정부 협의체 개최·참석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한 對中 소통 및 시정 촉구 등을 통해 역사왜곡, 문화논쟁 등 사안이 양국 관계 발전과 양국민간 우호감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극 대처
 - 21년 수행한 사할린동포 기념사업 연구용역 결과, 사할린동포에 대한 국민의 낮은 인지도 지적 → 12-1월 중 TV 방송을 활용한 사할린동포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 제고 방안 추진 중

4 주요 업무 성과

1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 주요 성과

- (한미동맹의 전방위적 확대·강화) 신정부 출범 후 군사안보, 경제·기술 협력을 아우르는 한미 간 전략적 소통을 통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본격 진화
 - 동맹 역사상 최단기간(10여일) 내 개최된 첫 한미 정상회담(5.21.)을 시작으로, 한미 정상이 세 차례 대면 회담을 가지는 등 유례없이 긴밀한 최고위급 간 교류 실시
 - 특히, 신정부 출범 후 5개월만에 美 의전 서열 1-3위인 대통령, 부통령, 하원의장이 모두 방한 ⇒ 한미 동맹 중요성에 대한 美 정부의 절대적 지지 확인
- (경제안보·기술 관련 한미간 전략적 소통 및 협력 확대) 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국가안보실간 경제안보대화 출범에 합의한 후,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경제안보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핵심광물, 반도체, 에너지 등 공급망의 안정화 및 다변화를 위해 미측과 각종 계기 긴밀히 소통
- (실질 성과 위주의 한미일 3국협력 확대) 11월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은 그동안의 논의를 집약한 공동성명을 채택,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 지역·글로벌 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
 - * (주요 내용) ▲3국간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도래 등 복합적 도전과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 등
- 특히, 3국간 경제안보 대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관련 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한바, 이를 통한 실질적 경제 성과 거양을 기대

- (인태전략 성안과 역내·글로벌 차원의 공조 확대)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가 인태 지역의 핵심 국가로서 역내 현안 해결과 미래 질서 형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기여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우리나라 최초의 포괄적 지역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성안,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이를 발표 → 미측 환영·지지 표명
 - 우리 인태전략에는 핵심 가치·이익을 공유하는 국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규칙 기반 질서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 등 우리의 역내 협력 목표, 원칙과 구체적인 협력 추진 방안이 포함
- (연합방위태세 유지·강화를 위한 외교적 공조) 한미연합훈련 정상화 등 연합방위태세 강화 노력 지원 지속(외교적 억제, 대비 및 대응태세 확립 등)
 - ▲8월 을지 프리덤 쉴드(UFS) 실시 ▲역내 적시·조율된 전략 자산 전개* 등
 - * ▲(7월) 美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전개 ▲(9월) 美 레이건 항모전투단 국내 입항 ▲(11월)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계기 美 전략폭격기 B-1B '랜서' 및 해병대 F-35B 스텔스 전투기 전개, 美 핵추진 잠수함 키웨스트함 국내 입항 등
-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한미 정상간 합의에 따라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약 5년 만에 재가동하고 고위급 회의 연례 개최에 합의함으로써, 확장억제에 특화된 2+2 공조 체계 제도화
 - ※ 한미 국방당국간 안보협의회의(SCM), 통합국방협의체(KIDD) 등과 유기적 연계를 통해 확장억제 논의 모멘텀 유지 및 구체 성과 도출
 - 보다 강화되고 최신화된 美 확장억제 공약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가운데, 동맹의 강력한 對北 경고 메시지 발신
 - EDSCG에서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데 이어, SCM에서는 이를 보다 발전·확대
- (한미 안보협력의 범위 및 외연 확대) 우주·사이버 등 신규 분야에서 한미 국방협력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한미일 3국 차원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합훈련, ▲정보공유, ▲정책협의 등 안보협력 강화 지속

- (대미 의회외교를 통한 한반도 관련 우호적 법안 채택) 적극적인 대미 의회외교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와 한반도 관련 우호적인 연방 법안·결의안 발의·채택에 기여하고, 한미 동맹의 저변 확대

연번	법안 및 결의안
1	하원, 한인의 날 결의안 발의 (1.13.)
2	하원, 북한인권법 연장법안 발의 (3.31.)
3	상원, 동맹 및 파트너의 중요성 재확인 결의안 통과 (5.11.)
4	상원, 북한인권법 연장법안 발의(5.12)
5	상원, 오토 웨비어 북한 검열·감시 대응법안 통과(6.16.)
6	상원,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기념 결의안 채택(8.7.)
7	하원, 추모의 벽 준공 기념 결의안 발의(8.12.)
8	상원, 대북정책 감독법안 발의(9.13.)

- (대미 정책소통 강화를 통한 美 조야 지지 확대) 美 주요 싱크탱크와 유력 언론매체 등 여론주도층 대상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한미관계 전반에 대한 지지 기반 확대

- 신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 각 급에서 ▲헤리티지재단, ▲하버드대 벨퍼센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월슨센터, ▲대서양위원회 (Atlantic Council), ▲美 외교정책협회(AFPC), ▲美 외교협회(CFR), ▲아시아소사이어티, ▲전미아시아연구소(NBR), ▲신미국안보센터 (CNAS) 등 美 주요 싱크탱크 인사와 30차례 이상 교류

- (美 국민의 한국 호감도 강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미 정책 소통 결과 美 국민의 한국 호감도는 역대 설문조사 기간 중 가장 높은 결과(61점)를 도출(9.9., 美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여론조사)하였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관계 전반에 대한 이해와 지지 강화

- 특히, 美 여론의 한국에 대한 호감은 ▲주한미군 장기 주둔 지지 증가 (‘21년 66%→’22년 72%), ▲북한 침략시 미군의 한국 방어 지지(55%) 등으로 확대

- (용산기지 등 주한미군 기지반환 성과) “2022년 초까지 상당한 규모(약 50만㎡)의 용산기지 반환” 공약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 2022년 상반기까지 총 58.4만㎡의 부지를 반환하는 초과 성과 달성

* 전체 반환대상 면적(200만㎡) 중 약 1/3 반환(누적 64만㎡) 달성

- 실질적 규모의 용산기지 부지 반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해당 부지는 “용산공원 시범개방 프로그램(6월)”을 통해 국민들이 우리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조성될 열린 공간을 먼저 체험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SOFA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한 주요 동맹 현안 관리)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 ▲주한미군기지 환경문제, ▲주한미군 코로나19 방역 협력 등 주요 한미동맹 현안을 SOFA 체계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

□ 장기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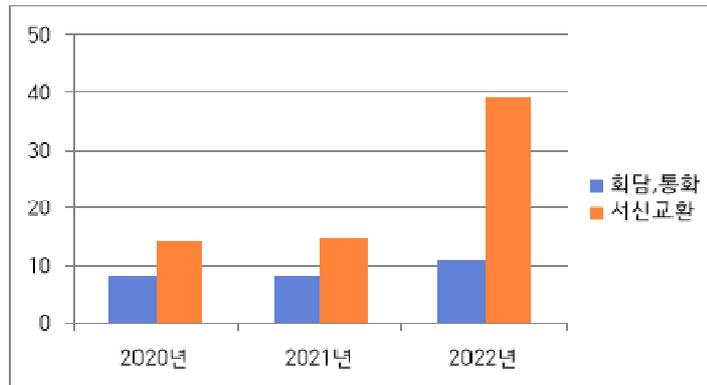
- (중장기적 협력 분야 식별 및 성과 구체화) 내년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우리 정상 방미 등 한미 정상 간 소통을 보다 강화하여,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가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2년차 외교정책 성과 더욱 구체화 추진
 - 아울러, 한미 행정부 각급에서 전략적 소통 채널을 구축, 안보와 더불어 경제 안보·기술 등 핵심 분야 관련 중장기적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거양에 집중
- (한미동맹 저변 확대) 적극적인 대미 의회외교 및 정책공공외교를 지속 실시하여 ▲우리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美 조야의 이해를 제고하고 ▲한미 동맹의 저변을 지속 확대
 - 주요 동맹 현안 및 우리의 대미, 한반도 정책 등에 대한 美 의회·여론주도층의 이해 제고와 지지 확보를 통해 美 조야 내 우호적 분위기 조성 및 미국의 對한국·한반도 정책에 긍정적 영향
- (美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강화)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연례 개최 및 실무급 협의(차기 회의는 2023년도 상반기 개최 예정) 개최에 합의
 - 외교·국방을 아우르는 최적의 협의 채널인 2+2 메커니즘을 제도화함으로써 한미간 보다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주한미군 기지반환) 주한미군 기지의 반환을 지속 추진하여 기지 반환을 통한 우리 국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 주한미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효과를 달성하고, 한미동맹의 호혜적 기반 강화에 기여
-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 우호관계 강화)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의 강화된 우호관계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자양분이자 밑바탕이 되어,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의 발전적 미래에 기여

②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 구현

□ 주요 성과

- (고위급 교류·소통 활성화) 코로나19 상황 및 중측의 엄격한 방역 정책 지속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신정부 출범 전후로 양국간 고위급 교류·소통 모멘텀 지속

※ (대면외교) ▲G20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11.15), ▲대통령 취임식 참석 계기 왕치산 국가부주석의 대통령님 예방(5.10), ▲리잔수 상무위원장 방한 계기 대통령님 예방 및 국회의장 회담(9.16), ▲외교장관 방중(8.8-10) 계기 한중 외교장관 회담(8.9),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7.7) 등 / (화상·유선 협의) ▲정상 간 통화(3.25), ▲외교장관 화상통화(5.16), ▲북핵수석대표 통화(6.10, 7.26, 11.15)



※ '20-'22년 장관·총리·정상 간 회담·통화 / 서신교환 횟수

- (한중관계 발전에 대한 정상간 공감대 확대) 정상간 통화(3.25) 계기 새로운 한중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자는 데 뜻을 같이 한 데 이어, 수교 30주년 기념 축하서한 교환(8.24)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 및 호혜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는 취임 후 첫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상호존중·호혜 정신에 기반한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로의 발전에 공감대 형성

- (한중 간 협력 수준·분야 확대)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및 실질협력 확대를 위한 세부 협력방안 논의
 - ① (고위급 교류 심화) 정상간 교류 및 각급 협력기제(외교차관 전략대화, 외교·국방 차관급 2+2 대화 등) 활성화를 통한 전략적 소통 심화 의지 확인
 - ② (실질협력 증진) △경제 분야 협력 확대(▲공급망 대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가속화, ▲RCEP·DEPA 가입 협력 등)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문화컨텐츠·항공편 등) 등 국민체감형 실질협력 증진
- (국익과 원칙에 따른 당당한 對中외교 전개) 우리의 입장을 선제적으로 명확히 밝히고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적극적 외교 추진
 - (새로운 한중관계를 열어나가기 위한 협력방향 제시) 한중 외교 장관 회담(8.9, 칭다오)시 우리측은 한중관계 3가지 발전방향으로 ▲상호존중에 기반한 공동이익 추구 ▲안보주권 사안에는 타협 불가 ▲국익과 원칙에 기초한 화이부동의 협력 모색을 중측에 제시
 - (사드문제 관리 관련 '칭다오 공동인식' 달성) 한중 외교장관 회담(8.9)시 사드 문제가 한중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자는 '칭다오 공동인식' 달성
- (수교 30주년 계기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방향 모색) ▲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행사」를 서울과 베이징에서 동시 개최(8.24)하고, ▲양국 정상간 축하서한 교환, 총리 및 외교장관 간 축전 교환을 통해 수교 30년의 의미와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한중관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모색
- (한중간 Track 1.5 소통 강화) 지난 1년간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운영을 통해 양국 각계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금년 수교 30주년 기념일에 발표
 - 동 보고서에 담긴 한중 간 정치·경제·사회 등 제반분야 미래 협력 방안 관련 다양한 정책 제언들을 향후 유관 정책 수립에 참고 예정
 - 「위원회」의 경험과 성과를 기반으로 한 한중 1.5 트랙 전문가 협의체 설립 및 지속 발전에 합의



「위원회」보고서 제출 행사 개최(8.24) ((左) 한국, (右)주중국대사관)

-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양국간 교류 촉진 기여) 외교부, 관계부처·기관, 주중공관의 긴밀한 협업 하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022)' 사업 160개 사업을 대면·비대면 방식을 유연하게 활용·추진하여 정부 차원의 양국간 교류에 긍정적 메시지 지속 발신 및 민간 교류 촉진에 기여
 - (양국간 미래 협력기반 강화) 특히 ▲ 한중 간 차세대 참여, ▲ 쌍방향적 교류, ▲ 한중관계 미래지향, ▲ 문화교류 전면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문화교류의 해 사업을 추진, 양국 국민 상호간 이해와 우호 증진 및 한중관계의 미래 협력기반 강화에 기여
- (상호인식 개선 발판 마련) 코로나19 등 대면교류의 한계 속 다양한 창의적 방식의 공공외교와 교류사업을 발굴·개최하여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의 토대가 되는 양국간 우호감정 증진의 발판 마련
 - (다채로운 교류행사 진행을 통한 양국민간 우호 증대) 각 주중공관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온라인, 온·오프라인 융합형 등) 교류사업 진행을 통한 한중간 인적·문화적 교류 관련 양국민의 관심 환기
 - ① 동심동행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3.0km 걷기 행사(주선양총영사관)에는 약 2,000명이 참가, 14만 6천 건의 SNS 게시물 조회수 기록
 - ② 한중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을 소개합니다 미담사례 공모전(주중대사관)에는 167편의 미담이 온라인 접수



동심동행-3.0km 걷기 행사

한중 우호림 조성

서예 교류 전시회

- (국민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공공외교 전개) 대중 접근이 용이한 유튜브 콘텐츠*의 활용 및 대학생과 일반인을 아우르는 공공외교 강연** 등으로 양국 관계 이해 증진에 기여

* 한중 문화교류 이야기(9.30) / 11월 현재 유튜브 조회수 5만 3천여 회(구독자수 3만 8천명 대비 약 1.4배)

** 제3기 대학생 국민외교 아카데미 강연(7.15) / 국민외교 열린캠퍼스(11.8)



국민외교 아카데미 강연

국민외교 열린캠퍼스

한중 문화교류이야기 영상

- (시민 직접 참여형 교류사업) ▲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9.30, 외교부 발대식), ▲ ‘한중 우호수호천사단’(5.28, 주중대사관 발대식), ▲ ‘한중 우호 SNS 서포터즈’ 등 운영을 통해 청년층에서의 양국 관계의 이해 증진 필요성에 관심 환기 및 상호인식 개선 도모

- (역사협력, 긴급상황 대응·지원 등 통한 한중간 신뢰 제고) ▲ 양국이 공유하는 역사 관련 협력 추진, ▲ 긴급상황 대응·지원 등을 통해 양국간 신뢰수준 제고 및 양국민간 우호감정 증진에 기여

- (우리 사적지 보존·관리 관련 對중국 소통) 고위급 교류 계기 등 활용, 중국 내 우리 사적지 보존·관리 관련 중요성에 대한 한중간 공감대 확대

※ 중국은 국가보훈처 지정 국외 독립사적지 전체의 약 47%(483개소)가 소재하는 지역

- (사건·사고 대응 지원) 이태원 사고 관련 1:1 매칭 제도를 적극 실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下 중국 국적 사망자 및 유가족 지원

- (신속한 해양 구조활동 전개) 우리 유조선 (KELSEY 2호) 침몰시 중국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긴급 구조활동 개시

→ 탑승 선원 전원 구조

※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10.19)시 한국 국적 유조선 조난 구조는 “양측 간 인도주의에 기반한 협력이자 양국 우호의 구체적 사례” 언급



중국 정례브리핑 보도(10.19)

○ (국민 체감형 실질협력 확대) ▲공급망, ▲문화컨텐츠, ▲항공편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 개선 및 관련 실질협력 심화 추진

-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기반 확보)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7.14) 등 계기 양국간 공급망 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주중 공관 및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下, 제26차 한중 경제공동위 개최 예정 (11.24) / 동 계기 공급망 협력 심화 관련 구체사항을 중국측과 논의할 계획

- (항공편 재개) 중측에 인적교류 회복을 위한 항공편 재개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고, 양국 항공당국 간 협의 지원 → 정기항공편 주 51회 운항 승인(※ 11.8. 기준 / 실제 운항편수는 수요에 따라 변동) 및 인천-상하이 직항편 운항 재개(11.17 아시아나 / 11.20 대한항공) 등



- (문화컨텐츠 교류 회복) 외교장관회담 등 각종 교류 계기 문화 교류 협력 활성화 필요성 지속 제기 → 올해 초 5년여 만에 중국 내 한국 드라마 방영 재개(현재까지 총 13편 방영) 및 중국 OTT 플랫폼 내 한국 영화 서비스 개시



사임당 빛의 일기 (22.1월 방영)

배드앤크레이지(22.5월 OTT 공개)

강변호텔 (22.11월 OTT 공개)

- (교역 확대) 금년 1-9월까지 교역액이 작년 동기 대비 10%가량 증가 (올해 최고기록 갱신 전망)

- (기업 지원) 코로나로 인한 산동성 봉쇄(22.3월) 당시 주중대사관을 중심으로 쑤 주중지역 공관(10개) 및 KOTRA 등 유관기관과 협의 하 '민관합동 중국 공급망 리스크 대응 협의체'를 운영, 중국 중앙·지방정부에 우리기업 애로 관련 협조 요청 → 우리 자동차부품 기업의 ▲폐쇄식 조건부 조업 ▲차량통행증 발급 ▲완제품 반출 허가 등을 조기에 확보

- (양자 민감현안 관련 적극적 대응) 양국민간 우호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조업, ▲역사왜곡 등 민감 현안에 대한 對중국 소통 지속 및 문제 발생시 적극적인 시정 요청

- (불법조업 감소)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 및 관련 기관의 단속 강화로 우리 EEZ 해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나포건수 지난 5년간 감소 추세

* 단,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퇴거 위주로 단속



- (중국의 역사왜곡 시정 촉구) 최근 중국 국가박물관 특별전 사안* 관련. 각종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측에 수차례 엄중히 문제를 제기 하고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한바, 중국측은 문제의 연표를 철거

* 중국 국가박물관측, 「동방의 상서로운 금속 : 한중일 고대 청동기전」(7.26-10.9)에서 고구려·발해가 삭제된 한국사 연표 전시

□ 장기적 효과

- (한반도 및 역내 평화·번영에 기여) 정상 포함 각 급에서의 한중간 교류·소통 활성화 및 한중간 실질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고, 북한문제 관련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 견인하여 한반도 및 역내 평화·번영에 기여
- (양국민 간 정서적 거리감 축소) 한중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지속 지원·추진하여 양국민 간 상호이해 및 우호감정을 제고하는 한편, 우호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역사왜곡, 문화논쟁 및 불법조업 등) 관련 한중간 소통을 강화하여 양국관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

③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 구축

□ 주요 성과

① 고위급 교류와 소통 활성화를 통한 양국 간 신뢰관계 회복

○ (한일 정상회담 2회 실시) 유엔총회 계기 2년 9개월 만에 개최된 정상회담(9.21)으로 관계 개선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데 이어, 2개월 만에 정상회담 개최(11.13)하여 양국 현안 등 다양한 의제에 정상 간 공감대 확인

- NATO 정상회의(6.28~30) 계기 첫 조우에 이어 9월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정상회담 개최, 관계 개선·소통 지속 필요성에 공감 및 외교당국 간 대화 가속화 지시

- 한일 정상통화(10.6)를 통해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일 및 국제 사회와의 연대 필요성 강조 및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 평가

- EAS 계기 한일 정상회담(11.13)은 양국 정상이 현안해결·북핵을 넘어 인적교류, 지역구상 등 협력의 지평 확대에 전반적으로 공감 → 각자 입장만을 서술하던 과거에 비해 현격한 진전

- 이러한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반영하여 최근 기시다 총리의 의회 소신표명연설(10.3)에서 한국 관련 분량 및 내용이 대폭 강화*

* 한일관계 부분 :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협력해 가야 할 중요한 이웃국가임. 국교정상화 이래 쌓아온 우호협력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갈 것임” / 미, 중, 러 북한 등 관련 언급은 기존 언급 수준 유지 또는 축소



한일 정상회담(11.13)



국무총리, 기시다 면담(9.28)



외교장관, 기시다 예방(7.19)

- (국무총리 아베 前총리 국장 참석) 아베 前총리 국장(9.27)에 정상급 인사를 파견함으로써 ▲일측에 대한 애도·위로 ▲기시다 총리 면담 등을 통한 한일관계의 조속한 회복·개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 다층적 전달
 - 또한, 스가 前총리, 니카이 前자민당 간사장, 도쿠라 경단련 회장 등 일본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광범위하게 만나 ▲한일관계 개선 ▲인적교류 복원방안 논의 및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 당부
- (외교장관 셔틀외교 복원) 정부 출범 후 상호방문 또는 다자회의 계기를 통해 거의 매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대면으로 개최*하는 등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외교장관 간 소통 활성화
 - * ▲5.9 서울(日 하야시 외무대신의 대통령취임식 참석 계기) ▲7.18 도쿄(외교장관 공식방일) ▲8.4 프놈펜(ARF 외교장관회의 계기) ▲9.19 뉴욕(유엔총회 계기)
 - 특히, ▲양국 외교장관의 상호방문 성사로 장관간 셔틀외교 복원 ▲약 4년 7개월만의 외교장관 공식방일(7.18~20) ▲장관 간 수시 통화(5.25/10.4/11.3/11.18) 등 다양한 계기 대면·비대면 소통을 통해 양 장관간 개인적인 친밀도와 신뢰 제고



한일 외교장관회담(5.9) 한일 외교장관회담(7.18) 한일 외교장관회담(8.4) 한일 외교장관회담(9.19)

- (외교차관 간 공조 강화)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개최 시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동시 추진하여 ▲북핵 대응 등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일·한미일 간 공조 강화 및 ▲한일간 주요 현안 관련 의견교환 등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 진행
 - * ▲6.8(서울) ▲10.26(도쿄)
- (아소 前총리 방한 계기 등) 최근 아소 前총리 방한(11.2),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계기 일본의원단 대통령 접견(11.4) 등 정계 고위급 접촉으로 관계 개선의 긍정적 흐름 유지

- 정부 출범 전(4.24~28)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을 파견, 기시다 총리 등 일본 주요인사 대상 전방위 아웃리치(총 22개의 일정 소화)를 통해 신정부 출범 모멘텀을 활용한 관계 개선 필요성 공감대 구축
- 이태원 사고 관련, 기시다 총리, 하야시 외무대신 등 일본 정·관계 주요 인사의 위로 서한 접수

② 한일 간 인적교류 복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 한일 외교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인적교류 재활성화 필요성에 공감대 下, 코로나19 등으로 경색된 양국 간 인적교류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전면 복원 목표 조기 달성
 - ▲ 일측 한국인 입국시 격리면제(5.17)* ▲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6.29) 합의 및 항공편 증편**, ▲ 부산-후쿠오카 등 한일 간 5개 항로 국제여객선 운항 재개(10.28) 등 양국 국민 편의 증진
 - * 일본은 10.10까지 ▲ 국가 구분(적색, 황색, 청색) ▲ 백신 3차 접종 여부 등에 따라 방역 정책 상이하게 적용
 - ** 김포-하네다 운항 현황 : 주 8회(6.29) → 주 28회(7.25) → 주 56회(10.30)
 - 우리 정부 ▲ 對日 사증발급 간소화(7.1) ▲ 서울 페스타 계기 일본 대상 한시적 사증 면제 시행(8.4-10.31)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일본의 한국인 무사증 입국 조치 견인
 - * 日 무사증 입국 재개(10.11~) / 韓 무사증 입국 제도 복원(11.1~)
- 상호 무사증 입국 제도 복원 후 10월 한 달간 한-일 항공 노선을 41만 6,132명이 이용하였으며, 이는 전월(16만 7,900명) 대비 약 2.4배로서 상호 방문객 대폭 증가(출처 : 에어포탈 항공통계)
 - 다수 언론에서 여행객 증가로 인한 항공편 증편 등을 보도하며 항공 및 여행업계에 대한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

③ 지역·초국경적 이슈 공동 대응을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유사
입장국과 다자·소다자 차원의 협력 추진

- (역내 안보 증진 노력) 한일 각급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강력히 규탄, 한일·한미일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 논의 등 역내 안보 증진 노력에 기여
 - 한일 정상 통화(10.6),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북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양국 협력 강화 ▲한미일 3자간 안보 협력 ▲안보리 등 국제사회 연대 등 공감
 - 한일 외교장관 통화(10.4/11.3/11.18),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 등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 강화 노력
 - 한미일 3국 차관 통화(10.4/11.7), 북한 일련의 도발 강력 규탄, ▲유엔 안보리 차원 ▲3국간 안보협력 등 대응 방안 논의
-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한미일 3국은 제10차(6월), 제11차(10월)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개최해, ▲북한 문제 ▲역내 및 글로벌 현안 대응 등을 위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 재확인 및 강화 협의



한일 정상통화(10.6)

한일 외교장관통화(10.4)

한일 외교장관통화(11.3)

한미일 외교차관통화
(10.4/11.7)

④ 현안 관련 국내 의견수렴 및 대일협의 가속화로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

- (국내 의견수렴 노력) ▲강제징용 민관협의회, ▲징용 피해자 방문, ▲피해자 지원단체 등 대상 아웃리치를 통해 해법 관련 다양한 의견수렴
 - 피해자측을 비롯하여 학계·재계·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강제징용 관련 「민관협의회」를 최초로 구성 (외교부 1차관 주재)하여 총 네 차례 회의 개최(7.4/7.14/8.9/9.5)

- 한편, 외교장관으로는 최초로 광주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방문하여 피해자들의 의견을 직접 경청(9.2)
- 아울러 국내 피해자 지원단체, 법률대리인, 국회 및 오피니언 리더 등 개별 접촉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청취 노력 지속
- 향후 보다 외연이 확장된 형태의 의견수렴의 장을 통해 현안 해결 방향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 또한 수렴 예정
- (대일협약의 가속화) 신정부 출범 이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 중인바, 한일관계 개선의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며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 노력 지속 중
 - 한일 정상 및 장·차관 등 고위급 교류를 포함해 국장급* 등 실무 차원에서도 수시로 소통하며 현안 관련 협의 지속
 - * ▲6.2(서울) ▲8.26(도쿄) ▲10.11(서울) 외 한일 국장협약의 수시 개최
 - 우리 정부는 ▲관련 당사자 및 각계각층에서 수렴한 의견, ▲민관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 국내적 차원의 노력을 설명하고, 원활한 해법 마련 및 이행을 위해 일측의 성의있는 호응 적극 요구



강제징용 관련 민관협의회
(7.4/7.14/8.9/9.5)



피해자 만남(9.2)



한일 국장협약(8.26)

⑤ 한일간 민간교류 지원 및 한일관계 정책 홍보 적극 추진 중

- (민간교류 지원) ▲한일축제한마당 ▲한일대학생교류 사업 등 코로나19 이후 대면 개최되는 민간행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및 미래세대 교류 활성화 지원
- (일본 학생 대상 강연) 일본 대·고등·중학생 등 대상 강연을 강화, 한국에 대한 우호정서 확대 및 올바른 한일관계 인식 계기 마련
 - ※ 게이오대(1.12, 4.20, 7.11), 아오야마가쿠인(5.7), 칸다외대(5.27), 도쿄대(6.17), 고베대(7.1) / 쓰시마고(6.30), 칸다여고(9.13) / 일한학생미래회의(5.13) 등

- (청소년 교류 강화) 3년 만에 대면 재개된 한일대학생교류 사업 관련 외교부 방문 시(9.26) 외교부 담당자의 **한일관계 설명 및 청소년 교류에 대한 인식 저변 확대**
- (차세대 연구자 간 논의 육성) 주일본대사관 ‘한일 차세대 포럼’ (6.13), 외교안보연구소 ‘차세대 연구자 간담회’(10.24) 등 **한일 차세대 간 협력의 바람직한 방향과 미래 전략 도모**
- (의원외교 지원) ▲일한의원연맹 방한(11.2-4) 장관주최 만찬 ▲입헌 민주당 소장파 의원 방한(8.31) ▲일본 지자체 의원 방한 초청 (11.13-16) ▲한일의원 축구대회(11.26) 지원 등 **의원외교 적극 지원**
- (전문가 아웃리치로 업무 이해도 제고) 한일관계 세미나, 심포지엄 등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정부의 한일관계 방향성과 추진현황 등 설명 / 언론계 및 학계 등의 **정부 업무 이해도 제고**
- 1.5트랙(정부 관계자 및 학계 인사)의 **한일 정책대화**(6.16), 민간 고위급 대화채널인 **한일포럼**(8.24-26), 한일친선협회 중앙회 세미나(11.28) 등 중장기적 외교정책 논의 추동
- * 외교장관, 동아시아연구원-겐론 NPO 주최 제10회 한일미래대화(9.3) 영상 축사 / 외교차관, 동아시아연구원-MBN 주최 제3회 외교전략 심포지엄 축사(10.24) 등



한일축제한마당
(9.25, 서울/도쿄)



한일대학생교류
(9.23-29)



일본 입헌민주당 의원단 면담
(8.31)

- (공관 차원의 현지맞춤형 공공외교) 주일본대사관 및 일본지역 총영사관 주최로 다채로운 공공외교 행사 개최하여 한국의 이미지 제고 및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증진 노력**
- (여론주도층 간 교류 확대) ▲한일 협력 논의 세미나(생명공학 부문 한일 R&D 협력, 11.25), ▲한반도 담당 일본 언론인 초청 간담회(11.17) ▲일본 기자단 교류(12.12-14) 등 **한일 오피니언 리더 간 교류 확대**

▶(그 외 주요 추진실적) ▲한일 축제한마당 in Tokyo(9.24) ▲2022 오사카 사천왕사 왔소(11.6) ▲한일 문화카라반(10.30 삿포로, 11.22 히로시마) ▲K-POP 오디션(10-11월/11.12 최종) ▲대사관 홍보부스 설치(11.12-13) ▲한국알리기 강좌 개최(와세다대, 가을학기), ▲대사관 공개 행사(3.23, 3.26) 등

○ (쌍방향 디지털 공공외교 지속 추진) 접근성이 뛰어난 디지털 플랫폼 활용, 디지털 공공외교를 지속 송출함으로써 친한 정서 강화 도모 및 쌍방향 소통 노력 지속

※ (나고야) ▲SNS서포터즈 운영 ▲N월의 타닥타닥 이벤트 ▲도카이라디오 방송국 한국 홍보 코너 기획 ▲뉴스레터 <Koreya> 발간(매월)
 (요코하마) ▲「한일에 불시착 온라인 라디오 시즌2」 ▲한류 메모리얼 콘테스트
 ▲ <나만의 한국지방여행 두근두근 에피소드> 온라인 공모전
 (삿포로 등) ▲총영사관 유튜브 채널 개설

⑥ 여타 과거사 현안 관리 및 대응을 통해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

○ 독도 관련 일측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 및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 교과서 왜곡 등 주권 및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히 대응

- (원칙에 입각한 독도 대응) 일측의 독도 국제분쟁지역화 기도에 유의 하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강력 항의 및 철회 촉구 / 독도에 대한 우리 영토주권 행사 관련 일측 항의시 일측

· 日 외교청서(4.22), 방위백서(7.22), 교과서 검정결과(3.29) 등 발표시 독도 관련 문제기술에 대해 항의 및 즉각적인 시정 촉구

- (일본 교과서 검정 대응) 미래세대의 역사인식이 중요한 만큼, 왜곡 기술에 대한 강력한 외교적 항의 및 일측의 책임 있는 자세 요구

· 검정결과 발표 직후(3.29)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및 주한일본 대사관 관계자 초치

▶(대응 실적) ▲日 시마네현 소위 '독도의 날' 행사 관련 주한일본총괄공사 초치 및 대변인 성명 발표(2.22) ▲일본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관련 대변인 성명 발표 및 주한일본총괄공사 초치(3.29) ▲2022년 日 외교청서 관련 대변인 논평 발표 및 주한일본총괄공사 초치(4.22) ▲2022년 日 방위백서 관련 대변인 논평 발표 및 주한일본총괄공사대리 초치(7.22)

- (야스쿠니신사 참배 대응)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일본 지도급 인사들의 참배, 공물 봉납 등에 대해 우리 입장 발표 및 단호히 대응

▶ (대응 실적) 각 계기 대변인논평 및 보도자료 발표를 통한 우리 정부 입장 표명
 - ▲ 춘계예대제(4.21) ▲ 日종전기념일(8.15) ▲ 추계예대제(10.17)

- (日근대산업시설 약속 이행 촉구) 일측 약속 이행을 지속 촉구 및 산업유산정보센터 현장의 정례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 현황 점검 / (사도광산 등재 대응)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응 민관합동 작업반(TF)」 참여를 통해 10개 관계부처·기관*과 협력 대응
 - * ▲외교부 ▲문체부 ▲교육부 ▲문화재청 ▲국가기록원 ▲동북아역사재단 등
- 여타 과거사 현안 관련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유도를 위한 홍보 및 공공외교 사업 추진
- (사할린동포 인지도 제고) 사할린 기념사업 시행으로 TV 방송 프로그램 활용(12-1월)한 사할린동포에 대한 인지도 제고 노력



사도광산 TF 회의(매달)



사할린동포 기념사업
TV프로그램(한국의 밥상)

□ 장기적 효과

-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토대 마련) 한일관계 개선은 정치적 문제를 넘어 양국의 경제·사회·문화·안보 등 전영역에 걸쳐 막대한 영향 /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한일관계 토대 마련
 - (지역·글로벌 문제 전략적 협력 강화) 최근 빈발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포함 글로벌 공급망, 미중 경쟁, 기후변화 등 다양한 역내·국제 문제 대응에 한일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강화
 - (기술 협력 잠재이익 다대) ▲기술 로드맵 작성, ▲국제표준화 활동, ▲발명 특허 등 지재권, ▲과학기술 인재 교류 등 경제·기술 분야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을 통한 잠재이익이 클 것으로 전망
- (양국 관계·인적교류 복원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인적교류 증대는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 및 이해도 제고뿐 아니라 여행·관광업계 등 경제적 파급효과 다대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1-9
방 한 일본인	231.1 (0.6)	294.9 (27.6)	327.2 (11.0)	43.1 (△86.8)	1.5 (△96.5)	8.3 (629.2)
방 일 한국인	714.0 (40.3)	753.9 (5.6)	558.6 (△25.9)	48.8 (△91.3)	1.9 (△96.1)	*2022.1-8 8.5 (629.2)

《단위:만명, ()는 증감률% / 출처:한국관광공사, JNTO》

- 지방공항의 일본노선 재개·확대에 따라 지역민의 항공교통 편의 대폭 증진 및 지방 관광·상권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 기대
 - * 지방공항 일본노선 운항 규모(국토교통부 발표, 10.30~)
 - (김해공항) ▲후쿠오카(주56회) ▲오사카(주35회) ▲삿포로(주14회) ▲나리타(주21회) ▲오키나와(주7회) 등 주요 일본노선 재개·확대
 - (대구공항) ▲나리타(주7회) 노선 재개
 - (제주공항) ▲후쿠오카(주3회) ▲나리타(주3회) ▲오사카(주7회) 등 노선 재개
- (투자 증대와 고용 창출) 양국 관계 정상화는 투자심리 개선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 / 국내 기업의 57% 한일관계 개선·경제협력 강화 희망*

* 한국경영자총협회, '한일관계, 경제협력 전망과 과제' 설문조사 결과

4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 모색

□ 주요 성과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력 규탄하고, 국제 규범 및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및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 對러 규탄 결의 적극 동참
 -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 ▲ 러시아의 도네츠크·루한스크 독립 승인 관련 우려(2.22)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 규탄(2.24) ▲ 부차 집단 민간인 학살 정황 우려(4.5) ▲ 러측의 점령지 영토 병합 불인정(10.1)
 - 유엔 결의 참여 : ▲ (안보리) 우크라이나 침략 규탄 결의(2.25) ▲ (총회) 우크라이나 침략 규탄 결의(3.2), 우크라이나 인도적 상황 결의(3.24),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정지 관련 결의(4.7) ▲ (인권이사회) 러시아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인권상황 결의(3.4), 우크라이나 인권상황 악화 관련 결과문서(5.12) 등 공동제안국 참여
- (對러 제재 동참)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관계부처 협의하에 對러 제재 동참 방침을 발표(2.24)하고, 수출통제·금융제재 시행중
 - 수출통제 : ▲ 전략물자 및 非전략물자 57개 품목 수출허가 거부 ▲ 특정 군사 최종사용자로의 수출허가 거부
 - 금융제재 : ▲ 러시아 주요 은행(중앙은행·국부펀드·8개 은행)들과의 거래 중단 ▲ 러시아 국채 거래 중단 ▲ SWIFT망으로부터의 러시아 은행 배제 조치 지지

【한러 관계 안정적 관리】

- (양국 간 필수적 소통 유지) 북핵 문제 관련 러측 협조 건인 및 러시아 내 우리 국민과 기업 보호를 위해 러시아와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 지속

- ▲G20·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계기 외교장관 조우(2회) ▲신임 주러 대사 부임(8.31) 및 푸틴 대통령 앞 신임장 제정(9.20) ▲신정부 출범 계기 취임·이임 서한 교환(대통령, 장·차관 등) ▲북핵수석대표 협의(사태 이후 4회) ▲기타 외교채널을 통한 실무접촉 등 필수적 소통 유지



박진 장관, G20 계기
러 외교장관 조우 언론보도(7.8.)



박진 장관, 아세안 관련 회의 계기
러 외교장관 조우(8.5)

- (경제적 피해 최소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태 초기부터 외교부 비상대응 TF를 중심으로 기업 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조치 적극 시행
 - 관계부처 및 재외공관 협조 下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 개최 ▲對러 수출통제 설명자료 배포 ▲수출입 기업 대상 금융지원 등 조치 시행
 -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8.5) 계기 한-러 외교장관 조우시, 러시아내 우리 기업 및 재외국민 보호 관련 각별한 관심 당부 / 신임 주러대사, 우리 기업의 구체 애로사항 및 러측 협조 요청사항 전달(9.12)

【국민 편익 증진 노력】

-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재외국민의 고충 해소를 위해 한-러 간 극동 정기 여객선을 재개하는 한편, 금융지원 제도 확대
 - 교통 : 대러 제재에 따른 한-러 간 직항 항공편 중단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을 위해 ▲해수부·질병관리청 등을 적극 설득하여 극동 정기 여객선(동해-블라디보스톡) 운항 재개(주 1회, 6.29~)

- **금융** : 관계부서와 함께 러측의 외화 송금제한조치로 어려움에 처한 러시아 거주 우리 재외국민 대상 신속 송금 지원제도를 확대 운영(3.21)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 3천달러 → 8천달러로 확대(3.21) / 유학생은 등록금 범위 내 추가송금 가능(3.30)

□ 장기적 효과

-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강화)** 민주주의·인권 등 국제규범에 기반하여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강화
-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탄력적 대응)** 우크라이나 전쟁 下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정세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공백)

3. 지역별 · 사안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공백)

순 서

I. 요약	95
II. 업무 추진 성과	99
1. 업무 개요	99
2. 추진 계획 및 주요 실적	100
3. 주요 추진 노력	105
4. 주요 업무 성과	117
① 한-아세안 상생협력 강화 및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외교지평 확대...	117
② 유럽 국가들과 '가치외교 파트너십' 기반 실질협력 강화 ...	129
③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별·지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	137
④ 국제 사이버 협력 네트워크 공고화	151

(공백)

I. 요약

1 한-아세안 상생협력 강화 및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외교지평 확대

1 주요 추진 노력

- 인태지역 주요 협력 파트너인 아세안 및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연대 및 교류 강화를 통해 우리 인태전략 추진 기반 구축
 - 취임 첫해 활발한 아세안 관련 양·다자 정상·고위급 교류를(20회 이상) 통해 상호 이해 및 친밀감 증진 / 對태평양도서국 고위교류 확대
 - 경제, 해양, 보건 및 청년 등 제 분야 교류·협력 촉진을 통해 인태전략 및 한-아세안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우호 환경 조성

2 주요 업무 성과

- 한-아세안 정상회의(11.11) 계기 ‘한-아세안 연대 구상’ 발표를 통해 아세안과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토대 마련
 - 우리 인태전략의 핵심 지역인 아세안에 특화된 협력 추진 등 우리의 아세안 중시 기조에 대한 아세안측 환영 및 지지 확보
-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위한 기반 구축
 - *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 수립하는 최고 단계 파트너십
 - 한-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에 2024년까지 관계 격상 추진에 대한 환영 문안 반영
- 경제협력 다변화 등 아세안과의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한 협의 본격화
 - 인니, 베트남, 태국, 필리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전환, 방산 협력, 녹색경제 등 실질 협력 심화 합의
- 태평양도서국과 협력 범위 확대 및 정상급 회의로의 격상 합의
 -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국내 개최를 통해 인태전략 틀 내에서 태도국과의 협력 의지 공고화 등 태평양 지역으로의 외교 지평 확장

② 유럽 국가들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 기반 실질 협력 강화

1 주요 추진 노력

-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EU 및 유럽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교류 및 협력 확대·강화
 -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간 정상급 교류만 총 23회* 실시
 - * 6월 EU 대통령 특사 파견 및 NATO 정상회의 계기 8개 유럽지역 국가들과 양자 정상회담 개최 등 포함
 - 그 외 장·차관급 교류 총 17회 및 국내 유럽 기업인 대상 공공 외교 실시 등 對유럽 외교 지평 확장을 위한 노력 적극 경주

2 주요 업무 성과

- 정상외교를 필두로 각급 고위급 교류 결과 구체협력 방안 마련 및 세일즈 외교(방산, 원전) 성과 거양
 - 한-영국 양자 프레임워크 채택(6.30.), 한-EU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발효(7.1.) 등 주요 유럽 국가들과 경제, 안보, 보건 등 분야별 협력 기반 구축
 - 방산·원전 분야 핵심 협력 대상국인 폴란드, 체코 등에 전방위적 외교 지원을 실시하여 가시적 성과 도출
- 유럽 국가들과 미래지향적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주요 분야(교역, 보건, 기후, 디지털) 협력 강화를 위한 틀 마련
 - 총리 주재 주한 유럽 대사 초청 간담회(7.14.), 장관 주재 유럽지역 공관장 회의(9.7.) 등을 통해 유럽 국가들과의 미래지향적 협력 증진 방안 논의
 - 교역·투자, 과학·기술, 사이버 안보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V4* 국가와의 정무차관보 회의 개최(11.29.)
 - * V4 : 중유럽 4개국(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지역 협력체
 -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11.28.) 및 한-EU 보건/그린 파트너십 체결 협의 지속

1 주요 추진 노력

- ▲ 지역별 전략적 ODA 정책 추진, ▲ 관련 사업예산 증액, ▲ 부처간 협업 강화 및 국민참여형 콘텐츠 추진 등을 통해 협력 기반 공고화
-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국가별·지역별 맞춤형 외교정책 이행 및 전략적 소통 강화

2 주요 업무 성과

- (중동) 중동의 Top-down 정책결정구조 및 탈석유 국가발전전략을 감안, 고위급 네트워크를 중점 구축하고 미래 상생 협력에 대한 실질적 비전 공유 및 기업 진출 가속화
 - 사우디 왕세자, 카타르 부총리 등 핵심인사 방한 성사 등 유례없는 고위급 교류 실현 ⇒ 중동 국가 新사업 구상에 대한 우리 기업 참여 지원 및 제도적 기반* 정비 ⇒ 부처간 민관간 협력을 통합, 적극적 성과 이행 도모
 - * 한-사우디 정상간 '전략파트너십 위원회 설치 합의(11월), 한-카타르 사증면제협약 체결(8월) 등
- (아프리카)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와의 미래협력관계 중요성*을 감안하고 주요국들의 공세적 진출동향을 주시하면서, 권역별 거점국을 중심으로 맞춤형 협력 심화 추진 / 2024 한-아프리카 특별 정상회의(54개국 초청) 최초 개최 추진
 - 이전 정부 1년차에 비해 아프리카와의 고위급 교류 1000% 이상 증가
 - * 2050년 전세계 인구의 1/4 차지, 핵심광물 30% 매장, AfCFTA 출범에 따른 단일시장 부상, 대서양-인도양-아덴만 연결 전략적 요충, 유엔 등 글로벌 무대에서 캐스팅 보터 등
- (중남미) 고위급 교류를 통한 대중남미 경제안보 외교 및 실질협력 기반 강화
 - 올해 중남미 15개국과 수교 60주년 계기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조기에 정상급 등 고위급 교류 추진을 통해 대중남미 외교관계 기반 강화
- (중앙아) 수교 30주년을 맞은 중앙아 대상 ▲ 고위급 교류 ▲ 친선 그룹 구성(10월) ▲ 제15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10.25, 부산) 개최 등을 통해 한-중앙아 협력 네트워크 강화

4 국제 사이버 협력 네트워크 공고화

1 주요 추진 노력

- 여타 정부·기업·시민사회·학계와의 긴밀한 소통下 사이버안보 규범 형성 논의에 적극 기여
 - 정부·기업·학계 등 인사가 참여하는 제2차 「세계신안보포럼」 개최(6.21-22)
 - ▲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워킹그룹(OEWG)」 회의 참여, ▲ 「제4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ICT안보 회기간회의」 주최(5.13)를 통해 사이버안보 규범 발전에 기여
-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양·다자 협력 강화
 - ▲ 사이버범죄 대응에 관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추진 ▲ 유엔 사이버범죄협약 성안 논의 참여
 - ▲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Counter Ransomware Initiative) 참여 ▲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을 포함한 NATO와의 협력문서 개정 추진 ▲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등

2 주요 업무 성과

- 국가 안보에 총체적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안보 규범 형성 논의 진전에 적극 기여
 - 「세계신안보포럼」 연례 개최 등을 통해 사이버 등 신종안보 의제에 대한 국제논의 선도
 - 안전하고 자유로운 사이버 공간 조성을 위한 국제 사이버 규범 마련을 위해 유엔에서 「책임있는 국가행동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PoA)」을 공동제안
- 초국경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 등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 지속 확대
 - ▲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의향서 제출(10.11) ▲ 유엔 사이버범죄협약 초안 마련에 참여(11.18 사무국 회람)하여 사이버범죄 대응 국제공조 기반 강화
 - ▲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CRI) 참여국과 공동 대응 방안 마련 ▲ NATO와의 사이버분야 협력 강화 ▲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사이버위협 대응 네트워크 지속 확대

II. 업무 추진 성과

1 업무 개요

□ 업무 목표

- 글로벌 중추국으로서 주요 국제문제 대응에 있어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지역별·사안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미중 경쟁下 우리 외교의 전략적 공간 확보를 위한 외교 다변화 추진

□ 업무 주요 내용

- 한-아세안 상생협력 강화 및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외교지평 확대
 - 한-아세안 연대 구상 구체화 및 호혜적인 실질적·전략적 협력 강화
 -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양·다자 협력 강화를 통한 외교지평 확대
- 유럽 국가들과 ‘가치외교 파트너십’ 기반 실질협력 강화
 - EU 및 유럽지역 국가들과 미래지향적 협력 분야에서 파트너십 강화
 - 정상외교를 필두로 한 각급 고위급 교류를 통해 구체 협력 방안 마련
 - 주요 분야(교역, 보건, 기후, 디지털)에 대한 별도의 양자 파트너십 강화/구축 및 상호 연계되어 있는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틀 마련
-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별·지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
 - 중동·아프리카 대상 고위급 교류 강화
 - 2024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 개최 추진
 - 중남미 대상 고위급 교류 강화
 - 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개최
 - 중앙아 중소국가 대상 외교활동 강화
 - 한-중앙아 협력포럼 개최
- 국제 사이버 협력 네트워크 공고화
 -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담론 도출 및 네트워크 강화
 -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주요국과의 양·다자 협력 강화

2 추진 계획 및 주요 실적

세부추진과제	추진 계획	주요 실적
<p>1. 한-아세안 상생 협력 강화 및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외교 지평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한-IORA 파트너십 세미나 개최(6월) ■ 한-뉴질랜드 차관보급 정책협의회(7월) ■ 신정부의 한-아세안 상생연대 강화 의지 등 신정부의 對아세안 중시 외교 기조 설명 (8월) ■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 장관회의 준비를 위한 관계부처 /기관 협의회 개최(9월) ■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 장관회의 개최(10월) ■ 우리 정부의 對아세안 협력 비전 및 정책 방향 수립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발표 예정 (11월) ■ 제1차 한-뉴질랜드 태평양 대화 (11월) ■ IORA 고위관리회의 및 각료 회의 참석(11월) ■ 제13차 한-SAARC 파트너십 세미나 개최(12월) ■ 한-인도 외교국방(2+2) 차관 회의 및 한-인도 장관급 공동 위(시기 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한-아세안 / 아세안+3 /EAS 정상회의 참석(11.11-13) ■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우리 정부의 對아세안 협력 비전 및 정책방향 소개·발표(11월) ■ 베트남 국가주석 국민방한(12.4-6)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상생연대 강화 의지 등 신정부의 對아세안 중시 외교 기조 설명(8월) ■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8.3-5) -한-아세안(8.4), 아세안+3(8.4), EAS(동아시아정상회의, 8.5),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8.5)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O 정상회의 계기 한-호주 정상회담(6월) ■ NATO 정상회의 계기 아시아 태평양파트너 4개국(AP4; 한·일·호·뉴) 정상 간 회동(6월) ■ 한-뉴질랜드 차관보급 정책협의회(7월) ■ 제1차 한-뉴질랜드 태평양 대화 (11월)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한-IORA 파트너십 세미나 개최(6월) ■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 장관회의 준비를 위한 관계부처 /기관 협의회 개최(9월) ■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 장관회의 개최(10월) ■ IORA 고위관리회의 및 각료 회의 참석(11월)

<p>2. 유럽 국가들과 '가치외교 파트너십' 기반 실질 협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리 주재 주한대사 간담회 개최(7월) ■ 장관 주재 유럽지역 공관장 회의 개최(9월) ■ 재외 명예영사 초청사업 개최(10월)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EU, 한-독일, 한-스페인 외교장관 회담 개최(7월) ■ 우리 대통령-폴란드 총리 통화(8월) ■ UN총회 계기 유럽 주요국들과 고위급 교류 추진(9월) ■ 한-오스트리아 외교장관회담(10월) ■ G20 정상회의 계기 유럽 주요국들과 고위급 교류 추진(11월)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슬로바키아 정책협의회 재개(7월) ■ 제18차 불어권 정상회의(OIF) 참석(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리 주재 주한대사 간담회 개최(7.15.) ■ 장관 주재 유럽지역 공관장 회의 개최(9.7.) ■ 재외 명예영사 초청사업 개최(10.17-22)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EU(7.7), 한-독일(7.8.), 한-스페인(7.8.) 외교장관 회담 개최 ■ 우리 대통령-폴란드 총리 통화(8.30.) ■ 대통령,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 참석(9.19.) ■ UN총회 계기 한-독일 정상회담(9.21.), 한-체코, 폴란드 외교장관회담 개최(9.19.) ■ 한-루마니아 총리 회담(9.28.) ■ 한-영국 외교장관 전략대화(9.28.) ■ 한-네덜란드 외교장관 회담(9.28.) ■ 한-오스트리아 외교장관회담(10.23.) ■ 국무총리, 오스트리아 외교장관 접견(10.24.) ■ 제8차 한-EU 고위정치대화(10.28.) ■ 한-독일 정상회담(11.4.) ■ 한-네덜란드 정상회담(11.17.) ■ 한-스페인 정상회담(11.18.)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슬로바키아 정책협의회 개최(7.14.) ■ 제18차 불어권 정상회의(OIF) 참석(11.19-20)
---	---	---

<p>3.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별 지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동·아프리카 대상 고위급 교류 강화 ■ 2024 한-아프리카 특별 정상회의 개최 추진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남미 대상 고위급 교류 강화 ■ 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개최(7월)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아 중소국가 대상 외교활동 강화 ■ 한-중앙아 협력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아공 정상회담(5.10, 서울) ■ 한-UAE 외교장관 회담(7.8, 발리) ■ 한-가봉 정상회담(7.20., 서울) ■ 사우디 외교장관 공식 방한(7.19-20., 서울) ■ 카타르 부총리 겸 외교장관 공식 방한(8.15-18., 서울) ■ 한-이란 외교장관 회담(9.19, 뉴욕) ■ 제1차 한-남아공 장관급 공동위 출범 및 우리 대통령, 남아공 외교장관 접견(10.11) ■ 한-이집트 정상 통화(10.20.) ■ 한-탄자니아 총리회담(10.26, 서울)(탄자니아 총리 공식 방한(10.24-28)) ■ 한-나이지리아 정상회담(10.26, 서울) ■ 한-나이지리아 외교장관회담(10.28, 서울) ■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 방한(11.16-17) ■ 대통령 주최, 아프리카의 밤 개최(11월) ■ 케냐 대통령 공식방한(11월)(아프리카의 밤 주빈 참석) ■ 국무총리 아프리카 순방(모잠비크, 가나)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콜롬비아 정상 간 통화(6.15.) ■ 한-멕시코 외교장관 회담(7.4.) ■ 2022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7.5.-6.) ■ 장관, 중남미 9개국 장관과 릴레이 회담(7.5.) ■ 대통령, 중남미 10개국 장관 합동 접견(7.6.) ■ 한-엘살바도르 외교장관 회담(10.5.) ■ 국무총리, 남미 3개국 공식방문
---	---	--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10.9.-17.)

- 총리, 중미 7개국 외교차관 합동 접견(11.2.)

-
- 중앙아 중소국가 친선그룹 구성 (10월)

- 대통령 특사, 타직·조지아·아제르바이잔 방문(8.20-28)

- 국무총리-중앙아 5개국 합동 접견(10.24)

- 키르기스스탄 외교장관 공식 방한(10.23-26)

- 한-카자흐스탄 외교장관 회담 (10.25)

- 한-타지키스탄 외교장관 회담 (10.25)

- 한-투르크메니스탄 외교장관 회담(10.25)

- 한-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 회담(10.25)

- 제15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개최 (10.25, 부산)

<p>4. 국제 사이버 협력 네트워크 공고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 워킹그룹 (OEWG) 3차 회의 참여(7월) ■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 워킹그룹 (OEWG) 4차 회의 준비(10-12월)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사이버범죄협약 성안을 위한 임시위원회(AHC) 3차 회의 참여(8-9월) ■ 유엔 사이버범죄협약 성안을 위한 임시위원회(AHC) 4차 회의 준비(10-12월)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 외교적 대응 워킹그룹 회의 참여(7월) ■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 고위급회의 참여(11월)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다페스트 가입의향서 제출을 위한 관계부처·기관 회의(8월) ■ 부다페스트 가입의향서 제출(10월)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NATO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체결 관련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문안 협의(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 워킹그룹 (OEWG) 3차 회의 참여(7.25.-29.) ■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 워킹그룹 (OEWG) 4차 회의 준비(10-12월) 및 회기간 회의 참여(12.5-9)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사이버범죄협약 성안을 위한 임시위원회(AHC) 3차 회의 참여(8.26.-9.9.) ■ 유엔 사이버범죄협약 성안을 위한 임시위원회(AHC) 4차 회의 (23.1.9.-20.) 준비(10-12월)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 외교적 대응 워킹그룹 회의 참여 (7.6.) ■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 고위급회의 참여(10.31.-11.1.)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다페스트 가입의향서 제출을 위한 관계부처·기관 회의 ■ 부다페스트 가입의향서 제출 (10.11.)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NATO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체결 관련 관계부처 회의 (9월)
------------------------------	--	--

3 주요 추진 노력

① 투입노력

□ 정책 과제 실행 기반을 위한 예산 확대

- (아세안) '한-아세안 연대 구상' 추진 예산 확대 및 양자·소다자 협력을 위한 사업 예산 신규 확보(2건)* / 2023년부터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 증액 공약
 -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실천적 기반인 한-아세안(1,400만불→1,600만불), 한-메콩(400만불→500만불), 한-해양동남아(100만불→300만불) 등 3대 협력기금 증액 및 2027년까지 배증(doubling) 공약에 따른 예산 증액
- (유럽) 對유럽 '가치외교 파트너십' 기반 실질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분담금 신설
 - V4 주변국(우크라이나, 세르비아 등) 개발·협력 지원 및 V4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비세그라드 펀드(IVF) 분담금(50만불) 신규 편성
- (중동·아프리카)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2023년도 예산 확대/ 2024년 한-아프리카 특별 정상회의 예산 확보 노력 지속
 - 2023년초 한-아프리카 특별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출범 위한 예산 계획 수립
 - 대통령 내외 주최 아프리카 외교단 초청만찬(180여명 규모, 11.23) 개최를 통해 한-아프리카 특별 정상회의 개최 공식화 및 국내외 참여 분위기 조성
- (중남미) 중남미 15개국과 수교 60주년을 맞아 '중남미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 예산 확대
 - (「한-중남미재단」 설립 추진) 중남미에 대한 체계적 조사연구, 맞춤형 교류 협력 사업 수행 등을 위해 추진

□ ODA 등 개발협력 규모 확대 및 체계화

- (아세안) 우리 양자 ODA 1위 공여 지역으로서 아세안측이 수요가 높고 우리가 강점을 지닌 디지털, 기후변화, 보건, 농촌개발 및 연계성 등 분야에서 ODA 공여 확대 지속
- (중남미) 한-중미통합체제(SICA) 협력기금 재조성(150만불)으로 ▲한미 포괄적 동맹 강화를 위한 對중미 협력 확대 및 ▲식량안보·재난대응·보건의료 분야에서 실질협력 강화
 - ※ 한-SICA 협력기금은 2002년 최초 설치, 2002-10년간 총 94만불 지원 이후 중단
- 한-카리브공동체(CARICOM) 협력기금에 대한 2차 기여로 보건 의료·기후변화 등 분야에서의 협력사업 추진 기반 확보
 - ※ 한-CARICOM 협력기금은 코로나19 대응 지원 계기 2021년 설립
- (아프리카) 2023년도 ODA 규모 전년 대비 증액 확보 / ODA 중점협력국(7개국) 및 국별 중점협력 분야*를 선정하고, 국가협력 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수립하여 개발협력 체계화
 - * 보건위생(가나,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통신(이집트), 지역개발(세네갈, 우간다), ICT(르완다), 에너지(가나, 탄자니아), 농림수산(세네갈) 등
- (중앙아)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수립 및 고위급 교류 시 개발협력 의제 포함 및 개발국 인사 적극 참여*
 - * ▲(외교장관 회담) 타직·카자흐·투르크멘·우즈베크(10.25), 키르기스스탄(10.23), 한-나이지리아 외교장관 회담(10.28) 등
 - ▲(경제공동위) 타직(10.20), 키르기스스탄(10.6) 등

□ 조직 정비 및 인프라 확충 노력 지속

- (공통)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따른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지역국 실무 인력 확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력 지속
- (아세안) 연간 20여개에 달하는 아세안 관련 다자회의에 적극 대응하고, 특히, 결과문서 교섭을 위해 주아세안대표부 직원의 의장국(캄보디아) 단기 파견

- (인도·태평양) 지정학적으로 중요도가 높아진 태평양도서국 14개국 담당 인력을 하반기에 새로이 투입시켜,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의 계기 연쇄 및 동시다발적으로 각급 양자 회담 및 면담을 성공적으로 추진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제4차 한-태도국 외교장관회의의 계기 양 회담이 전무했었던 것과 비교하여, 금번 제5차 한-태도국 외교장관회의의 계기 ▲한-마셜제도, 한-통가, 한-팔라우, 한-파푸아뉴기니 등 외교장관회담, ▲한-나우루 외교차관회담, ▲차관보-주일 피지대사 면담, ▲한-바누아투 국장급 회담 등 역대 최다(총 7개) 양자 일정을 개최하여 태평양도서국과의 실질 협력 확대 의지 시현
 - ※ 제1차~제3차 외교장관회의의 계기 외교장관회담 각 2건
- (유럽) 유연한 인력 활용을 통해 국제회의·행사 계기 폭증하는 업무 수요 대응
 - UN 총회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 동시 대응을 위해 기존 업무분장에 추가로 주요 행사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 한-영국(9.28, 오전), 한-네덜란드(9.28, 오후) 외교장관 회담 동일 개최를 위해 부서 내 자료 및 의전 등 사안별·국가별 대응팀을 조직하여 업무 공백 발생 방지
- (중동·아프리카) 아프리카 고위급 교류 업무 활성화 대비 인력 확보 노력 지속

② 일하는 방식 개선

- 對아세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요국(미국, 호주 등)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정책 효과성 배가 및 역내 다자협력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 한-미 동남아 정책대화(2월, 10월), 한-호 동남아·아세안 정책대화(3월) 및 한-미-아세안 지역 청년 캠프(8월) 및 인태지역 백신포럼(12월) 공동개최를 통해 역내 다자협력 주도국으로서 우리 위상 강화

- 부처·부서 간 협업을 통해 포괄적이며 통합적인 지역 전략 수립 및 협력 추진
 - 양·다자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준비 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기관 협의회 및 수시 협의를 통해 부처별 지역정책 간 정합성 제고
 - 외교부 주관 범정부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여(10.11, 17개 기관 참석) 한-아세안 협력 심화·확대를 위한 협력 방향 및 성과사업 발굴·이행 방안 논의
 - 베트남 국가주석 국빈방한(윤석열 정부 최초 국빈방한) 대비 국내 17개 관계부처 참석하에 실질 성과 거양 방안 등 집중 논의(11.4)
 -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계기 의제 및 성과사업 등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행사 개최를 위한 절차적 측면에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
 - ▲법무부 등 유관 부처 ▲부산시 등 관련 지자체 ▲경찰청, 공항공사 등 유관 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하여 출입국, 의전 및 수송, 부대행사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
 - 이란 관련 관계부처 회의, 제6차 對아프리카 협력 확대관계부처 회의(5.31), 한-남아공 공동위(10.11) 계기 관계부처간 워킹그룹 개최 등 범부처 차원의 對아중동 정책 조율 및 전략 수립
 - 산업부, 부산광역시 등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한 협업(對중남미 협력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6.24.) 개최 등)을 통해 한-중남미 FTA 네트워크 확대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확보 기반 마련
 - 사이버범죄 대응에 관한 유럽평의회 「부다페스트협약」 가입 추진 및 유엔 사이버범죄협약 성안 논의에 대한 우리 입장 수립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소통 활성화
 - ※ 「유엔 사이버범죄협약 성안을 위한 임시위원회(AHC)」 대비 관계부처 회의 개최

□ 대면 교류 활성화를 통해 정부, 학계 및 민간 등 전방위 지역 네트워크 구축 활동 본격화

○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축소 시행된 고위급 및 인적교류 사업 재개 및 활성화

- 2020년, 2021년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및 정상회의가 온라인 개최됨에 따라 동 계기 양자 회담 기회가 없었으나, 2022년도에는 아세안 관련 회의의 대면 개최 등 계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동남아 3개국 양자 정상 및 9개국 외교장관회담 개최

- 또한, 학계, 재계, 청년 간 대면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계기를 다수 마련함으로써*, 한-아세안 연대 구상 추진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 기여

* ▲한-메콩 유스그룹 워크숍(8.17-19),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9.14), 한-필리핀 해양대화 대화(9.21), ▲한-베트남 현인그룹 제3차 회의(9.30), ▲한-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 학술 논문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10.25), ▲한-아세안 청년캠프(YCAFE) 개최(8.22-26) 등

□ 대면 교류와 더불어 비대면 회의를 병행함으로써 사업 준비과정에서 소통의 효과성 제고

○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준비를 위한 관계부처/기관 협의회 등을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진행

○ 한-중앙아 협력 포럼은 대면 개최하고 차관급 준비회의는 화상 개최하는 등 여건에 따라 대면·비대면 방식을 적절히 활용해 고위급 교류 강화

□ 주요 행사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11.2.)과 한-중미 통상투자포럼(11.3.) 연계 개최를 통해 외교·경제 협력 시너지 효과

-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 참석 7개국 차관, 고위급 대표 및 미국 주요 인사를 한-중미 통상투자포럼에도 참석하도록 하여, 한-美-중미 간 경제협력을 위한 소통의 장과 우리 기업인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의 장 마련

- 한-아프리카 재단, 한-아랍 소사이어티(KAS) 등 대표적 국내 유관단체와 제5회 모의 아프리카연합(AU) 총회(8.18-19), 아프리카연합의 날 기념 리셉션(9.7), 한-아랍 스타트업 아이디어 공모전(7.1-8.31) 개최 등 협업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중동·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제고 및 실질교류 협력에 기여
- 한-이란 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10.12), 한-EU 중동문제 국제회의(10.5), 국내 중동 신진학자 간담회(10.25), 한-중동 협력포럼(11.18) 등 1.5 트랙 행사를 통해 국내외 전현직 관료 및 민간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 효율화에 활용
 - 국제 정세의 불안정에 따른 다층적 현안 대응 및 대중동 정책 방향 및 중장기 협력 방향에 대한 심층적 의견 교환
- 2022년 한-아세안 연계성 포럼(12.8)을 한-아세안센터에서 개최하는 연례 아세안 연계성 포럼과 연계 개최함으로써 한-아세안 민·관 네트워크 확충에 기여하고, 우리 정부가 설립한 한-아세안센터 위상 제고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국민참여형 콘텐츠 및 홍보 추진

- 다양한 국민참여형 콘텐츠를 추진하여 국민 및 협력 대상국 간 상호 인식 제고 및 교류 증진 달성
 - 한-미-아세안 청년 캠프(YCAFE) 실시를 통해 인태지역 청년 교류 활성화 및 미래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한-메콩 교류의 해(2021-22)' 계기 한-메콩 유스그룹 워크숍(8.17-19) 실시하여 한국과 메콩 청소년 간 심도 있는 교류를 통해 한-메콩 청소년 상호 이해 증진
 - 한-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 학술 논문 공모전 실시
 - ※ 한국과 베트남 대학(원)생으로부터 논문 47편 접수



한-미-아세안 청년캠프(YCAFE)



한-메콩 유스그룹

○ 접근성 높은 플랫폼, 참신한 콘텐츠로 국민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 적극 진행

- ▲'KOREAZ' Focus 인터뷰(7.13., 15.), ▲쿠바 영화제(7.15.-17.), ▲중남미 문화 토크콘서트(11.10.), ▲「화요라틴광장」 개최(5회) 등으로 對중남미 국민외교 활성화



'KOREAZ' Focus 인터뷰(7.13., 15.)



중남미 문화 토크콘서트(11.10.)

- 「제1차 아프리카 인식제고 기여상」 공모전(5.25-10.31간) 실시로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우리 국민의 아프리카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 접근성 높은 플랫폼, 참신한 콘텐츠로 국민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 적극 진행

- SNS 홍보(30초 퓌터뷰, 브이로그 형식의 사무관의 하루)를 통해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성과 홍보 및 관심 제고

- 2022년 수교 60주년을 맞은 아중동 9개국과의 수교 기념 홍보 영상 제작 및 적시 활용 (재외공관 배포, 서울정부청사 옥외 전광판 송출, 행사 계기 상영 등)



아중동 9개국 수교 60주년 기념 홍보 영상

③ 기관장 노력

□ 장관, 對아세안 외교 및 아세안 관련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정부의 對아세안 중시 외교 기조 및 한-아세안 협력 심화·확대 의지 각인

○ 올해 한-아세안(8.4)/아세안+3(8.4)/ARF(8.5)/EAS(8.5) 외교장관회의의 참석 및 동 계기 아세안 5개국*과 아세안 사무총장 면담을 통해 對아세안 중시 외교 추진 및 한-아세안 협력 발전 토대 구축

* 브루나이,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베트남

- 또한, ▲싱가포르(7.5-7), 인도네시아(7.7-8), 캄보디아(8.3-5), 베트남(10.17-18, 공식) 방문, ▲라오스 부총리 겸 외교장관 공식 방한 접수(9.6), ▲유엔 총회 계기 한-필리핀 외교장관회담(9.19)을 통해 아세안 각 국과의 협력 강화 기틀 마련

- 취임 후 첫 공식 외교단 대상 일정으로 주한아세안대사단 접견(5.27)을 진행, 우리 아세안 외교 중시 기조 부각



○ 아주지역 재외공관장회의(9.14) 계기 한-아세안 협력 심화·확대를 위한 본부-공관간 유기적 협력방안 논의 및 현장 외교활동 강화 필요성 강조



- ▲ 「제주 아세안 홀」 개관식 및 「한-아세안 우정의 나무」 식수 행사 (9.15), ▲ 싱가포르 리완유 공공정책대학원 간담회(7.6) ▲ 베트남 외교아카데미 연설(10.18) 등을 통해 對아세안 중시 외교 기조를 공개 표명하고, 포스트 펜데믹 시대의 사회·문화·인적교류 확대 중요성 강조



「제주 아세안 홀」 개관식 및 「한-아세안 우정의 나무」 식수 행사(9.15)



베트남 외교아카데미 연설(10.18)

- 「아세안의 시간 실감한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제하 기고 게재(8.9, 매경), 우리 정부 아세안 중시 외교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이해 제고 노력
 - 1차관, 「아세안 무대에 소개된 ‘윤석열 표 외교’」 제하 기고 게재 (11.18, 문화), 한-아세안 정상회의 및 아세안 순방 성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이해 제고 노력
- 장관,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주최를 통해 태평양 지역으로의 외교 다변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 발휘
- 특히, 제4차 회의(‘21.11월) 개최 이후 1년 만에 대면으로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정부의 對태평양도서국 협력 강화 의지 표명
 - 동 회의 계기 양자 회담을 적극 발굴하여 한-마셜제도, 한-통가, 한-팔라우, 한-파푸아뉴기니 등 4개국과 연쇄 외교장관회담을 성사 하고, 이를 계기로 각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도 추진
 - ※ 외교장관회담 이외 ▲한-나우루 외교차관회담, ▲차관보 - 주일피지대사 면담, ▲한-바누아투 국장급 회담 등 실시
 - 또한, 금번 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함으로써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에도 박차를 가하며, 14개 태평양도서국 중 BIE 회원국인 10개국에 지지를 요청

- 장·차관, 우리 정부 외교 다변화의 핵심축이자 주요 협력 대상인 對유럽 지역 외교 내실화를 위해 적극적인 양자 교류 실시
 - (장관)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EU(7.7.), 한-독일(7.8.), 한-스페인(7.8.) 외교장관 회담 ▲한-헝가리 외교장관 통화(8.17.) ▲UN총회 계기 한-체코 한-폴란드 외교장관 회담(9.19.) ▲한-영국 외교장관 전략대화(9.28.) ▲한-네덜란드 외교장관 회담(9.28.) ▲한-오스트리아 외교장관 회담(10.23.) ▲G20 정상회의 계기 한-프랑스 외교장관회담(11.15.)
 - (차관) ▲1차관, 네덜란드 총리실 국가안보보좌관 면담(9.30.) ▲제8차 한-EU 고위정치대화(10.28.) ▲1차관, V4 정무차관보 수석대표단 접견(11.29.)

- 장·차관, 對중동·아프리카·중남미·중양아 고위급 교류를 적극 주도 하여 외교정책 효과 제고 및 성과 거양에 솔선수범
 - (장관) 취임 직후부터 고위급 교류*를 적극 주도하고, 주한 외교단 직접 접견·국제포럼 개최** 및 지역별 성과 도출을 위한 본부-공관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
 - * 한-UAE(7월), 사우디(7월), 멕시코(7월), 카타르(8월), 이란(9월), 엘살바도르(10월), 나이지리아(10월) 외교장관 회담 / 한-UAE(6월), 요르단(9월), 사우디(9월) 외교 장관통화
 - ** 주한아프리카대사단 간담회(7.12), 주한중양대사단 접견(6.7), 주한이란대사 접견(6.9), 주한이스라엘대사 접견(6.20), 주한중남미대사단 접견(9.30) / 주한 중남미외교단 초청 한-중남미 수교 60주년 특별 포럼(5.27), 2022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7.5-6) 등
 - *** 미주지역 공관장 화상회의(8.25.), 아중동지역 공관장 화상 회의 주제(8.31)
 - (차관) 주한아프리카대사단 주최 「아프리카연합(AU)의 날」 리셉션 참석(9.7) 및 주한중미대사단 간담회(7.11)를 주제 등 주한대사단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유라시아 청년 미래 개척단 4기 발대식(10.28.)에 직접 참석하여 청년들의 유라시아 지역 진출 격려

④ 갈등·리스크 예방 등 위기관리 노력

□ 이태원 사고 발생 직후 ▲유가족과의 즉각적인 소통 실시 ▲경찰, 서울시 등 유관부처와 긴밀 협의 ▲한국어에 미숙한 유가족 위해 문서 번역, 공증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 제공(동남아, 서남아·태평양, 유럽, 중동, 중앙아 대상)

□ 아세안 및 인도·태평양

○ (미얀마 사태) 미얀마 쿠데타 및 국가비상사태(‘21.2.1.~) 관련, 국제사회·전문가 등과의 다각적 소통을 바탕으로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능동적 외교 시행 및 미얀마 내 우리 기업·재외국민 보호 활동 지원

○ (범부처 및 민간과의 협업을 통한 위기관리) 제5차 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시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연결성 저하 및 방역 정책 변동성 증대 등을 고려, 유관부처 및 태평양도서국 주재 공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위기 상황 예방 및 관리

□ 유럽

○ 급작스러운 외교 사안 발생 시에도 대응체계를 긴밀히 가동하여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

- 우리 대통령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 참석 시 짧은 시간 내 대규모 행사 준비

□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중동·아프리카]

○ (對이란 양자관계 관리) 양국간 최대 현안인 국내 동결 원화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통해 한·이란 관계를 관리하고 추후 경험 재개를 위한 기반 조성

- 이란핵합의(JCPOA) 복원협상 타결을 위해 이란, 미국, EU 등 유관국과 각급에서 긴밀히 대화 / 협상 전격 타결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및 우리 기업에 대한 정세 브리핑 수시 실시

- (정세 급변 대응) 외부환경 변화 및 역내국간 복잡한 관계에서 기인하는 정세 급변 요소를 조기 식별하고 우리 입장을 적시 발표함으로써 위기 상황 발생을 방지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적극적 외교정책 구현
 - ※ 대변인 성명 : 이집트 시나이반도 테러 관련(5월), 알자지라 기자 피격 사망 관련(5월), 예멘 휴전 연장 관련(6월), 예멘 휴전 2개월 추가 연장 관련(8월), 예멘 휴전 연장 합의 미타결 관련(10월), 이스라엘-레바논 해양경계 획정 합의문 체결 관련(10월), 에티오피아 내전 중지 합의 관련(11월)

[중남미]

- (對쿠바 관계 관리)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체되었던 교류 복원을 위해 ▲쿠바 영화제 개최(7.15-17), ▲마탄사스 화재 관련 인도적 지원(8월), ▲허리케인 발생 시 인도적 지원(11월) 등을 통해 우호적 여건 조성
- (對수리남 관계 관리)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 관련 수리남 정부측 우려 및 요청을 넷플릭스와 제작사측에 전달 → 시리즈 영문 제목 변경(Suriname→Narco Saint) 및 한-수리남 외교장관 회담 개최(11.16.) 등으로 수리남과의 우호관계 안정적 관리

□ 국제 사이버 협력 네트워크

- 유럽평의회 「부다페스트협약」의 원활한 가입을 위해 협약 가입국들의 동의 확보 노력
 - 다자회의 및 양자 면담 계기 유럽평의회 및 협약가입국에 대해 지지 요청

4 주요 업무 성과

1 한-아세안 상생협력 강화 및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외교지평 확대

□ 주요 성과

- '한-아세안 연대구상' 발표를 통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아세안 중시 기조 재확인 및 한-아세안 관계 강화·발전 의지 표명 등을 통해 신정부의 아세안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각인
 - 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해양안보 협력 강화, ②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한-아세안 FTA 개선 추진 및 디지털·전기차 협력, ③ 지역적·국제적 도전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환경·보건 등 협력 제안
 - 또한, 아세안+3 정상회의(11.12), 동아시아정상회의(11.13)에서 역내 협력 및 자유·평화·번영의 인태지역 구현에 대한 기여 의지 강조
- '한-아세안 연대 구상' 등 우리 정부의 아세안 정책 방향에 대한 아세안측의 환영 및 지지 확보를 통해 정책 추진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 아세안 각국 정상은 발언문 및 정상회의 의장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의 對아세안 중시 기조 평가 및 아세안의 미래 수요를 반영한 협력 방향 제시 환영, ▲한-아세안 관계 격상 제안 환영



한-아세안 정상회의(11.11)



아세안+3 정상회의(11.12)



동아시아정상회의(11.13)



**ASEAN
CAMBODIA 2022**
ASEAN A.C.T.
Addressing Challenges Together

mutual benefit through ASEAN-led mechanism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and key areas contained in the AOIP as well as the vision of a free, peaceful, and prosperous Indo-Pacific presented by the ROK, thereby contributing to the maintenance and promotion of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in the region. ASEAN welcomed ROK's commitment to a free, peaceful and prosperous Indo-Pacific, which enhances the complementarities with the

**CHAIRMAN'S STATEMENT
OF THE 23RD ASEAN-REPUBLIC OF KOREA SUMMIT
PHNOM PENH, CAMBODIA, 11 NOVEMBER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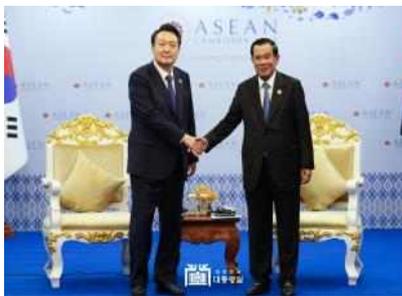
respect, mutual trust, mutual benefit, and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ASEAN welcomed the ROK's renewed commitment to ASEAN and its unwavering support for ASEAN Centrality. ASEAN encouraged the ROK to support the AOIP and undertake substantive, practical and tangible cooperation with ASEAN, through practical projects to promote mutual trust, mutual respect, and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the AOIP, including respect for ASEAN Centrality and ASEAN-led mechanisms. ASEAN took note of the ROK's policy on the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and looked forward to receiving more details of the initia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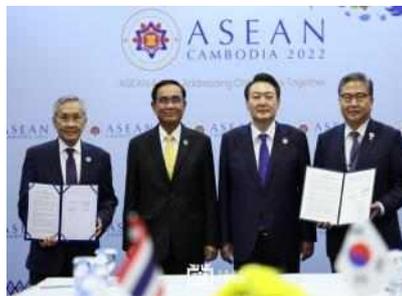
제2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서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대한 아세안측 환영 입장 포함

- 아울러, 정상회의 참석 계기 아세안 3개국(캄보디아, 태국*, 필리핀)과의 정상회담 개최, ▲ 우리의 아세안 중시 외교기조 부각, ▲ 각국과의 협력 강화 기틀 마련

* 「2022-27 한-태국 공동행동 계획」 채택 통해 양국 6개 전략협력분야 (▲ 정치·안보 ▲ 녹색경제 ▲ 미래산업 및 교역 ▲ 보건 ▲ 지속가능한 발전 ▲ 인적교류) 위주 전략적 협력관계 심화 합의



한-캄보디아 정상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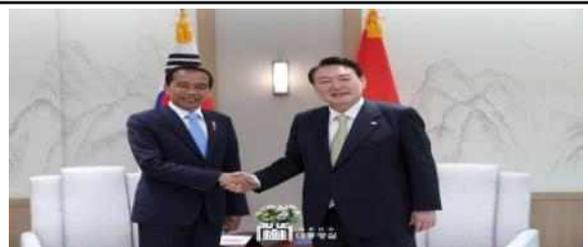
한-태국 정상회의



한-필리핀 정상회의

- 아세안 국가들과의 고위급 교류 재활성화를 통한 역내 공동 도전과제(경제안보, 기후변화 등) 대응 공조를 위한 협력 기반 강화 및 양자 관계 확대를 위한 정치적 의지 결집

- (인도네시아 대통령 공식방한(7.27-28)) ▲ 천연자원 강국인 인도네시아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구축 및 이를 통한 첨단산업 분야 등 경제안보 협력 강화 ▲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사업 관련 우리 기업 진출 기회 확대 ▲ 방산 협력 성과 점검 및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의지 확인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7.28)

- (베트남 국가주석 공식방한(12.4-6)) 수교 30주년 계기 국가주석의 신정부 출범 이후 첫 국빈방한 및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베트남 최고 단계)’ 격상을 통해 양국 관계 새로운 전기 마련 / 외교, 무역, 금융, 공급망, 전력, 보건, ICT, 문화 분야를 아우르는 9개 정부간 협정 및 양해각서 체결(12.5)



한-베트남 정상회담(12.5)

- (인도네시아 푸안 하원의장* 및 메가와티 前대통령 방한(11.6-10) 계기 우리 대통령 접견) ▲경제·국방·인적교류 등 양국 관계 전반 ▲아세안·G20 등 다자회의 계기 양국 공조 방안 ▲2023년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관련 협력 등 논의
 - * 인니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이자, 차기 유력 대권주자
- (총리 주재 주한 아태지역 대사 초청 간담회(9.23.)) 아태 13개국* 주한대사를 초청하여 공급망,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및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 강조
 - * 뉴질랜드,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 (총리 주재 주한 아세안 대사단 및 국제기구 대표 차담회(11.25.))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 특사 파견 및 대통령 예방(6.28-7.1))
 - ▲양국 신정부 간 공조 강화 의지 확인 ▲방산·국방 등 전통적 분야 협력 심화 ▲에너지·원전 등 신규 협력 분야 발굴 등

- 외교장관,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8.4-5) 참석을 통해 한-아세안 협력 방향 제시 및 11월 한-아세안/아세안+3/동아시아정상회의 성과 거양을 위한 토대 마련
 - 우리 아세안 외교 중시 기조 부각 및 한-아세안 관계 격상 의향 소개
 - 한반도 문제 관련, 북 도발에 대한 아세안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보 및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 확대
 - 또한, 동남아 6개국(동티모르, 라오스,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태국) 및 아세안 사무총장과의 별도 양자회담을 통해 동남아-아세안 각국과의 ▲ 고위급 네트워크, ▲ 교역·투자 ▲ 인프라, ▲ 개발, ▲ 인적교류 등 분야 협력 강화 기반 구축



한-캄보디아 외교장관회담(8.5)



아세안 사무총장 면담(8.4)

- 외교장관, 동남아 3개국 양자 방문 및 1개국 양자 방한 접수
 - ※ 베트남 방문은 아래 별도 설명
 - (싱가포르) 총리 예방 및 외교장관회담(7.6) 등을 통해 인프라, 교역·투자 등 전통적인 협력을 공고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원자력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 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외교장관회담(7.7)을 통해 국방·방산 등 분야에서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핵심광물 관련 공급망 협력, 인도네시아측 신수도 이전 사업 등 신규 분야로 협력 지평 확대
 - (라오스) 라오스 부총리 겸 외교장관 공식방한 접수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논의, 신정부의 한-아세안-메콩 중시 기조 확인



한-싱가포르 외교장관회담(7.6)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회담(7.7)



한-베트남 외교장관회담(10.17)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 통화(6.20)



한-라오스 외교장관회담(9.6)

○ 한-베트남 수교 30주년 계기 양국 관계의 질적·양적 고도화

- 국가주석의 신정부 출범 이후 첫 국민방한(12.4-6) 및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로의 격상 통해 최상의 양자 관계 구축
- 수교 30주년 계기 ▲한-베 현인그룹 운영 및 한-베 관계 미래 발전을 위한 보고서 발간(12.20) ▲수교 30주년 및 베트남 국경일 기념 리셉션 장관 축사(8.26) ▲한-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 학술 논문 공모전 시상식·발표회 개최(10.25) 등 통해 양국 협력관계 공고화 노력 강화



제2차 한-베트남 현인그룹 회의(6.15)



한-베트남 수교 30주년 및 베트남 국경일 기념 리셉션 참석축사(8.26)



한-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 학술 논문 공모전 시상식·발표회(10.25)

○ 관련 기관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연계성과 정합성 제고

-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범정부 관계부처회의를 개최 하여(10.11, 17개 기관 참석) 한-아세안 협력 심화·확대를 위한 협력 방향 및 성과사업 발굴·이행 방안 논의 등을 통해 부처별 지역 정책간 정합성 제고 및 아세안에 대한 포괄적·통합적 전략 수립

○ 대면 교류 활성화를 통해 전방위 지역 네트워크 구축 활동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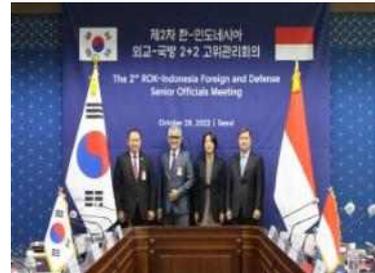
- (제10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2년만에 포럼 대면 개최(9.14, 비엔티안) 통해 한-메콩 협력 모멘텀 유지 및 한-메콩 교류·투자 활성화 위한 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 촉진
 - ※ 2022년 제10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주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메콩 경제협력」
- (제1차 한-필리핀 해양대화(9.21)) 동남아 국가와 최초로 해양 분야 관련 정례 대화체를 출범시킴으로써 해양 안보·경제·환경에 대한 한-필 양자간 협력을 구체화하고, 아세안과의 해양안보 분야 전략 협력 기반 마련
- (제2차 한-인도네시아 외교·국방 2+2 고위급 회의(10.28)) 2023년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에 앞서 양국 간 실질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인태 지역의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여 아세안의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전략적 소통 강화
- (한-메콩 유스그룹 워크숍(8.17-19)) 한-메콩 교류의 해(2021-22) 기념 사업으로 한국과 메콩 국가 청소년 간 교류 활동을 통해 차세대 친한 인사 기반 확대 및 상호이해 증진 등 미래협력 우호 기반 구축



제10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9.14)



제1차 한-필리핀 해양대화(9.21)



제2차 한-인도네시아 외교·국방 2+2 고위급 회의(10.28)

○ 인태지역 주요국들과 아세안·동남아 관련 연계협력 강화

- 한-미 동남아 정책대화(2월, 10월) 및 한-호 동남아·아세안 정책 대화(3월)를 통해 인태지역 유사입장국과 정책 공조 강화
- 한-미-아세안 청년 캠프 'YCAFE*' (8월) 및 한-미-호 인태지역 백신포럼(12.7) 공동개최를 통해 역내 다자 협력 주도

* 청년교류 분야에서 최초의 한-미 간 연계협력 사례 / 동남아·미국·한국 청년 참가자들 모두 동 교류 행사에 대해 높은 만족도 시현

- '아세안 확대 연계성 포럼'(12.8) 개최를 통해 아세안 연계성 분야에서의 대화 상대국(미국, 일본, 호주, EU 등) 간 협력 기반 강화



한-미-아세안 청년 캠프(YCAFE)

○ 동남아 소지역 협력 강화

- (한-메콩 협력 강화) ▲한-메콩 협력기금 확대(400만불→ 500만불 / 8개 사업선정) ▲한-메콩 고위관리회의 개최(7.12) ▲메콩우호국 고위관리회의 참석(8.3) ▲'한-메콩 교류의 해'(2021-22) 계기 한-메콩 유스그룹 워크숍(8.17-19) 개최 등 통해 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 및 상호 이해 증진
- (한-해양동남아 협력 제도화) ▲한-해양동남아 기금 확대(100만불 →300만불) ▲한-BIMP-EAGA 국장급 고위관리회의 개최(11.24) ▲한-BIMP-EAGA 협력포털 운영 등을 통해 해양동남아 지역 내 개발격차 해소, 한-아세안 연계성 강화, 우리 국민 관심 제고

○ 다양한 매체를 통한 對아세안 정책 홍보 강화 및 대국민 인식도 제고

- 장관, 국내 언론(매일경제)에 “아세안의 시간’ 실감한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제하 기고를 게재(8.9)하여 신정부 아세안 중시 기조에 대한 여론주도층의 이해 제고



장관 매일경제 기고



1차관 문화일보 기고

- 아세안국장, 외교부 유튜브 콘텐츠인 KOREAZ 인터뷰* 실시 등 SNS 콘텐츠 제작을 통해 한-아세안 협력 및 외교부의 아세안 정책 관련 대한 대국민 이해 제고

* KOREAZ Focus, "ASEAN-ROK Special Partnership"(9.13, 주한캄보디아대사·주한 필리핀대사·외교부 아세안국장)



아세안국장, MOFA KOREAZ 인터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의 30초 highlight

○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양·다자 협력 강화를 통한 외교지평 확대

- (서남아·태평양 지역 양자 고위급 교류 확대) 서남아·태평양 지역 내 주요 국가들과의 양자 고위급 교류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기조 아래 역내 협력 증진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를 시현하고 고위급 교류, 정부, 경제 등 제반 분야 협력 강화

- ▲NATO 정상회의 계기 한-호주 정상회담(6월), ▲G20 외교 장관회의 계기 한-인도, 한-호주 외교장관회담(7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파키스탄, 한-스리랑카 외교장관회담(8월) 등 양자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자간 협력 방안, 지역 현안 등에 대해 긴밀히 논의
- 또한, 서남아 유력인사 초청사업을 통해 ▲방글라데시 외교부 동아태국장(10월), ▲스리랑카 국립교육원장(11월), ▲네팔 외교부 동북아국장(11월) 등이 방한하여, 부산세계박람회를 홍보하고 양자 외교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 창출

- (對태평양도서국 고위급 교류) 태평양도서국과의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고위급 교류를 추진, 동 지역 우리 관여 확대 및 협력 모멘텀 확보
-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10.25-28)) 5년 만에 대면 개최된 금번 회의에서 내년 최초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여 양측간 협력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 또한, 협의체 참석 범위 확대 합의를 통해 상호간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우리 정부의 비핵, 평화, 번영을 위한 '담대한 구상' 지지 확보
 - * 특히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해 금번 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하고 유치 관련 부대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일부 태평양도서국의 지지 확보 성과 거양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10.25-28)

- (양자 외교장관회담 개최(10.27))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공식 방한 중인 마셜제도, 통가,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외교장관과 연쇄 양자회담을 갖고 양자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보다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경제, 개발 협력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및 부산박람회 관련 우리 입장 설명 실시, 내년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최 관련 태평양도서국 측 적극적 협조 확보
 - ※ 외교장관회담 이외 ▲한-나우루 외교차관회담, ▲차관보 - 주일피지대사 면담, ▲한-바누아투 국장급 회담 등 실시
- (대국민 홍보 강화) 외교장관회의의 계기, 언론 활동, SNS 홍보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 제고



한-태도국 외교장관회의의 획터뷰



1차관 태평양도서국 장관회의의 관련 기고

- (다자주의 협력 강화) 지정학적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하여 유사입장국들과의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다자차원의 노력 강화의 일환으로 신규 협의체인 푸른 태평양 동반자(Partners in the Blue Pacific) 협력 가입 및 아시아태평양 4개국 정상간 회동 참여로 연대 공고화
 - (Asia Pacific 4; AP4) 6.29. 나토 정상회의 계기 아시아태평양 4개국(한, 일, 호, 뉴) 정상간 회동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평화·번영 및 규범 기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각국의 의견 공유 및 공조 강화 의지 확인
 - (Partners in the Blue Pacific; PBP) 우리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및 우리 인태전략 하에 태도국에 대한 기여와 관여를 강화해나간다는 기조에 따라 對태도국 협력 이니셔티브인 PBP 외교장관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한 후(9.22) 정식 참여 의사를 대외 발표(11.13 한미일 정상회담 계기)
 - ※ (11.13.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중 관련 부분) They will look for opportunities to do so individually and together, including through the Partners in the Blue Pacific, and President Biden and Prime Minister Kishida welcome President Yoon's intent to join the partnership.
- (기존 다자협의체 적극 활용) 인도태평양 및 서남아 지역과 다자 협의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동지역에 대한 우리의 관여 확대 및 협력 강화
 - (환인도양) ▲IORA(환인도양연합) 각료회의 참석 ▲제3차 한-IORA 파트너십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파트너십 강화 및 관광분야 향후 협력 모멘텀 확보
 - ※ 제3차 한-IORA 파트너십 세미나(22.6.9-10, 주제: 포스트 팬데믹 시대 관광 및 문화교류의 재창조를 통한 지속 가능 성장 기회 모색)
 - (서남아) 제13차 한-SAARC(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파트너십 세미나(12.20) 개최를 통해 역내 국가들과 협력 증진 방안 모색 예정

□ 장기적 효과

○ ‘한-아세안 연대구상’ 발표 및 실질 협력을 위한 재원 확충을 통해 장기적인 협력 기반 강화

- 신남방정책에 이어 우리 신정부의 對아세안 정책 구상을 발표 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일관되고 중장기적인 아세안과의 협력 방향 제시 등 한-아세안 관계 격상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 향후 5년에 걸쳐 ▲한-아세안 협력기금은 연 3,200만 불 ▲한-메콩 협력기금은 연 1,000만 불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은 연 600만 불로 각각 올해 대비 2배 규모로 증액(doubling)을 공약함으로써 정책의 실천적 기반 확보

- 기금 등 재원 확충에 따라, 아세안의 협력 수요가 높고 우리가 강점을 지닌 ▲디지털, ▲기후변화, ▲공중보건 등의 분야에서 한-아세안 간 협력의 체계적 확대를 통해 아세안의 핵심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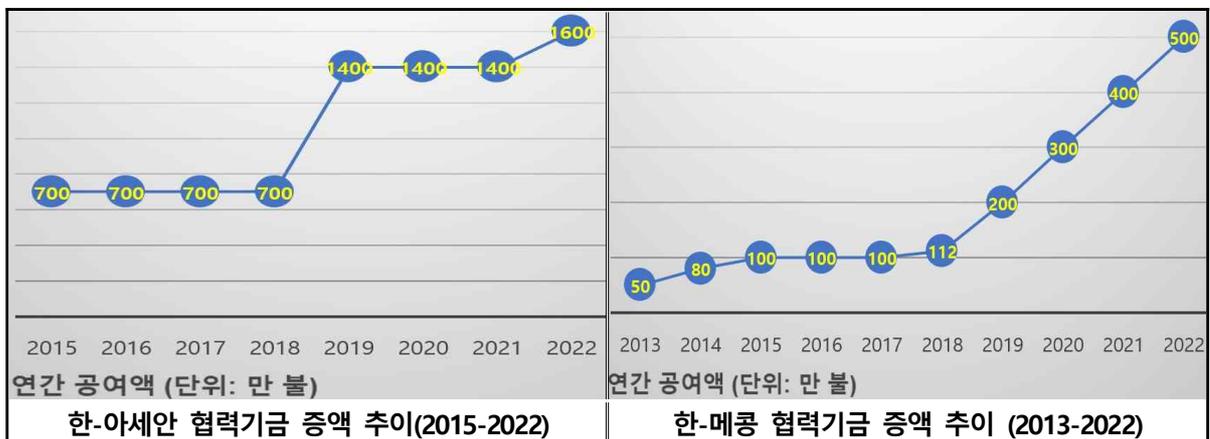
※ 한-아세안 협력기금 : 1990년 조성 / 한-아세안 협력 증진 및 아세안 차원 중요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사업 진행

- 2022년 예산 약 1.6천만 불 / 1990-2022년간 누적 약 1.53억 불 지원

※ 한-메콩 협력기금 : 2012년 조성 / 한-메콩 협력을 강화하고 메콩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한 개발격차 완화 및 연계성 증진에 기여

- 2022년 예산 500만 불 지원 / 2013-2022년간 누적 1,945만 불 지원

※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 2021년 조성 / 해양동남아 낙후지역 개발 및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해 조성 / 2022년 예산 300만 불



- 특히, 2024년 한-아세안 관계 35주년 계기 한-아세안 포괄적·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은 아세안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의 글로벌중추국가 비전 실현에도 기여 예상
 - *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 :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 맺는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으로, ▲2021년 중국, 호주와, ▲금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시 인도, 미국과 수립
- 인도,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도서국 등 인태지역 주요 국가들과 양자, 소다자 차원의 중층적·포괄적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우리 글로벌 협력의 지리적 범위와 협력 의제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의 역내 역할과 기여를 강화해 나갈 예정
- 2023년 최초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모두를 초청하여 개최됨에 따라 한-태평양도서국 관계가 질적 및 양적으로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태평양도서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국제 선거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입장을 보다 폭넓게 지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14개 태평양도서국 중 10개국이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 ※ 태평양도서국은 UN내 아시아·태평양그룹(54개국)의 26% 비중을 차지

② 유럽 지역국가들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 기반 실질협력 강화

□ 주요 성과

○ EU 및 유럽지역 국가들과의 미래지향적 협력 분야 파트너십 강화

- (총리 주재 주한 유럽대사 초청 간담회(7.15.)) 유럽 16개국* 주한 대사를 초청하여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지역 국가들과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강화 방안 논의

* 그리스, 노르웨이, 독일,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체코, 튀르키예, 폴란드, 헝가리

- (장관 주재 유럽지역 공관장회의 개최(9.7.)) 우리의 對유럽 외교 전초기지인 유럽지역 49개 공관이 참석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달성을 위한 유럽지역 국가들과의 미래지향적 협력방안 등 논의

- (재외 명예영사 방한 초청(10.17.-22.)) 유럽국 주도로, 우리 외교를 지원하는 민간 외교사절인 재외 명예영사를 초청(총 10개국 중 유럽국 4개국*)하여 친한 인사 기반 확대 및 對유럽 외교 역량 강화

※ 사물지능융합기술(AIoT) 국제 전시회 참관 등 추진하여 한국이 강점을 가진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재외 명예영사들의 이해 제고

*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총리 주재 주한 유럽대사 간담회(7.15.)



제11차 재외명예영사 초청사업(10.17.~21.)



유럽지역 공관장회의(9.7.)



- (정상 간 축하 서한 교환) 한-오스트리아 교류 개시 130주년(6.23.), 한-아이슬란드 수교 60주년(10.10.) 등 2022년 수교 기념국들과 축하 서한을 교환하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 심화·발전 의지 교환 및 공감대 형성

○ 고위급 교류 확대를 통한 유럽지역 국가들과의 구체 협력 강화

- (유럽 국가들과 가치·규범 기반 파트너십 구축)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 핵심 가치를 대한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 고위급 교류를 통해 가치·규범 기반 외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다자 현안 공동 대응 방안 마련

- (영국) 우리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9.19.)에 참석함으로써 한-영 우호 관계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 한층 강화

- 특히, 취임 3주 만에 방한한 영국 외교장관과 '제7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9.28.)'를 개최하여 양·다자 협력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 채택

* 6월 한-영 양자 정상회담(6.30.) 계기 채택한 양국 간 미래협력 비전을 포괄하는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양자 프레임워크」이행 방안 포함, 원전·디지털·보건·사이버·공급망·과학기술외교·한반도 비핵화 등



대통령, 영국 여왕 국장 참석(9.19.)



제7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9.28.)

ROK-UK Foreign Ministerial Strategic Dialogue
28 September 2022
Joint Statement

1. H.E. Mr Park Ji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Rt. Hon James Cleverly, the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Commonwealth and Development Affairs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held the ROK-UK Foreign Ministerial Strategic Dialogue on 28th September 2022 in Seoul.
2. Reviewing the ROK-UK Bilateral Framework for Closer Cooperation agreed between Leaders in June 2022, Foreign Minister Park and Foreign Secretary Cleverly reiterated their commitment to advancing security, energy, digital, economic, health and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ROK and the UK. In the context of global challenges from climate change, COVID-19 pandemic and Russia's aggression against Ukraine, the two ministers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defending freedom, maintaining regional security and upholding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3. The Ministers welcomed high-level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since the launch of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in May that includes a summit meeting and three encounters between the two Leaders, three ministerial level meetings including today's strategic dialogue. The Foreign Secretary also expressed his appreciation for President Yoon and the First Lady's visit to London to attend the funeral of Her Late Majesty Queen Elizabeth II.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공동성명(9.28.)

- (독일) G7 의장국이자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우방국인 독일과 총리, 대통령을 포함하여 다양한 고위급 인사와 교류를 적극 실시*하고 **안정적 공급망 구축, 에너지 안보 증진 협력 강화 방안 등 논의**

※ 이외에도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 심화, 통일을 경험한 독일과의 한반도 문제 협력 강화 등 협의 / 독일측,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 및 기후 변화 해결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라는 입장 표명

- * ▲ 외교차관회담(6.10.) ▲ 외교장관회담(7.8.) ▲ 우리 대통령-독일 총리 간 정상회담(9.21.) ▲ 슈타인 마이어 대통령 공식 방한 및 정상회담(11.4.)



한-독 외교장관회담(7.8)



한-독 정상회담(9.21)

한독 정상회담 언론공동발표 주요내용 11.4. 대한민국정부

**윤석열 대통령 -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국제사회 직면 위협에 대응해
상호 협력 한층 강화**

- ▶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 ▶ 북한 도발 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긴밀히 공조
- ▶ 우크라이나 국민의 평화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노력 지속
- ▶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독일 대통령 공식방한 계기 한-독일 정상회담 언론공동발표문 주요 내용(11.4)

- (EU) 고위급 교류 지속*을 통해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그 결과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7.1. 발표)’** 등 성과 거양

* EU와는 ▲ 당선인-EU 집행위원장 통화(3.31.) ▲ EU 대통령 특사 파견(6.5.-9.) ▲ 공동위(6.28.) ▲ 약식 정상회담(6.30.) ▲ 외교장관회담(7.7.) ▲ 고위정치대화(10.28.) 등 각급 고위급 교류 지속 실시

** 우리나라는 EU의 10대 전략적 동반자 중 하나이자 EU와 3대 핵심협정(기본협정, FTA, 위기관리협정)을 모두 체결한 유일한 국가

유럽에서도 COOV로 백신접종 증명...31개국 적용

출고시간 2022-07-02 10:43:14



유럽에서도 COOV로 백신접종 증명...31개국 적용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상호 인정(7.1.)



한-EU 외교장관 회담(7.7.)



제8차 한-EU 고위정치대화

- (스페인) 양국 간 고위급 교류* 모멘텀을 지속 활성화하고, 무역보험공사 간 MOU 체결 및 외교 아카데미 간 MOU 체결 등(11.18. 정상회담 계기) 경제협력과 인적·학술 교류기반을 강화하여 문화관광 확대를 추진**하는 등 다방면으로 '한-스페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추진

* ▲우리 대통령,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면담(NATO 계기, 6.29.) ▲외교 장관회담(7.8.) ▲페드로 산체스 총리 공식 방문 및 정상회담(11.18.)

** 내년 국내 스페인 세르반테스 문화원(스페인어 보급 등 문화교류 전담 기관) 및 관광사무소 개관 예정



한-스페인 외교장관 회담(7.7.)



한-스페인 정상회담(11.18.)

- (네덜란드) 정상외교를 포함한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EU 회원국 중 對한국 투자 1위** 국가인 네덜란드와 반도체, 원전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지속 심화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11.17. 정상회담 계기)

- * ▲ 정상회담(NATO 계기 6.29.) ▲ 외교장관회담(9.28.) ▲ 1차관, 네덜란드 총리실 국가안보보좌관 면담 ▲ 제2차 경제공동위(10.18, 실장급) ▲ 마크 루터 총리 공식 방한 및 정상회담(11.17.)
- ** 우리의 對네덜란드 투자는 對EU 회원국 중 2위(2021년) /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ASML社는 2024년까지 화성시에 2,400억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예정



한-네덜란드 외교장관회담(9.28.)



한-네덜란드 정상회담(11.17.)

- (정상 세일즈 외교 적극 지원) 정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정상 세일즈 외교 관련, 원전·방산 분야 핵심 협력 대상국인 폴란드, 체코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외교적 지원

- (폴란드) 정상회담부터 차관보급 정책협의회에 이르기까지 각급 고위급 교류를 통해 방산, 원전 분야 협력 증진 방안 지속 논의하고, 외교부·대사관·국방부·방사청·산자부 등이 One Team으로 지원함으로써 방산무기수출(K2, K9, FA-50, 천무)과 민간 주도 원전 분야(LOI, MOU 체결)에서 가시적 성과 도출

- * ▲ 한-폴 대통령 간 정상회담(NATO 계기, 6.29.) ▲ 국회의장 폴란드 방문(8월) ▲ 우리 대통령-폴 총리 간 통화(8월) ▲ 외교장관회담(UN총회 계기, 9.19.) ▲ 정책협의회(10.25.) 등

○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NATO 정상회담시 진행된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금번 계약성사를 위해 방산협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실시함에 따라 계약체결이 가속화될 수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병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업무보고 때마다 방산육성과 방산수출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외교부, 방사청, 각 군 등 방산수출과 관련된 부처·기관간 협업을 통해 업체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수출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병정부 차원의 지원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노력으로 방산업체의 정부 그리고 우리 군이 원천으로 협력하여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수출 계약체결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방사청 보도자료(8.27.)



대통령-폴 총리 통화(8.30.) 연합뉴스 방송

< 한-폴 방산, 원전 분야 협력성과 >

- ▶ (방산) 폴란드와 총 124억불 규모 대규모 수출 계약 성사 / ▲ K2전차, K9자주포, FA-50 총괄계약(7.27) ▲ K2, K9 1차 이행계약(8.26.) ▲ FA-50 이행계약(9.16) ▲ 천무 총괄계약(10.20) ▲ 천무 1차 이행계약(11.4)
- ▶ (원전) 폴란드 사신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 방한 계기, 폴란드 민간 주도 원전 사업(퐁트누프 지역, 최대 4기) 관련 LOI(협력의향서)와 MOU 체결(10.31.)

- (체코) 6월 한-체코 정상회담(NATO 정상회의 계기)에 이어 9월 한-체코 외교장관회담(UN총회 계기), 10월 체코 외교부 정무 차관 방한 계기 면담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원전 분야 우리 기업의 우수성 홍보 등 수주 지속 지원

※ 체코 두코바니 원전(약 8조원 규모) 수주 위한 민관 합동 노력 중

- (중유럽 지역 국가들과의 실질협력 확대방안 협의)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이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가진 중유럽 국가들과의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여 실질 협력 확대 기반 구축

- (헝가리, 슬로바키아) 제조업, 전기차 배터리 등 분야 우리 기업이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지역으로 ▲8월 한-헝 외교장관 통화 ▲7월 제4차 한-슬 정책협의회를 통해 우리 진출기업 지원 및 미래산업 분야(전기차 배터리, 수소 등)에서의 협력 강화 계기 마련
- (루마니아) ▲8월 김진표 국회의장 루마니아 방문 ▲9월 한-루마니아 총리회담 통해 양국 교역·투자 확대, 원전·방산 분야 협력 잠재력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 (오스트리아) 10월 한-오스트리아 외교장관회담(수교130주년 계기 방한) 계기 과학·기술, ICT, 기후변화 등 미래지향적 협력 분야에서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11월 박병석(前 국회의장)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여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두 국가와 정치, 문화, 인적교류뿐만 아니라 자동차, 에너지, 탄소중립 등 다방면에서의 실질 협력 동력 확보



한-헝가리 외교장관 통화(8.17)



한-루마니아 총리 회담(9.28)



한-오스트리아 외교장관회담(10.23)

- 교역, 보건, 기후, 디지털 등 주요 분야에서 유럽지역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강화 및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틀 마련
- (비셰그라드 그룹(V4)와의 협의채널 공고화) V4는 우리의 EU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이자 전기차 배터리, 방산, 원전, 인프라 등 유망 산업 분야 주요 협력 파트너로, 11월 말 서울에서 한-V4 간 제7차 정무차관보 회의 개최를 통해 교역·투자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사이버 안보 등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 한-V4 협력 >

- ▶ (V4 개요) 1991년 창설된 중유럽 4개국(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의 지역 협력체
- ▶ (한-V4 협력 현황) V4는 EU내 2대 교역대상 지역(200억불)이자 최대 수출시장(164억불)이며 650여개 우리 기업이 진출한 핵심 파트너 / 교역·투자 이외에도 방산·원전·인프라 등 분야 실질협력 활발
- ▶ (한-V4 협의채널)
 - 한-V4 정상회의 : 1차('14.12월, 프라하), 2차('21.11월, 부다페스트)
 - 한-V4 외교장관회의 : 1차('14.7월, 브라티슬라바), 2차('15.11월, 룩셈부르크), 3차('19.6월, 브라티슬라바)
 - 한-V4 정무차관보회의 : 4차('17.10월, 부다페스트), 5차('19.3월, 서울), 6차('21.9월, 부다페스트)

- (범유럽지역 다자협의체와 주요 분야에서 협력 강화) 제43차 불어권 각료회의(11.18, 튀니지) 및 제18차 불어권 정상회의(11.19.-20, 튀니지) 참석을 통해 프랑스, 벨기에 등 불어권 국가들과 협력 강화 및 對유럽 외교 시너지 효과 창출

※ 우리 정부는 불어권국제기구(OIF) 옵서버 가입(2016년) 이래 정상회의 참석(격년 개최) 및 아시아태평양 연례 지역회의 참석(연례 개최) 등을 통해 불어권 국가들 대상 우리 외교 외연 확장 및 지역 맞춤 협력 추진 중

- (한-EU 보건/그린/디지털 파트너십 구축) 우리의 경제 분야 주요 파트너인 EU*와 글로벌 도전과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11.28.)하는 한편 한-EU 보건/그린 파트너십 체결 협의 지속

* EU는 2021년 기준 제1위의 對한국 투자국(127억 달러)이며 우리의 제4대 교역 상대국

□ 장기적 효과

- 우리 정부의 외교 다변화 주요 대상인 EU 및 유럽지역 국가들과의 제반 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對유럽 외교 역량 강화
 - 특히 전염병, 공급망 문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상대국과의 즉각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의 양자관계 구축 및 관리
 - UN, OECD, G7, G20 등 국제사회 주요 행위자인 유럽 국가들과 공조하여 다자무대에서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등 新글로벌 이슈 관련 규범 형성 주도
-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세계적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민주주의, 인권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 안보 협력을 통해 국익 확보 및 증진
 - 독자적 인태전략을 발표한 프랑스(2019), 독일(2020), 네덜란드(2020), 영국(2021), EU(2021)를 비롯하여 다수 유럽 국가들과 인태지역에서의 공급망, 무역, 안보 등 협력 지속 강화
 -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뿐 아니라 자국 내 북한 상주 공관이 있는 유럽 국가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여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이슈 관련 우리 입장에 대한 지지와 긴밀한 공조 확보
- 에너지 안보와 국방력 강화에 관심이 다대한 유럽지역 국가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최근 원전, 방산 분야의 성과를 유럽지역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실질협력 지속 강화

□ 주요 성과

가. 중동·아프리카

[중동]

- 중동은 다수국이 Top-down식 의사결정체계를 갖는바, 고위급 네트워크를 중점 구축하여 미래 협력(탈석유·보건·스마트시티 등) 심화를 위한 실질 성과를 거양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속화 등 차질 없는 방문 성과 거양
 - ※ 대규모 경제 협력은 대부분 정부/왕실 주도 사업으로서 최고위급 교류의 성과는 우리 기업 수주 및 사업 협력에 직접적으로 연결
- (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올 11월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가 공식 방한, 양국 관계 격상 및 정상간 '전략파트너십 위원회' 설치에 합의
 - ※ 동 계기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 ▲내무부 장관, ▲국가방위부 장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상무부 장관, ▲투자부 장관, ▲경제기획부 장관, ▲사우디 국부펀드(PIF) 총재 등 사우디 핵심인사 대부분 방한
 - 이외에도 사우디 외교장관 공식 방한(7월), 한-사우디 외교장관 회담, 한-사우디 외교장관 통화(9월), 외교차관보 사우디 방문 및 사우디 외교차관 면담(10월) 등을 통해 ▲고위급 교류 활성화 ▲「사우디 비전 2030」, ▲대형 신도시 네옴(NEOM) 프로젝트에의 한국 참여, ▲에너지·건설·ICT·보건 등 첨단 분야 협력방안 등을 긴밀히 논의
- (UAE)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UAE와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산 등 주요 분야의 전략적 협력 확대
 - 대통령 조문 특사 파견(5월), 외교장관-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면담(6월), 한-UAE 외교장관 통화(6월), 한-UAE 외교장관 회담(7월),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UAE 대통령 특사) 방한(9월), 대통령 특사 파견(12월) 등 고위교류 계기마다 ▲석유·가스, 건설·인프라 등 전통 협력 분야 협력, ▲원자력, 국방·방산 협력, ▲수소, 보건,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우주, 농업 등 미래 신성장 분야 협력 방안 등을 긴밀히 논의

- (카타르) 우리나라 최대 LNG 공급국(25%)이자 제8의 해외건설 시장(누적 수주액 276억불)임을 감안, 「카타르 국가 비전 2030」을 필두로 한 미래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 지원
 - 카타르 부총리 겸 외교장관 공식 방한(8월)시 ▲LNG 및 수소, 태양광 등 에너지 협력, 우리 기업의 카타르 인프라 사업 참여 지원 등을 논의하고 ▲한-카타르 사증면제협정을 체결(8.17.) 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를 지속중
- (오만) 제4위 LNG 공급국으로서 오랫동안 긴밀한 에너지 협력을 유지 중으로, 최근 산업다각화를 위해 추진 중인 「오만 비전 2040」 정책 실현에 많은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 지속
 - 오만 차관 공식 방한(10.20-23) 시 ▲외교장관 예방, 차관회담, 통상교섭본부장 면담, ▲LNG,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탄소중립 등 실질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



한-UAE 외교장관 회담(7.8)



한-카타르 외교장관 회담(8.17.)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 방한(11.16-17)

- (이집트)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 하 개발협력 및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왔으며, 최근 원전, 방산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확대 / 정상간 통화(10.20)시 ▲우리 기업 지원 당부 및 ▲원전 등 협력 방안 집중 협의
- (이스라엘) 역대 위상 제고로 주목받고 있는 이스라엘과 대통령 당선인 주한 대사 접견(3.24), 외교장관 주한대사 접견(6.20) 등 최고위급에서 소통을 실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발효(12월 추진중) 준비 등 실질협력 확대 기반을 조성
 - 아울러, 선제적인 한-이스라엘-UAE 삼각협력 정책연구용역 발주(22.5월~) 및 관련 공공외교 실시(UAE 외교아카데미 워크숍 및 기고, 이스라엘 오피니언 리더 면담 등)

- (요르단)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요르단 정상간 축하서한을 교환(7.26)하고, 외교장관간 통화(9.6)를 실시하여 동 계기 ▲양국관계 발전 방안 논의,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활동에 대한 요르단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당부



한-요르단 외교장관 통화(9.7)



UN총회 계기
한-이란 외교장관 회담(9.19)



한-이집트 정상 통화(10.20)

- (이란 현안 관리) 협력 잠재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로 인해 파생된 현안(동결자금)이 있는 이란과의 관계 관리 노력을 집중 전개
 - 정부 출범 이후 집중적인 고위급 소통(정상간 서한 교환(2차례), 외교장관 회담(9.19), 차관 통화 등)을 통한 현안 해결 의지 공유
 - 한-이란 인도적 교역 확대, 인도적 지원(의약품), 동결자금을 통한 이란의 UN분담금 납부 지원 등 구체 성과 거양
 - 미국, 유럽연합, 영·불·독 등 이란 문제에 대한 핵심 유관국과의 소통을 통해 JCPOA 복원 협상에 지속 관여, 우리 국익 투영 노력
 - ※ 1차관-EU 외교안보 대외관계청 사무차장 통화(7.4), 1차관-미이란 특사 통화(7.6), 1차관-EU 외교안보 대외관계청 사무차장 및 미 이란특사 통화(8.19), 1차관-미이란특사 면담(9.15), 제8차 한-EU 고위 정책대화(10.28) 등
 - 對이란제재 해제를 대비한 경제협력 기반 사전 정비 작업도 병행 ⇒ JCPOA 복원협상 전격타결 및 대이란제재 해제 상황을 대비한 우리 기업 이란 진출 방안 사전 점검

[아프리카]

- 우리의 발전 경험과 협력 의지(hidden agenda 부재)에 대한 아프리카의 높은 관심과 우호적 기대에 부응,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한 고위급 교류 및 관계 발전 적극 추진(※이전 정부 1년차에 비해 고위급 교류 1000% 이상 증가)

- 미래 시장인 아프리카의 중요성*을 감안한 주요국들의 공세적 진출 동향을 주시하면서, 지역별로 서로 다른 특성을 감안하여 권역별 거점국을 중심으로 협력을 심화하고 지역경제공동체**와의 협력도 개시

* 2050년 전세계 인구의 1/4, 핵심광물 30% 매장, AfCFTA 출범에 따른 단일시장 부상, 대서양-인도양-아덴만 연결 전략적 요충, 유엔 등 글로벌 무대에서 캐스팅 보터 등

**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중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ECCAS),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등 8개 경제공동체 중 가장 발전된 협력체계를 보유하고 지리적으로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아프리카공동체(EAC)와 1.5트랙 파트너십 세미나 개최(8.4)

- (케냐) 동아프리카 지역 물류·경제 허브이자 우리 최대 교역국인 케냐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단(9.13) 파견 / ▲케냐 대통령 예방(9.14) ▲모잠비크 대통령 예방(9.12), ▲말라위 대통령 예방(9.13)을 통해 양자관계 논의 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
- (남아공) 한-남아공 수교 30주년을 맞아 제1차 한-남아공 장관급 공동위(10.11, 서울)를 개최하여 ▲경제·통상·투자 ▲과학기술 ▲원전, 재생에너지 등 자원 협력 및 ▲문화교류 등 실질협력 증진방안 논의
- (탄자니아) 한-탄자니아 총리 회담(10.27, 서울)에서 ▲인프라, 교통, ICT 분야 협력 ▲흑연, 니켈, 코발트 등 자원 협력 ▲행정수도 이전 경험 공유 ▲2030 부산세계박람회 등 논의
-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제1의 경제대국인 나이지리아 정상외 10년 만의 방한 계기 정상회담(10.26) 및 외교장관 회담(10.28)을 개최하여 ▲양국 관계 발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논의



제1차 한-남아공 장관급 공동위



한-나이지리아 외교장관 회담

- (가봉) 전통적 친한 국가인 가봉과 정상회담(7.20) 개최 및 수교 60주년 기념 정상간 축하서한 교환(10.1)을 통해 인프라 구축·기후 변화 대응 등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요청
- (국회의장 145차 IPU 총회 계기 에티오피아·르완다 방문(10.9-10.13))
 - ▲ 에티오피아 대통령(10.9) ▲ 르완다 상원의장(10.11) ▲ 탄자니아 국회의장(10.11) ▲ 르완다 하원의장(10.12) 면담을 통해 양자관계 논의 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
 - ※ 에티오피아, 르완다, 탄자니아는 가나, 우간다, 세네갈 등과 함께 우리 정부의 ODA 중점 협력국

○ 주한아프리카대사단과의 소통 강화

- (외교장관, 주한아프리카 15개국 대사단 간담회(7.12)) ▲ 신정부 대외정책 설명 ▲ 한-아프리카 관계 발전 방안 논의 ▲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 요청 등



장관, 아프리카 15개국 주한대사 간담회

- (국무총리, 주한아프리카 11개국 대사단 부부동반 오찬 간담회(8.11))
 - ▲ 신정부 대외정책 설명, ▲ 한-아프리카 관계 발전 방안 논의,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 등
- (1차관, 아프리카연합의 날 리셉션 참석(9.7)) 주한아프리카대사단 주최 「아프리카연합(AU)의 날」 리셉션 참석을 통해 對아프리카 협력의 중요성 평가 및 주한대사단과의 소통 강화

○ 2024 한-아프리카 특별 정상회의의 차질 없는 추진

- 우리 정부 최초로 아프리카 54개국 정상을 초청하는 對아프리카 다자회의로 ▲'글로벌 중추 국가(GPS)'로서 위상 강화, ▲아프리카에 대한 국내적 관심 및 이해 제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입에 대비
- 대통령 내외 주최 주한아프리카대사단(31개국 43명) 초청 만찬 개최를(11.23) 통해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공식화하고, 우리 對아프리카 상생 협력 의지를 천명

※ 한-아프리카 특별 정상회의 추진 경과

-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3.3, 서울 / 장관급) 계기 한-아프리카 특별 정상회의 개최 제안
-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2024년 하반기 한-아프리카 특별 정상회의 추진 계획 반영
-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동 특별 정상회의 추진 관련 협의(5.31)
- 동 특별 정상회의 추진 관련 아프리카 국가들 입장 파악 지속(현재 28개국 환영 입장 표명)
- 對아프리카 경제협력 추진 방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7.1)
- ▲ 외교장관-주한아프리카대사단 간담회(7.12), ▲ 국무총리 주최 주한아프리카 대사단 오찬 간담회(8.11.) 등 계기 주한아프리카외교단 관심·지지 요청

나. 중남미

[남미]

○ 리튬 등 핵심광물 주요 매장지역이자 대규모 소비시장(인구 4.4억명)인 남미지역과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및 FTA네트워크 확대

- (국무총리 남미 순방(10.9.-17.)) 칠레·우루과이·아르헨티나 3개국 정상과 회담 개최*를 통해 ▲리튬 등 핵심광물*, ▲수소·재생에너지, ▲수산·농업·항만·국방 등 다양한 부문의 실질 협력 방안 협의
- 동 방문 계기 그간 정상급 교류가 다소 소원**했던 국가들과 양자 관계 강화 및 경제안보 협력 확대 → 특히, 칠레와의 광물 공급망 협력 제도화는 우리 기업의 美 IRA 대응 여건 강화에 기여

* 남미의 '리튬 트라이앵글'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이 전세계 리튬의 60% 공급

** 우루과이 및 아르헨티나는 각각 11년 및 18년 만의 정상급 양자 방문

※ 동 순방 계기 3개국과 광업, 농업기술, 수산과학 부문 등 MOU 5건 체결 · 개정 / 칠레 상원은 칠레 사상 최초로 대북정책 합의문 채택(10.18.) 등 성과



칠레 대통령 면담(10.11)



우루과이 대통령 면담(10.12.)



아르헨티나 대통령 면담(10.14.)

- (칠레) ▲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관계 격상, ▲ 정부(기관)간 MOU 3개* 체결, ▲ 한-칠레 FTA 개선 협상 재개 합의** 등

* 한-칠레 민주적 대화 MOU, 한-칠레 농업과학기술연구협력 MOU, 지속가능한 광업 및 밸류체인 협력 MOU

** 수석대표회의 개최(11.10.), APEC 정상회의(11.16-17.) 계기 통상교섭본부장-칠 외교장관 간 면담 개최(11.18.)

- (에콰도르) 한-에콰도르 외교차관 회담(7.7.) 계기 ▲ 교역·투자·기후변화 대응, ▲ 한국공항공사(KAC)의 에콰도르 신공항 사업 참여 방안, ▲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협상* 재개 논의

* 동 협상은 '16년 이래 중단된 후 올해 재개되어 6차(7월), 7차 협상(9월), 8차(11월) 진행 → 조속 타결 목표로 협상 중

- (아르헨티나) 제8차 한-아르헨티나 고위정책협의회(7.28., 차관급) 계기 ▲ 우리 기업의 리튬 개발 투자, ▲ 수소·재생에너지, ▲ 안정적 곡물 수급 등 경제안보 협력 방안 논의

- (페루) 국무총리, 페루 부통령과 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11.18.)으로 ▲ 방산, 인프라 등 분야 협력, ▲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 ▲ APEC 협력 등 협의

- (수리남) 한-수리남 외교장관 회담(11.16.) 계기 ▲ 개발·에너지·자원·농수산 협력, ▲ 한국전 수리남 참전 용사에 대한 보훈, ▲ 지역 및 한반도 정세 등 논의

[중미]

- 주요 동반자 국가들과 미주 시장 진출을 위한 경제협력 강화 및 미래 지향적 신규사업 확대 및 이민자 문제 등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

- (멕시코) 차관보 멕시코 방문(5월), 멕시코 외교장관 공식방한(7월) 및 대통령 특사 멕시코 방문(10월)으로, 공급망·경제안보 등 경제통상 협력 강화, 對중미 삼각협력, 보건, 우주 등 신규 분야 협력 확대 논의



멕시코 외교장관 방한 및 한-멕시코 외교장관회담(7.6)

- (콜롬비아)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 예방(8월) / 양국 정상통화(6월) 계기 콜롬비아 대통령 2030 부산세계박람회지지 표명 및 무역투자 확대, 방산 등 분야 실질협력 강화



박덕흠 대통령 특사 콜롬비아 파견(8.5.-8.)

-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주요 5개 정부부처* 고위 인사 방한, 대통령 특사 방문(9월)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관계 발전 계기 마련
* 대통령실 혁신부수석(7월), 공공사업교통부장관(9월), 경제부장관(9월), 외교부 장관(10월), 보건부장관(10월), 외교부차관(11월)

- (중미북부 3개국) 외교장관의 중미북부 3개국 장차관* 접견(7월), 3개국 외교차관 초청 및 양자회담(11월)을 통해 중미북부 3개국과 교육, 농업, 보건분야 협력 강화

* 온두라스 외교장관, 과테말라 농업부장관, 엘살바도르 대통령실 혁신부수석

- (코스타리카) 대통령 특사 방문(9월), 외교장관 방한(7월), 외교장관 통화(8월), 외교차관 방한(11월) 등 계기 디지털·인프라·환경 등 분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행동 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확대·발전

다. 중앙아

- 수교 30주년을 맞아 역사적·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중앙아 중소 국가 대상 고위급 교류 강화를 통해 협력 모멘텀 지속

- (대통령 특사, 타직·조지아·아제르바이잔 방문(8.20-28)) ▲ 신정부 중앙아 중시 정책 소개, ▲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요청 등
- (국무총리-중앙아 5개국* 합동 접견(10.24)) ▲ 신정부 중앙아 중시 정책, ▲ 고위급 교류, ▲ 실질협력, ▲ 국제무대 협력 등 논의
 - * 3개국(우즈베크·투르크멘·키르기스스탄) 외교장관 및 2개국(카자흐·타직) 주한대사
- (국회의장-중앙아 5개국* 합동 오찬(10.24)) ▲ 한-중앙아 관계, ▲ 의회 교류, ▲ 실질협력 등 논의
 - * 3개국(우즈베크·투르크멘·키르기스스탄) 외교장관 및 2개국(카자흐·타직) 주한대사
- (키르기스스탄 외교장관 공식방한(10.23-26)) 16년만의 공식방한으로, 외교장관 회담 및 국무총리·국회의장 예방에서 ▲ 고위급 교류, ▲ 실질협력, ▲ 인적 교류 확대 등 논의
- (한-카자흐스탄 외교장관 회담(10.25)) ▲ 경제 협력 확대, ▲ 에너지·원전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 한국기업 참여 협조 등 논의
- (한-타지키스탄 외교장관 회담(10.25)) ▲ 양국 경제인간 교류·협력 활성화, ▲ 산업·농림수산·교육 분야 개발협력 추진 협력 등 논의
- (한-투르크메니스탄 외교장관 회담(10.25)) ▲ 에너지·인프라 사업 한국기업 참여 협조, ▲ 문화·인문·한국어 분야 교류 활성화 등 논의
- (한-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 회담(10.25)) ▲ 고위급 교류 지속, ▲ 보건 의료·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 등 논의

- (장관, 중앙아 5개국 주한대사 간담회(6.7)) ▲ 신정부 중앙아 정책 공유, ▲ 한-중앙아 관계 발전방안 논의

- (장관, CICA* 사무총장 접견(7.4)) ▲ 아시아 지역에서 CICA 역할과 발전방향, ▲ 우리 활동과 기여 등 논의

* 아시아 교류·신뢰구축회의(CICA)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모델로 아시아 역내 신뢰구축과 분쟁 예방을 위해 1992년 카자흐 주도로 출범한 지역 협의체로, 한국과 중앙아 4개국(투르크멘은 옵저버) 등 27개 회원국 참여중



장관, 중앙아 5개국 주한대사 간담회



키르기스스탄 외교장관 공식방한



한-중앙아 협력 포럼 계기
중앙아 5개국 외교장관 양자회담

○ (중앙아) 중소국가 친선그룹 구성(10월)을 통한 중앙아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강화 및 우리정부 외교 다변화

- 해당 지역에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전직 대사, 교수, 기업인 등으로 친선그룹을 구성하여 글로벌 가치외교(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인권 등 보편적 가치 지향) 및 경제안보 외교(공급망, 기술, 디지털 등 분야 글로벌 협력) 연계

- 친선그룹 정부대표단 파견을 통한 현지 네트워킹 및 실질협력 사업(디지털·통신 분야, 수자원·에너지 분야 등) 발굴 추진중(12월)

○ 제15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 개최(10.25, 부산)를 통한 한-중앙아 협력 비전* 실현 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 제14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에서 한-중앙아 미래 협력 비전으로 ①자연과 공존 ②미래기술을 통한 성장 ③인간의 행복이 조화를 이루는 발전을 위한 협력 제시

- 포럼 창설 이래 최초로 중앙아 5개국 외교장관이 모두 참석

- 보건·디지털·관광·환경·경제안보 등 다양한 실질협력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포럼 계기 경제인 협의회 및 에너지 분야 차세대 리더 양성 사업 등을 통해 한-중앙아 경제협력 여건 조성

- 적극적인 포럼 홍보로 우리 중앙아 정책에 대한 공공·국민외교 실현
 - * ▲전 프로그램 유튜브 생방송 ▲5개국 관광홍보부스 설치(다수 인플루언서 방문)
 - ▲홍보영상 EBS 송출 ▲KOREAZ Focus 인터뷰 ▲외교부 SNS 및 획터뷰 등



포럼장 관광홍보부스



KOREAZ Focus 인터뷰



외교부 SNS

- 유라시아 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사업구상을 공모하여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현지 답방 등을 통해 사업 구상 구체화 지원
 - 2022년 유라시아 청년 미래 개척단 4기 출범(10월) 및 현지 답사·전문가 멘토링 실시(11월)

라. 공통사항

- 지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을 위한 내부 소통 활성화 노력
 - (장관 주재 미주지역 공관장회의(8.25)) 중남미지역 21개 공관 및 북미지역 19개 공관이 참여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따른 중남미·북미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장관 주재 아중동지역 공관장회의(8.31)) 중동지역 21개, 아프리카지역 20개 공관이 참여하여 ▲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현황 및 전략, ▲ 아중동지역 정세 및 현안, ▲ 對중동·아프리카 외교 추진 방향 논의



미주지역 공관장회의(8.25)



아중동지역 공관장회의(8.31)

- 국제회의 개최를 통한 입체적인 지역 정세 파악 및 국제무대 담론 형성에 기여
 - (제6차 한-EU 중동문제 국제회의(10.5, 서울)) ▲ 이스라엘-아랍 관계 정상화, ▲ 이란 문제, ▲ 중동지역 평화 구축의 3개 소주제를 중심으로 중동 정세 및 현안 논의



제6차 한-EU 중동문제 국제회의(10.5.)

- (제18차 한-중동 협력포럼 개최(11.18., 서울)) 한-중동 협력 강화를 위한 1.5트랙 포럼으로 對중동 외교정책 대외 발표의 장으로 활용



제18차 한-중동 협력포럼(11.18.)

- (아프리카 평화안보세미나(9.29., 화상)) 사헬지역 평화·안보 관련 현황 발표 청취 및 동 지역 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토의
- (한-아프리카 비즈니스포럼(11.9., 모로코 카사블랑카)) 「아프리카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한-아프리카 비즈니스포럼 개최
- (한-중남미 수교 60주년 기념 특별포럼(5.27., 서울)) 한-중남미 15개국과의 수교 60주년 축하 및 미래 협력 강화 방안 모색

- (2022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7.5-6., 부산)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공급망, 광물·에너지 협력, ▲디지털 전환 및 인프라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 ▲그린산업, 농·어업 분야 등 한-중남미 상생공영 협력 분야 집중 논의
 - 부산광역시와 공동 주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전개
 - 동 포럼 계기 ▲대통령 단체 예방(7.6.), ▲외교장관과 중남미 9개국 장관 릴레이 회담(7.5.) 등 정부 및 실질협력 증진 노력 경주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7.5.-6.)



대통령 단체 예방(7.6.)

- (제2차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11.2, 서울) 중미 7개국 차관 및 고위급 대표의 방한으로 농업기술·전자정부·보건·기후변화 등 협력 유망분야에서 구체협력 방안 논의 / 동 계기 한-중미 통상·투자 활성화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한-중미 통상투자포럼(11.3.) 개최 / 부산세계박람회 홍보(11.3.-4.간 부산 방문)



제2차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11.2.)

- (제12차 한-카리브 고위급회의, (11.30.) 카리브 국가 장·차관 및 카리브 국가연합 사무총장 등 고위급 대표 방한 초청으로 카리브 지역 국가와의 해양오염 대응, 해양산업 증진 등 해양경제 협력 확대 방안 협의 및 부산세계박람회 홍보

- (제15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10.25, 부산)) 보건·디지털·관광·환경·경제안보 등 다양한 실질협력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포럼 계기 경제인 협의회 및 에너지 분야 차세대 리더 양성 사업 등을 통해 한-중앙아 경제협력 여건 조성

□ 장기적 효과

- (중동·아프리카 / 미래 경제협력 심화) 각국 고위급과의 미래 비전 공유를 통해 중동·아프리카 국가들이 발전 전략 실행시 우리 정부·기업과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검토하도록 유도
 - (중동) 「사우디 비전 2030」, 「카타르 국가 비전 2030」, 「오만 비전 2040」 등 중동 국가 新사업 구상에 우리 기업 진출 가속화 / 이중과세 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항공협정 체결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 ※ 한-사우디 최고위급 전략파트너십 위원회 설치 합의(11월), 한-카타르 사증 면제협약 체결(8월), 한-이스라엘 FTA 연내 발효(12월) 지원 등
 - (아프리카) 글로벌 중추 국가 추진을 위한 한-아프리카 상생형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개시로 향후 거대 단일시장(GDP 3.4조 달러, 13억 인구)으로 부상하는 아프리카 시장에 우리 기업 진출 교두보 마련 노력
 - * 21.1.1. AfCFTA에 따른 교역 공식 개시(실제 교역은 상금 미실행)
 - 아프리카연합(AU) 회원국 55개국 중 54개국이 서명, 교역 개시시 인구 약 13억, GDP 3.4조 달러 규모의 세계 8위 규모 거대 경제블록 형성 전망
- (중남미 / 경제외교 강화 및 맞춤형 실질협력 추진) 주요 자원·에너지 수급 다변화를 위한 경제안보 외교 강화 및 대중남미 FTA망 확대 추진으로 무역·투자 확대 및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디지털·인프라·에너지 전환·농업혁신 등에서 각 국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국별 맞춤형 협력방안 모색
- (중앙아 / 한-중앙아 협력 포럼) 새로운 30년을 이끌어 나갈 호혜적 협력 분야와 미래지향적 협력사업 발굴하고 포럼 홍보를 통해 중앙아 지역에 대한 청년세대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차세대 협력의 저변 확대

4 국제 사이버 협력 네트워크 공고화

□ 주요 성과

○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 논의 진전 기여) ▲제2차 「세계신안보포럼」 개최, ▲유엔 및 지역기구(ARF)의 사이버 규범 수립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사이버안보 관련 규범 강화에 기여

- (신안보포럼*) 제2차 「세계신안보포럼」 개최를 통해 정부·기업·시민사회·학계 인사가 사이버안보 등 신형 위협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해 사이버안보 의제 선도

* 정부·기업·학계를 아우르는 전문가를 한 자리에 초청, 보건·사이버·신기술 세 가지 분야에서의 신안보 위협 대응 국제 협력 방안 논의



「세계신안보포럼」 개최사



「세계신안보포럼」 단체사진

-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 워킹그룹*) 유사입장국과의 공조하에 국제법의 사이버 공간에의 적용, 신뢰구축조치 추진 등 우리 입장이 사이버안보 관련 규범에 포함되도록 노력

*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 워킹그룹(OEWG) : 안전하고 자유로운 사이버 공간 조성을 위한 국제 사이버 규범 마련 목적으로 유엔총회 1위원회 산하에 구성

- ▲ICT 기술의 악용으로 인한 위협, ▲핵심 기반시설 보호 필요성, ▲기존 국제법의 사이버공간에 대한 적용, ▲신뢰구축 및 역량강화 중요성 등 논의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 워킹그룹(OEWG) 주요 결과>

□ 2019-21 OEWG 채택 보고서 주요 내용

○ ▲ICT 기술의 악용으로 인한 위협, ▲핵심 기반시설 보호 필요성, ▲기존 GGE 보고서상 비구속적 규범 재확인 및 ▲국제법의 사이버공간에 대한 적용, ▲신뢰구축 및 역량강화 중요성 등

□ 2021-25 임기 OEWG 회의 지속 추진

○ ▲위협 요인, ▲다중이해관계자 참여, ▲글로벌 POC 연락망 구축 등 신뢰구축 조치, 지속가능개발목표(SDG)와의 연계 등 역량강화 방안 논의 지속

- (사이버안보 행동계획) 사이버 규범의 이행 촉진 및 역량 강화 추진을 위해 프랑스 주도 행동계획(PoA)* 출범 노력(유엔총회 결의안 상정 등)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 정보통신 기술 이행에 있어 책임 있는 국가행동 증진을 위한 행동 계획 (Programme of Action for Advancing Responsible State Behaviour in the use of ICT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규범 이행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신규 협의체로 올해 첫 상정된 결의안이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통과

- (ARF ICT안보 회기간회의*) ARF의 ICT안보 회기간회의 공동의장국 (2021-24)으로 제4차 ICT안보 회기간회의를 주최(5.13)하여 사이버안보 관련 다자 논의 동향 공유 및 역내 사이버 신뢰구축 활동 점검

* ARF ICT안보 회기간회의(ISM on ICTs Security) : 아세안지역포럼(ARF) 내 ICT 안보 이슈를 논의하는 회의로, 아태지역 최초의 사이버신뢰구축조치이며 ▲ARF 연락처 디렉토리 설립 ▲국가 법, 정책, 최적관행 및 전략 공유 등 조치 시행중

○ (사이버범죄 대응 네트워크 구축)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의향서 제출(10.11), ▲유엔 사이버범죄협약 초안 마련에 참여하여 사이버범죄 대응 국제공조 기반 형성

- (부다페스트 협약)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통해 ▲초국경적인 사이버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 가능,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협력 외연 확장, ▲국제 사이버 협력 네트워크 공고화

※ 우리는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을 위한 첫 단계로 유럽평의회에 협약 가입 의향서를 제출(10.11.)

- 가입의향서는 우리나라가 동 협약에 가입할 의사가 있음을 알리는 유럽평의회 사무총장 앞 외교장관 명의의 서한

<사이버범죄협약(일명 '부다페스트협약')>

◆ 사이버범죄협약 개요 및 가입절차

- (개요)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은 '01년 채택, 부다페스트에서 서명된 사이버범죄 대응에 관한 국제협약이며, 美·日·호주 등 총 67개국이 가입
 - (목적)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해 협약 가입국 간 △처벌 대상 규정, △국제협력 등에 대한 절차를 수립, 신속한 국제공조수사 체계 구축
- (가입절차) 외교부, 가입의향서 제출(외교장관 명의) → 유럽평의회, 협약당사국 의견 수렴 및 각료이사회 심의 후 가입 초청 결정 → (국내 절차) → 외교부, 가입서 기탁(초청 후 5년 내)



- (유엔 사이버범죄협약 성안을 위한 임시위원회*(AHC)) 사무국의 협약 초안 마련 논의에 적극 참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

*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 성안을 위한 임시위원회(AHC) : 범죄 목적의 ICT 활용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 국제협약 성안을 목표로 설립된 유엔총회 3위원회 산하의 임시위원회(Ad Hoc Committee to Elaborate a Comprehensiv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ountering the Use of ICTs for Criminal Purposes)

<유엔 사이버범죄협약 성안을 위한 임시위원회(AHC) 주요 결과>

◆ AHC 제2-3차 회의 주요 내용

-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약에서 다룰 범죄에 관한 규정, ▲절차 및 법 집행 관련 규정, ▲국제협력 관련 규정, ▲기술지원 규정, ▲예방조치 규정, ▲이행메커니즘 등에 대한 협약 내용 논의



AHC 제3차 회의 참석

- (사이버위협 대응 네트워크 확대)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CRI) 참여국(15개국)과 공동대응책 마련 및 ▲NATO와 사이버분야 협력 강화,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 등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해 사이버위협 대응 네트워크 확대

- (CRI) 미국 주도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CRI) 고위급회의 및 외교적 대응 워킹그룹에서 네트워크 회복력 제고, 랜섬웨어 범죄 차단·수사, 개도국 역량강화 등 다양한 랜섬웨어 공동 대응 방안 모색·이행

*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 : 초국경적 랜섬웨어 위협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위해 미국 주도로 출범한 유사입장국 협의체

- '21.10월 고위급 출범회의 개최(우리나라와 5 Eyes(미, 영,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32개국 참석)하여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워킹그룹 및 후속 고의급회의 개최중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VP
United States government official

Ransomware affects thousands of companies and individuals every year, which is why our Administration brought together 37 global partners and the private sector to counter its spread and impact. Together we will improve our cybersecurity and protect our citizens.

트윗 번역하기



오전 1:35 - 2022년 11월 2일 - The White House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 고위급회의 관련
美부통령 트윗

International Counter Ransomware Initiative 2022 Joint Statement

NOVEMBER 01, 2022

Th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unter Ransomware Initiative (CRI)—Australia, Austria, Belgium, Brazil, Bulgaria, Canada, Croatia, Czech Republic, Dominican Republic, Estonia, France, Germany, India, Ireland, Israel, Italy, Japan, Kenya, Lithuania, Mexico, the Netherlands, New Zealand, Nigeria, Norway, Poland, Republic of Korea, Romania, Singapore, South Africa, Spain, Sweden, Switzerland,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and Ukraine, and the European Union—met in Washington, DC on October 31–November 1, 2022. Previously participating states welcome Belgium as a new CRI member.

At the Second CRI Summit, members re-affirmed our joint commitment to building our collective resilience to ransomware, cooperating to disrupt ransomware and pursue the actors responsible, countering illicit finance that underpins the ransomware ecosystem, working with the private sector to defend against ransomware attacks, and continuing to cooperate internationally across all elements of the ransomware threat.

「2022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 고위급회의」
계기 발표 공동성명

- (NATO) 한-NATO간 기존 협력 문서(IPCP)를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으로 전환 체결을 통해 사이버 등 신흥안보 위협 대응 협력 심화
- (사이버 정책협의회) 한-미 사이버 정책협의회(12월) 및 한-NATO 정책협의회(12월) 등 양자 정책협의회를 통해 초국경적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 및 협력 강화

□ 장기적 효과

-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담론 주도) 국가 안보에 총체적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안보 관련 규범 형성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국익에 기여하는 국제 규범 형성 유도
-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워킹그룹(OEWG) 참여시 국제인도법의 사이버 공간 적용 및 사이버 신뢰구축조치에 대한 소그룹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이버안보 규범 형성에 반영되도록 기여
- 유엔 사이버범죄협약이 신규 성안될 경우, 사이버범죄 공조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협력의 외연 확대

- (사이버 범죄·위협 대응 역량 강화) 사이버범죄·위협은 초국경적으로 이루어지는바, 양·다자 협력을 기반으로 형성된 사이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 기대
 -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시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가입국간 국제 공조수사 요청 수락 의무가 부과되어 초국경적인 사이버범죄에 대해 보다 신속·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 양자 사이버 정책협의회를 통해 유사시 정보 공유 및 공동대응 네트워크 구축
 -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CRI) 참여 등을 통해 랜섬웨어 위협 관련 정보와 최적관행 공유 및 공동 대응 역량 제고

(공백)

4.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공백)

순 서

I. 요약	161
II. 업무 추진 성과	166
1. 업무 개요	166
2. 추진 계획 및 주요 실적	167
3. 주요 추진 노력	170
4. 주요 업무 성과	179
① 규범기반 국제질서를 견인하는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	179
② 범세계적 문제에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리더십 구현 ...	185
③ 글로벌 기후변화 대처와 탄소중립 외교 강화	189
④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	193
⑤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확대	199

(공백)

I. 요약

1 주요 추진 노력

- (기관장 노력)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국제기구·소다자 협의체와 교류 강화, △주요 국제기구 진출 지지 교섭, △주요 국제회의 참석, △디지털 공공외교 주도, △현안 관련 관계부처 조율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강화
 - ※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지지 교섭(상시), 세계신안보포럼 참석(6.21), ICC 로마규정 발효 20주년 행사 참석(7.4), 므타 외교장관회의 참석(7.7, 9.22), 유엔사무총장 면담(8.12),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접견(8.31) 등
 - ※ 신안보포럼 참석, ENDviolence 캠페인 참여 등 주요 행사 계기 콘텐츠 촬영 참여
 - ※ 무상원조 주관기관의 장으로서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주재(6·12월) 등

- (투입 노력)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주요 글로벌 현안 논의 주도적 참여, △국제회의 주최, △국제기구 이사국 진출, △우리 국민 국제기구 진출 지원 및 △對국제사회 재정기여 지속 확대
 - 주요 현안 및 신규업무 수요 대응을 위해 조직 개편
 - ※ 주NATO대표부 개설(11월) 등

- (업무방식 등 개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평화 및 발전에 보다 기여하기 위해 관계부처·협력국·국제사회·시민사회·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 및 협력 확대
 - ※ 국제기구분담금 통합관리체계 구축(1월), GGGI 공여국 공동협의회 신설(6월), 유엔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 개최(9월), 국제개발협력 제도개선 TF 참여(11월), 외교부-반크 간 상호협력 양해각서 개정(12월) 등

2 주요 업무 성과

□ 규범기반 국제질서를 견인하는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 국제사회에 '자유를 위한 연대 강화' 등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기조 각인 및 이에 대한 명시적 지지 확보
 - ※ 유엔 사무총장, 한반도 문제 관련 지지 표명(8.12, 9.20), 유엔 기술특사 등 우리 정상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관련 환영 및 지지 입장 표명(9.20) 등
- 유엔 행정예산 분야 입지 공고화, 주요 국제기구 이사국·의장국 당선 등 실질적 영향력 확보
 - ※ 유엔행정예산자문위원회 위원(2023-25년 임기) 진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국제민간항공기구 등 이사국 진출 등
- △신안보, 군축·비확산 등 국제평화안보 주요 의제 주도,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 기반 국제연대 강화, △규범기반 국제질서 수호 및 국제협력체계 구축
 - ※ 한-유엔 평화안보워킹숍(6.9), 신안보포럼(6.21-22) 등 회의 개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23년초 예정) 준비에 주도적 역할, 조약 검토 및 체결 국내 절차 진행 및 기관간 약정(MOU) 국제법적 검토('22년 총 45건의 양자 및 다자조약 발효 및 총 100여건 MOU 검토) 등

□ 범세계적 문제에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리더십 구현

- 성 기반 범죄의 예방·대응 및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도적 참여
 - ※ 유엔 안보리 여성·평화·안보 공개토의(1,3,4,6,10월) 및 PSVI 장관급 국제회의(11월) 참석, 「제4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개최(12월) 등
-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적 위기 대응에 기여 및 KDRT 의료팀 역량 제고
 - ※ △우크라이나 초 9천만불 포함 43개국 대상 2,870억원의 인도적 지원, △KDRT 의료팀, WHO EMT Type 1 Fixed 인증 획득(6.16)

- 백신 공여, ACT-A에 3억불 공약, 글로벌펀드에 2023-25년간 1억불 공약 발표를 통해 글로벌 보건기여 확대
 - ※ △소아용 백신 80만 도즈 멕시코 지원 포함, 9개국 대상 330만불 규모의 백신 지원, △글로벌펀드 기여 지난 재정주기(2020-2022) 대비 4배 확대
- 다자개발협력·인도적 지원·보건 관련 주요 파트너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소통 적극 시행
 - ※ △우크라이나 복구회의(7.4-5) 계기 우크라이나·독일·미국 등 면담, △대통령, 빌 게이츠 공동이사장(8.16) 접견, △외교장관, WFP 사무총장(7.14), UNICEF 사무총장(11.7) 접견 등

□ 글로벌 기후변화 대처와 탄소중립 외교 강화

- 기후다자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기여·노력 설명 및 파리협정의 충실한 이행 등을 통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선도
 - ※ 대통령 특사 등 제27차 기후변화총회(COP27) 정상회의 계기 기후변화 대응 의지 및 국제 이니셔티브 동참 표명(11.8)
- 주요 기후관련 회의 계기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피력하고, 개도국의 효과적인 기후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의사를 표명하여 국제적 기후대응에서 실질적 영향력 확보
 - ※ COP27 계기 그린ODA 확대 등을 통한 개도국 기후행동 지원 의지 표명(11.6-18)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국외 감축분 확보 기반 마련 차원에서 우선협력대상국 18개국과 양자 협정 체결 및 이행 추진
 - ※ 한몽 외교장관회담 계기 양자협정 가서명 완료(8.29)
-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한 지원과 노력을 확대하여 기구의 거버넌스와 역량 제고
 - ※ '22년 현재 기준, GGGI 설립 당시 대비 △회원국 2배 이상 확대(44개국), △GGGI의 관련 프로젝트 약 2배 확대(37개국)

□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

- 유엔, OECD, G20 등 주요 다자 개발 논의 참여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 정부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가속화 기여 의지 표명 및 구체 협력방안 모색,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HDP Nexus), 개발효과성 등 논의 주도
 - ※ 디지털, 보건, 기후변화 등 우리 비교우위 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표명 (유엔 총회 대통령 기조연설 '22.9.22), OECD 분쟁.취약성 네트워크(INCAF) 공동 의장직 수임('19.6월-'22.12월), 부산글로벌파트너십 운영위원 활동('19.9월-현재) 등
- 주요 선진 공여국과 상시 소통체계 구축 및 정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 ※ 한미 개발협력 MOU 개정 및 한미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9.14)
- 무상분야 개발협력 전략 수립을 통한 전략적 무상원조 추진
 - ※ 제4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계기 「교육 ODA (무상부분) 추진전략」 의결(6월)
 - ※ 제5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계기 「농업 ODA (무상부분) 추진전략」 의결(12월 예정)
- 무상개발협력 주관기관으로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강화
 - ※ 제42차4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참석(6월11월), 국제개발협력 제도개선 TF 참여(11.3), 국제개발협력학회 특별학술대회 개최(11.23), 외교부 시민사회 정책대화 개최(12월)
- 무상 ODA 사업의 체계적·통합적 추진을 위해 △시행기관 대상 사업 추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주관기관-시행기관 간 협의를 개최하여 정보 공유 및 연계 논의를 적극 실시하는 등 사업 소 단계의 질적 내실화 및 사업간 시너지 창출 모색
 - * KOICA 사업발굴지침(7월) 및 쏘 시행기관에 대한 사업발굴 가이드라인(11월) 배포
- 재외공관·협력대상국 등 현장 중심의 사업 진행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여 사업의 효과성 및 가시성을 제고
 - ※ 재외공관 대상 ▲ODA 현지협의체 개최 지원(연중), ▲사업 모니터링 실시(연중), ▲재외공관 개발협력담당관회의 개최(11월) 및 개발협력담당관 대상 온라인 교육 과정 이수(연중) 등을 통해 재외공관의 컨트롤타워 역량 강화 지원 / 협력대상국과의 정책대화 개최(연중, 중점협력국 중심) 및 국가협력전략 개정을 추진

□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확대

- 정책공공외교 주제를 기존 한반도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기후 등 다양한 이슈로 확대함으로써 우리의 글로벌 현안에 대한 기여 의지와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이미지 강화
 - ※ ▲경제안보와 신기술 전문가 세미나(6.21), ▲'한일관계 전문가·언론인 세미나' 개최(7.17),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등을 주제로 한 한일 공동 사회문제 협력 강연회 및 심포지움 (연중) 등 다양한 주제로 정책공공외교 활동 전개
- 정책공공외교 대상을 주요국 여론 주도층 외에 차세대, 일반 대중들로 확대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전문가 발굴 및 親韓 네트워크 구축
 - ※ ▲신진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 개최 (7.4-15) 등의 활동을 통해 차세대 한반도 전문가 및 친한 네트워크 구축, ▲'한일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을 소개합니다.' 이야기 공모전 (12월 시상식 예정) 등 한국에 대한 우호적 여론 제고 노력
- 공공외교 통합 SNS 채널 「KOREAZ」를 활용, 공공외교 외연 확대 및 우리 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 강화
 - ※ 한국의 정책·문화·지식, 글로벌 이슈 등 관련 콘텐츠 제작을 통해 KOREAZ 4개 채널 구독자 수 38만명 달성 및 1,300여개 콘텐츠 제작·확산
- 글로벌 가치 기여 관련 콘텐츠 제작·확산을 통해 국제사회 포용과 연대 증진에 기여
 - ※ 유니세프와 공동으로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ENDviolence」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 전세계 90여개국, 31만명 지지 확보 및 7천만건 이상 도달
- 지역별·언어권별 맞춤형 디지털 공공외교 지원을 통해 현지인들의 관심도 및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제고
 - ※ ▲재외공관 주도 디지털 공공외교 사업 지원('22년 105개 공관 141개 사업), ▲2030 부산박람회 홍보 영상 등 주요 콘텐츠 다국어 제작, ▲KOREAZ Weekly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제작·확산 등

II. 업무 추진 성과

1 업무 개요

□ 업무 목표

- 주요 분야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및 국제사회 평화안보·민주주의·인권·법치·군축·기후변화·개발협력 분야 협력에 선도적 역할 수행
- 규범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주도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 확립

□ 업무 주요 내용

- 규범기반 국제질서를 견인하는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 국제사회 기여 확대를 통한 주요 국제기구 진출 기반 조성
 - 양·다자회의 및 협의체에 대한 고위급 관여 확대
 - 주요분야 국제규범 논의 및 형성 주도
- 범세계적 문제에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리더십 구현
 - 성별간 격차 해소 및 성기반 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
 - 인도적 지원 예산 확대 및 해외긴급구호 관련 역량 제고
- 글로벌 기후변화 대처와 탄소중립 외교 강화
 - 파리협정의 이행 강화를 위한 협력관계 적극 구축
 - 저탄소 녹색경제 전환 관련 다자협력 이니셔티브 적극 참여
-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및 글로벌 가치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논의 주도적 참여
 - 선진 공여국과의 개발협력 분야 파트너십 강화
 - 무상분야 개발협력 전략 수립 및 현장중심·통합적 ODA 강화
-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확대
 - 글로벌 가치 확산 및 대외 관계 증진에 기여하는 정책공공외교 추진
 - 디지털 뉴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발맞춘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

2 추진 계획 및 주요 실적

세부추진과제	추진 계획	주요 실적
<p>1. 규범기반 국제 질서를 견인하는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7차 유엔총회 참석(9월) ■ 제51차 인권이사회 신기술과 인권 부대행사 개최 및 우리 주도의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 상정(9월) ■ 제51차 유엔 인권이사회 참석(9월) ■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관련 협의 (9월-11월) ■ 무기거래조약(ATT) 제8차 당사국 회의 참석 및 제9차 당사국회의 의장직('22.8월~) 수임(8월) ■ 제10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참석(8월) ■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참석 (9월) ■ 국제해저기구(ISA) 이사국 진출 (8월)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8연속 수임 (10월) ■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입후보를 위한 우리 후보자 선정 예정(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7차 유엔총회 정상 참석 및 기조연설 시행(9월) ■ 제51차 인권이사회에서 신기술과 인권 부대행사 개최 및 지방 정부와 인권 결의안 상정·채택 주도 (9월) ■ 제5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약 40개 결의 채택/중국, 러시아 인권 등 주요 국제 인권 논의에 적극 참여 (9월-10월) ■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약 점검 및 발굴 관계부처 회의 개최(7월, 11월) ■ 미 주도 민주주의 정상회의 핵심그룹 회의 참석(4월, 6월, 9월, 11월) ■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국 회의 참석(9월, 10월, 11월) ■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미 협의 (9월, 10월) ■ 국내 시민사회 협의(10월, 11월) ■ 무기거래조약(ATT) 제8차 당사국 회의에서 제9차 당사국회의 의장국으로 선출(8월) ■ 제10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참석(8월) ■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참석(9월) ■ 국제해저기구(ISA) 이사국 진출 달성(8월)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8연속 수임 달성(10월) ■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국내 후보자 선정(11월)

<p>2. 범세계적 문제에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리더십 구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RT 의료팀 WHO EMT Type 1 인증 획득(6월 중) ■ 우크라이나 복구회의 참석(7월) ■ '온라인상 젠더 학대·희롱 글로벌 파트너십' 제1차 Sherpa 화상회의 참석 (7월) ■ 유엔총회 계기 분쟁하 성폭력 생존자 기금(GSF) 부대행사 공동후원 (9월) ■ 백신 현물공여(하반기 내) ■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조달회의 참석(9월) ■ KDRT 실무협의회·운영협의회 개최(11월) ■ 주요 인도주의 국제기구와의 정책협의회 개최(11-12월) ■ 중앙긴급대응기금(CERF) 고위급 회의 참석(12월) ■ 제4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개최(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RT 의료팀 WHO EMT Type 1 인증 획득(6월) ■ 2차관, 우크라이나 복구회의 참석(7월) ■ '온라인상 젠더 학대·희롱 글로벌 파트너십 회의에서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 논의 (7월) ■ 다자조정관, 유엔총회 계기 분쟁하 성폭력 생존자 기금(GSF) 부대행사 공동후원 및 참여 (9월) ■ 멕시코, 그레나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백신 현물공여 (8월) ■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참석(9월) ■ 주요 인도주의 국제기구와의 정책협의회 개최(11월-12월(잠정)) ■ KDRT 실무협의회·운영협의회 개최(12월(잠정)) ■ 중앙긴급대응기금(CERF) 고위급 회의 참석(12월(잠정)) ■ 제4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개최(12월)하여 안보리 관심 의제인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우리 정부 기여 가시화
<p>3. 글로벌 기후변화 대처와 탄소중립 외교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GGI 운영프로그램 소위원회 (MPSC) 참석 (4,7월) ■ 제4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협상 수석대표(HoDs) 비공식회의 (손실과 피해(7월) ■ SB56 후속조치 관계부처회의(7월) ■ P4G 집행위원회(7월) ■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 사전총회(9월) ■ OECD 기후변화전문가그룹(COXG) 글로벌포럼 및 정기회의(9월) ■ GGGI 총회 및 이사회 참석 (10월) ■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7)(11월) ■ P4G 이사회(11월) ■ P4G 집행위원회(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15차 GGGI 운영프로그램 소위원회(MPSC) 참석 (4,7월) ■ SB56 후속조치 관계부처회의(7월) ■ 한-몽 외교장관 회담 계기 양자 기후변화 협력협정 가서명(8월) ■ OECD 기후변화전문가그룹(COXG) 글로벌포럼 및 정기회의 참석 (9월) ■ 제4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협상 수석대표(HoDs) 비공식회의 (감축, 자원)(10월) ■ 제11차 GGGI 총회 및 제15차 이사회 참석 (10월) ■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참석(11월) ■ 한-가봉 외교장관회담 계기 양자 기후변화 협력협정 가서명(12월)

<p>4. 선진국형 국제 개발협력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지속가능발전 고위급 정치포럼 참석 (7월) ■ 서울 ODA 국제회의 개최(9월) ■ G20 개발장관회의(9월) 및 개발 실무그룹회의(2,5,8월) 참석 ■ 한-미 개발협력 정책협의회(9월) ■ 공여국간 협력 가능 분야 발굴 협의(12월) ■ '24년도 ODA 사업 발굴 지침 송부(9월) ■ '24년도 ODA 사업 발굴·연계를 위한 1:1 기관간 협의회(10월) ■ 국가협력전략(CPS) 개정 상황 점검(11월) ■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개최 (12월) ■ '23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 계획(확정액 기준) 의결(12월) ■ 국제 원조투명성기구(IATI)를 통한 원조정보 공개 (분기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지속가능발전 고위급 정치포럼 참석(7월) ■ 서울 ODA 국제회의 개최(9월) ■ 한-미 개발협력 정책협의회(9월) ■ G20 개발장관회의(9월) 및 개발 실무그룹회의(2,5,8,12월) 참석 ■ SDGs 달성을 위한 다자주의 세션 주관(10월, 한태평양지속가능대화) ■ 인도적지원-개발-평화 연계(HDP Nexus) 세미나 개최(11월) ■ 세계평화포럼 참석(11월) ■ '24년도 ODA 사업 발굴 지침 송부(7월, 11월) ■ '24년도 ODA 사업 발굴·연계를 위한 1:1 기관간 협의회(11-12월) ■ 국가협력전략(CPS) 개정 상황 점검(11월) ■ 제3차 부산글로벌파트너십(GPEDC) 고위급회의 참석(12월) ■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개최(12월(잠정)) ■ '23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 계획(확정액 기준) 의결(12월(잠정)) ■ 국제 원조투명성기구(IATI)를 통한 원조정보 공개(분기별)
<p>5.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타버스 기반 디지털 공공외교 행사(9-10월) ■ 한일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을 소개합니다 이야기 공모전 (12월) ■ 한중 싱크탱크 대화 (12월) ■ 한미 정책공공외교 세미나 (12월) ■ 정책설명자료제작(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신진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 출범(7월) ■ 제3차 한일관계 전문가 및 언론인 세미나(7월) ■ 아동폭력근절 관련 ENDviolence 캠페인 콘서트 개최(9월) ■ KOREAZ 명예기자단과 재외 공관 서포터즈 간 메타버스 글로벌 총회 개최(10월) ■ 제7차 한-체코 미래포럼(11월) ■ 한일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을 소개합니다 이야기 공모전 (12월(잠정)) ■ 한중 싱크탱크 대화 (12월(잠정)) ■ 한미 정책공공외교 세미나 (12월(잠정)) ■ 정책설명자료제작(12월(잠정))

3 주요 추진 노력

① 투입노력

- 평화안보(신흥안보 포함)·여성 등 주요 글로벌 의제 관련 국제회의 주최
 - 2021년 서울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에 이어 한-유엔 평화안보 워크숍(6.9)을 개최하여 평화유지활동 분야에서 우리 리더십 공고화
 - 제2차 세계신안보포럼(6.21-22) 개최를 통해 신흥 안보 위협 의제 주도
 - 제4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12.15) 개최를 통해 여성·평화·안보 분야 선도
- 다자 정상회의 참석 및 고위급 관여 확대를 통해 글로벌 현안 관련 국제논의에 주도적 참여
 - 제77차 유엔총회 계기 정상 기초연설을 통해 '자유를 위한 국제 연대 강화'라는 대외정책 핵심 기초 각인
 - NATO 정상회의(6.29-30)에 우리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참석하여 공통 가치 기반 파트너십 강화
 - 코로나19 정상회의(5.12) 및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9.21) 계기 우리의 기여 공약 발표를 통해 글로벌 보건분야에서의 위상 제고
 - 분쟁하 성폭력 생존자 기금(GSF), 분쟁하 성폭력 방지 이니셔티브(PSVI) 등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동참
 - 7년 만에 개최된 제10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계기 기초연설 시행 및 북핵 공동성명 발표, '19-'22년 효과적 무기거래조약(ATT) 이행 실무그룹 의장 수임 등 수출통제 및 군축·비확산 분야 논의 주도
 -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 참석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 입장 적극 개진 및 COP27 성과 도출에 기여

-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기구에 대한 재정기여 확대
 - (유엔) '22년 유엔 정규예산 및 PKO 예산 분담률 세계 9위('21년 11위)
 - (평화안보) 유엔 평화유지신탁기금 '21년 대비 약 200만불 증액 ('23년 300만불), 엘시기금 50만불 신규 기여, 유엔정무평화구축국(DPPA) 분쟁예방기금(MYA) 증액 편성('22년 250만불 → '23년 380만불), 유엔 평화구축기금(PBF) 증액 편성('22년 250만불 → '23년 434만불)
 - (글로벌 보건) ACT-A에 3억불 및 글로벌펀드에 '23년부터 3년간 1억불 공약 발표
 - (기후) 기후위기에 취약한 태평양 산호초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분담금 20만불 신규 편성 추진
 - (환경) GGGI 재정기여 200만불 증액 편성 추진('22년 1,000만불 → '23년 1,200만불)
-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의 ODA 규모 확대 추진
 - '23년 ODA는 요구액 기준 4.54조원으로 전년 4.04조원 대비 대폭 확대되었으며, 무상협력비율 증가('22년 59% → '23년 63%)
 -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 예산도 '20년 대비 '23년 2배 이상 확대('20년 1,003억원 → '23년 2,744억원)
- 주요 현안 및 신규업무 수요 대응을 위한 조직 개편
 - 한-NATO 협력 강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주NATO대표부 개설('22.11월)
 - 신흥안보이슈 대응을 위한 신기술안보 및 보건안보 담당 2명 증원
- 주요 국제기구 이사국 및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 (국제기구 선거 당선)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6월), 국제해저기구(ISA)(8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10월) 등 이사국 연임 성공, 유엔 행정예산자문위원회(ACABQ)(11월) 최초 진출

-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확대)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선발 인원 전년 대비 5명 증원('21년 20명 → '22년 25명)

○ 2030 NDC 달성을 위한 주요국과의 협정 체결

- 2030 NDC 달성 관련, 국외 감축분(3,350만톤) 확보 기반 구축을 위해 총18개국과 양자 기후변화 협력 협정 체결 및 이행 추진
 - 한-몽 외교장관 회담 계기 양자 기후변화 협력협정 가서명(8월)

○ 주요국과의 정책공공외교 주제 및 대상 확대

- '경제안보와 신기술 전문가 세미나' 참석(6.22), '한일관계 전문가·언론인 세미나' 개최(7.17) 등 기존 한반도 안보 문제뿐 아니라 경제, 과학기술, 사회·문화 등 다양한 이슈로 사업 주제 확대
- 작년 재한 미국 유학생에서 금년 재한 미·일·중 유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한 '신진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7.4-15) 등을 통해 차세대 계층 및 각 분야 신진 친한인사 네트워크 발굴을 모색하고 추후 동 사업의 주제 다변화 및 대상 국가 확대 추진
- 저출산 고령화 등을 주제로 한 한일 공동 사회문제 협력 온라인 강연회(6.28) 등 주요국과의 공동 관심사를 발굴하여 정책공공외교 사업 시행 및 정례화 추진



신진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 강연



신진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 제주도 현장학습



신진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 수료식

○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은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

- 외교부 공공외교 SNS 채널 「KOREAZ」를 통해 신정부 외교 활동 및 부산엑스포 홍보 영상 등 주요 정책 콘텐츠를 제작, 우리 외교 일정·현안 적극 홍보
- 과학기술 강국 이미지에 부합하는 신기술을 활용, ENDviolence 캠페인 콘서트(9.16) 및 메타버스 글로벌 총회(10.13) 등 개최
- 재외공관 주도 디지털 공공외교 사업 확대 및 다국어 콘텐츠 제작 등 지역별 맞춤형 디지털 공공외교를 통한 해외 대중과의 쌍방향 소통 강화

○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의료팀 역량 강화

- 피해국 도움 없이 29명의 대원이 자급자족하며, 최소 14일간 1일 100명의 외래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팀에게 부여하는 WHO EMT Type 1 Fixed 등급 획득(6.16)

② 일하는 방식 개선

○ 대면, 비대면, 하이브리드 업무방식을 병행하여 국가별·시기별로 상이한 방역상황에 유연하게 대처

- 한-유엔 평화안보워크숍(6.9), 제2차 세계신안보포럼(6.21-22), GGGI 총회·이사회 및 운영프로그램 소위원회 등을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하여 참석 수준 및 논의의 시의성 확보
- 연초에 비대면 형식으로 기획한 재외공관 주도 정책공공외교 사업 일부를 현지 방역상황 개선에 따라 대면사업으로 전환

○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평화 및 발전에 보다 기여하기 위해 시민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확대

- (전문가·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
 - 신기술과 인권 관련 국내 전문가 간담회 개최(1.27)

-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5.2, 11.11)
- 제2차 세계신안보포럼 개최 전 정부·학계간 라운드테이블 개최(5.26)
- 지자체 및 청년 등이 참여하는 제5회 열린 SDGs 포럼 개최(6.8)
-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7.14)
- 개발협력 분야 외교부-시민사회 정책대화 2회 개최(3.22, 12.6)
- 아시아지역의 기후위기 대응 및 SDGs 달성을 위한 다자주의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제1차 환태평양 지속가능 대화(TPSD) 개최(10.27)
- 민주주의 정상회의 관련 학계·시민사회와 간담회(11.8), 라운드테이블 개최(12.20)
- 주요 개발의제(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인도적지원-개발-평화 연계(HDP Nexus) 등) 관련 열린 SDGs 포럼 개최(6.8), HDP Nexus 세미나 최초 개최(11.8)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의견 수렴과 소통의 장 마련
- 2012년 7월 체결된 외교부-반크 양 기관간 양해각서를 민관 협력 강화 및 디지털 공공외교 역량 제고를 위해 갱신(12.6)

○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계부처와의 조율 강화

- 국무조정실 및 외교부·기재부 등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TF(11월 출범)를 통해 ODA 추진체계 관련 부처간 소통 강화 및 협업 효율성 제고
- 국제기구 분담금의 효과적·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실무위원회 개최(22.4월 및 11월)

○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소통 채널 구축

- 유니세프남수단사무소(10.13.), DR콩고 유엔상주조정관(11.3) 등과 현장 차원의 HDP Nexus 이행방안 논의

-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KOICA · 수출입은행 · KOPIA · KIND · KOFIH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ODA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ODA 협의체를 23개국 총 50여회 이상 개최

③ 기관장 노력

○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

- 장관, 유엔 사무총장 방한 계기 면담(8.12) 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의지를 표명하고, 우리의 대유엔 정책에 대한 사무총장의 지지 확보
- 장관, 므타 외교장관회의 참석(7.7, 9.22) 계기 우크라이나, 식량안보 등 주요 국제현안 해결책 모색 및 다자주의 강화 방안 협의
- 장관, 세계신안보포럼 개회사(6.21)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신종 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제고, 다양한 당사자 간 협력 촉진 의지 표명
- 장관, NATO 의회연맹 대표단을 접견(10.20), 자유·민주주의·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NATO측과의 협력 강화



세계신안보포럼 개회사(6.21)



NATO 의회연맹 대표단 접견(10.20)

○ 북한 인권 등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과의 협력 강화

- 장관(8.31) 및 2차관(9.3), 엘리자베스 살몬(Elizabeth Salmon)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접견, 특별보고관의 임무 수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 전달
- 2차관,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Tomás Ojea Quintana)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접견(6.29),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갈 의지 표명

- 장관,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 난민최고대표(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와 면담(11.10), 세계 난민 동향, 한-유엔 난민기구(UNHCR)간 협력 증진 방안 등 논의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접견(8.31)



유엔 난민최고대표 면담(11.10)

○ GGGI의 활동 및 효과성 강화를 위한 일반공여 확대 캠페인 주도

- 장관, GGGI 일반공여 확충 캠페인(Core Replenishment Drive) 지원 일환으로 각종 고위급 교류 계기에 GGGI의 공여 요청
- 2차관, GGGI 설립 10주년 기념식(6.9) 계기 일반공여 확대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통해 저탄소 경제 전환 노력에 대한 기여 의지 표명

○ 우리나라 및 우리 국민의 주요 국제기구 진출 지지 교섭

- 장관, 각종 다자·양자 면담 계기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거 지지 교섭
- 장관, ICC 로마규정 발효 20주년 기념 행사시(7.4) ICC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 참여와 기여를 약속하는 등 우리 인사의 ICC 재판관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
- 장관, 유엔 사무총장 면담시(8.12) 우리 국민의 유엔 진출 확대 당부, 사무국과 실무 협의 진행 합의
- 2차관, Salvatore Sciacchitano ICAO 이사회 의장 면담시(7.8) 한국의 ICAO 이사국 연임 관련 이사회 의장의 관심과 지지 촉구



ICC 로마규정 발표 20주년 기념행사(7.4)



유엔 사무총장 면담(8.12)

○ 무상원조 주관기관의 장으로서 관계부처와 현안 조정 및 시민사회·학계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총괄

- 장관, 제4·5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6·12월) 주재 및 무상개발협력 정책·전략 수립 등 제반사항 심의·조정
- 장관·2차관, 국제개발협력위원회(1·4·6·11월) 참석을 통해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및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등 주요 안건 수립 주도 및 심사·의결
- 2차관, 열린 SDGs 포럼(6.8.) 개최사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글로벌 현안 해결 및 SDGs 달성 노력 대한 우리 기여 계획 공유
- 2차관, 서울 ODA 국제회의(9.1.) 환영사를 통해 국내·외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우리 기여 의지 표명

○ MOFA 스튜디오를 활용, 주요 정책 관련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장관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 홍보 효과 제고

장관 취임 계기 KOREAZ 축하 영상	장관 신안보포럼 개회사 영상	장관 ENDviolence 캠페인 참여

④ 갈등·리스크 예방 등 위기관리 노력

○ 현장 상황으로 인한 사업 지연 방지

- (ODA) 르완다 등 중점협력국에서는 재외공관-협력국 수원총괄 기관간 정책대화 및 수원총괄기관 면담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주재국 소재 우리 ODA 관계기관간 정례 현지협의체를 개최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모색
- (정책공공외교) 2차례의 수요조사 및 각 재외공관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정책공공외교 사업 추진 독려
 - ※ 2차 수요조사를 통해 ▲러시아(대)(우리 대외정책에 관한 러시아측 입장 및 인식 연구), ▲토론토(총)(2022 한인 차세대리더 네트워크 행사), ▲이집트(대)(이집트 지방 대상 정책공공외교 강화) 사업을 추가 지원

⑤ 외부 지적사항에 따른 정책개선 노력

- 금년도 「제4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12.15)」 관련 자문 위원 의견을 반영, ▲아시아 지역에 초점을 맞춘 세션을 구성, ▲동 이니셔티브의 두 가지 축인 개발협력사업 및 국제회의의 연계를 도모하며 회의 주제 및 형식 구체화
- 여성 관련 개발협력사업을 수행중인 지역 국제기구 사무소를 초청하여 관련 경험 공유
- '11.8월 제정된 ODA 통합 BI의 직관성 및 상징성 부족에 대한 재외공관·시행기관의 건의를 감안, 11년만의 ODA 통합 BI 개정



4 주요 업무 성과

1 규범기반 국제질서를 견인하는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 주요 성과

○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기조 각인 및 지지 확보

- (對유엔 정상외교 강화) 우리 정상의 유엔총회 참석 및 기조연설 시행(9.20)을 통해 국제문제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하고 디지털 분야 지원을 약속하는 등 새로운 글로벌 비전 천명
 - ※ 유엔 기술특사 및 디지털기술 우호그룹 공동의장인 싱가포르와 멕시코는 우리 정부의 지원 약속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입장 표명
- 우리 정상과 유엔 사무총장간 2차례 면담(8.12 방한 계기, 9.20 유엔 총회 참석 계기)을 통해 우리 대외정책 관련 유엔 차원의 지지 확보
 - ※ 유엔 사무총장, 한반도 문제 관련지지 표명
- (NATO와의 가치기반 파트너십 구축) 우리 정상으로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73년 역사상 최초로 정상회의에 참석,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 및 ▲초국경적 신홍안보 도전에 대한 협력 의지 표명



제7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9.20)



NATO 정상회의 (6.29-30)

- (소다자협의체 협력 심화) 제22차 믹타 외교장관회의 계기 최초로 옹서버(폴란드) 초청(9.22), 외교-보건 차관보급 회의 최초 개최(9.8) 등을 통해 소다자협의체 내 고위급 협력의 대상 및 범위 확대



제21차 므타 외교장관회의(7.7)



제22차 므타 외교장관회의(9.22)

○ 국제기구 대상 재정 기여 확대를 통해 우리의 실질적 영향력 확보

- (유엔 행정·예산분야 입지 공고화) 우리 인사가 유엔 행정예산 자문위원회 위원(2023-25년 임기)에 최초로 진출함으로써 동 분야 관련 확대된 우리나라의 입지 및 역할을 명시적으로 확인

- ※ 유엔 행정예산자문위원회(ACABQ) 위원은 유엔의 행정예산문제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

- ※ 우리의 2022-24년 유엔 정규예산 분담률(2.574%)은 세계 9위로 상승
- 2019-21년에는 2.267%로 세계 11위

- (주요 국제기구 이사국·의장국 수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6월), 국제해저기구(ISA)(8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10월) 등 이사국 연임 및 무기거래조약(ATT) 제9차 당사국회의 의장국에 선출됨으로써 해당 분야 국제논의시 영향력 행사 기반 마련

-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내 역할 확대) 1990년대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제도를 통해 국제기구에 진출한 우리 국민 중 5명이 고위직으로 활동 중으로, 국제기구 내 우리 역할 증진 기대

- ※ 금년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및 유엔봉사단(UNV) 선발 인원은 전년 대비 각각 5명 증원(JPO : 20명→25명, UNV : 50명→55명)

- ※ 금년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는 코로나19 이후 최초로 대면 진행, 홍보 효과 제고

<2022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서울, 인천, 전주)>



- 행사 목적: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국민들에게 유엔 및 주요 국제기구의 채용정보, 면접준비 방법 등 유용한 정보 및 유엔 모의면접 기회를 제공하여 유엔 및 국제기구 실제 채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참가 대상: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국민
- 참가 국제기구: 유엔사무국, UNESCAP, UNHCR, WFP, UNV 등 7개 기구
- 프로그램: 외교부 국제기구 진출 지원 사업 소개, 각 지자체(서울, 인천) 국제기구 유치 현황 소개 및 국제기구별 채용정보 설명 등
- 참가 혜택: 유엔 인사담당관들과의 1:1 모의면접, 국제기구 담당자들과의 채용 상담 기회 제공 등

○ 국제사회의 평화·안정 관련 주요 의제 주도 및 선점

- (평화안보 의제) ▲ 한-유엔 평화안보 워크숍(6.9) 주최를 통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미래 및 기술·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방향성 제시, ▲ 평화 관련 기금에 대한 기여 증액 등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핵심 임무 관련 논의 주도 및 기여 확대

※ '21년 대비 평화유지신탁기금 3배 증액(100만불→300만불), 유엔 평화구축기금(PBF) 56% 증액(160만불→250만불), 엘시기금 50만불 신규 기여,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분쟁예방기금(MYA) 66% 증액(150만불→250만불) / 유엔 PKO 임무단에 자산 공여 추진(500MD 헬기 16대) 등



한-유엔 평화안보 워크숍(6.9)

- (군축·비확산 의제) ▲ 제10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계기 79개국이 동참한 북핵 공동성명 발표 및 한·불 북핵 행사 개최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 ▲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 64년 만에 최초로 이사회 의장직을 수임(21.9월)한 이래 적극적인 리더십 발휘

- ※ 특히, IAEA 의장국 활동 계기, ▲매 이사회(22.3-6/9월) 이전 IAEA 사무총장 면담 및 8개 지역그룹, 30여 개 이사국, IAEA 사무차장 등과 총 135차례 협의 실시, ▲북핵 관련 종합보고서 제출, ▲우크라이나 원전 안전안보 결의 채택 주도, ▲AUKUS 핵잠수함 협력 의제 상정 및 원만한 논의 주재



제10차 NPT 평가회의 계기 한-불 북핵 행사 개최(8.1)

- (신흥안보 의제) 제2차 「세계신안보포럼」 개최(6.21.-22.)를 통해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정부·기업·시민사회·학계의 다양한 관점 공유 및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방향을 제시

- ※ 포럼 참석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신흥안보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디지털·기술 선도국인 한국의 국제협력 선도 역할 기대 표명



제2차 세계신안보포럼(6.21-22)

○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 강화

- (민주주의 논의 선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23년 초 예정) 준비 관련 주도적 역할을 수행, 경제 발전과 자유 민주주의를 동시 달성한 우리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확립

- ※ 미 주도 민주주의 정상회의 핵심그룹 회의(4월, 6월, 9월, 11월) 및 한미협의(9월, 10월) 참여

- ※ 전미민주주의기금 등 민주주의 관련 주요 기구와의 면담(8.4) 등을 통해 민주주의 선도국으로서 우리의 위상과 기여에 대한 국제사회 이해 제고
- ※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출범한 「한-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개최를 통해 한미간 국내외 인권, 민주주의 증진 협력 방안 논의(10.13, 워싱턴)



- (인권 논의 주도적 참여) 인권이사회의 주요 국제 인권 이슈 논의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가로서의 우리 입장 천명 및 우리 주도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적 지지 지속 확보
 - ※ 우리가 상정하여 채택(22.9월)된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의 경우, 공동제안국 수가 20년 43개국 대비 22년 55개국으로 대폭 확대
 - ※ 「신기술과 인권 부대행사」 개최(9.19), 유엔 내 신기술 논의 관련 주도적 역할 지속

○ 규범기반 국제질서 수호 및 국제협력체계 구축

- 국제해저기구(ISA)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진출을 통해 심해저 및 국제민간항공 분야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주도적 기여
- 외교부는 조약 체결의 주무부처로서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조약의 검토 및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하여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 ('22년 총 45건의 양자 및 다자조약 발효)
- '22년 총 100여건의 정부 각 기관이 추진하는 기관 간 약정(MOU)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를 수행하여 제반 분야의 국제협력 업무 지원

□ 장기적 효과

- 2024-25년 세 번째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기반 조성
 - 부서간 협업 및 본부-재외공관간 조율 등 '23년 상반기까지 선거 캠페인을 안정적으로 진행

- 우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기간 중 중점의제로 설정할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의제 주도 기반 마련 및 성과있는 이사국 활동 수임 가능
- **협의체와의 협력 관계 강화**
 - NATO 정상회의 참석 후속조치로 주NATO 대표부 개설 등을 통해 NATO와의 협력 제도화
 - 므타 회의 적극 참여 및 신규 협력 분야 발굴 등 소다자협력 강화
- **수출통제 및 군축·비확산 분야 선도국으로 도약**
 - 무기거래조약(ATT) 제9차 당사국회의 의장국 선출을 계기로 책임 있는 방산 수출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가능
 - 핵 군축·비확산 체제의 핵심인 핵비확산조약(NPT) 체제 강화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 표명
 -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및 총회에서의 주도적 활동 지속을 통해 원자력 분야 주요국으로서의 위상 공고화
- **우리 입장을 반영한 규범 형성을 통해 장기적 국익 증대 및 국제법 분야 우리 위상 제고**
 - 심해저 및 국제민간항공 분야 국제규범 형성에 우리 입장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양광물자원 탐사 및 우리 항공 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국익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제반 분야에서 효율적인 조약체결 업무 수행을 통해 정부의 주요 외교정책 추진 및 규범기반 국제질서에 기여
 -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중과세방지협정, 공중보건협력협정, 사회보장협정,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 등 경제협력·보건·영사 분야에서 많은 조약을 체결하여 국민들의 편익 증진

② 범세계적 문제에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리더십 구현

□ 주요 성과

- 여성·평화·안보 관련 성기반 범죄의 예방·대응 및 평화구축을 위한 여성의 참여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적극 기여
 - ▲ 유엔 안보리 여성·평화·안보 공개토의(1.18, 3.8, 4.13, 6.16, 10.20)
▲ 여성·평화·안보 담당관 네트워크 회의(5.18, 9.22) ▲ 온라인상 젠더 기반 학대·희롱 글로벌 파트너십」 제1차 세르프 회의(7.27) 및 부세르프 회의(4.7, 5.12, 8.17, 10.13) 등에 참여, 여성·평화·안보 논의 진전에 기여
 - 영국 주도 분쟁하 성폭력 방지 이니셔티브(PSVI: Preventing Sexual Violence in Conflict Initiative) 고위급 라운드 테이블(5.24, 11.8) 참석, PSVI 실무회의 참석(11.1), PSVI 장관급 국제회의(11.28-29) 참석 등을 통해 분쟁하 성폭력 대응에 관한 국제 담론 형성에 동참
 - 분쟁하 성폭력 기금(GSF: Global Survivors Fund) 이사국으로서, 유엔총회 계기 GSF 부대행사(9.22)를 공동후원, 금년 200만유로 재정기여를 통해 생존자 배상 및 지원 제공
 -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 일환으로 「제4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개최(12월) 등 여성·평화·안보 분야 논의 선도 및 성폭력 대응 분야 전문성을 가진 국제기구(UNFPA 등)와의 협력하에 분쟁하 성폭력 예방, 피해자 지원,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

<제4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 일시 및 장소 : 2022.12.15., 롯데호텔
- 주제 :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포괄적 관점
- 프로그램 :
 - (개회식) 개회사 / 주요 인사 축하
 - (세션1) 여성·평화·안보 관련 아시아 차원의 접근 교훈 * 아시아 여성 평화협상가 등 초청
 - (세션2) 아프가니스탄 : 여성과 소녀의 권리
 - (청년 세션) 영상 공모전 시상 및 수상작 상영
 - (폐회식) 폐회사

○ 유엔이 평가한 역대 최악의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여 사상 최대 규모의 인도적 지원 실시

- 유엔, 올해 작년 대비 17% 증가한 410억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산(UNOCHA 2022 Global Humanitarian Overview)
- 외교부 43개국 대상 2,870억원의 인도적 지원 제공(작년대비 약 30% 증가)
- 특히,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총 9,0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필요한 물품 및 추가 지원 필요성 관련 우크라이나 정부측과 긴밀한 협의 지속



○ 글로벌 보건 기구에 대한 기여 획기적 확대 약속

- 코로나19 정상회의(5.12) 계기 코로나19 대응 체제인 ACT-A에 3억불 기여 공약
-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9.21) 계기 주요 감염병 퇴치를 위해 2023-25년간 1억불 공약



- 글로벌소아마비근절이니셔티브(GPEI: Global Polio Elimination Initiative)에 45억원(320만불 상당) 공약
-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글로벌 보건협력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8.16)
- 감염병혁신연합(CEPI: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과 글로벌펀드와 협력하여 신규투자유치, 우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달포럼 개최 등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의료팀, WHO가 피해국 도움 없이 29명의 대원이 최소 14일간 1일 100명의 외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팀에게 부여하는 EMT(Emergency Medical Teams) Type 1 Fixed 등급 획득(6.16)



- '22년 9개국(가봉, 부르키나파소, 기니비사우, 수단, 멕시코, 과테말라 등) 대상 330만 도즈의 백신 지원
- 백신 수원국과 국제기구 측 감사표시 및 현지언론에 다수 보도



對수단 백신 지원 홍보 UNICEF 수단사무소 트위터(9.21)

對멕시코 소아용 백신 지원 보도자료(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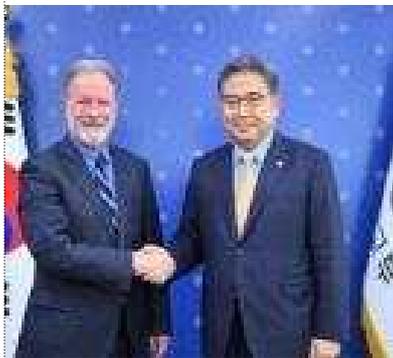
對과테말라 백신 지원 현지언론 보도(7.21)

○ 다자개발협력·인도적 지원·보건 관련 국제회의 및 양자면담 계기 주요 파트너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소통을 적극 시행하여 국제사회 내 우리나라의 영향력 강화

- ▲UNICEF 집행이사국 연속 6회('06-'23, 총9회) 수임, ▲WFP, 현재 집행이사국 수임('22-'24, 총4회), ▲UNIDO 88년부터 9회 연속 공업 개발이사국(IDB) 수임,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한·미·호 공여국 그룹 교체이사 수임('22.6~) 등을 통해 기구 정책에 우리 입장 반영
- 장관, WFP 사무총장(데이빗 비즐리), UNICEF 사무총장(캐서린 러셀),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이사장(빌 게이츠) 접견



장관-UNICEF 사무총장
오찬(11.7)



장관-WFP 사무총장
면담(7.14)



장관-빌게이츠
공동이사장 만찬(8.16)

- 2차관, 우크라이나 복구회의(7.45)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 및 국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연대 지지를 표현하고, 주요 협력국(우크라이나, 독일, 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 대표단 면담

□ 장기적 효과

- 가치·인권 중시 국가로서의 우리 위상 강화 및 국제여성인권 증진에 실질적 기여
 - 안보리 관심 의제인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역할과 기여 확대를 통해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기반 조성
- 글로벌 보건기여와 인도적 지원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규모를 확대하여 타국가와의 협력 지속 증진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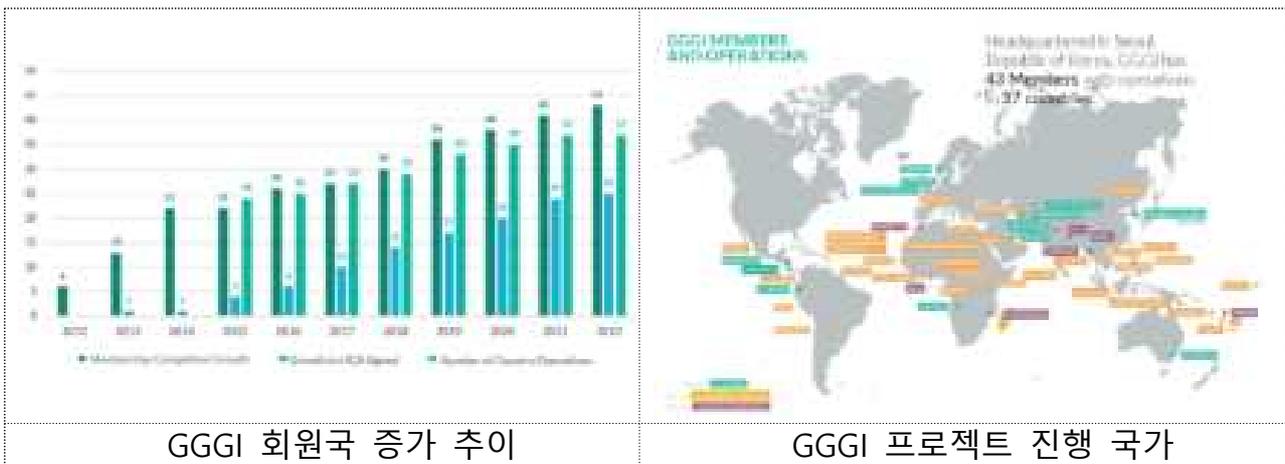
③ 글로벌 기후변화 대처와 탄소중립 외교 강화

□ 주요 성과

- 1.5°C 목표 달성을 위한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해 기후다자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노력 설명 및 파리협정의 충실한 이행 지속
 - ▲ 제4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수석대표(HoDs) 비공식회의(7월) ▲ OECD 기후변화전문가그룹(CCXG) 글로벌포럼 및 정기회의(9월) ▲ 제2차 한-아세안 기후변화 대화(10월) ▲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11월)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다자회의체 참석 계기 우리 정부의 기후대응 행동 의지 천명 및 강화된 기후 행동 공유
-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 계기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피력하고, 개도국의 효과적인 기후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의사를 표명하여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
 - (COP27)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기후재원 조성 등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관련 합의의 구체적 이행을 점검하고 감축 작업프로그램 및 새로운 기후재원 목표 합의 설정
 - (COP27 성과 도출에 기여)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파리협정의 주요 요소*뿐만 아니라, ▲에너지 ▲해양 ▲산림 ▲농업 분야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비당사국 이해관계자 참여와 행동을 촉구하는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Sharm El-Sheikh Implementation Plan)’ 대표결정문 채택
 - * 감축, 적응, 손실 및 피해, 재원, 기술, 역량배양 등
 - 기후변화 취약국을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fund) 설립 결정 등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에 반영

- 한국이 과학과 혁신에 기반한 기후기술 공유, 녹색기후금융(GC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연락사무소 지원 등 그린 ODA를 확대하여 개도국의 녹색전환 적극 지원 약속
 - (GCF) 3억불 공여 지속(초기재원 조성시 1억불 공여, 제1차 재원 보충시 2억불 공여 공약)
 - (GGGI) 일반공여 연간 1천만불 기여 중이며, 그린뉴딜 신탁기금을 신설하여 '22-'26년간 연 500만불 상당 지원 예정
 - (P4G) '22년 사무국 대상 400만불 신규 기여
 - (그린 ODA) 그린 분야 ODA 비중을 '25년까지 OECD DAC 평균 수준으로 확대 추진 중
-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국외 감축분(3,350만톤) 확보 기반 차원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우선 협력 대상국(18개국)을 선정하고 양자 기후변화 협력 협정의 표준문안을 마련하여, 해당국들과 협정 체결 및 이행 추진
- 베트남과 既체결, 페루, 스리랑카, 미얀마,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필리핀, 라오스, 방글라데시, 모로코, UAE와 체결 추진 중
 - 한-몽 외교장관 회담 계기 양자 기후변화 협력협정 가서명(8월)
 - 한-가봉 외교장관 회담 계기 양자 기후변화 협력협정 가서명(12월)
 - 동 협정 체결 시, 양국간에 기후변화 대응 정책 정책·연구·기술 교류·민간투자 등 전반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는 법적 토대가 구축되어, 궁극적으로 동 협정에 기반한 협력 활동이 2030 NDC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우리 공관을 통한 주요 대상국의 협정 체사의결 확인 및 화상회의 등을 통한 문안 협상 가속화 노력

- GGGI 소재지국, 상임이사국 및 부의장국인 우리 정부의 지원과 노력을 통한 명실상부한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로서의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위상 확보
 - '22년은 GGGI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설립 당시 회원국이 18개국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22년 현재 회원국 44개국으로 2배 이상 확대 달성
 - GGGI 회원국의 44%가 기후 위기 등에 취약한 개도국(LDC), 최저개도국(LLDC), 군소도서국가(SIDS)로 개도국 녹색전환 기여라는 기구 취지를 성실히 이행 중
 - GGGI의 관련 프로젝트 '12-'13년 20개국에서 '22년 37개국으로 확대
 - 금년도 GGGI는 80건의 정책 자문 및 60건의 녹색투자 유치 자문을 하였으며,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라틴 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중동, 태평양 지역 등 모든 대륙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관련 프로젝트 수행



□ 장기적 효과

- 파리협정의 충실한 이행 및 GGGI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활용 및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정부가 글로벌 기후·환경 위기 속 주요 화두인 녹색성장과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환경 리더십 강화

-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계기,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 재확인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 제17차 제주포럼(9.15.) 계기, 「Green ODA를 통한 공존과 협력: GGGI의 10년을 돌아보며」를 주제로 GGGI와 공동 세션을 개최하여,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과 이에 대응한 녹색 ODA의 필요성 등 우리 정부의 Green ODA에 대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



제17차 제주포럼 「Green ODA를 통한 공존과 협력: GGGI의 10년을 돌아보며」 세션

- GGGI 글로벌 녹색성장 주간(GGGW)*에 한국의 날 행사(10.28)를 GGGI와 공동 주최하여, 개도국의 녹색 ODA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한국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소개하며 개도국과의 기후 연대 강화

* 글로벌 녹색성장 주간(GGGW) : GGGI의 연중 최대 행사로서 매해 10월 포럼·전시회 등 각종 부대행사 및 최고 의사결정회의인 총회·이사회 등을 집중적으로 개최하는 주간행사로 올해는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



GGGI 글로벌 녹색성장 주간(GGGW)

4]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

□ 주요 성과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 가속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주도적 참여
 - 디지털, 보건, 기후변화 등 우리 비교우위 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 및 구체 협력방안 모색(대통령님 유엔총회 기조연설(9.20.), 유엔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HLPF) 다자조정관 일반토의 참여(7월))
 - 국회,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SDGs 이행을 위한 포용적 파트너십 구축
 - 국내 SDGs 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범정부적 접근을 위한 상시 협의



제5회 열린SDGs포럼 (6.8)



한태평양 지속가능성 대화 (10.27)



세계평화포럼(11.1)

- (OECD DAC)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으로서 관련 규범 이행 모범사례 적극 공유 및 지침 형성 논의에 선도적 역할 수행
 - ▲분쟁·취약성 네트워크(INCAF) 공동의장직 수임(19.6월-22.12월)
 - ▲제2차 HDP Nexus 관련 DAC-유엔 공동주관 고위급 회의(5월) 및 분쟁·취약성네트워크 과장급회의(7월) 등 참여를 통해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HDP Nexus) 논의 주도
 - 아이슬란드 동료검토 참여국(한국, 슬로바키아)으로서 활동(실무회의 3회, 현장 실사, 동료검토보고서 작성 등) 선도적 수행을 통해 차기 우리 동료검토 수검 대비



제2차 HDP Nexus 관련
DAC-유엔 고위급 회의(5.17)

인도적지원-개발-평화 연계
강화를 위한 세미나(11.8)

- (부산글로벌파트너십) 부산글로벌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운영위원 활동을 통한 개발효과성 논의 주도
 - ▲운영위원('19.9월~현재)으로서 운영위원회(7월, 10월) 참여, ▲재정 기여 확대, ▲제3차 고위급회의('22.12월) 참석 등을 통해 글로벌 모니터링 체계 개편 등을 통한 개발효과성 의제 활성화에 기여
- (G20, We-Fi, IATI) G20, We-Fi 등 여타 다자·소다자 회의 계기, 개도국의 SDGs 달성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한 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
 - 또한,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를 통해 개발협력에 관한 32개 정보 항목(예산·진행현황 등)을 분기별 공개하여 우리 ODA의 투명성 제고
- (선진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주요 선진 공여국과의 상시 소통체계 구축 및 정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 및 SDGs 달성을 위한 개발협력 외교 강화
 - (한미 개발협력 MOU 개정 및 한미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9월)) 한미 개발협력 분야 및 지역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양국 관계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발전에 기여



한-미 개발협력 양해각서 개정(9.14)



한-미 개발협력 정책협의회(9.14)

- (무상분야 개발협력 전략 수립)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6월, 12월) 계기 교육ODA·농업ODA 등 무상분야 전략 수립 및 기존 채택 전략 대상 이행점검을 통해 지역·분야별 전략적 무상원조 추진 지속

<무상개발협력 전략회의 개요>

- ▶ (구성) 의장(외교부장관)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소속 14개 정부부처 차관급 인사 및 KOICA·한국수출입은행 임원 등 총 17명 위원
- ▶ (개최 주기) 연 2회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 ▶ 주요 기능
 - 대외정책과 연계한 주요 분야별·지역별 정책 및 전략의 수립
 - 정책 및 전략과 사업간의 부합성 검토
 - 사업의 심사 및 조정
 - 무상분야 정책 및 전략의 통합
 - 정책 및 전략에 따른 사업의 발굴, 추진, 평가를 위한 이행 점검
- ▶ '22년도 주요 안건
 - 4차 회의('22.6.20) : ▲'23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시행계획(요구액 기준), ▲교육 ODA(무상부분) 추진전략 의결
 - 5차 회의('22.12월 예정) : ▲농업ODA(무상부분) 추진전략 ▲'23년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의결 및 ▲ODA(무상부분) 전략 이행현황 보고

- (교육 전략) 교육ODA 사업 시행을 통해 디지털 기반 교육ODA 및 고등·직업교육 지원 등 ▲개도국 교육 기회 확대 ▲교육의 질 제고 ▲전지구적 교육 격차 해소 등에 기여
- (농업 전략) 수원국 수요에 맞춘 인도적 식량원조 확대 및 푸드 시스템 전환 이니셔티브 적극 참여 등을 통해 ▲농업ODA 효과성 제고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는 리더십 구축 및 국가위상 제고에 기여

- (개발협력 정책·전략 선진화) 무상개발협력 주관기관으로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개발협력 정책·전략 추진 방향 논의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1·4·6·11월) 참석을 통한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다자협력 추진전략」 등 개발협력 관련 주요 안건 수립과정 주도 및 안건 심의·의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요>

▶ (구성)

- (정부위원) 국무총리(의장),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소속 14개 정부 부처 장관 및 KOICA·한국수출입은행 기관장 등 총 17명 위원
- (위촉위원) ODA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2명

▶ (개최 주기) 통상 연 2회 개최하였으나, '21년 이후 연 3~4회 수시 개최

▶ (주요 기능) 정부 내 ODA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

-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종합시행계획 수립
-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중기지원전략 수립
-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의결 등

▶ '22년도 주요 안건

- 제42차 국개위('22.6.30) : ▲ 새 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의결 및 ▲ '21년 재외공관 모니터링 이행점검 결과 보고
- 제43차 국개위('22.11.9) : ▲ 다자협력 추진전략, ▲ 민간부문(기업) 참여전략, ▲ '22년 ODA 사업예산 집행상황 점검, ▲ ODA 시행기관 역량진단 결과, ▲ ODA 통합 BI 개정 의결

- (서울 ODA 국제회의)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개최된 최대 규모 국제 개발협력 행사로 주요 국제기구, 원조 전담기관 인사 등 300명 이상의 참석자와 함께 신정부 ODA 추진방향 및 포용적 파트너십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 기여 의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9월)



제15회 서울 ODA 국제회의(9.1)

- (특별 학술대회) “탈전환기 개발협력 접근방법론” 을 주제로 국제개발 협력학회 및 전문가와 함께 통합적 무상개발협력 추진방향 및 개발협력 분야 디지털 전환을 논의하며 포스트 팬데믹 개발협력 방향 논의(11월)
- (외교부-시민사회 정책대화) ▲ 신정부 개발협력 추진방향 및 시민 사회의 역할, ▲ KOICA 시민사회협력사업 강화방안 등 논의를 통해 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 역할 강화방안 적극 모색(12월)

- (무상 ODA 사업의 체계적·통합적 추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계기 '23년도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24년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지침 안내·기관간 협의회 개최 등 시행기관과 긴밀한 협업 추진 등을 통해 '23, '24년도 무상원조 사업을 확대 추진
 - ※ 23년 무상원조사업 총 1,593개, 45개 기관, 2조 3,528억원 규모 추진(요구액 기준)
 - (체계적 사업 추진) KOICA 사업발굴지침(7월) 및 전 시행기관에 대한 사업발굴 가이드라인(11월) 배포를 통해 정부 정책과 ODA 사업 간 연계 및 재외공관과의 협업 강화
 - (주관기관-시행기관간 협의 내실화) 하반기 사업 발굴·기획단계시 주관기관-시행기관 간 ▲기관별 '24년 발굴 현황 및 애로사항 논의, ▲사업 발굴시 유의사항 안내, ▲시행기관에 재외공관 개발협력 담당관 및 KOICA 사업연계 담당자 정보 제공 등 협의를 개최, 정보 공유 및 논의 내실화
 - (지방정부와도 함께하는 ODA 강화) 제3차 국개위('21.7월)시 의결된 「지자체 ODA 추진체계 지원방안」에 기반, 지자체 ODA 역량강화 워크숍(10월) 개최 등을 통해 지자체의 체계적인 ODA 추진 지원



2022년 지방자치단체 공적개발원조(ODA) 역량강화 워크숍(10.28)

- (무상 ODA 사업 간 연계 및 협업 강화) 정부의 ODA 연계 강화 기조를 적극 지원하고자 재외공관 의견을 기초로 유·무상, 무·무상 ODA 사업간 연계 가능 사업을 별도 검토하고, 기관간 협의회 개최 시 안내하여 사업의 질적 내실화 및 사업간 시너지 창출 모색
 - 사업 발굴 단계(N-2년 하반기)부터 기종료 및 종료단계에 있는 사업을 포함하여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 연계 가능 사업 목록을 안내

- (재외공관의 역할 강화) 재외공관의 역할 강화 및 본부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ODA 현지협의체 개최 지원(연중), ▲사업 모니터링 실시(연중), ▲재외공관 개발협력담당관회의 개최(11월) 및 개발협력담당관 대상 온라인 교육과정 이수(연중) 등을 통해 재외공관의 컨트롤타워 역량 강화 지원
- (협력대상국과의 소통 강화) 수원총괄기관과의 정책대화 개최(연중, 중점협력국 중심) 및 국가협력전략 개정*을 추진하여 수원국의 개발 수요를 반영하고, 사업의 효과성 및 가시성을 제고
 - * 중점협력분야 및 실행계획을 담은 국별 ODA 지원전략인 CPS 개정(베트남, 라오스, 우간다,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대상 연내 개정 완료 예정)

□ 장기적 효과

-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
 - ODA 규모를 지속 확대하는 동시에,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대외정책 ▲협력국 수요 ▲우리 비교우위 분야 등을 고려한 무상원조 정책·전략 수립
 - 주요 선진 공여국과의 정례적 협의 채널을 활용하여 식량 위기·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 학습 결손 심화 등 글로벌 현안 해결에 실질적 기여
 - 유엔, OECD, G20 등 다양한 계기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우리 ODA의 영향력과 가시성 확대
- 수원국의 수요가 크고 우리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서 구체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협력국과 상생의 국익 창출
 - 수원국의 수요와 우리 정부의 대외전략을 반영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우리 개발협력의 성과를 제고하고, Team Korea 체제 하 현장중심·통합적 ODA를 강화
- 시민사회·기업·학계 등 개발협력 분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 지지를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ODA 생태계 조성
 - 코로나19로 SDGs 달성을 위한 재원 부족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간부문(기업)의 혁신 기술 활용 ▲기업 ESG 경영과 ODA간 접목 확대를 통해 민간재원 확충

5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확대

□ 주요 성과

-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 수립(8.24)을 통해 '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2)'와는 차별화된, '세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비전 달성을 위한 범정부(18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자체) 공공외교 중장기 전략 수립
 - 문화공공외교 및 일방적 홍보에 치중하지 않고, 정책공공외교 및 지식공공외교 분야 외연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기본 방향 수립
 - ※ '2차 공공외교 기본 계획'의 3대 목표 : ▲전략적 정책공공외교 강화를 통한 국익 증진, ▲과학기술,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디지털·혁신적 공공외교 생태계 구축
 - 정책공공외교의 범주를 '한반도 정책' 위주에서 '자유민주주의·평화·인권' 등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부합하는 글로벌 이슈로 확대
 - AI,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
- 공공외교 대상을 주요 여론주도층에서 일반 대중 및 차세대로까지 확대하고, 보편가치와 개방적·포용적 국제질서 구축,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 해결 모색에 기여하는 정책공공외교 강화
 - (대상) 기존 한국 관련 전문가 이외에 차세대·신진 전문가 대상 정책공공외교 활동을 통해 장기적 협력 기반 강화
 - (이슈) 법치, 인권 등 인류보편가치, 개방적·포용적 국제질서 구축 등의 글로벌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주제 비중 확대
- 주요국 대상 정책공공외교 플랫폼 강화 및 주요 외교계기 등 현지 상황을 반영한 정책공공외교 사업 추진
 - (미국)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걸맞게 지역안보, 경제안보, 기후변화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우리의 대미 협력 의지를 보여주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친한 네트워크 구축 분야를 확대하는 성과 거양

※ 경제안보와 신기술 세미나 개최 및 대미 아웃리치(6월) 등 글로벌 도전과제 관련 한미 협력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 전개

- (중국) 한중문화교류의 해('21-22년)계기, ▲對中 1.5 Track 공공외교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참여형(차세대, 유학생 등) 공공외교 사업을 확대하여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실화에 기여

※ 한중 공공외교 포럼(12.13), 한중 싱크탱크 대화(12.15)

- (일본) 일본 내 전문가와의 연계, 재외공관의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폴뿌리 공공외교 및 ▲차세대 교류증진, ▲공공외교 강화를 통한 양국 간 미래지향적 인식 제고 및 우호 교류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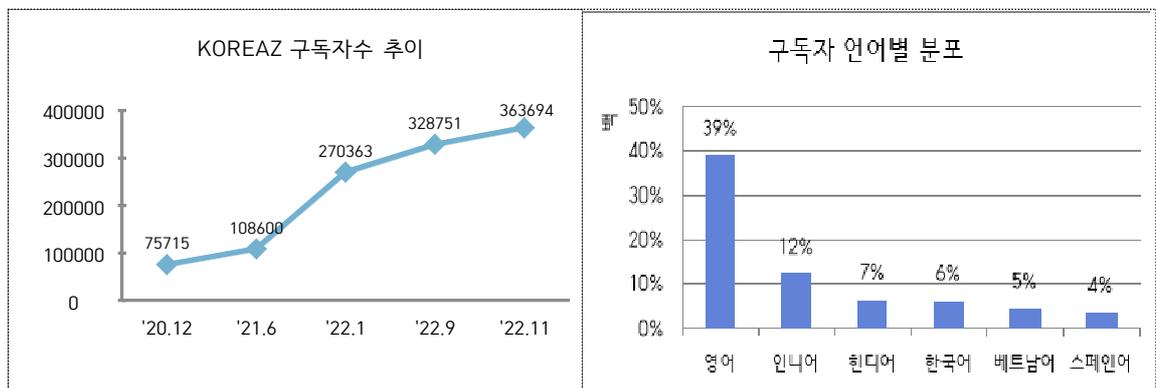
※ 한일관계 전문가.언론인 세미나(7월), 주일 재외공관이 주도하는 한일 과제 해결을 위한 심포지엄 등 다수의 교류 활동 전개

- (유럽) ▲전문가 정책협의 채널 정례화, ▲현지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 공공외교 인프라·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우리 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

※ '제7차 한-체코 미래포럼' 개최, '팬데믹 이후 한-이탈리아 협력 방안 세미나' 등을 개최

- 공공외교 통합 SNS 플랫폼 「KOREAZ」를 우리 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확대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 글로벌 중추 국가 이미지 제고

- KOREAZ 4개 채널 구독자 수 38만명 달성 및 1,300여개 콘텐츠 제작·확산('22.12월 기준)



- 전 세계 대중 및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전체 지지층 확대를 위한 구독자수 증대와 더불어, 국가브랜드 제고를 목표로 전략적 타겟팅을 통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

- KOREAZ 채널을 통해 ▲한국 문화와 정책 소개, ▲신안보, 환경 보호 등 범지구적 이슈 콘텐츠 제작, ▲본부 및 재외공관 활동 공유, ▲부산엑스포 관련 국경일 영상 제작 등 우리 주요 외교 일정·현안 적극 홍보
- 정책 콘텐츠와 문화·지식 콘텐츠를 적절히 구성, 일방적인 정책 홍보가 아닌 한국 전반에 대해 호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전략적 공공외교 추진

* '22년 콘텐츠 분야별 제작 비율 : 정책(46.1%), 문화·지식(53.9%) ('22.11월 기준)

< KOREAZ 주요 콘텐츠 >

【특별기획 콘텐츠】

- 주요 현안 및 외교 계기 관련 특별기획 영상 제작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동영상 7개 언어(영어, 일어, 중어, 불어, 서어, 러어, 아랍어) 제작·배포, ▲한-중 수교 30주년, 한-메콩 교류의 해, 한-중앙아 수교 30주년, 한-베트남 수교 30주년 등 주요 외교 계기 특별기획 영상 현지어 제작

【MOFA News】

- 한주간의 주요 외교행사를 묶어 하이라이트 모션뉴스 제작, 우리 정부 외교활동 홍보

【KOREAZ Focus】

- 미중일 협력, 유럽·중동·아세안·중남미 등 지역별 상생공영 외교, 환경·개발 등 글로벌 가치실현 기여, 유엔·APEC·G20 등 국제기구 다자협력 정책 콘텐츠 제작

【KOREAZ Weekly】

- 주재국 내 재외공관의 활동을 소개함으로써 소개국과 한국과의 양자관계 부각
 - '22년 기준, 전 세계 28개국 34개 지역 소개

【Snapshot】

- 최근 MZ 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채널 특성에 맞춰 한컷 이미지로 세계 각국의 명소, 재외공관 활동, 국내 지자체 등 소개
 - '22년 기준, 총 21개국 23개 지역 소개

※ 인스타그램 구독자 수 작년 대비 약 2배 가량 증가('21년 17,244 → '22년 30,119)

<p>(위클리)이탈리아 사찰음식 행사 (도달수 35.3만)</p>	<p>(특별기획)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도달수 101.6만)</p>	<p>(스냅샷) 이집트 (도달수 26.1만)</p>

콘텐츠	콘텐츠 관련 주요 댓글
KOREAZ Weekly	▲(Anal****) How nice. <u>Great to see the connections between my country and Korea.</u> ▲(Nin*) One of the best contents that I've watched. Good to know that 'magkgeolli' and other Korean culture was literally popular in many countries. I love Korean vibes ever! ▲(fati) The Korean war wasn't easy, it was a memorable event, <u>gratitude for the sacrifice and safety for the next generation.</u>
KOREAZ FOCUS	▲(Fot****) <u>Thank you for the simple and short explanations to such complex issues!</u> Thanks to this informative and fun video I really feel like I <u>learned a lot about emerging security threats!</u> ▲(정**)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계가 고민해야 하는 만큼 외교부의 역할이 새삼 중요하다 생각되네요. ▲(Yoo*) Thank you for your invaluable insight!
KOREAZ Culture	▲(Axi**) <u>Wow this kind of crossculture give me new insights and knowledges!</u> ▲(rhe****) What I like about the videos on the KOREAZ channel is that they are both informative and entertaining. ▲(Abs**) Thank you MOFA KOREAZ. My mom was Korean, but she passed away when I was young, so I really appreciate you talking about traditional Korean dishes!

○ 글로벌 가치 기여 관련 콘텐츠 제작·확산을 통해 국제사회 포용과 연대 증진에 기여

- 유니세프와 공동으로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ENDviolence」 캠페인을 진행, 전세계 90여개국, 31만명 지지 확보 및 7천만건 이상 도달
- * 메타버스를 활용한 「ENDviolence」 캠페인 콘서트(9.16)는 약 180만건 이상 도달 (유튜브, 메타버스, MBN 방송 포함)
- * KOREAZ 명예기자단과 재외공관 서포터즈 간 메타버스 기반 글로벌 총회(10.13) 개최(약 30개국 334명 참여)

<ENDviolence 캠페인 추진 현황 >



캠페인 로고



캠페인 참여 사진



캠페인 공식 계정

□ 캠페인 현황

- 아동폭력 근절을 위해 UNICEF와 함께 7월부터 시작한 SNS 캠페인으로, 캠페인 콘서트(9.16), 메타버스 글로벌 총회 행사(10.13) 등을 통해 지속 확산 중

□ 주요 참여자 현황

- (국내) 외교부·국방부·통일부 등 중앙부처장 다수, 반기문 前유엔사무총장, 김황식 前 국무총리 등 전직 인사, 이인영, 도종환, 김병욱, 나경원 의원 등 국회의원 다수, 인천시장, 김해시장, 동해시장 등 지자체장 다수, 송가인, 최시원, 에일리, 이혜성 등을 포함한 배우, 가수, 성우, 스포츠선수 등 유명인 다수
- (해외) George Laryea-Adjei 유네스코사무총장 및 지역별 유니세프 사무소장,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한대사 다수

□ ENDviolence 캠페인 콘서트 개최(9.16)

- 캠페인에 대한 국내외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콘서트 제작 및 온라인(메타버스 플랫폼 및 KOREAZ 유튜브 채널) 송출
 - 콘서트 라이브 스트리밍 및 관련 영상 총 180만건 도달
 - ※ 콘서트 시청자 국가별 분포 : 인도(55.6%), 이집트(23.2%), 대한민국(11%), 인도네시아(2.04) 등 총 100여개 국가에서 시청

- 지역별·언어권별 맞춤형 디지털 공공외교 지원을 통해 현지인들의 관심도 및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제고

- (재외공관 사업 지원) ▲재외공관 주도 디지털 공공외교 사업 '21년 104개 공관에서 '22년 105개 공관 141개 사업으로 확대, ▲재외공관 디지털 공공외교 우수사례 선정·전파, ▲현지 인플루언서 및 재외공관 SNS 서포터즈 등 친한 네트워크 확대

< 재외공관 디지털 공공외교 우수사례 >

○ 주이탈리아대사관

- (개요)한국에 거주하는 이탈리아 국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 문화와 생활을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으로 제작, 유명 유튜브 채널 등 SNS를 통해 홍보
- (성과) 2021년 시즌1(총 조회수 약 50만회), 2022년 시즌2 (총 조회수 약17만회) 기록

○ 주이집트대사관

- (개요) 대사관에 파견 근무한 영프로페셔널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상을 제작, SNS 게재
- (성과) 한국 젊은이가 바라본 주재국의 다양한 모습을 긍정적으로 소개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제고 및 한국 정부의 대 이집트 ODA 간접 홍보

○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

- (개요) 주재국 및 한국 관련 소식,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카드 뉴스를 주재국 언어 및 한국어로 제작·배포함으로써, 지역내 한국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성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주재국 정부의 주요 SNS 접속 차단에도 불구하고 브콘탁테 등 현지 매체를 활용, 평균 조회수 2천건 이상을 상회하는 등 현지에서 다수의 긍정적 반응

- (지역별·언어권별 현지 맞춤형 콘텐츠 제작)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동영상(7개 언어), 한-중 수교 30주년, 한-중앙아 수교 30주년, 한-메콩 교류의 해 등 주요 외교 계기 특별기획 콘텐츠 현지어 제작, ▲KOREAZ Weekly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제작·확산

< KOREAZ Weekly 주요 콘텐츠 >

		
이탈리아 사찰음식 행사 (도달수 35.3만)	스리랑카 어린이날 행사 (도달수 21.8만)	이집트 탁구신동 하나고다 (도달수 12.5만)

□ 장기적 효과

- 정책공공외교 영역을 기존 한반도 중심의 안보 이슈에서 자유·평화·인권·기후변화·경제안보·보건안보 등 글로벌 이슈로 확장하여 세계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국가 위상 강화
- 본부-재외공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현지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공공외교 사업을 실시하여 차세대, 지방 주민 등 정책공공외교 대상을 다변화함으로써 친한 인사 네트워크 범위 확대
- 팬데믹 지속 상황에서,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를 통해 해외 대중 및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쌍방향 소통 강화
-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공공외교 외연 확대 및 플랫폼 업그레이드로 과학기술 강국 위상 부각

5. 국민권익과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외교

(공백)

순 서

I. 요약	209
II. 업무 추진 성과	212
1. 업무 개요	212
2. 추진 계획 및 주요 실적	213
3. 주요 추진 노력	216
4. 주요 업무 성과	227
①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	227
② 재외동포 지원 강화	235
③ 경제안보를 위한 양자·다자간 협력 기반 확충	241
④ 원자력에너지 협력외교 강화	248
⑤ 2030 세계박람회 유치활동체계 강화 및 대외유치교섭 활성화...	252

(공백)

I. 요약

1 주요 추진 노력

-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 해외 위난 상황 대비 체계적인 재외 국민 보호시스템 구축 및 홍보 강화
 - ▲해외 위난 신속 대응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및 관련 법령·규정 등 재정비, ▲민관 협력을 통한 정책 환류, ▲현지점검 및 관계부처와의 협력 체계 구축,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 (재외동포 지원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예산확보 노력) 국정과제 채택(5월) 후 재외동포청 조기 설치를 목표로 법령정비(정부조직법 개정 등) 및 재외동포청 기능·규모 등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디지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및 예산확보 노력 실시
 - 장차관, 다양한 지구촌한민족 공동체 행사에 참석하여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추진 방향 설명 및 동포 의견 청취 등 소통 노력 강화
 -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피란 고려인 동포 대상 긴급 지원 실시
- (경제안보를 위한 양자·다자간 협력 기반 확충) 경제안보 외교 추진 체계 및 양·다자 협의 채널 지속 강화
 - 경제안보외교센터 개소 및 경제안보 핵심품목 조기경보시스템(EWS) 확대 운영 등 과제 이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투입
 -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및 IRA 합동대책반 등 범정부·민관 협업 체계 구축, 장·차관급 양·다자 경제안보외교 추진 강화
 - 미중 전략경쟁 및 지정학적 갈등 속 우리 국익 극대화를 위한 소·다자 국제협의체 주도적 참여를 통해 효과적 과제 이행 노력
- (원자력에너지 협력외교 강화) 한미 원자력 협력 및 원전수출 지원 외교 추진
 - 한미 원자력 분야 고위급 협의 개최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 협력 방안 논의

- ▲원전수출지원공관 지정, ▲원전수출 지원 부내 TF 발족 등 원전수출 지원 외교 추진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체계 수립 및 부처간 협업 하에 대외유치교섭 강화
 - 부내 유치교섭 상황실 구성 및 직제 개정을 통한 한시정원 증원
 - 국제행사, 고위급 방한, 양자회담 등 고위급 외교 계기마다 적극적으로 지지교섭 실시 및 부처간 협업 노력

2 주요 업무 성과

- 해외 안전 정보 수시 전파, 신속한 영사조력 제공을 통한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 ▲다양한 홍보 채널(주요 매체 및 SNS, 오프라인 간담회 등)을 활용한 대상별 맞춤형 홍보, ▲국민 참여형 홍보 프로그램 확대
 - ▲우크라이나 교민 신속 대피·철수 지원, ▲대만 우리선원 탑승선박 침몰 사건 대응, ▲아이티 우리국민 피랍 사건 대응 등 각종 해외 위난 상황 발생시 체계적인 영사조력 제공
- 재외동포 사회·인식 변화와 국가위상 제고에 걸맞는 재외동포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모국과 재외동포 간 유대 강화와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사업 실시
 - (재외동포 권익향상) ▲통합적·체계적 재외동포정책 추진 기반 마련* ▲차세대 동포의 교육 역량 강화 및 인재 발굴**을 통해 미래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주역 육성 ▲역사적으로 피해를 겪었던 동포 및 소외동포에 대한 맞춤형 지원*** 실시
 - * 재외동포청 조기 신설 목표로 부처·국회 협의 진행(부내 TF 운영('22.11.1.~))
 - **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 한글학교 교사 연수 및 자격 취득 지원 / 차세대 동포 장학 및 초청사업 등
 - *** 피란고려인 동포 지원 /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 한입입양인 가족찾기 / 귀환 한-베 다문화 가정 자녀 지원 등
 - (네트워크 강화) ▲재외동포와의 소통 강화* ▲지역별·분야별·세대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국정과제) 이행

* 약 3,000개 동포단체 등에 대통령 메시지 전달, 재외동포 초청 리셉션 개최 / 대통령 총리 해외 순방 계기 동포간담회(총12회) 통해 정부 정책방향 설명 및 소통 강화

** 제8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제24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제16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22 세계한인회장대회, 제20차 세계한상대회, 2022 차세대 해외입양동포대회 등

□ 경제안보를 위한 양자·다자간 협력 기반을 확충하여 능동적 경제 안보외교 전개

- (양자 경제협력 강화) ▲범정부 협업 下, 경제안보 현안에 선제적·능동적 대응 ▲미국·중국·EU 등 주요국 및 베트남, 몽골 등 신흥경제권과의 경제협의를 통한 실질 협력 확대 및 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체제 강화 ▲해외 시장 개척·진출 및 기업 활동 애로 해소 등 우리기업 해외 진출 지원
- (다자 경제협력 강화) G20, APEC 등에서 식량·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대응 등 당면한 국제현안 대응에 있어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및 성공적 2025년 APEC 의장직 수임 기반 조성
- (경제협정 네트워크 확대) 경제협정 (투자, 항공, 조세, 사회보장, 과학기술 등) 협상 적극 실시(문안합의·서명·발효 11건), 新국제경제규범 논의 적극 참여, 협정에 근거한 분쟁(ISDS 등)에 선제 대응해 국익 손실을 최소화

□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 및 체계적·실질적 원전수출 지원 기반 구축

- ▲ 한미 원자력 분야 고위급 협의 지속, ▲ 한미 SMR 협력·소통 강화, ▲ 한미 핵안보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
- ▲ 원전수출 대상국과의 소통체계 강화, ▲우호적인 원전 수출환경 조성 등을 통해 체계적, 실질적 원전수출 지원 기반 구축

□ 고위급 지지교섭 적극 전개 및 재외공관을 통한 2030 세계박람회 교섭 활동을 통한 지지세 확산

- 정상회담, 장·차관 회담 등 BIE회원국 고위급 대상 외교 계기시 부산 유치교섭을 적극 전개하여 지지 확대
- 재외공관을 통해 170개 회원국 본국 정부 대상 교섭과 프랑스 파리 (BIE 사무국 소재지) 주재 각국 대표 대상 유치활동을 병행하여 지지 확산

II. 업무 추진 성과

1 업무 개요

□ 업무 목표

- 재외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건사고 예방 활동과 대응 체계 강화
-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모국과의 유대 강화
 -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별, 분야별, 세대별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강화
- 급변하는 대외경제·통상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주도의 우호적 대외 경제안보 환경을 조성
- 한미 원자력 협력 및 원전수출 지원 등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 협력외교 강화
- 2030 세계박람회 대외유치전략 수립 및 총력 유치
 - 개최지 선정까지('23.11월) 범국가적 유치 역량을 결집하여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총력 유치

□ 업무 주요 내용

- 재외국민 보호 예방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및 재외공관 대응 역량 강화 및 인프라 개선
- 동포사회와의 쌍방향 소통 강화를 통해 통합적·체계적 재외동포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재외동포의 권익향상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의 네트워크를 강화
 - ▲신정부 출범 계기, 재외동포사회와의 소통 및 유대 강화 ▲재외동포청 조기 설치를 위한 준비 ▲모국과 동포사회의 네트워크·유대 강화 ▲차세대 동포 한민족 정체성 함양 및 인재 발굴·육성 ▲역사적으로 피해를 겪었던 동포 및 소외동포 지원 등

- 양자 및 다자간 협력 강화를 통한 능동적 경제안보외교 전개
 - 미국·EU·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다자 경제협의 통해 경제현안 대응 및 경제협력을 심화하고, 신흥경제권과 실질 협력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 강화
 - 다자경제협력체에서 관심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입장을 반영하고, 양자·다자간 경제협정 네트워크 확대
- 한미 원자력 협력 및 원전수출 지원 외교 추진
 - 한미 정부간 고위급 협의, 원전수출 지원공관 지정 및 원전수출지원 부내 TF 발족
- 2030 세계박람회 유치활동체계 강화 및 대외유치교섭 활성화
 - △박람회 지원 부내 TF 구성·운영 △고위급 지지교섭 상시화
 - △재외공관 유치교섭활동 실시

2 추진 계획 및 주요 실적

세부추진과제	추진 계획	주요 실적
1.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	<p>[예방 시스템의 효과적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한 대상별 맞춤형 홍보(5-12월) ■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9-12월) <p>[대응 역량 강화 및 인프라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국민 보호 정책 주관부처로서 본부의 통합적 지원 역할 확대(5-12월) ■ 재외공관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5-12월) 	<p>[예방 시스템의 효과적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안전여행 온·오프라인 홍보(8-10월) - 유튜브 등 SNS, 인천공항 스크린, 안전간담회 개최 등 ■ 사건사고 경험 공모전 개최(5월~), 해외안전여행 서포터스 운영(9-12월) ■ 선교단체, 여행업계 간담회(9월) <p>[대응 역량 강화 및 인프라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국민보호위원회 개최(8월 서면) - 재외국민보호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 재외국민 지킴이 사업(민간전문가 현지 컨설팅) 운영(10-11월) ■ 신속대응팀 모의훈련 겸 안전한국 훈련 실시(9-11월) ■ 지역별 해외안전 담당영사 회의(4-12월 8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공관 해외안전 대응 인력 대상 심리치료 지원(5월~) ■ 자연재해 관련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합동 점검(11월) ■ 재외국민보호위원회 개최(12월) - 2021-22년 집행계획 이행평가 및 차년도 재외국민보호 집행계획 수립
<p>2. 재외동포 지원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모국 연수 (8월) ■ 한글학교교사 온라인 연수 (8월) ■ 제8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개최 (8월) ■ 제24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개최 (9월) ■ 제16차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및 세계한인회장 대회 개최 (10월) ■ 제20차 세계한상대회 개최 (11월) ■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실시 (12월) ■ 중장기 재외동포정책 수립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모국 연수 실시 (7.14~8.10) ■ 한글학교교사 온라인 연수 실시 (1차 8.15~8.21, 2차 8.24~8.30) ■ 제8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개최 (8.16~8.19) ■ 제24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개최 (9.4~9.8) ■ 제16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22 세계한인회장 대회 개최 (10.4~10.7) ■ 제20차 세계한상대회 개최 (11.1~11.3) ■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업 추진 중(350명 대상) ■ ▲중장기 재외동포정책 수립 및 ▲재외동포사회 현황 실태조사 연구 실시 (6월~12월)
<p>3. 경제안보를 위한 양자·다자간 협력 기반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과의 양자경제 외교 강화 및 신흥경제권과 실질 경제협력 확대 ■ 보호무역조치 적극 대응 등 우리 기업의 해외활동 적극 지원 ■ 정상·각료급 다자 경제협력체에서 우리 관심의제 제기 및 주요 국제 경제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 개진 ■ 디지털경제 하 국경이동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 거버넌스 논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한미 NSC 경제안보대화(7월) ▲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 협의회(12월) ▲ 제26차 한중 경제 공동위(11월) ▲ 제19차 한-베 경제공동위(10월) ▲ 제2차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10월) ▲ 제6차 한-몽 공동위원회(11월) 등 개최 ■ 수입규제 동향 보고서 발간 (7-12월) ■ 해외진출 기업 사례집 발간 (9월) ■ 2022 다보스 포럼 참석(5.22-26) ■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7.5-8) ■ OECD 동남아 프로그램(SEARP) 참석(10.17) ■ 세계경제포럼(WEF) 국가전략 대화(CSD) 참석 (10.21) ■ G20 정상회의 참석 (11.15-16) ■ APEC 정상회의 참석 (11.18-19) ■ APEC/글로벌 CBPR 포럼 실무회의 참석(7.29, 8.22-23, 9.23, 10.14, 10.28, 11.1) ■ 글로벌 CBPR 포럼 워크숍 개최(11.2-4)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협력국 및 신흥경제권과의 양·다자 경제협정 네트워크 확대 및 新국제경제규범 형성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협정 체결협상 적극실시 <table border="1" data-bbox="965 248 1422 884"> <thead> <tr> <th>협정</th> <th>협상국가</th> </tr> </thead> <tbody> <tr> <td>투자보장</td> <td>멕시코, 조지아</td> </tr> <tr> <td>항공</td> <td>쿠웨이트, 나이지리아, 케냐, 이스라엘, 인도</td> </tr> <tr> <td>사회보장</td> <td>모로코, 이집트</td> </tr> <tr> <td>이중과세방지</td> <td>포르투갈, 안도라, 아르헨티나, 르완다, 이라크, 가봉, 알제리, 이란, 보츠와나</td> </tr> <tr> <td>세관</td> <td>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영국</td> </tr> <tr> <td>과학기술</td> <td>미국, 튀르키예</td> </tr> <tr> <td>경제무역협력</td> <td>요르단</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국제경제규범 논의 적극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UN무역개발기구(UNCTAD) 회의 참석 및 정부의견서 제출(10.18) 	협정	협상국가	투자보장	멕시코, 조지아	항공	쿠웨이트, 나이지리아, 케냐, 이스라엘, 인도	사회보장	모로코, 이집트	이중과세방지	포르투갈, 안도라, 아르헨티나, 르완다, 이라크, 가봉, 알제리, 이란, 보츠와나	세관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영국	과학기술	미국, 튀르키예	경제무역협력	요르단
협정	협상국가																	
투자보장	멕시코, 조지아																	
항공	쿠웨이트, 나이지리아, 케냐, 이스라엘, 인도																	
사회보장	모로코, 이집트																	
이중과세방지	포르투갈, 안도라, 아르헨티나, 르완다, 이라크, 가봉, 알제리, 이란, 보츠와나																	
세관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영국																	
과학기술	미국, 튀르키예																	
경제무역협력	요르단																	
<p>4. 원자력에너지 협력외교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전수출지원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전수출공관 지정(8월) ■ 원전수출지원 부내 TF 발족(9월) 																
<p>5. 2030 세계박람회 유치활동체계 강화 및 대외유치교섭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내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상황실 인력 증원 및 상근 임무부여(8월) ■ 고위급 지지교섭 상시화(7-8월) ■ 2030 세계박람회 상세 유치 계획서 제출(9월) ■ 제171차 BIE 총회 계기 경쟁 PT(11-12월) ■ 지역·국제행사 계기 유치교섭 병행(~12월) ■ BIE 상주대표부 및 재외공관 상시 유치활동(~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내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상황실 상근 임무부여(8월), 인력 증원 등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직제화(9월) ■ 정상, 국무총리, 장·차관 등 고위급 지지교섭 실시(7월~) ■ 2030 세계박람회 상세 유치 계획서 제출 완료(9.7) ■ 제171차 BIE 총회 계기 경쟁 PT(파리, 11.28-29 예정) ■ 아세안·G20·한-태도국 외교장관 회의, 한-중남미·한-중앙아 협력포럼 등 국제행사 계기 유치교섭 (~12월) ■ 프랑스 파리 주재 BIE 상주 대표부 및 재외공관을 활용한 활발한 유치교섭 전개(~12월) 																

3 주요 추진 노력

① 투입노력

□ 과제 이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투입

- 사건·사고 및 해외 위난 상황 신속 대응을 위한 재외공관 해외안전 담당 영사 등 인프라 지속 강화

※ 예산 확대 : '21년 139억원 → '22년 146억원 → '23년 155억원(정부안)

※ 인력 확충 : '21년 75명 → '22년 82명(+7명) → '23년 83명(+1명)

- 통합적·체계적 재외동포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재외동포청 조기 설치를 목표로 추진중이며, 법령정비(정부조직법 개정 등)와 더불어 외교부 기능이관, 재외동포청 조직규모 등 협의 진행 중

- 대통령실·국회·부처 등 수시 협의 강화, 부내 TF 운영('22.11.1.~)

- 「경제안보외교센터」 개소(5.30.)를 통해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을 위한 정책 지원 기반 마련

-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기술 공급망 등) 모니터링·분석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 지원 ▲업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한 정책 소통·고도화

- 제2의 요소수 사태 방지를 위해 37개 재외공관에 '경제안보 핵심품목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확대 운영('22.1월)하여 해외 發 공급망 위기 징후의 조기 포착 및 위기 발생 시 신속 대응

-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을 위한 'IPEF 대응팀' 출범(5.31.)

-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를 구성, 경제·외교·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경제안보외교센터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주요 경제안보 현안의 합의 및 대응 방안 등 수시 논의

* ▲1차(3.14) : 경제안보외교 추진 방향, ▲2차(5.30) : 한미정상회담 성과, IPEF 추진방안, ▲3차(10.20) :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 2022년 다보스포럼 대통령 특사단 임명(대표 : 나경원 前자유한국당 대표 및 단원 5인)에 따라, 기존 세계경제포럼(WEF) 담당 실무직원 1인에 더해 주요 면담·행정사항 지원을 위해 직원 1인이 추가로 다보스포럼 행사 전담

- 다보스포럼 참석 계기, 대통령 특사 총 21회 면담(외국주요인사 8회, 국제기구 수장 3회, 기업인 10회) 실시 및 외신 기자 간담회, '국제협력의 미래' 세션 패널 참석을 통해 우리의 외교비전 성공적 홍보
- 체계적·실질적 원전 수출 지원을 위한 부내 TF 발족
 - 원전수출지원 TF(9.2) 발족을 통해 외교부 내 유관 실국(기후환경 과학외교국,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실, 지역국 등) 및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협업 관계 구축
- 원전수출중점지원공관(8개) 지정을 통해 해당 공관에 원전수출 지원 임무 부여 및 외교적 지원 기반 구축
 - 재외공관을 통한 현지 원전 정보 실시간 확보, 상대국 수요 파악 및 맞춤형 지원 활동 강화
- 부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상황실을 구성하고 한시 정원으로 직제화 추진
 - 2030 부산세계박람회 대외 유치교섭 업무 추진을 위한 외교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32905호, '22.9.13)
 - *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시까지 한시정원 4명 순증(7등급1, 5-6등급2, 3-4등급1, ~23.12.31)

□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영사조력법 시행(21.1.16.) 이후 해외 위난 관련 법령·규정·매뉴얼 재정비
 - (영사조력법 일부개정(안) 검토) 의원발의 영사조력법 일부개정안 관련 자료 제공 및 부처 의견 전달
 -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7.19.) 관련 관계부처 의견조회(1차, 7.20~8.8., 2차, 8.19.~8.26.), 법무부행정안전부법제처 의견 접수, 통일된 정부 입장 국회 전달(9.6.), 입법 수정안 제시 등
 - ※ 김경협의원 대표발의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10.25.) 관련 관계부처 의견조회 (10.27.~11.7.), 국회측에 외교부기재부 의견 제시(11.10.)
 - (긴급지원비 운용 지침(외교부 예규) 제정) 영사조력법령에 근거한 긴급 지원비 집행의 구체적인 지원범위, 절차 및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외에서 사건·사고에 처한 무자력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체계 제고
 - ※ 11.24. 제정 완료

- 영사협력원 및 해외법률전문가 운영 내실화 ▲ 전자통합행정시스템 (G4K) 내 사업 및 통계 관리메뉴를 신설을 통한 사업추진 실적 및 통계 DB 구축 및 공관의 보고절차 간소화, ▲ 영사협력원 및 법률전문가 위촉·선정 기준 수립을 통한 본부 사전심사 강화 및 인력배치 효율성 제고
 - ※ 영사협력원 운영 현황 : 104개 공관에서 212명 위촉을 통해 2,621건의 사건사고 처리 및 예방 활동 수행(22.10월 기준) 중
 - ※ 해외법률전문가 운영 현황 : ▲ 107개 공관 현지 법률전문가 자문 계약 체결, ▲ 영사 조력법상 규정된 사건사고 유형(체포·구금, 범죄피해, 사망, 환자, 실종, 해외위난상황)에 대한 해외안전 담당관 대상 법률 자문 및 주재국 법률조사 시행

② 일하는 방식 개선

- 민·관 협력을 통한 재외국민보호 정책 개선
 - (재외국민 지킴이 사업 전개 등) 본부 및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방문을 통해 재외국민보호 태세 점검 및 사전 컨설팅, 정책 시사점 도출
 - ※ ▲ 강력 사건·사고 및 장기 지연 재판 대응 방안 모색(10.20.-22. 필리핀), ▲ 혐오범죄 및 정신질환자 대응 역량 제고 방안 모색(11.6.-9., 체코), ▲ 기니만 해적 활동 및 교민 거주지역 치안 상황 점검(11.14.~18., 나이지리아) 등 ▲ 산악 조난 사고 및 지진 대응(11.30.~12.3., 네팔)



주필리핀대사관 사건사고 브리핑(10.20.)



위험지역(앙헬레스) 현장시찰(10.21.)

- (민간전문가 릴레이 세미나 개최) ▲ 국외 범죄피해지원 실태 및 재외국민보호 업무 개선방안(5.26), ▲ 해외 혐오범죄 실태 및 재외국민 보호 방안(6.2.), ▲ 내전의 이해 및 국제사회의 역할(6.16.), ▲ 해외 재난 현장 의료지원 활동 현황(6.30.), ▲ 해상테러, 서아프리카 문제들(7.8.), ▲ 혐오범죄 국내 전문가 간담회 개최(8.11.)를 통한 재외국민보호 업무 이해도 제고 및 사건사고 대응 역량 강화

- (해외안전 대응인력 심리치료 지원) 직무 수행에 따른 스트레스 및 후유증에 대한 심리치료를 통한 안정적인 영사조력 제공 도모
 - ▲ 해외안전 대응인력 대상 심리진단 검사(6.13.-7.31. 75명참여), ▲ 지역별 사건사고 영사 회의 계기 특강(6회), ▲ 유선 및 화상 등 개별 상담(150회), ▲ 찾아가는 방문 특강(9회, 96명참여), ▲ 재외공관 고위험군 상담 서비스(13회, 96명),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특강(9회)
-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재외국민이 필요한 민원행정 업무를 원거리 재외공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처리하고, 해외에서도 국내의 온라인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준비*
 - *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관련 관계부처 업무협의 지속 및 '23년 예산 확보 노력
- (공급망 통합 관리를 위한 범정부 협업 강화) 제2의 요소수 사태 방지를 위한 범정부 및 민관 협업체계 구축
 - 외교부는 범정부 차원 핵심품목 조기경보시스템(EWS) 內 재외공관 EWS를 가동해 국내부처와 소통하면서 범부처 대응에 적극 참여 중
 - EWS 운영 관련, ▲ 재외공관-유관기관(KOTRA, AT,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및 진출기업·지상사 간 'Team-Korea' 협업체계를 마련, ▲ 위기 발생시 신속·효과적 대응을 위해 현지 네트워크 정비 강화(주재국 정부부처, 생산자, 수출업체, 전문가 등)
- IRA 대응 합동대책반 가동* 및 업계와의 소통을 위한 민관 합동 TF 개최
 - * 외교부·산업부·기재부 등 참여, 8.30. 가동 이후 4차례 개최
- 다자경제협의체 참여시 화상회의 적극 활용을 통해 외교활동의 효율성 및 성과 달성도 제고
 - (G20) G20 정상회의 성과도출(정상선언문 극적 합의) 및 주요 의제 협의를 위해 양·다자 화상회의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G20 차원의 국제협력 견인
 - (OECD SEARP) 장관 영상 메시지를 통해 OECD SEARP 논의에 기여

- (WEF CSD) 총리급에서 화상회의를 매개로, 20여개국 30여명의 글로벌 경영인들과 직접 소통하여 우리 경제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
-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위원장 : 산업부장관) 위원 참석(외교부 2차관)을 통한 부처간 협업 체계 강화
- ▲ 원전수출지원 부내 TF를 중심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③ 기관장 노력

-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장관, 재외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긴급 대피·철수 지원 및 잔류 국민 안전 확보 조치 적극 강구 지시
 - ▲ 현지 안전점검 출장(5.3.-10.), ▲ 잔류 우리국민 일일 안전점검 지속(2월~현재) 및 ▲ 러시아 공습 대비 대피계획 현행화(9-10월), ▲ 방사능 유출 대비 보호장구 교민 배포(10월말) 등



< 우크라이나 우리국민 대피철수 지원 언론기사 >

- (해외 위난 상황 신속 대응) 장관, 해외 발생 주요 사건·사고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여부 신속 파악 및 대응 철저 지시(220여회)
 - 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은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해외 사건·사고 발생 상황, 우리국민 피해 여부 등을 파악하여 장·차관 앞 상황 보고
 - ※ ▲우크라이나 사태, ▲대만 선박사고, ▲북미·유럽 지역 총격난사 사건 관련 혐오범죄, ▲기니만 해역 해적피해 상황, ▲통가 해저 화산분출 및 쓰나미 관련 대응, ▲태풍(힌남노, 이안 등) 이동 경로상 재외국민 피해 상황, ▲지진 발생지역 피해 상황 등
- (재외국민보호 위원회* 주재) ▲ 2022.8월 「재외국민보호 집행계획 (2021-2022)」에 대한 2022년 상반기 이행점검 회의(서면), ▲ 12월 및 금년도 이행실적 평가 및 차년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재외국민 보호위원회 개최(12.20., 예정)

- 영사조력법에 따라 2021.10월 수립된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2021-2025)의 연도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간 계획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재외국민보호체계 강구
 - * 외교부장관(위원장) 소속 '21.10.19. 발족한 재외국민보호 정책 심의·조정 협의체로서,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등 13개 정부부처 차관급 위원 및 민간 위원 6명으로 구성
- (이태원 사고 수습 대응) 외국인 사상자 수습 및 지원을 위해 10.30.(일) 장관 주재 긴급대책회의를 4차례 주재
 - 최초 회의시 사고 현장에 급파한 직원을 통해 ▲외국인 피해 현황 파악, ▲주한 공관에 외국인 사상자 명단 및 소재 신속 통보 지시
 - 이후, ▲외국인 사상자-외교부 담당 직원 1:1 전담 배치, ▲법무부와 협업을 통한 유가족 입국 편의 제공, ▲해당 주한공관 앞 외교장관 명의 위로 서신 발송 등 후속 지시
-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강화) 장차관, 지역별·분야별·세대별 네트워크 강화 통해 재외동포 정부정책 추진 방향 설명 및 소통 노력 강화
 - 장관, 제8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동포 정치인들의 지원 당부
 - 장관, 2022 세계한인회장대회 참석을 통해 정부 외교정책과 재외동포 정책을 설명하고, 동포사회와 모국 발전에 헌신해 온 한인회 역할 평가 및 동포들의 단합 당부
 - 제2차관, 제24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석을 통해 재외동포 지원 정책 설명 및 차세대 동포 격려와 역할 당부
- (양자경제외교 현장 지휘) 장차관, 우리의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 국가들과 국가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경제협력 확대 노력 경주
 - 장관, 한미외교장관회담 방미(6.12.-15.) 계기 국무·상무장관 연쇄 면담하고 한미 경제안보 '2+2' 협의체 추진 기반 마련
 - 장관, 한·중 외교장관회담(8.9, 칭다오)에서 ▲공급망 관리, ▲문화 콘텐츠 교류 활성화 등 실질협력 강화 방안 논의

- 장관, 新경제안보 협력 파트너로 주목받는 몽골(8.29), 베트남(10.18) 외교장관 등 고위급 인사와 회담, 광물·자원 협력을 포함하여 경제·개발·여타 실질 협력 분야 적극 추진에 합의
- 2차관,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을 위한 방미(9.19.-24.) 및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E, 12.12.) 개최 통해 양국간 경제 현안 협의 및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미 행정부·의회 교섭 실시
- 장관, 취임 이후 주요국 방문 계기마다 「교민·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우리 교민·기업인들과 적극 소통하고 코로나19 상황 속 통관·인허가 절차 지연 등 애로사항 해소 노력 경주
 - * ▲재중국 교민·기업인 간담회(8.9), ▲재몽골 교민·기업인 만찬 간담회(8.28), ▲재베트남 교민·기업인 대표 조찬 간담회(10.18) 등
- 외교장관·2차관이 다자경제협의체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요 파트너국가 및 기관들과 적극적인 소통 주도
 - 장관, △G20 외교장관회의(7.7-8, 발리) 참석 및 10차례 양자·소다자 회담 실시(EU, MIKTA, 호주, 인도네시아, 중국, 스페인, 독일, UAE, 한미일, 인도)를 통해 양·다자협력 강화 △OECD SEARP 포럼 참석(10.17, 영상 메시지)을 통해 OECD SEARP 전임의장국으로서 기여 지속
 - 2차관, △ESCAP 총회 참석(5.23, 영상 메시지)을 통해 고위급 관여 지속,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에 참석하여 다자무역체제지지 및 지역경제통합 논의 강화 등 금년 APEC 성과물 도출에 기여
- 장·차관, 각종 고위급 면담 계기시 우리 원전의 우수성 홍보 및 우리 업체의 진출 지원 요청으로 적극적인 원전 수출지원 외교 전개
 - 장관, ▲폴란드 외교장관 회담(9.19), ▲체코 외교장관 회담(9.19), ▲영국 외교장관 회담(9.28), ▲한-남아공 장관급 공동위(10.11) 등 11회 실시
 - 차관, ▲주한체코대사 면담(8.5), ▲네덜란드 총리실 국가안보보좌관 면담(9.30) 등 실시

- 장·차관, 한미 원자력 분야 고위급 협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 (5.21)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 협력 강화 방안 논의를 통해 한미 원전동맹 강화 모멘텀 유지
 - 장관, ▲한미 외교장관 회담(6.13), ▲에너지부 장관 면담(6.13) 등 실시
 - 차관, ▲미 국무부 부장관 면담(6.7), ▲미 정무차관 면담(7.27) 등 실시
- 장·차관, 국제행사, 고위급 방한, 양자회담 등 고위급 외교 계기 적극적으로 2030 세계박람회 지지교섭 실시 및 부처간 협업 노력
 - 아세안·G20 외교장관회의·유엔총회, 중남미·중앙아·태평양도서국 지역 포럼 개최, 외교장관 방한 등 각종 외교 계기에 장·차관 등 외교부 고위급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지교섭 전개
 - 장관, 유관기관(대통령실, 산업통상자원부, 부산광역시,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포함한 유치교섭 점검회의를 정례화(9.26., 11.2., 12월중 예정)하고 지역별 공관장회의를 개최하여 유치교섭 현황을 점검하고 교섭 방안 논의

④ 갈등·리스크 예방 등 위기관리 노력

- (선제적인 현지 안전점검) 소요사태·정정불안 지역에 대한 재외 공관 대응 태세 점검
 - ▲기니만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공관장 회의(4.4-4.6, 가나), ▲에티오피아 북부 무력충돌 사태 관련 우리국민 보호·안전대책 협의(4.7-9, 에티오피아), ▲케냐 대선 후 소요사태 발생 관련 현지 점검(7.10-12, 케냐), ▲재외국민 보호 대응 현황 점검(7.13-16,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재외동포영사실장-에티오피아 외교차관 면담(4.8.)



케냐 거주 우리국민 대상 안전간담회(7.11.)

- (해외 우리국민 환자 국내 이송체계 점검) 주태국대사관-태국한인회와 3자 협력 MOU를 체결한 현지 병원(사마티벳, 메디파크) 방문(9.18.-21., 태국) 및 진료시설 시찰, 우리국민 환자 이송 관련 신속한 협조 당부
- (해외 활동 선교사 안전관리) 선교단체 안전간담회 개최(9.1., 12.1.)를 통해 ▲해외 선교 활동 안전강화 방안논의, ▲현지 정보 제공 및 안전유의 당부, ▲국가별 선교사 현황, ▲공관-선교사간 연락·협조체계 유지 당부

* 한국위기관리재단,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문체부, 국정원 등 관계부처 및 주요 선교단체 참여

- (여행업계와의 안전여행 협력) 코로나19 방역정책 완화에 따른 해외 여행객 수요 증가*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여행업계간 안전간담회 개최(9.30.)

* 해외출국자 수 ('21년) 122만명 → ('22.8월) 273만명 (출처: 한국관광통계)



정부-선교단체 안전간담회(9.1.)



정부-여행업계 안전간담회(9.30.)

- (태국 대마 합법화 관련 대응 강화) ▲태국 관광체육부 차관보 및 외교부 동아시아 4과장 면담(9.18.-21.)을 통해 우리 국민 태국 방문시 의도치 않게 범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태국 정부의 관심과 협조 당부, ▲국내 여행업계 대상 예방 안내문 배포(9.16.) 및 홍보 협조요청(9.30.), ▲식약처, 검찰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 실무회의 개최(9.27.), ▲국무조정실 주관 마약류 대책협의회 참석(10.13.), ▲해외안전여행 및 공관 홈페이지 안전공지 게재(수시), ▲태국 방문객 대상 해외안전로밍 문자 발송(6.28.~), ▲YTN, KBS 등 주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수시)



태국 대마 예방 홍보 안내문

YTN 언론 홍보 활동

- 재외동포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책 추진 갈등·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내국인의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이해 제고 노력 실시
 - 특정 지역 동포에 대한 편견 등 포함 내국인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 국내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주제 관련 이해교육** 실시
 - *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조사 연구용역 실시
 - ** (상반기) 대학교 12개교 23회, 중학교 4개교 4회 / (하반기) 대학교 10개교 17회, 중학교 6개교 8회 교육 실시
- 안보·기술·경제가 융합된 경제안보 이슈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외교센터」를 개소(5.30.), 우리 경제·산업에 영향을 미칠 리스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 미중 전략 경쟁 下,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품목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해 ▲美 주도 소다자 협의체 적극 참여 및 ▲중국과도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 양자 차원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
 - ▲공급망 장관회의(7.20.)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9.8-9),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장관급 회의(9.23),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작업반(Fab4) 예비회의(9.28) 등 美 주도 소다자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공급망 복원력 강화 방안 논의
 - ▲한·중 외교장관 회담(8.9), ▲제26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 회의(7.14), ▲제26차 한·중 경제공동위(11.24) 등을 통해 중국과도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지속 소통 및 협력 방안 모색

- 우크라이나 재건 및 북한내 코로나19 확산에 등에 대한 우리 기여 의지 표명을 위해 다보스포럼 참석 계기 나경원 대통령 특사, 우크라이나 수석부총리, 주요 국제기구(ICRC, GAVI) 수장 면담
- 우크라이나 사태로 G20 내부 갈등·대립이 지속되는 상황 하, 적극적 양자·소다자·다자협력 지속을 통해 국제협력 견인
 - 세르파·부세르파 회의 및 문안협상 회의, G7 국가 등 각 G20 국가들과 지속 소통, 외교장관회의 등 활용

⑤ 외부 지적사항에 따른 정책개선 노력

- (피란 고려인 동포 지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려인 동포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피란 동포들을 위한 입국·체류 지원과 현물 지원 실시
 - (입국·체류 지원) ▲사증 발급 대상 확대 및 발급 간소화 ▲여권 미소지자 여행증명서 발급 ▲현지 안정화 시까지 국내체류 허용 등
 - (현물 등 지원) 피란 고려인동포에 대해 2만불 긴급지원 실시
 - (국내 정착) 국내 정착 고려인 동포가 처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소통* 강화
 - * 국내 정착 고려인 지원을 위한 채용(간병인) 간담회 실시(7.6) / 고려인 협회, 단체 통한 실태 파악 노력(수시)
-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한 부처 간 정보 칸막이 제거) 외교부(EWS)에서 수집한 해외 공급망 리스크 관련 사항을 기재부(공급망관리기획단) 및 소관 관계부처와 실시간 공유되도록 문서 배포 방식 체계화*
 - * 공급망 리스크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배포방식 및 수신부서 지정

4 주요 업무 성과

1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

□ 주요 성과

- 해외안전지킴센터 상시(365일, 24시간) 가동, 신속대응팀 파견,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해외 재난 및 사건·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재외국민 위난 상황 수습

<22년도 주요 사건사고 대응 성과>

- 카자흐스탄 비상사태(1월)
 - 주재국내 국가비상사태 선포(1.5~19.) 직후 우리 국민 37명이 탑승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도착한 알마티 공항이 무장 시위대에 의해 점거
 -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가동, ▲1.12. 우리국민 구호용 특별수송기 운항허가 취득, ▲1.13. 알마티 공항 운영 재개 및 **우리국민 43명 무사 귀국**
- 우크라이나 사태(2월~현재)
 - ▲재외국민대책본부 가동(1월), ▲장관 주재 우크라이나 및 인접국 공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신속대응팀 파견(2회),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 ▲임시사무소(폴란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체르니우치) 3개소) 운영 및 대피 우리국민 지원
 - **체류 국민 560여명 중 530여명 긴급 대피철수 완료**, 잔류 국민(30여명) 일일 안전점검 실시 중
- 대만 우리 선원 탑승 선박 침몰 사고(4월)
 - 4.7. 시에라리온 선적 교토1호 침몰로 우리 선원 4명 사망 및 2명 실종
 - 사고 접수 직후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가동 및 4.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확대 운영
 - ▲양국 해상 구조당국 합동수색, ▲희생자 가족 지원반 운영 및 관계부처 정례 합동 브리핑, ▲외교부·해수부 합동 출장단 두바이 소재 선사 방문(6.8) 등 **사고 수습 지원**
- 아이티 우리국민 피랍(5월)
 - 5.5. 우리 국민 1명이 현지 조직에 의해 피랍되는 상황 발생
 -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가동, ▲본부-공관 대책회의(5.8., 5.13.) 개최 등 석방협상 지원 결과 **5.18. 피랍 14일차 무사 석방**
- 세부공항 우리국적기 불시착 사고(10월)
 - 세부 막탄공항 대한항공 여객기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 발생
 - ▲재외국민보호대책반 운영, ▲대한항공 및 국토교통부 등과 협조체계 구축, ▲신속대응팀 인력 파견(10.27.~31) 등을 통해 사고 수습 지원
- 서아프리카 우리 선원 탑승 선박 억류 사건(11월)
 - 기니만 해역에서 우리국민 2명 포함 선원 19명이 탑승한 선박이 해적에게 억류
 - ▲위기 경보(심각) 발령 및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가동, ▲본부-공관 상황평가회의 및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 ▲수색 및 구조를 위한 기니만 연안국 및 우방국과의 협조 등을 통해 우리 선원 전원 무사 억류 해제
- 기타 대응 사례(상시)
 - ▲기니만 해역 해적피해 예방 지시(1.12.), ▲통가 해저 화산 분출 및 쓰나미 관련 대응(1.16.), ▲서아프리카 해역 우리국민 승선 선박 해상강도 사건 대응(1.26.), ▲케냐 테러 첩보 전달(2.22.), ▲일본 미야기현 앞바다 규모 7.3 지진 관련 안전 확인(3.16.) ▲태풍 '힌남노' 일본 후쿠오카 상륙 관련 안전 확인(9.4.), ▲대만 타이동현 규모 6.4 지진 관련 안전 확인(9.18.), ▲허리케인 '이안' 美 플로리다 상륙 관련 안전 확인(9.27.), ▲대만해역 우리 유조선 침몰사고 대응(10.15.)

○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재외국민 안전확보 노력

- (우크라이나 잔류 우리 국민 안전 확보) 2.24. 교전 발생 이후
 - ▲우크라이나 잔류 우리 국민 및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통해 입국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일 안전상황 점검 지속 중(1.26.~),
 - ▲자포리자 원전 방사능 유출 위험 대비 우리 국민 안전조치 강화(9.18.) 및 방사능 보호장구 등 지원(10월말), ▲크림대교 폭발에 따른 키이우 등 주요 도시 공습(10.10.~) 대비 교민합동 대피훈련 실시 등 잔류 우리 국민에 대한 각종 위협을 대비한 제반 조치 지속 중

*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 국가에 대해 영주권자 등 필수교민에 대해 방문타당성 및 안전대책 등을 관계부서·기관과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단기방문 허가

- (러시아 제재로 인한 우리 국민 불편 해소 지원) 대러 제재로 인한 한-러 직항노선 중단 및 금융거래 제한(3월초~) 등에 따라 ▲해양수산부, 질병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코로나19 상황으로 중단되었던 동해-블라디보스톡간 여객선 운항 재개(3.30.), ▲현지 우리 국민의 생활비 및 유학자금 조달을 위한 신속해외송금 제도 한시적 확대 시행(3.21.~)* 등 러시아 체류 우리국민의 불편 해소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9.21. 러 정부의 예비군 동원령에 따른 반대시위 격화로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 유의 당부 등 현지 상황에 따른 우리국민 보호 조치 시행 중

* 현행 \$3,000에서 최대 \$8,000 증액

		<p>러 예비군 동원령 관련 신변 안전 공지</p> <p>2022. 9. 22(목)</p> <p>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9.21(수)부로 예비군 동원령이 발효됨에 따라 러시아 각 지역에서 시위가 발생하고 있어 재외국민들의 신변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러시아 국외지역 우리 재외국민들에게는 집합 참가 및 집합 장소 배정을 절대 불가하여 주시고 각종 불합리한 방문 강제 등 본인 및 가족의 신변안전에 최대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향 중 주변에서 소요스런 시위 또는 시민들의 불법 행동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현장을 이탈하시고 동향사안에 신중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피소 시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직권 중항 시 교행명규를 철저히 준수(자랑 내 몰수 서명 및 인질감비 구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우크라이나 교민 비상키트 배포 (2월 중순)</p>	<p>동해-블라디보스톡 여객선 재개 (3.30.)</p>	<p>러 예비군 반대시위 교민 안전공지 (9.22)</p>

- (코로나19 관련 중국 봉쇄지역 우리국민 지원) 상하이, 북경, 하이난 등 도시 봉쇄(4월~9월)가 단행된 중국 일부 지역내 우리 국민 지원
 - ▲ 우리 국민 귀국 허가 취득 및 공항 이동 가능한 교통편 등 지원, ▲ 질병관리청 등 유관부처 협조 하 중문 PCR 검사 결과 인정, ▲ 필요시 긴급 생필품·구호품 지원 등
- (혐오범죄 대응역량 강화) 북미·유럽 지역의 혐오범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현지 공관별 범죄예방 및 대응강화 방안 수립
 - ▲ 미주(5월) 및 유럽(7월) 지역 공관별 대책 수립·시행, ▲ 혐오범죄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6.2.), ▲ 미주(대면) 및 유럽(화상) 지역 공관 대책회의 개최(7월), ▲ 혐오범죄 국내 전문가 간담회 개최(8.11.), ▲ 유럽·아프리카 지역 혐오범죄 대응 방안 협의(11.7.)
 - ※ 11.18.(금) 기준 우리국민 혐오범죄 피해는 총 18개국 55건 확인
 - 미국 15건, 캐나다 3건, 호주 3건, 영국 3건, 독일 13건, 네덜란드 3건, 프랑스 3건, 이탈리아 2건, 핀란드, 포르투갈, 그리스, 스위스, 카자흐스탄, 남아공, 뉴질랜드, 요르단, 우간다, 카타르 각 1건



북미 지역 혐오범죄 대책 회의(7.8.)



유럽 지역 혐오범죄 대책 화상회의(7.27.)

- (이태원 사고 외국인 사상자 지원) 이태원 사고 초기 외교부 해외 안전지킴센터 직원 2명을 사고 현장에 급파(10.30.(일) 새벽~현장지휘본부 해체시)하고, 외교부 1:1 전담 직원 중심으로 서울시복지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현장 방문, ▲시신 확인, ▲유가족 입출국, ▲장례 및 운구 절차 안내 등 윈스톱 지원 지속
 - 전담 직원은 운구 과정에서 공항·항만까지 동행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현지 도착시 우리 공관원이 영접하며 유가족을 위로 중
 - ※ 11.13.(일) 기준, 사망자 26명 중 24구 운구 완료(2구 국내안치), 전원 지원금 지급 완료

□ 장기적 효과

- (법 정부차원의 재외국민보호 정책 시행) ▲ 21-22년도 재외국민 보호 집행계획 상반기 이행점검 서면회의 개최(8월)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 정책 관련 관계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유지, ▲ 금년도 집행 계획 이행점검 평가 및 차년도 재외국민보호 집행계획 수립(12월 예정)을 통한 재외국민보호 정책 주관부처로서의 역할 강화 및 체계적인 영사조력 제공에 기여
- (해외위난 신속대응 체계 강화)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 신속대응팀 파견, ▲ 분기별 본부-공관 합동 신속대응팀 모의훈련, ▲ 공관별 위기대응 도상훈련 실시
 - (신속대응팀 파견)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현지 교민 철수 및 대사관 업무 지원(1차 1.30.-2.11., 2차 2.13.-3.2.), ▲ 필리핀 세부 공항 활주로 이탈사고 대응 지원(10.27.-31.)
 - (신속대응팀 모의훈련) ▲ 일본 요코하마 지진 발생 상황 가정 훈련(3.30.), ▲ 미국 호놀룰루 화산폭발 가정 훈련(6.28.-30.), ▲ 네팔 지진 및 조난사건 발생 가정 훈련(11.7.-9.), ▲ 미국 델러스 공항 항공기 충돌 사고 대응 훈련(11.15.-16.)
 - (위기대응 도상훈련) 공관별 현지 환경에 맞는 재난 시나리오 가정, 한인회 및 현지 지상사 등 민간 참여자와 함께 ▲ 위난상황 대비 도상훈련, ▲ 현지 협력체계 점검, ▲ 현장조치 매뉴얼 개선
 - ※ 12.7.(수) 기준 156개 공관 실시 완료



〈신속대응팀 파견〉
필리핀 세부 공항 사고 대응
(10.27.-31.)



〈신속대응팀 모의훈련〉
호놀룰루 화산폭발 가정 훈련
(6.28.-30.)



〈위기대응 도상훈련〉
주후쿠오카총영사관 지진-해일
발생 상황 가정 훈련(10.31.)

○ (해외안전담당 영사 대응역량 제고) 지역별 사건사고 현안 토의를 통한 재외공관 애로·건의 사항 청취 및 사건 처리 경험 공유를 통한 대응 역량 강화, 본부 재외국민보호 정책 환류

- ▲ 동남아(4.22., 싱가포르), ▲ 서남아(5.31., 태국), ▲ 일본(6.27.), ▲ 태평양(9.26., 뉴질랜드), ▲ 중동(10.25., 화상회의) ▲ 유럽·아프리카(11.7-8., 체코), ▲ 중남미(11.14., 미국), ▲ 북미(12.15.)



○ (사이버교육과정을 통한 영사조력법 이해 제고)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 직원 대상 재외국민보호 업무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함으로써 영사조력법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여 적극적인 영사조력 제공 노력
 ※ 영사조력법 주요 내용 및 시행 전후의 변화, 영사조력법 실제 적용사례 설명



< 사이버 교육과정 자료화면 >

○ (「주재국 법령정보」 번역 사업을 통한 우리국민 정보 제공 확대)

- 영사조력법 시행에 따라 재외공관은 변호사선임 절차, 형사재판 절차, 범죄피해구제 등 관련 정보를 우리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며, 코로나19 상황 하에 비대면 정보전달 필요성 증대
- 24개 국가·지역 35개 공관에서 번역사업 추진 중이며, 번역문은 공관 홈페이지 게재 및 책자·안내문 등으로 제공 중

○ (맞춤형 홍보 및 국민 참여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 우리국민들의 해외 안전여행 의식 제고를 위해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다양한 홍보 채널 활용, ▲해외 안전정보 수시 제공 등 대상별 맞춤형 홍보 활동 지속

- (참여형 프로그램) ▲해외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3.2~4.29. 총 99편 응모) 개최 및 우수작 12편 대상 시상식 개최(5.31, 12명),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발족(9.28. 60명 선발, 온라인 콘텐츠 제작 68건 및 대외 활동 7건)

* 2010년부터 추진해온 해외안전여행 서포터스 사업은 2020-21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잠정 중단되었으나, 올 하반기 사업 전면 재개



해외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5.31.)



해외안전여행 서포터스 발대식(9.28.)

- (다양한 홍보채널 활용) 우리 국민의 해외안전 인식 제고의 일환으로 기존의 대중매체 및 오프라인 홍보방식을 내실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2021년부터 3대 홍보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온라인·뉴미디어 홍보를 대폭 강화

① 대중매체 및 오프라인 홍보 : ▲YTN 「해외안전여행정보」 83개 영상 제작 (매월 240회 송출, 유튜브 조회수 약16만), KBS월드 라디오 송출(42건), 국민일보 「해외선교·성지순례 안전기상도」 (23건), ▲인천공항 전광판 광고 (8~9월, 1일 150~250회), ▲서울·경기 버스 스크린 홍보 동영상(9월, 서울 버스 2천대, 경기버스 8천대), ▲아시아나항공기 기내 스크린 광고(7~9월, 42개 노선 3,3681회) 및 아시아나 항공기 탑승권 후면광고(7월~ 50만장)

② 테마형·공감형 홍보 : ▲사건사고 유형별 대응요령 홍보 영상6개 제작 및 게재(3~11월, 이경규 출연, 유튜브 조회수 약 1,960만회), ▲댓글이벤트 (3-6월, 댓글 1,362개), ▲제2회 대국민 해외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 수상작 홍보(유튜브 조회수 약 770만회)*, ▲영사콜센터 무료전화 앱 홍보 영상 제작 및 게재(7~11월, 김병지 출연, 유튜브 조회수 약 380만회)

* 제1회 대국민 공모전 수상작 홍보 영상(2021.11월) 게재 이후 금년도 유튜브 조회수 약1,600만회 증가, 누적 유튜브 조회수 3,200만여회 달성



사건사고 대응 요령 홍보영상



YTN <해외안전여행정보>



인천공항 전광판 광고 (8.1.-9.30.)



제37회 국제관광전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6.23.-26.)

③ 해외안전여행 정보 제공 : 해외 여행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지역에 대한 위험 수준과 행동 요령을 안내함으로써 해외 사건사고 예방

- (여행경보 발령)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른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 해제(4.14) 및 국가별 상황에 따른 여행경보 정기조정(8.22, 11월 예정)
- (여행금지 제도) 여권정책심의위원회 개최(7.7.-14, 12.16.-22.)를 통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국가(지역) 대상 예외적인 방문·체류가 가능하도록 정하여 우리 국민의 피해 예방
 - * 현행 여행금지 국가(지역) : 이라크·우크라이나·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예멘·시리아·리비아 등 7개국 및 필리핀·러시아·벨라루스 일부 지역('22.8.1.~'23.1.31.)
- (각종 여행정보 안내) ▲코로나19 관련 국가별 입국 조건 안내 (매일 1회 업데이트 중), ▲해외 출국자 대상 로밍 문자 3,790만건 발송

< 2022년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국가별 여행경보 단계 발령 내역 >



전세계 특별여행주의보 발령(~4.13.)



국가별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장기조정(8.22.)

22.1.14.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181개국)
22.1.25.	우크라이나 남동부북부지역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추가 발령
22.2.12.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긴급 발령
22.2.14.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180개국)
22.2.24.	러시아 내 우크라이나와의 접경 지역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추가 발령
22.2.25.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와의 접경 지역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발령
22.3.1.	벨라루스 전 지역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확대 발령
22.3.7.	러시아 및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
22.3.13.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179개국)
22.3.15.	에티오피아 일부 지역 여행경보 특별여행주의보로 하향 조정
22.4.13.	각 국가·지역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조정, 시행 - 23개국 1단계, 129개국 2단계로 하향 조정, 26개국 특별여행주의보 유지
22.4.27.	엘살바도르 전 지역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22.5.20.	스리랑카 전 지역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22.5.24.	체코 전 지역 여행경보 1단계 발령
22.6.23.	에콰도르 여행경보단계 특별여행주의보 상향 조정
22.8.22.	국가별 안전 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정기조정, 시행 - 30개국 하향 조정, 4개국(일부지역) 상향 조정, 20개국 특별여행주의보 유지
22.11.29.	국가별 안전 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정기조정 - 33개국 하향 조정, 2개국(일부지역) 상향 조정, 12개국 특별여행주의보 유지

② 재외동포 지원 강화

□ 주요 성과

○ 신정부 출범 계기 재외동포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모국과 재외동포사회의 유대 강화

- (대통령의 재외동포 메시지 발신) 신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방향 등을 동포들에 설명*하여 국정 관심을 제고하고, 대통령 취임 경축 재외동포 초청 리셉션 개최**를 통해 재외동포와 모국이 상생 발전하는 실질적 정책 추진 약속 및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

* 재외공관을 통해 한인회, 한글학교, 민주평통 등 전세계 약 3,000개 동포단체 등에 대통령 메시지 전달(역대 최초)

** '22.5.11.(수) 재외동포 530여명, 국내인사 60여명 참석

- (동포와의 직접소통 강화) 대통령* 및 총리** 해외 순방 시 동포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지지 요청, 한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로서의 동포사회 역할 당부

* 대통령 총4회 (NATO정상회의 계기 스페인(6월) / UN총회 계기 토론토, 뉴욕(9월) / ASEAN정상회의 계기 캄보디아(11월))

** 총리 총8회 (중남미 3개국 공식 방문 계기 휴스턴,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애틀랜타(10월) / APEC정상회의 계기 태국(11월)) / 아프리카 2개국 공식 방문 계기 모잠비크, 가나(12월))



- 통합적·체계적 재외동포정책 추진과 부처별 산재된 재외동포 지원사업 통합 시행을 위한 기반 마련
 - (재외동포청 설치 준비) 730만 재외동포 대상 지역별 동포사회에 걸맞은 맞춤형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범정부차원의 원스톱 영사·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적 업무 전담기구로 재외동포청 조기 설치 추진
 - ※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단장으로 한 재외동포청 신설 TF 설치·운영('22.11.1.~)
 -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 개최) 중장기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 청취 및 전문가 자문을 위한 학술포럼 개최(12.20)
 - ※ 한국이민학회 및 재외한인학회 공동주관, 재외동포재단 후원 등 재외동포 유관 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 (재외동포정책 대국민 홍보) 재외동포정책 교육 및 홍보동영상 제작·활용을 통해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 제고
 - (중장기 재외동포정책 수립 연구)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시 재외동포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중장기 재외동포정책 수립 연구용역 실시('22.6월~'22.12월)
- 지역별·분야별·세대별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을 위한 모국과 동포사회의 네트워크 강화
 - (제8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13개국 70여 명의 한인 정치인* 초청, 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한인 정치인의 역할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지지세 결집 당부(8.16.~8.19., 장관 참석)
 - * 연아 마틴 의원(캐나다 최초 한인 상원의원), 멜리사 리 의원(뉴질랜드 첫 한인 국회의원) 등
 - (제24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정치·경제·법률·언론·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18개국 75명의 세계 한인차세대를 초청, 상호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9.4.~9.8., 총리 및 2차관 참석)
 - ※ 국무총리 간담회, 제2차관 주최 오찬 등을 통해 동포 지원 정책 설명, 차세대 동포 건의사항 청취 및 격려, 차세대 동포들의 주류사회 진출 당부
 - (제16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22 세계한인회장대회) 64개국 350여 명의 전 세계 한인회장 초청,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기반 마련, 재외동포와 모국과의 연계 강화(10.4.~10.7., 총리, 장관 참석)
 - ※ 장관, 환영 오찬 등을 주최하고 한인회 역할 평가 및 동포사회 구심점 역할 당부

- (제20차 세계한상대회 개최) 48개국 2,000여 명의 한상들이 참여하여,
 - ▲기업 상담 455건 ▲기업 간 MOU 체결 4건 ▲3억 5,970만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 상담 ▲48개국 59개 한상 기업에서 국내 청년 70명 인턴 채용 확정 등 전세계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 강화 및 한인 비즈니스 활로 확대(11.1.~11.3.)

※ 장관 축사 등을 통해 세계 한상을 통한 지구촌 한민족 경제공동체 강화 당부



○ 차세대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 역량 강화 지원

- (한글학교 지원) 112개국, 158개 공관에 등록된 1,435개 한글학교 (학생 수 85,203명, 교사 수 13,190명) 운영 지원*을 통해 차세대 재외 동포의 한글·역사·문화 교육 지원

* 1개교 당 약 10백만원 수준 운영비 지원과 함께 역사문화 캠프 등 맞춤형사업 지원 실시

- (한글학교 교사 역량 강화) ▲한글학교 교사 온라인 연수* ▲CIS 지역 한국어교사 온라인 연수** ▲한국어교원 자격 등 취득 지원*** 을 통해 한민족 정체성 교육자 역량 강화 지원

* 50개국 450여명 한글학교 교사 온라인 참가(1차 8.15~8.21., 2차 8.24~8.30.)

** 5개국 54명 한글학교 교사 및 현지학교 한국어 교사 참여(7.25.-8.26.)

*** 학사 학위 과정 173명 /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115명 / 재외동포재단 한글학교 교사 인증과정 약 720명

- (교육기자재 및 콘텐츠 보강) 중국·CIS·일본 지역 교육기자재 지원을 통해 민족교육 여건 개선 및 대면 교육이 어려운 지역 차세대 동포가 한민족 정체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콘텐츠 강화

※ 스테디코리아 온라인 포털에 온라인 수업 보조자료, 온라인 한글 교육 및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탑재



한글학교 교사 온라인 연수
(1차 8.15~8.21, 2차 8.24~8.30)



CIS지역 한국어교사
온라인 연수(7.25~8.26)



주뉴욕(총)
재미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
제10회 역사문화체험캠프(8.20)

○ 차세대 인재 발굴·지원을 통한 미래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주역 육성

- (장학사업) 향후 동포사회의 주역으로서 차세대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중국·CIS지역 현지장학생** 등 선발·지원

* 국내 대학 학사, 석·박사 과정 수학을 희망하는 재외동포 우수 학생 100명(학사 25명, 석·박사 75명)

** 중국·CIS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우수 동포 대학생 140명(중국지역 70명, CIS 지역 70여명)

- (교류사업)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 등을 통해 모국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차세대 동포와 모국 간 네트워크 강화

* 53개국 1,300여명 국내 및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참여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
(7.14~8.10)



주선양(총)
현지장학생 온라인 간담회(9.20)



주사할린(총)
현지장학생 장학금 수여식(10.26)

○ 강제이주 강제동원 등 역사적으로 피해를 겪었던 지역의 동포에 대한 지원

- (고려인동포) 「고려인동포법」에 따른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과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지원 등을 통해 동포 권익신장 제고

·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상황에서 고려인에 대한 피란 지원*, 현지 잔류
동포 긴급 현물 지원(2만불) 등을 통해 인도적 지원 실시

* ▲사증 발급 대상 확대 및 발급 간소화 ▲여권 미소지자 여행증명서 발급 ▲
현지 안정화 시까지 국내체류 허용 등(국회 간담회, 관련 부처 협의 등 수회 개최)

- (사할린동포) 「사할린동포 지원법」(21.1월 시행)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되었던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 지원* 추진(지원 대상 확대 등 법률 개정 문제 국회와 협의중)

* (외교부 법무부 복지부 국토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대한적십자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협업 실시)
 총 350명 대상 ▲영주귀국초기정착 ▲국적판정·회복 ▲임대주택 및 특별생계비 등 지원
 ※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 영주귀국 수: (20년) 0명 -> (21년) 334명 -> (22년) 350명 대상 추진 중
 ※ 영주귀국자 등 국적판정 실적: '22년 44명 국적 확보



○ 해외입양인 및 귀환한 다문화 가정 자녀 등 소외되기 쉬운 동포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보건복지부-외교부-경찰청간 협업 하에서 한인입양인 가족 찾기 실시(재외공관 통해 유전자 채취·등록 등 중점 협력, 62건 유전자 채취)

※ 미국, 캐나다, 유럽 지역 재외공관을 통해 홍보를 강화, 입양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차세대 해외 입양동포 모국 방문) 14개국 150여명의 입양동포와 자녀 등 동반가족이 참가하여 국적·가족찾기사업·한국어 교육 등 정보를 안내받고 한국문화체험 등을 통해 모국과의 유대 강화(10.12~10.17.)

※ 재외동포영사실장 참석, 해외 입양동포 격려 및 가교역할 당부

- (귀환한 한-베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 중 혼인관계 해소 후 자녀와 베트남으로 동반 귀국하는 사례 증가에 따라 베트남 내 '한-베 함께 돌봄센터*' 지원

* 한-베 자녀들의 안정적 현지 정착을 위한 법률상담, 한-베 자녀 보호자 네트워크 구축, 한-베 자녀 정체성 정립을 위한 한글 교육 등 지원



□ 장기적 효과

- 통합적·체계적 재외동포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통해 맞춤형 재외 동포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별·분야별·세대별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행사를 통해 모국과 동포사회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모국과 재외동포사회의 상생 발전 실현
 - 재외동포청 설치로 맞춤형 재외동포정책 시행 및 one-stop 영사·행정 서비스 제공 가능
 - 모국과 동포사회 간 활발한 교류 속,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를 통해 동포사회가 한국과 세계 각국을 연결하는 가교역할 수행
- 차세대 재외동포 교육·지원을 통해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의 미래 주역을 양성하고, 소외되기 쉬운 동포들에 대한 사업 발굴·시행을 통해 모국에 대한 자긍심 고취
 - 차세대 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통해 향후 차세대동포가 모국과 재외동포사회의 상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춧돌 역할 수행
 - 역사적으로 피해를 겪었던 동포 및 소외되기 쉬운 동포 대상 특별한 배려를 통해 인도적이고 포용적인 재외동포정책 실시

< 재외동포에 대한 대통령 메시지(3월) >

- 동포 여러분이 세계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대한민국이 나의 고국이라며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더욱 자랑스럽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로 거듭나겠습니다.
-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선거제도 개선, 국적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동포 여러분의 권익을 향상하고, 차세대 교육 강화 등 모국과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재외동포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③ 경제안보를 위한 양자·다자간 협력 기반 확충

□ 주요 성과

- (경제안보 현안 대응) 범정부 협업 下, 경제안보 현안에 선제적·능동적 대응 및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우리 기업·산업의 이익 보호
 - (IRA 대응)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 전기차 보조금 조항으로 인한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사입장국 중 가장 먼저 별도 양자 실무협의체 운영 ▲업계와 소통하며 재무부 하위규정 대비 입장 제출 ▲대의회 아웃리치 등 적극 대응중



장관 - IRA 관련 Ossoff 상원의원 통화(9.14.)



2차관 - IRA 관련 미 국무부 경제차관 면담(9.20.)

- (對中 수출통제) 美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관련, 국내 관계 부처와 협력 및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 1년 유예를 확보하여 기업 불확실성 제거 및 업계 피해 최소화
- (경제안보외교센터) 주요 경제안보 현안 모니터링 및 대응을 위한 「경제안보외교센터」를 개소(5.30.) 하고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외교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역량 강화 ▲경제안보 현안 및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유사입장국과의 협력 확대
 - * 최근 한-네덜란드 정상 공동성명(11.17.)에도 경제안보외교센터가 최초 명시
 - * ▲미국 국가안보전략 분석 ▲공급망 실사 관련 법제화 동향 등 주요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경제안보리뷰」 다섯 차례 발간



경제안보외교센터 개소식(5.30.)

연합뉴스 2022.10.12 01:01

외교부 "美와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영향 최소화 긴밀 협의해와"



美 對中 수출통제 대응 성과 관련 언론보도

- (IPEF 참여) IPEF 협상 관련, 5월 공식 출범 이래 외교부는 필러2와 필러3의 공동분과장을 맡아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공급망·디지털·탈탄소 등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역내 경제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rule-maker) 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
- (양자경제협력 심화) 미국·중국·EU 등 주요 경제파트너 및 광물 자원 등 분야에서 미래 투자 및 협력 잠재력이 큰 베트남, 몽골, 캐나다, 호주등과 활발한 경제협의를 통한 실질 경제협력 확대 및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 분야 공조체제 강화
 - (미국) ▲'22.5월 한미 정상회담 계기 NSC간 경제안보대화(7.7.) 출범을 통한 전략협약 강화 ▲美「인플레이션 감축법」, 공급망(핵심광물, 반도체, 배터리), 수출통제 등 효과적 경제안보 협의를 위한 한미간 다각적 협의체제 구축
 - (중국) ▲양국 정기항공편 증대를 통한 인적교류 회복, ▲금년 초부터 5년여 만에 중국 주요 OTT 플랫폼에서 한국 드라마 13편 및 영화 1편 방영, ▲1년여간 중단되었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재개되어 문화시장 등 서비스시장 개방 진전에 포석 마련
 - (일본) 日 국토성, 외무성 등과 긴밀한 협의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팬데믹으로 운항 중단(20.3월)된 김포-하네다 노선을 운항 재개(6.29.)함으로써 양국 수도를 연결하는 교류 증진의 교두보 마련
 - ※ 대통령, 한일 의원연맹 회장 면담시(5.11.) 한일관계 회복 의지 및 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김포-하네다 노선을 재개할 필요성을 강조
 - 한·일 외교장관회담시(5.9.) 등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노선 재개 필요성 제기
 - (유럽) ▲EU(제18차 공동위, 6.28) 및 우리와 공급망, 교역·투자가 긴밀한 ▲폴란드(제5차 경제공동위, 9.21) ▲네덜란드(제2차 경제공동위, 10.18)와의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품목 공급망 강화, 첨단기술 촉진·보호 등 경제안보 협력 심화, EU의 각종 경제·통상 입법 관련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 예방 노력 경주



제18차 한-EU 공동위(6.28.)



제19차 한·베 경제공동위(10.28.)

- (캐나다) ▲'22.9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경제안보 공조 강화를 위한 외교·산업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신설 합의 ▲핵심 광물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양국간 에너지 공급 협력 강화 ▲인공지능 연구개발 협력 MOU 체결을 통해 AI 협력 기반 마련
- (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등 경제안보 및 스마트시티 등 디지털 전환 분야 협력 강화 합의, ▲철도·공항·에너지 등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 및 우리 금융기관 진출 확대 기반 마련
- (몽골) ▲양국간 희소금속·광물 협력을 위한 희소금속 광물 분야 한몽 TF 및 「희소금속 협력센터」 추진, ▲한-몽 경제협력 제도화를 위한 「한-몽 경제동반자 협정(EPA)」 체결 협상 및 「투자보장 협정」 개정 협상 조기 개시 노력 경주
- (호주) 에너지·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 중장기 협력 기반 구축 달성 및 정상·장관 등 각급별*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간 상호호혜적 경제협력 강화
 - * (정상)당선인 - 호주 총리 간 통화(3.16) 및 NATO 정상회의 계기 한-호주 정상회담(6.28) / (장차관)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호주 외교장관회담(7.7), 호주 통상장관 방한(10.12-14) 등
- (기타) 인도, 뉴질랜드, 방글라데시, 태도국과의 고위급 교류를 통한 양자경제협력 심화
 - * ▲한-인도 외교장관 회담(2.21, 7.8), ▲한-뉴 정책협회의(7.19), ▲한-태도국 외교장관회의(10.26-27), ▲한-방 정책협의회(3.31) 등
- (우리기업 해외 진출 지원) 해외시장 개척·진출 및 기업 활동 애로 해소 지원
 - (수입규제) 「수입규제대책반」을 통해 ▲양자협약의 실시 및 공청회 참석 ▲정부입장서 및 서한 전달 등 수입규제 조치에 적극 대응

- 재외공관 기업지원 사업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 발간**을 통해 우리기업 해외진출의 나침반 역할 제공
 - * △재외공관 기업지원활동강화 사업(101개 공관 108개 사업), △해외진출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지원사업(28개 공관), △재외공관 법률자문서비스 사업(39개 공관)
 - ** 재외공관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주를 성공적으로 지원한 주요 사례(74건)를 모아 「2021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9월) 발간
- (유엔조달) 우리 기업의 유엔 조달시장 진출 3.2억 달러(역대 최대치, '21년 기준) 달성
- (방산수출) 주요국 방산당국·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세미나, 협의를 실시하여 방산협력 모멘텀을 가속화하고 폴란드(FA-50, K9 자주포 등), UAE(천궁II), 이집트(K9) 등 수출 성공에 기여
- (해외건설) 재외공관 「해외건설 수주지원 협의회」 운영 및 고위 관계자 면담 등 적극적인 외교 지원 결과, 카타르 산업도시 태양광 발전소 건설사업(6.4억불), 필리핀 남북철도 건설사업(15억불) 등 우리 기업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수주 성공
- (다자 경제협력 강화) 지정학적 갈등, 식량·에너지 안보 위기, 기후변화 등에 따른 복합적 국제경제위기 상황 하 글로벌 경제 협의체·플랫폼에서의 다자협력 기반 확충



G20 정상회의(11.15.-16.) 윤석열 대통령



G20 외교장관회의(7.7.-8.) 박진 외교장관

- G20 정상회의(11.15-16, 발리) 계기 국제경제 위기 상황 하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G20 차원 노력에 적극 기여하고, 주요국간 거시경제정책 공조 협의를 통해 민생경제 안정 효과 견인

- 2022 다보스포럼(5.23-26, 다보스) 계기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비전 및 주요 외교정책 방향 설명 및 지정학적 도전과 국제경제 리스크 극복, 다자주의 복원을 위한 우리의 역할 등 논의



- WEF 국가전략대화(CSD)(10.21, 화상) 참석을 통해 글로벌 기업 CEO들에게 우리 정부의 경제성장 비전을 설명하고, 투자환경 개선 및 사업 기회 확대 등 對한국 투자 매력 홍보
 - ※ 참석 기업들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운용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정부의 △국제협력 추진 방향, △기후변화 대응, △수소경제 운용 계획 등에 관심 표명
- OECD 각료이사회(6.9-10, 파리) 및 OECD SEARP 각료급 포럼(10.17, 하노이) 등 주요 계기 우리 정책 관심 사항 반영 및 아세안 국가 등 아웃리치 국가들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논의를 통해 우리의 비전 실천에 기여
- ESCAP 총회(5.23-27, 방콕/화상) 참석 및 한-ESCAP 연례협의회(9.28, 서울) 개최를 통해 對ESCAP 최대 기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
- APEC 정상회의(11.18-19, 방콕) 계기 ▲다자무역체제지지 및 지역경제통합 논의, ▲역내 연결성 강화,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에 관한 우리 기여 의지 강조
 - ※ 정상회의 외에도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고위관리회의 4회(2월, 5월, 8월, 11월), CBPR 관련 회의 7회 등에 참석해 적극적 의견 개진
- WTO각료회의(MC-12)(6.12-17, 제네바) 관련 우리 입장·제안 지지 확보 노력, 분야별 입장 정립 과정 및 회의 참석을 통해 주요국 입장과 해외 동향을 파악하고 WTO 각료회의 성과 도출에 기여

- **(대국민 홍보 강화)** 다자경제협의체 참여 계기, 언론 활동 및 SNS 홍보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 제고
 - ※ 보도자료(G20 외교장관회의 2회, 세르파회의 2회(2,3차 회의), 다보스포럼 3회, WEF CSD 1회, OECD 1회, ESCAP 2회), 인터뷰(다보스포럼 특사 3회 / 로이터, 연합뉴스, 매경), 외신기자 간담회(다보스포럼 특사), 기고문(G20 정상회의), 외교부 인스타그램·유튜브(KOREAZ FOCUS 홍보영상)(G20 정상회의) 등 언론·SNS 적극 활용
-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해외 지재권 침해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실시하고, 현지 맞춤형 지재권 보호 지원 사업을 수행
 - 금년도 해외지재권 보호 지원사업 수행공관 대상 지재권 담당관 회의(4.26, 10.26)를 통해 공관의 지재권 대응 역량을 점검
 - 또한, 니스(NICE)에 우리 고유상품명의 공식상품명칭 6건 등재(22.4월)
- **(경제협정 네트워크 확대 및 新국제경제규범 형성)** ①경제협정 (투자보장, 항공, 이중과세방지, 사회보장, 과학기술협력 등) 제·개정 추진, ②국제경제규범(UNCTAD, UNCITRAL 등) 논의 참여, ③ISDS 등 협정에 근거하여 제기되는 분쟁 대응
 - 제·개정 협상, 서면협의를, 문안합의·서명·발효(11건) 등을 통해 우리 기업·국민의 해외진출시 투자보호, 조세부담 완화, 연금수급권 확대 등 경제적 권리 증진 및 해외진출 법적기반 확대
 - ※ 투자보장협정 제·개정시 페이퍼컴퍼니의 남소방지규정을 포함하여 향후 우리 정부에 대한 ISDS 등 분쟁가능성을 억제해 우리 경제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
 - 신국제경제규범 논의참여 및 협정에 근거한 분쟁 예방 및 협의 지원, 대응 논리 개발을 통해 범정부 대응의 효과성 제고
 - 우리 정부에 대한 ISDS(투자자-국가 분쟁) 제기 관련 관계부처 분쟁대응단을 통한 공동 대응에 적극 참여 및 외교적 공조 지원

□ 장기적 효과

- (경제안보 현안 대응) 범정부 협업 下 위기 예방·대응 체제 강화 및 IRA, 수출통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 대응을 통한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는 물론, 장기적으로 핵심기술 육성·보호 및 공급망 안정화·다변화에 기여
- (양자경제협력 심화) 주요국·신흥경제권과의 전방위적 경제안보 협의 강화 및 반도체·광물·배터리 등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협력을 통한 우호적인 대외경제환경 조성
- (해외 진출 지원) 우리 기업의 안정적 해외수출통로 확보를 통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 유지·확대 기여 및 재외공관의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한 장기적 경쟁력 강화 기대
 - 우리기업의 ▲인프라·방산 등 대규모 프로젝트 성공적 수주 지원, ▲유엔조달시장 진출 확대 지원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시장 개척 기반 마련
- (다자경제협력 강화) 식량·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대응 등 당면한 국제현안 대응에 있어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및 성공적인 2025년 APEC 의장직 수임 기반 조성

4 원자력에너지 협력외교 강화

□ 주요 성과

- (한미 원전 동맹 강화 모멘텀 유지) 한미 정상회담(5.21) 계기 한미 원자력 협력 강화에 합의한바, 한미 원자력 분야 고위급 협의 개최*를 통해 구체 협력 방안 모색

※ 한미 정상회담 원자력 분야 합의 사항

- (해외원전시장 협력)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등의 수단을 활용,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한미간 협력 강화
 - (SMR 협력) 수출진흥, 역량개발, 소형모듈원자로(SMR) 공급망 분야 협력을 통해 선진원자로·SMR의 개발과 판매를 위해 협력
 - (고위급위원회 재가동)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HLBC)를 활용하여 협력방안 구체화
- * ▲ 외교부 장관, 미 국무부·에너지부·상무부 장관 면담(6.13, 6.15), ▲ 다자외교조정관, 미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차관 및 핵안보청장 면담(8.2, 8.12), 등



장관-미 에너지부 장관 면담(6.13, 미국)



2차관-미 국무부 정무차관 면담 (7.27, 서울)

- (한미 SMR 협력·소통 강화) 과기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협력을 유도하고, 제3국 SMR 역량강화 협력 등 주도

- (FIRST 프로그램* 협력 추진) 한미 실무회의를 개최(6.17, 화상)하여 전문가 지원 등 우리측 참여방안을 논의하고, NPT 평가회의 계기 채택된 FIRST 프로그램 협력 공동성명(8.25)에 영국, 일본 등과 함께 동참

* 바이든 행정부에서 21.4월 기후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공식 발표한 개도국 SMR 도입 지원 및 가속화를 위한 국제협력 사업

- (관계부처 협력 주도) SMR 협력 관계부처 회의 개최 등을 통해 과기부, 산업부, 원안위 등 SMR 관련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력을 유도, 한미 SMR 협력의 구심점 역할 수행

※ ▲FIRST 프로그램 관계부처 사전회의(6.10, 서울), ▲한미 SMR 협력 관계부처 회의 (9.7, 서울) 등

- (한미 핵안보 협력 강화) 한-미 핵/방사능 테러 대응 공동훈련(Winter Tiger III) 개최와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의 대응 및 완화 실무그룹(RMWG) 의장 수임을 통해 역내 핵 테러 대응 역량 강화

- 한-미 핵/방사능 테러 대응 공동훈련(Winter Tiger III) 준비 회의 (4.27~28/덴버, 10.19~20/서울) 계기, 한미 양국 다양한 관계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모범관행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 (우리측) 외교부, 대테러센터, 경찰청, 소방청, 원안위(KINS, KIRAMS, KINAC), 군(합참, 화생방사), 국방부 등 20여명 / (미측) 국방부, 핵안보청, FBI, 국토안보부, 연방재난관리청 (FEMA), 환경보호청(EPA), 주한미군 등 20여 명



중간준비회의 (4.27~28, 덴버)



최종준비회의 (10.19~20, 서울)

-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의 대응 및 완화 실무그룹(RMWG) 의장을 수임하고, 미국무부와 활동 논의를 지속하여 GICNT 위기 상황소통(Crisis Communication) 워크숍 개최를 공약하고 추진 중

※ 세 차례 화상회의(5.4, 7.7, 8.25)를 통해 워크숍 프로그램 구상

- (원전 수출 대상국과의 소통체계 강화) 원전수출지원공관 8개* 지정(8.18)을 통해 원전수출 대상국과의 네트워크 구축·강화, 수주 정보 파악·대응, 한국 원전 홍보 등 현지 소통체계를 강화

* 원전수출지원공관(8개) :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남아공, 필리핀, 카자흐스탄, 영국, 사우디

- 원전수출지원공관을 지정하여 공관의 인적·물적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통해 전략적 원전 수출 외교 수행
- ▲ 시급성(입찰 시한), ▲ 시장성(원전 도입 추진 현황 및 계획) ▲ 경쟁력(종합패키지 제공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해외원전 세일즈 외교거점으로 역할 수행 지원
- (원전 수출 외교 지원 기반 마련) 원전수출지원 부내 T/F 발족(9.2)을 통해 우리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한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외교 지원 기반 마련
 - 원전수출지원공관을 통해 파악된 현지 동향 및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



- (우호적인 원전 수출 환경 조성) 한미 정상 차원에서 한미간 원자력 협력 강화에 합의한바, 이러한 양국간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원전 수출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노력 지속
-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와 업무협약(MOU) 체결(9.30)을 통해 국제원자력 협력 교육 활동(원전 도입 추진국 학생 등 포함) 지원 기반 마련 및 원전 도입 추진국에 대한 아웃리치 확대에 기여



- (원전 수출 지원 노력 홍보 강화) 원전수출 활성화 위한 전략과 과제 제하 국회정책토론회 참석(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8.31), 외교부 차원의 원전수출 활성화 지원 노력을 소개함으로써, 국회 및 유관 전문가의 외교부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 장기적 효과

- (해외 원전 수주 가능성 제고) ▲한미 원전 동맹 강화, ▲원전수출 지원 TF 적극 활용, ▲원전수출지원공관 현지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주요 해외원전 사업에서 우리 원전 수주 가능성 제고
- (SMR 상용화 추진 가속) 긴밀한 한미 SMR 협력·소통을 바탕으로 ▲SMR 공동연구, ▲제3국 SMR 진출 협력, ▲SMR 공급망 협력 등 추진과 이를 통한 SMR 개발 및 배치 가속화 기대

5 2030 세계박람회 유치활동체계 강화 및 대외유치교섭 활성화

□ 주요 성과

<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요 >

- ▶ **(주제)**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Transforming Our World, Navigating Toward a Better Future)
- 부제 : △자연과 지속가능한 삶(sustainable Living with Nature) △인류를 위한 기술
(Technology for Humanity) △돌봄과 나눔의 장(Platform for Caring and Sharing)
- ▶ **(장소/기간)** 부산광역시 북항 일원(343만m²), 2030.5.1.~10.31.(6개월)
- ▶ **(예상 참가국/관림인원)** 200개국 3,480만명 ※ 여수엑스포 총820만명
- ▶ **(개최비용)** 약 5.7조원(잠정) ※ 구체적 자원/비용 별도 추계
- ▶ **(개최효과)** 잠정 생산(43조원), 부가가치(18조원), 고용창출(50만명)
- ▶ **(기타)** 유치 성공 시 세계 12번째*(아시아에서는 4번째) 등록 엑스포 개최국
* 벨기에, 프랑스, 미국, 아이티, 캐나다, 일본, 스페인, 독일, 중국, 이탈리아, UAE
- 3대 행사(올림픽·월드컵·등록엑스포)를 모두 개최하는 세계 7번째* 국가
*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 **(유치활동체계 수립)** 특사 파견, 재외공관을 통한 유치교섭, 관계 부처 일대일 맞춤형 패키지 조율 등 대외유치교섭을 총괄 지원
 - 22.2월 유관 실국이 참여하는 부내 T/F를 구성하고, 유치교섭 상황실을 설치하여 전용 사무공간을 마련하여 전담 상주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부내·외 유치교섭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
 - 2030 부산세계박람회 대외 유치교섭 업무 추진을 위한 외교부 직제 개정을 통해 부내 유치교섭상황실 구성 등 한시정원 직제화 완료(대통령령 제32905호, '22.9.13.)
 - *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시까지 한시정원 4명 순증(7등급1, 5-6등급2, 3-4등급1, ~23.12.31)
 - * 사업예산 확보 노력 '22년 1.4억 → '23년 9.8억(+8.4억 순증)



부내 유치교섭상황실 개소 및 운영(6.17.)

<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관련 현황 >

- ▶ **(후보국)** 2022.11월 현재 4개국이 경쟁 중
 - 한국(부산), 사우디(리야드), 이탈리아(로마), 우크라이나(오데사)
- ▶ **(향후 일정)** 22.11월 BIE 총회시 3차 후보국 프리젠테이션 실시 ⇒ 23.3-4월 후보국 현지 실사 ⇒ 23.6월 BIE 총회시 4차 프리젠테이션 실시 ⇒ 23.11월 BIE 총회시 5차 프리젠테이션 및 개최지 투표 예정

○ **(전략적 유치교섭 추진)** 유치교섭 활동에 대한 전략 수립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체계적으로 대외 교섭 활동 전개

- **(유치교섭 전략 수립)** 외교부 장관 주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점검회의」 개최를 통해 유관기관(대통령실, 산업통상자원부, 부산광역시,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포함하여 유치교섭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략 수립

※ 유치교섭 점검회의: 9.26., 11.1., 12월중(예정) / 유치위원회: 7.8., 8.26. / T/F 회의 : 2.25., 4.28., 6.29.



외교부 장관 주재, 제2차 유치교섭 점검회의(11.1., 외교부)

○ **(대외 유치교섭 총력 전개)** 「Korea One Team」 원칙하, 7대 교섭주체·5대 핵심계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금년 중 대부분 BIE 회원국에 대해 교섭 실시 추진

- ※ 7대 교섭주체 : 정상·총리·외교장관 등 각료, 특사, 국회, 민간대표, 재외공관
- ※ 5대 핵심계기 : 방문, 방한, 다자회의, 통화, 駐韓외교단

- **(대통령)** 양자 정상회담 및 접견, 다자 정상회의 등 모든 외교활동 계기에 부산박람회를 홍보하고 유치 지지를 당부 중

- 대통령실 소속 미래전략기획관 및 미래정책비서관도 11월 초, 현재 18개국 방문하면서 교섭 중

< 대통령실 유치교섭 현황 >

- ▲ 대통령 : 제5차 한-태도국 외교장관 회의 계기 태도국 12개국(나우루, 마셜제도 등) 외교장관 단체접견(10.27.), 나이지리아 대통령(10.26.)·남아프리카공화국 외교장관(10.11.)·영국 외교장관(9.28.) 등
- ▲ 미래전략기획관 : 프랑스·수리남·도미니카(공)·앤티가바부다·세인트키츠네비스·바베이도스 방문(10.17.-11.5.), 기니비사우·세네갈·감비아·기니·라이베리아·시에라리온(9.14.-24.) 방문
- ▲ 미래정책비서관 : 가나·베냉·토고·니제르·코트디부아르(10.20.-29.)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10.24.-25., 도미니카공화국·앤티가바부다·세인트키츠네비스)

- (총리) 유치위원회 주재(8.26.), 중남미 순방 및 양자 면담을 통해 직접 교섭하고 주요 인사 접견 등
 - 제170차 BIE 총회(6월) 및 제171차 총회(11월 말 예정) 참석, 유럽·아프리카·아주 주한대사 오찬간담회, 중남미 순방(칠레·우루과이·아르헨티나), 고위급 방한 외교 계기 면담 등

< 국무총리 유치교섭 현황 >

- ▲ 칠레·우루과이·아르헨티나 순방(10.9.-17.), ▲제2차 한-중미 특별 라운드 테이블 계기 중미 7개국 외교차관 단체접견(11.2.) 및 제15차 한-중양아 협력 포럼 계기 중앙아 3개국 외교장관 단체 접견(10.24.), 탄자니아 총리(10.27.)·오스트리아 외교장관(10.24.)·루마니아 총리(9.28.)·라오스 외교장관(9.5.) 등 고위인사 면담 및 접견, ▲주한 아주지역 대사단 오찬 간담회(9.23.) 등



국무총리 유치교섭 활동 언론보도

- (외교장관) △몽골, 베트남 방문 △멕시코, 카타르, 영국, 라오스 등 양자회의 △중남미, 중앙아 및 태평양도서국 각료들과의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지지교섭 실시 △지역별 공관장 회의* 및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점검회의** 주재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전략 수립
 - * 미주(8.25.), 아중동(8.31.), 아주(9.1.), 유럽(9.1.) 지역 공관장 회의 개최
 - ** 9.26, 11.1, 11월말/12월초(예정) 점검회의 개최

< 외교부장관 유치교섭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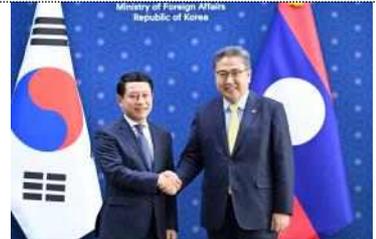
▲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계기 라오스, 베트남, 스리랑카, 뉴질랜드, 태국 외교장관 회담(8.4.-5.) ▲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독일, 스페인, 중국 외교장관 회담(7.7.-8.) ▲ 중남미 미래협력포럼 계기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등 9개국 장·차관 등 (7.5.-6.) ▲ 제77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 폴란드, 체코, 필리핀 외교장관 회담(9.19.) ▲ 몽골 방문(8.28.-30.) 및 베트남 방문(10.17.-18.) ▲ 제5차 한-태도국 외교장관 회의 계기 마셜제도·통가·팔라우 외교장관 회담(10.27.) ▲ 제15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 계기 중앙아 5개국(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외교장관 회담(10.23.-25.) ▲ 몽골 국회의장(10.28.) ▲ 멕시코 외교장관(7.4.) ▲ 카타르 외교장관(8.17.) ▲ 라오스 외교장관(9.6.) ▲ 네덜란드 외교장관(9.28.) ▲ 영국 외교장관(9.28.) ▲ 엘살바도르 외교장관(10.5.) ▲ 남아공 외교장관(10.11.) ▲ 오스트리아 외교장관(10.23.) ▲ 나이지리아 외교장관(10.28.) 등 고위인사 면담 및 접견



한-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회담(10.25.)



한-마셜제도 외교장관회담(10.26.)



한-라오스 외교장관회담(9.6.)

< 외교부 고위급 유치교섭 현황 >

- ▲ 1차관 : 주한 중미 대사단(6개국) 초청 오찬간담회(7.11.), 우즈베키스탄 외교차관(7.21.), 미 국무부 정무차관(7.27.), 네덜란드 총리실 국가안보보좌관(9.30.), 오만 외교차관(10.21.), 도미니카공화국·파나마·엘살바도르·온두라스·코스타리카·과테말라 외교차관 및 벨리즈 외교부 국장(11.1.-2., 제2차 한-중미 특별 라운드 테이블 계기)
- ▲ 2차관 : 엘살바도르 공공사업교통부 장관(7.1.), 에콰도르 차관(7.7.,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계기), 주유엔 아이티·앤티가바부다·벨리즈·세인트키츠네비스 대사(9.19.-20. 미국 방문), 나우루 외교차관(10.27., 한-태도국 외교장관 회의 계기)
- ▲ 차관보 : 슬로바키아 외교차관(7.14., 제4차 한-슬로바키아 정책협의회 계기 슬로바키아 방문), 우즈베키스탄 외교차관(7.12. 우즈베키스탄 방문), 라오스 외교장관·외교차관(9.13.-14., 한-메콩 비즈니스 참석 계기 라오스 방문), 주한 중앙아 대사단(5개국) 오찬 간담회(9.29.), 체코 정무2차관(10.14.)
- ▲ 경제외교조정관 :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차관(9.21., 제5차 한-폴란드 경제공동위 계기), 벨기에 외교부 양자총국장(10.7.), 가봉 총리 및 앙골라 외교차관 등(10.10.-14., 가봉·앙골라 방문), 네덜란드 외교부 대외경제차관보(10.18., 제2차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 계기), 타지키스탄 경제개발통상부 장관(10.20., 제5차 한-타지키스탄 경제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 계기),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10.28., 제19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 참석 계기 베트남 방문)

- (대통령 특사) 국회 의장, 각료급 인사, 전직 장관, BIE 협력대사 등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하여 상대국 정상급 고위인사를 대상으로 교섭 활동 전개

< 대통령 특사 유치교섭 현황 >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박병석 前 국회의장, 11월), ▲체코·리투아니아·헝가리(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10월), ▲에스토니아·몰타(김종훈 前 통상교섭본부장, 10월), ▲카메룬·기니(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0월), ▲감비아(조재호 농촌진흥청장, 10월), ▲엘살바도르·코스타리카·멕시코(유명환 前 장관, 9-10월), ▲케냐·모잠비크·말라위(정병국 前 의원, 9월) ▲타지키스탄·아제르바이잔·조지아(서병수 의원, 8월)

- (외교장관 특사) 기업인 내지 전 차관급, 전직 대사 등을 장관 특사로 파견하여 상대국 각료급을 대상으로 교섭 활동 전개

< 외교장관 특사 유치교섭 현황 >

▲노르웨이(가삼현 현대중공업 부회장, 11월), ▲몰디브·스리랑카(한동만 유치사절단 위원, 11월), ▲에티오피아·탄자니아·코트디부아르(조주완 LG전자 사장, 11월), ▲DR콩고·중아공(김준 SK이노베이션부회장, 10-11월), ▲나미비아·잠비아·부룬디(여한구 유치사절단 위원, 10월), ▲바하마·파라과이(장재훈 현대차 사장, 10월), ▲세르비아·알바니아·그리스(송호성 기아차 사장, 10월), ▲남아공·모잠비크·짐바브웨(송호성 기아차 사장, 9월) ▲남아공·모잠비크·짐바브웨(송호성 기아차 사장, 9월) ▲핀란드 경제고용부 차관보, 에스토니아 경제통신부 장관, 그리스 경제외교 차관(최석영 특사, 7월) ▲라오스 외교장관, 방글라데시 총리실 수석차관, 네팔 총리(한동만 특사, 6월) ▲페루 외교차관 에라도르 외교장관 도미니카(공) 산업부 장관(홍성화 특사, 6월)

- (재외공관) △상시 교섭 활동 전개 △현지 동향 보고 △최근에는 국경일 행사를 활용하여 회원국내 박람회 유치 홍보

- 국경일 행사 계기에 BIE 핵심인사 초청, 홍보 부스 설치, 현지 언론 상대 홍보활동 실시
- ※ 그리스(Prorothema, Newmoney), 알제리(EI Hiwar, El Khabar), 요르단(Petra, Jordan News, Jordan Times), 파키스탄(방송사 PTV) 등 다수 외신은 우리 공관의 국경일 행사 및 박람회 홍보활동을 보도

재외공관 국경일 리셉션 언론보도

주카메룬(대)	주그리스(대)	주엘살바도르(대)

○ (부산광역시와 교섭활동 공동 추진) 부산광역시와 부처간 인적교류 (국제관계대사, 유치교섭상황실 등)를 통해 유치교섭대표단 구성, 대외 협상전략 수립 등 긴밀히 상시 협의

- 부산광역시 및 산업부 유치지원단과 대통령 특사 파견시 부산시 고위급 동행, 국내 주요 외교행사시 교섭활동 등 협업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등 관련 회의시 참석하여 유치교섭 대책 논의



유명환 대통령 특사와 박형준 부산시장 멕시코 방문(9.30.-10.4.)

※ 외교부 연계, 부산광역시장 교섭활동 내역

- 유명환 대통령 특사 중미 3개국 방문 동행(9.30.-10.4.)
- 주프랑스대사관 국경일 행사 참석 계기, BIE 인사 대상 유치교섭(10.14.-18.)
- 주일본대사관 유치홍보 리셉션 참석 계기, 국회의원, 도쿄도 부지사, 오사카 시장·부시장 면담 (10.20.-23.)
- 한-중양아 협력포럼 계기, 계기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장·차관 면담(10.24.-25.)
- 한-태도국 외교장관 회의 계기, 마셜제도 외교장관, 나우루 외교차관 면담(10.26.)
- 프랑스 상원 외교국방위원장(10.30.), 체코 외무부 차관(10.17.) 방한 계기 면담

※ 부처간 협업 및 부산박람회 유치활동체계 강화를 위한 외교부-부산광역시간 인적교류

- 외교부 유치교섭상황실 내 부산광역시 파견인력 배치('22.1월~)

○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세 확대) 우리의 적극적인 교섭으로 아시아,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등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고 있으며 향후 지지세 확대를 위해 유치교섭 총력 지속 전개 예정

- △G20·아세안·APEC 등 주요 다자회의 계기 양자 교섭 실시
- △11.30 한-카리브 고위급포럼 및 내년 상반기 제1차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등 다양한 방한 초청행사를 통해 부산에 대한 우호적 여론 조성 및 지지세 확대 지속 추진

□ 장기적 효과

- (우리의 국제사회 기여 및 홍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불평등 등 인류 도전과제 해결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 표명 및 기여 △우리의 산업·기술 성과와 우수한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
- (우리의 외교적 저변 확대) 금년 중 BIE 회원국(170개국) 대부분과 접촉하여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유치교섭을 통한 실질 양자관계 강화 효과도 거양
 - 특히 카리브지역, 태평양도서국 등 그간 접촉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격지 국가와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적 저변이 확대되는 성과 거양
 - ※ 카리브지역국, 태평양도서국 대상 방한·방문 적극추진을 통해 상호교류 확대
 - △BIE협력대사 카리브 9개국 방문(5.5.-16.), 솔로몬제도·바누아투 방문(10.31.-11.9.)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카리브지역 4개국 방문(10.21.-11.1.)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10.25.) △한-카리브 고위급포럼(11.30. 예정)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내년 상반기) 개최

/끝/